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044-10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

#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

2016. 3.

농림축산식품부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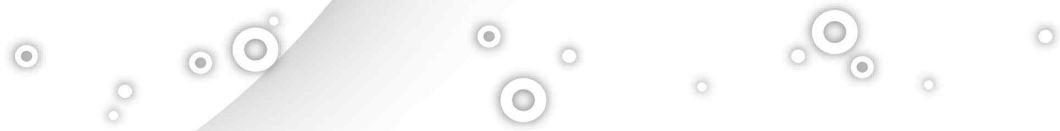
<b>I . 업무보고</b> .....	<b>1</b>
<b>1. 행사 개요</b> .....	<b>3</b>
<b>2. 서면보고서</b> .....	<b>7</b>
<b>3. Presentation</b> .....	<b>37</b>
<b>4. 보도자료</b> .....	<b>49</b>
<b>II . 2016년 업무계획</b> .....	<b>59</b>







업 무 보 고





# 1. 행사 개요



## 2016년도 정부업무보고 행사 개요

□ 행사명 :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 기재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 금융위 합동보고

□ 일시 : 2016. 1. 14.(목) 10:00~11:50

□ 장소 :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 보고주제 :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구분	내용	보고
① <b>총괄 보고</b> (6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li> <li>*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li> </ul>	부총리
② <b>과제별 보고</b> (3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li> <li>*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li> </ul>	산업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li> </ul>	국토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li> </ul>	공정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li> </ul>	금융위원장

□ 토론주제(2개)

- ①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②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



## 2. 서면보고서





---

#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

2016. 1.

농림축산식품부





## 목 차



I. 농정 평가 .....	13
II. '16년 추진방향 .....	16
III. '16년 중점 추진과제 .....	20
1. 농산물 생산 첨단화·전문화 .....	20
2. 제조·가공 및 식품산업 활성화 .....	23
3. 유통 효율화 및 수출 확대 .....	25
4. 내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	29
IV. 추진방식 .....	32



# I. 농정 평가

## 가 농정 방향 및 과제

□ (중장기 농정방향)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박근혜정부 5년간의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13)

○ 경쟁력·소득·복지 3대 축을 기초로 5대 분야 100대 과제 선정·추진



□ ('15년 추진내용) 박근혜정부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실천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화·조직화 및 ICT 융복합 확산,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 FTA를 활용한 수출시장 적극 개척 및 식품산업 등 신시장 창출
-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영세 고령농 배려 및 소득·경영 안정장치 확충
- 경영체 DB 활용 과학농정 기반 마련, 현장 소통 및 규제개선, 관련 부처·산하 기관 등과의 협업 등 스마트 농정을 통해 체감성과 확산

## 나 '15년 주요 농정성과

### 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핵심과제별 성과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ICT융복합 스마트팜이 확대('14:온실60ha/축사30호→'15:364/156)되어 농업의 첨단화·수출산업화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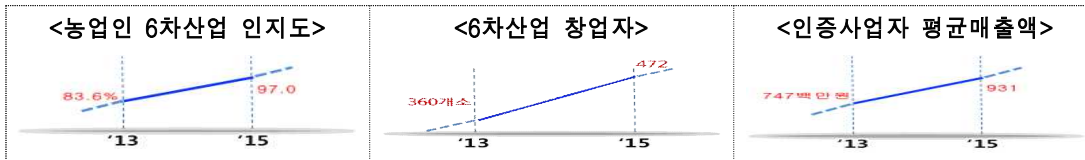
○ 세계 경제침체·엔화 약세, 메르스 사태 등 어려운 여건에도 중국\* (6.9% ↑)·GCC\*\* (5.9% ↑) 대상 농식품 수출 증가

\* 정상외교를 통해 중국 내 김치·쌀·삼계탕 검역조건에 합의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 전국적인 6차산업화 열기로 창업이 확대(20% ↑)되고, 경영다각화·판로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6차산업 인증 사업자 : ('14) 379개소 → ('15) 802



※ 핵심과제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공사례 확산 유도

\* 우수사례 : (6차산업화) 123건, (수출확대) 43, (상생협력) 42, (ICT융복합) 25

### ② 장관 참여 규제개혁 현장포럼 개최(4회) 등 현장규제 적극 발굴·개선

○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위한 농지규제 합리화 추진

\*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주말 체험 목적 농지소유 허용자격 확대, 농지 보전부담금 납부방식 다양화(신용카드 허용) 및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

○ 6차산업시설 진입도로 규제 개선, 소규모 탁·약주 생산판매 허용,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 등 422건의 과제 발굴·개선

### ③ 한중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에 의한 상생협력기금 조성방안 마련

\* '15.6월 한중 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농업분야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보완대책(10년간 1,595억원)을 마련하였으며, 11월 국회통과시 추가 보완대책(10년간 16천억원) 마련

④ 정책자금 금리인하\*(연간 1,222억원), 쌀 고정 직불금('14:90만원/ha→'15:100) 및 이모작 직불금(40만원/ha→50) 단가 인상 등 농가소득 안정 도모  
\* (1차/'15.1월) 연간 336억원 부담경감, (2차/7월) 572억원, (3차/12월) 314억원

⑤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가뭄 등 공급불안 상황에서도 농산물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유통 확산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14:6,241억원→'15:7,491)  
\* 채소류 가격변동률 : ('10~'14평균) 15.9% → ('15) 11.8

○ 「농산물직거래법」 제정(6월), 농산물 전용 TV홈쇼핑 개국(7월)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4:71개소→'15:103) 등 직거래 인프라 확대

⑥ 가사도우미 지원('14:10천가구→'15:15), 농촌 복지달력 배포(39천부), 농촌형 교통서비스('14:13개소→'15:21) 등 체감도 높은 배려농정 지원 강화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상향('14:85만원→'15:91), 공동아이돌봄센터(31개소) 및 농업안전 보건센터(8개소) 등 농촌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시행

⑦ 현장 체감성과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부문 일하는 방식 개선

○ 농업경영체 DB 등 통계에 기초한 합리적 농정 추진기반 마련

\* '15.12월말까지 약 160만 농가가 DB에 등록하였으며, 경영체 DB와 농식품부 사업(62개) 및 타부처 전산망을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신청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로 농업인 여부를 확인,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어 연간 4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 농진청·지자체·선도농·대학·기업 등 참여 SNS(23품목)를 운영하는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밀착형 지원 강화

○ 관련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정책효과 제고

• 복지부와 협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나라미 공급 개선  
- (기존) 20kg 포장으로 공급, 10kg 포장은 7~8월 한정공급 → (개선) 20kg·10kg 포장 연중공급

## II. '16년 추진방향

◆ 농산물생산·가공·유통·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수경기 진작과 수출확대에 기여

- 이를 위해, 전문경영체 육성, 외부자본·인력활용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 규제개선, 관계기관 협업 등 추진



◆ 경쟁력 정책에서 소외되는 영세고령농에 대한 배려농정 병행

### 1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

- ① (농산물 생산) 전략품목 중심으로 스마트팜과 공동경영체를 확산하여,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
- ② (제조·가공)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농가단위 제조·가공을 활성화하고, 기업과의 상생협력 확산
- ③ (유통·수출) 직거래·포스몰·온라인쇼핑 등 신유통경로를 확충하고, 로컬푸드 등 유통산업 육성
  - FTA를 활용하여 김치 등 전략품목의 수출 확대
- ④ (농촌 관광)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색있는 상품 개발, 예약·결제시스템 등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



##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유형 및 추진방향

**목표** : 스마트팜, 공동생산 등 효율적인 생산시스템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이 융복합된 지역단위 6차산업 클러스터 육성

<b>추진전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2차, 3차 중 주된 산업을 중심으로 융복합하여 6차산업을 확산</li> <li>• 규제 특례를 통해 6차산업화 촉진</li> </ul> <p>☞ 산업집적도, 전후방산업 연계, 규제특례에 초점을 맞춰 지역단위로 네트워크화 하고, 규제개선 등을 통한 6차산업화 촉진</p>
-------------	--

	제조·가공 중심형	유통·수출 중심형	체험·관광 중심형	융복합형
<b>유형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적화되어 있는 농산물 제조·가공이 1차 산업을 견인, 3차산업과 융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산지를 중심으로 유통·수출 활성화</li> <li>•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체험관광산업이 1·2차 산업을 견인, 융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형태</li> </ul>
<b>사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창 복분자</li> </ul> <p>전국 복분자 생산량의 약 27% 차지, 복분자 가공·체험 융복합으로 지역경제 활력 증진, 복분자식초·원액·즙 등을 중국·일본·싱가폴 등에 수출 ('15년 260억원 매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주 참외</li> </ul> <p>전국 참외 생산량의 약 70% 차지, 참외 재배시설 및 품질 개선, 해외시장 개척, 통합마케팅 등을 통해 유통 활성화 ('15년 4천억원 매출, 7억원 수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양 알프스마을</li> </ul> <p>콩·조롱박·얼음축제 등을 통해 지역민 고용 및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 조롱박 부산물로 화장품 개발·생산 ('15년 25만명 방문, 18억원 매출, 고용 5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례 자연드림파크</li> </ul> <p>iCOOP생협이 농공단지 입주하여 우리밀 라면 공장, 영화관, 기숙사 등 설치·운영,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15년 고용 432명, 농산물 연 42억원 구매)</p>
<b>정책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이용시설 등 공동인프라,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수출정보 제공, 품질관리, 기업애로 해소, 산업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 홍보·마케팅, 규제 발굴·개선 등을 통해 육성</li> </ul>			

## ② 체감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방식 개선

- 생산·유통·가공·관광 등 전문경영체를 발굴하여 기술·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보육·컨설팅 지원
- 외부자본, 기술, 인력 활용으로 농업·농촌의 역량 보완
- 해제되거나 행위제한이 완화된 농업진흥지역을 6차산업 등에 활용하고, 6차산업지구를 통한 규제특례 확대
-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업,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체감 성과 확산

## ③ 영세고령농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배려농정도 지속 추진

- 지역개발 사업과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농촌 행복꾸러미\*'를 도입하고,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소규모 보육시설(설치 3개소, 운영 30) 지원
  - \* 중심지(읍·면소재지 등)와 배후마을 간 생활·문화·복지 서비스 연계 및 영세고령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동식 세탁소 운영' 등 체감도 높은 복지 프로그램 지원
- 농고·농대 재학생에게 영농 장학금을 지원\*하고, 농업인자녀 대상 대학생 장학금을 소득수준에 맞게 차등 지원\*\*
  - \* 영농 장학금 : (대학) 250만원/학기당, 26백명, (고교) 50만원/연, 10백명
  - \*\* 농업인자녀 장학금 : (1~3분위) 150만원, (4~5) 100, (6~8) 50
- 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 및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자금(5천억원) 지원조건\*\* 개선
  - \*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336만원/호), (농식품부) 철거 후 지붕개량(540만원)
  - \*\* 대출금리 인하(2~2.7%→2),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축소(4종→2) 등

## ■ 6차산업 관련 주요 현장 애로

- '15년 이후 장관주재 현장간담회 개최 실적
  - \* '15년 90개소(6차산업 23, ICT 12, 수출 12, 유통 8, 재해 22 등), '16년 7개소(6차산업 3, ICT 1, 수출3) 등
- 6차산업·스마트팜·수출관련 홈페이지 설문조사('16년 1월) 실시(2,748명 응답)

농산물 생산 및 제조·가공	유통 및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가공 원료농산물 가격이 높고, 수급 및 가격불안 발생</li> <li>● 원료의 균질성이 떨어지고, 계약 재배 등 안정적 공급체계 미비</li> <li>● 개별 농가 중심의 소규모 제조·가공 위주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고, 대량 수요처의 요구 대응이 어려움</li> <li>● 단순 가공 위주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의 다양성 미흡</li> <li>● 디자인 및 브랜드화 등 상품화 역량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등 지역 내 안정적 소비기반 부족</li> <li>● 우수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국내외 판로를 찾기가 쉽지 않음</li> <li>● 기존 유통망은 유통비용이 높아 소규모 농가에게 불리</li> <li>● 검역·통관절차가 복잡하여, 유통 기한이 지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li> <li>●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해외물류 인프라 부족</li> </ul>
농촌 관광	경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특색 있는 농촌 관광상품 부족</li> <li>●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고, 교통 등 접근성이 부족</li> <li>● 외국인 농촌관광객을 위한 숙소 예약시스템 및 교통연계, 통역 등 서비스가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생산 과정의 규모화(주산지 조직화), 기계화가 미흡</li> <li>● 경영주체들의 기술과 경영 능력 부족</li> <li>● 자금부족 및 외부자본 유입 제한</li> </ul>

### Ⅲ. '16년 중점 추진과제

#### 1 | 농산물 생산 첨단화·전문화

- ◆ 전략품목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확산하여 농산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수출 확대
- ◆ 주산지 중심으로 쌀 들녘경영체를 확대하고,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15개소)하여 생산의 효율성 및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 제고
  - \* 쌀 들녘경영체 : ('15) 224개소(51천ha) → ('16) 250(55)

#### ① 스마트팜 보급 확대

- (시설원예) '17년까지 현대화된 온실(10천ha) 중 수출이 가능하거나 생산성향상 및 노동력 절감이 기대되는 40%(4천ha)에 우선 보급
  - \* (첨단형) 파프리카·토마토·화훼 등 수출재배 첨단온실 600ha(기존394+추가206)
  - \* (복합관리형) 딸기·오이 등 규모화된 연동형 온실 2,400ha(기존334+추가2,066)
  - \* (간편관리형) 참외·수박 등 소규모 재배시설 1,000ha(기존41+추가959)

면적 ('15)	토마토 (5,380)	파프리카 (575)	화훼(장미,국화) (841)	오이 등 (2,836)	딸기 (6,789)	수박 등 (12,299)	참외 (5,380)
보급 목표	첨단형(첨단온실, 수출 : 600ha) (기존) 394 + (추가) 206						
	85	215	300				
	복합관리형(연동 : 2,400ha) (기존) 334 + (추가) 2,066					간편관리형(단동:1,000ha) (기존) 41 + (추가) 959	
	700	360	539	201	600	600	400

- (축산) '17년까지 전업농의 10%(730호)를 대상으로 스마트 축사 보급
  - \* 대상 축종 : ('15) 양돈·양계 → ('16) 한우·낙농 추가

#### ②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현장지원 강화

-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모델을 시범 보급(9월)하고, 첨단 유리온실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 개발(12월)
  - \* 기 보급된 스마트팜 모델의 비용(시설비·운영비) 및 성능에 대한 검증(7월~)

-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국내 생육환경 및 재배작목에 적합한 생육 관리 SW를 조기에 개발·보급('16:토마토→'17:딸기·국화·파프리카)

\* 세종·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 화순 한울농장은 스마트팜 도입 후 토마토 생육정보(열매수·줄기길이 등) 수집·분석을 통한 생육환경 최적화로 3년만에 생산성 55% 향상

- 기존 농기계 국제박람회 등을 활용, 스마트팜(시설·자재·SW 등) 국제 박람회 개최(11월)

- 농가대상 교육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농가의 ICT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토마토대학 운영\* 확대(토마토 → 토마토·딸기·버섯·양돈) 및 현장 실습교육(5천명) 등 추진

\* 최고수준 강사(일당 85만원) 활용 등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15:4.52점/5점만점)

- 교육·A/S 등 권역별 현장지원센터(8개소)를 통한 현장애로 해소

\* '15.7월부터 A/S 4백건 이상 실시

-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스마트팜 119 콜센터 및 불만제로 밴드 운영

### ③ 전략품목 수출 전문단지 조성

- 대호간척지 등에 ICT를 접목한 규모화된 첨단 시설원에 온실을 조성('16년까지 10ha)하고, 향후 타 간척지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수출 전략품목이면서 환경변화에 민감한 파프리카·토마토·화훼 등을 중심으로 ICT 융복합 첨단온실 신규 지원(100억원, 16ha)

- 딸기·오이 등 재래식 비닐온실의 자동화도 추진

- 지열·발전소 폐열·가축분뇨 등 신재생에너지와 다접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1천ha)

- 우일계전공업(주)이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우일팜(주)은 화옹지구 첨단유리 온실(11ha)을 인수, 수출용 토마토를 재배하여 '16.1월말부터 일본 수출

#### ④ 쌀 들녘경영체 확산 및 사업다각화

- 들녘경영체를 확대('15:224개소/51천ha→'16:250/55)하고, 경영체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사업다각화(벼농사→가공·유통) 모델 육성\*\* (22개소)
  - \* 평균적인 벼 재배농가 대비 생산비 약 10% 절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들녘경영체를 활용한 밀·보리·사료작물 등 답리작과 콩·팥 등 타작물 재배\*로 쌀 수급조절 기능 강화
  - \*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경영체는 경영면적의 10~20%에 타작물 재배 유도(3천ha)
  - 생산비 절감 및 작부체계 개선 등 성과확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

• 산청 영실영농조합법인은 벼와 조사료 답리작, 맥주보리 재배 및 수제맥주 제조판매를 통해 벼농사만 지을 때에 비해 매출 2.5배 증가('10:19억원→'14:49)

#### ⑤ 주산지 중심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 주산지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유통·수급조절이 가능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15개소)
  - 경영체 DB 등을 활용하여 10개 품목\* 주산지 세부 실태조사 추진(3월)
    - \* 실태조사 대상 품목 :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참깨, 콩, 감자
  - 이를 바탕으로 밭작물 주산지별 수급 활용방안을 마련(6월)하고, 공동경영체별 운영 및 발전방향\* 수립(10월)
    - \*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ICT 기술 활용 및 수출 활성화 방안 검토
- 주산지 지역농협 주도의 계약재배(품종·재배방법 통일) 등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 공급체계 마련
  - \* 작목별 GAP 생산가이드 개발·보급(8월), 지역농협·기술센터 등을 통한 맞춤형 지도·교육
  - 지역특산 농식품(경주 황남빵, 천안호두과자 등) 생산 원료의 안정적 공급

#### ⑥ 공동경영체를 대상으로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 기존 농가 대상 농기계 단기임대(1~3일) 사업을 50ha 이상 들녘경영체와 밭 공동경영체 대상 중·장기 임대로 확대

◆ 안정적 원료공급을 바탕으로, 농가단위 가공을 활성화하고,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전처리·식자재 등 다양한 식품산업 육성

### 1 농가단위 가공 활성화 지원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확대('15:30개소→'16:44)하여 시제품 생산 및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보육대상자를 DB화하여 지속 관리

○ 6차산업지원센터를 통해 디자인·포장재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공골식품영농조합법인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6차산업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전통장류 포장디자인을 개선하고 갤러리아 백화점 입점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존 6차산업 창업 지원기관(46개소\*)을 연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에 필요한 코칭·멘토링 제공

- \* 6차산업지원센터(9개소), 농산물종합가공센터(30개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귀농귀촌종합센터, aT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을 통해 창업·6차산업화·스마트농업 등 19개 과제 추진 중

- R&D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의 현장적용(기술이전·사업화 등) 지원(650건)

○ 고령화, 1인가구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트렌드에 맞는 전략 품목\* 개발 및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R&D 추진('15:30억원→'16:50)

- \* 건강기능식품, 즉석식품(HMR), 베이비식품, 실버식품, 환자식, 뷰티식품, 글루텐프리 식품, 고단백 곤충식품, 냉동식품, 저나트륨식품 등

○ 국유림을 임업인에게 대부하여 6차산업화 등에 활용

- 논산 양촌영농조합법인은 국유림 16ha를 대부하여 밤 재배·가공수출을 통해 22억원 매출('15)

## ② 식자재 산업 육성

- 외식업 중앙회, 학교·군부대 등 대규모 수요처 발굴 지속 추진
  - 농협(안성) 물류센터 전처리 시설을 활용하여 외식·단체급식 업체 등 대상으로 전처리(Preprocessing) 농산물 공급
    - \* 삼성웰스토리(식자재), 홈플러스·경북 학교급식지원센터(간편채소) 등
  - 출고 전 잔류농약 검사, 전처리 HACCP 시설 운영 등 안전관리 강화
  - 산지와 외식업계 연계, 식재료 산지 페어 개최(8회)
- 농식품 분말·건조 등 식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반가공 시설 지원('15:3개소→'16:10)
  - 곡류·채소류·과일류 등을 미분·농축하여 제조·가공업체에 공급
- 지역 농산물 수요 확대 및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방안\* 마련(4월)
  - \* 기능성 등 고부가 식품소재 발굴, 재배농가-소재업체-식품기업간 연계 강화 등

## ③ 지역단위 식품산업 육성

- 가공식품 원료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 \* 국산 원료 사용 비율(10-10 프로젝트) : ('12) 30% → ('17) 35
  - 식품 원료 농산물 정보시스템에 농산물 가공적성, 영양·기능성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보완, 내실화\* 추진(3월)
    - \* 농업경영체DB, 식품성분표, 기능성 정보, 가공적성 등 연계
  - 가공식품·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시범 적용(3월)
    - \* 원료 농산물의 95% 이상이 특정 국가산인 경우 원산지 인증
- 지역특산 농산물을 외식·가공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계약재배 등) 하는 상생모델 확산('15:MOU37건→'16:62)
  - 기업의 실수요와 연계하여 주산지별 주요 품목 협의체 구성 및 시범모델(Test-bed) 운영(밀·팥·콩 등)

- 천안당(23개점)은 지역의 45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국산 밀과 팥을 공급받아 호두과자 생산('14:밀445톤/팥10톤 → '15:560/50)



◆ 로컬푸드 직거래 및 공영홈쇼핑 등 **신유통 비중 확대**

\* 신유통비중 : ('15) 16.2% → ('16) 18

◆ 전략품목 중심으로 **중국 및 신시장 등 수출 확대**

\* 농식품 수출액 : ('14) 61.8억불 → ('15) 61.1 → ('16) 81

① 차별화된 **신유통경로 확충**○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15:103개소→'16:140)하고,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로컬푸드 표준조례안을 제정(7월)·확산하여, 학교급식으로 로컬푸드 활용이 가능토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 유도
- 직매장 개설 전 준비단계(교육·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 부실을 방지하는 등 **로컬푸드 직매장 내실화**
  - \* 고정형 직매장 한계를 보완하는 찾아가는 이동형 직거래장터(로컬푸드 트럭) 개설 확대('16년 상반기까지 10개소)

○ **외식·식품가공업체 등 대량수요처와 산지 간 직거래 활성화**

- 직거래 매칭시스템을 구축하여(상반기) **맞춤형 거래희망정보\***를 쌍방향으로 제공하고, 거래정보는 빅데이터로 구축·활용
  - \* 지역, 거래 유형(장기 또는 단기), 배송방법, 가격 조건 등

○ **중소 외식업체 등의 포스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소량·다품목 농산물 익일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거래모델 보급·확대**

\* 지역물류 거점 확대 : ('15) 4개소 → ('16) 6

○ SNS 등을 활용한 **1인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시범모델 구축(2월)**○ **공영홈쇼핑에 지역특화상품(6차산업·지리적표시 제품 등) 전용시간대 설정**

- 공영홈쇼핑 고춧가루 특별판매방송('15.11.5일)을 통해, 공급과잉으로 산지가격이 하락한 고추 주산지 8개 지역의 고춧가루를 3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약 5억원 매출 달성

## ② 농식품 유통산업 육성

- 농식품유통교육원(42과정, 18백명) 및 농협교육원에 국내외 유통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식품법인연합회도 자체적으로 산지조직화 교육 추진
- 농협의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통합마케팅 조직 등)에 농산물유통(산지·도매·소매) 유경험자 등 우수 전문인력 우선 배치
- 저장·물류 등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유형을 발굴하고, 농식품 공동 물류\* 확대 추진
    - \* 기업 간 물류자원(시설, 장비, 인력 등)을 공동 이용해 비용 절감 기여
  - 산지 수집 및 수송단계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배추·무에 대해 물류기기 이용 확대 등 물류표준화 시범사업 추진(7월)

• 소셜커머스기업 쿠팡은 농협 물류센터(안성)에서 신선농산물을 10~20%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고, 자체 배송망 및 물류센터 저장고를 활용하여 당일 또는 익일 직배송 체계 구축

## ③ 검역장벽 해소 품목 수출 확대

- (김치) 북경·상해 등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형성하여 '16년 대중국 수출 100만불 추진
  - 국내외 첨단 연구기관, 김치연구소 등을 통해 김치 수출의 가장 큰 애로요인인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 추진(미래부 협업)
  - 수출 통관기간 단축 추진(식약처·관세청 협업)
  - 북경 한국문화원에 중국 현지인 대상 '김치 요리교실' 운영(2월)
  - 고품질 김치를 우수문화상품으로 인증하여, 우리 김치의 우수성을 문화와 연계하여 홍보(문체부 협업)

- (쌀) 안전·고급 이미지로 고소득층 공략, '16년 대중국 2천톤 수출 추진
  - 1월 중 중국 수출용 쌀 도정공장 등록 완료(6개 공장에 대해 등록 추진 중), 공동 마케팅을 통해 프리미엄 이미지 형성
  - 중국(북경·상해 등) 도시별 선호 품종을 조사하여 수출용 벼 재배 단지를 통해 생산, 가격경쟁력 제고
  - \* 충남 당진 대호간척지 수출용 벼 재배단지 확대('15:200ha→'16:540)
- (삼계탕) 중국·미국 등 수출국별 맞춤형 상품(레토르트·소포장 등) 개발 지원, 현지 유통·외식업체를 통한 판로 확대 추진
- (쇠고기) 홍콩 수출검역 타결('15.11월)을 계기로, 홍콩 시장에 한우의 우수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홍보·거래선 발굴 등 추진
  - \* '15.12월 태우그린푸드(수출자: 대우인터내셔널)가 한우 홍콩 첫 수출

#### 4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물류·판매망 확충

- 한중 FTA를 활용, 중국 서부 내륙까지 진출을 확대하여 '16년 대중국 농식품 수출 12억불 달성 추진('15년 대비 15% 증가)
- (유망 수출품목 발굴) 미래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는 고품질 화훼류 등 대중국 수출유망품목(10개) 발굴, 마케팅 및 상품화 등 지원
  - 농촌진흥청에서 과육이 단단한 수출전용 딸기 품종(매향)을 개발하여 딸기 수출 확대 ('11:21백만불→'15:34백만불) 현재 수출물량의 95%를 매향품종이 점유
- (홍보) 한류마케팅 등을 활용, K-Food Fair(3회)·안테나숍(6개소) 등의 확대를 통한 현지 홍보 및 문화창조벤처단지\* 등을 활용한 국내 홍보 강화
  - \* 문화창조벤처단지 내에 한식테마관 조성(2월)
- (물류인프라) 청도 물류기지와 중국 내 주요 거점지역 공동물류센터(8개)를 연결하는 콜드체인 배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부 내륙까지 진출
  - 현지 물류업체와 청도 물류기지 운영업체간 협력 강화(상반기 MOU 추진)
- (네트워크) 수출개척협의회(aT·KOTRA·지자체 등 참여)를 통해 수출 시장 정보제공, 홍보 및 현장애로 해소

- **(판로 확대) 온라인 농식품 판매관 확대\***, 현지 모바일 쇼핑몰 내 한국 식품관 개설, 현지 지역별 유통업체와 제휴하여 **대형유통매장 진출** 추진
  - \* 온라인 한국 농식품 판매관 : ('14) 2개소 → ('15) 4 → ('16) 6
- **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CJ 홈쇼핑 등에 입점 추진(5월)

• CJ프레시웨이는 산청군 33개 농가로부터 딸기를 매입하여 가공제품(잼·케이크 등) 제조에 활용하고, CJ대한통운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시장 개척(싱가폴 등 6개국에 100톤 수출)

## 5. 할랄식품 생산·수출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품목 다양화

- 할랄 생산기반 및 인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16년 수출 11억불 달성 추진('15년 대비 31% 증가)
- **(정보제공) 할랄 식재료 DB 구축, 할랄식품 수출지원센터 설치(3월)**를 통해 할랄인증·시장 정보 체계적 제공, '한-UAE 할랄식품포럼' 정례화
- **(생산기반) 국내 할랄도축·도계장 건립\***, 할랄식당 리모델링 지원 등
  - \* 수출용 생육 및 식재료 생산, 한식당 진출 등에 활용
- **(인증지원) 국내인증기관(KMF)과 UAE·인니 등과의 교차인정 확대, 할랄인증비용 지원 확대('15:7억원→'16:20)**
- **(홍보) 박람회(6회), 재외공관 연계 행사(UAE·카타르 등 9개 공관) 등 추진**

## 6. 일본 등 기존 주력시장 회복 및 신시장 개척 적극 추진

- **(기존시장) 기능성 식품 및 신선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일본·아세안·미주지역 등 기존 주력시장 회복**
  -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제품 개발, SNS를 활용한 젊은 층 공략, 한류스타를 활용한 K-Food Day 등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 \* 저도주·저염식 선호, 생면 선호도 증가, 건강·기능성 식품(당조고추·글루텐 프리쌀빵 등) 소비 확대 등
- **(신시장) 코셔식품 시장, 베트남 등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유망 품목 및 현지 바이어 정보 제공 및 해외인증 지원 확대 등 추진**

◆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내외 농촌관광객 적극 유치

\* 농촌 체험마을 방문객(전체/외국인) : ('15) 870만명/8.3만명 → ('16) 1,000/10

### 1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 승마 등 내외국인 선호 20개 관광자원을 엄선하여 정보 제공(4월)
  - \* 체험 프로그램, 인근 연계관광지, 숙소 및 음식 등
- 초·중등학교 현장체험 프로그램 및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육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10종)로 도시학생 유치(교육부 협업)
  - \* 자유학기제 연계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자 공고(1.6일)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을 통해 고택·종택 및 전통음식 등 지역별 테마관광 상품 개발 확대('15:2개소→'16:5)
  - \* '15년 실적 : (전남) 남도음식테마(3종), (경북) 명품고택 연계 관광상품(1종) 개발
- 코레일, 민간여행사 등과 협업\*을 통해 체험마을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으뜸촌\*\* 관광여행' 등 상품 개발(신규 10종)
  - \* '15년 민간 농촌관광상품 운영 실적 : 9,822명 이용, 만족도 94%
  - \*\* 농촌관광등급평가에서 전문야(4개분야) 1등급을 받은 체험마을(23개소)
- 전국의 자연휴양림(163개), 치유의 숲(13개),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 등과 지역명소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20개소)
  - 산림레포츠용 임도(전국 600km) 등을 활용하여 산악승마·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악레포츠 활성화
- 농어촌형 승마시설(15개소) 설치, 전문 승용마 생산농가(30호) 육성, 승마장 진입관련 규제개선 등 말산업 관광 인프라 지속 확충

- 쇼핑, 건강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상품과 연계한 **외국인 맞춤형 패키지 농촌관광상품 개발**(5종, 3월)
  - 농식품 수출과 연계하여 음식문화 체험관광 활성화
- 체험마을 등 우수 관광자원 중심, **농촌관광 스탬프투어 도입**(5월)

## ② 농촌관광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 '2016~2018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중화권 대상 집중 홍보
    - 중국·싱가폴 등 해외 현지 여행업계 및 언론 대상 홍보 강화
      - \* 중화권 현지 설명회(3개국) 및 국내 우수관광자원 팸투어(3회) 개최
- 외국인 선호 농촌관광자원 40선 수록 책자를 중국어(번체·간체) 및 영어로 발간, 관광공사 해외 지사(중국·미국 등), 해외 현지 여행사(100개소) 등에 배부(2만부)
- 공항 등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영어·중국어 안내책자**(2만부) 비치
- 파주 산머루 와인은 중국·대만 등 10개국 여행사와 연계한 관광상품(30여개)을 운영하여, '15년 외국인 관광객 5만명 유치
- 중화·동남아 등 **주한 유학생 농촌관광 서포터즈**(60명)를 활용하여 SNS(웨이보·페이스북 등) 등 온라인·모바일 홍보 강화
  -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농촌체험마을로 유치하는 **1교·1촌 프로그램** 개발(수도권 10개 대학교)
- **월별·테마별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등 우수 관광자원을 SNS(카카오토티스토리, 구독자 39천여명) 등을 통해 집중 홍보
  - **네이버 모바일 플랫폼(MODOO)**을 통한 홍보 확대('15:농촌체험휴양마을→'16: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등 추가)
- 도심에서 농촌관광 체험이 가능한 **상설 체험홍보관 운영** 및 **농촌관광 콘텐츠**(사진·동영상) **공모전 개최**(8월) 등

- 농촌 관광객이 집중되는 **관광주간**(봄철, 가을철)과 연계하여 모바일 쿠폰북 발행 등 프로모션 진행
- 공항, 기차역 등 거점교통망을 중심으로 교통·숙박·지역특산물 등을 수록한 **농촌관광 안내자료 비치**(영문·중문, 2만부)

### ③ 국내외 예약·결제 시스템 구축

-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4월)
  - 숙박, 체험프로그램 및 지역 특산물 구매 등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3월)
- **Hotels.com, AirBNB 등 해외 예약·결제시스템**에 농가민박·체험마을 등 우수 농촌관광자원 등재(150개소, 6월)
  - \* 민박B&B 인증 등을 통해 해외 관광객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인근 관광지·명승지 등 **연계관광 정보도 함께 제공**
  - 우수 관광자원의 지속적 발굴을 통해 **'17년까지 300개소로 확대**

### ④ 접근성 및 서비스 향상

- 농촌관광 등급평가 대상을 확대('15:350개소→'16:450)하고,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홍보·마케팅 등) 제공 등을 통해 품질 제고 유도
- 외국인이 많이 찾는 마을을 대상으로 거점 교통시설과 마을 간 **연계 교통 서비스\***를 시범운영(3개소)하고 **통역서비스\*\***(영어·중국어) 지원
  - \* (코스예시) 인천공항-농촌관광지-서울역, 김해공항-농촌관광지-부산터미널 등
  - \*\* 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전문인력풀 운영
- 농촌관광 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마인드·소방안전·식품위생 및 **서비스 교육** 등 지속 실시('16년 1천여명)

## IV. 추진방식

### ① 전문경영체 및 인력 육성

-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분야별 전문경영체를 발굴하고,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최고수준 전문경영체는 6차산업 교육 시 현장사례와 교수요원으로 활용
- 신규 농업창업자 등이 전문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체계를 품목별·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개편
  - 농업경영체 DB, 농업인력포털 DB 등을 활용하여 농업교육 통합 DB를 구축하고, 농업인 역량진단 및 교육성과평가시스템 구축(5~7월)
  - 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 공모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등 농업 교육과정을 수준별·발전단계별로 개편(6월)
  - 영농승계 농가 특화교육과정을 마련, 안정적 영농승계 유도(6월)
    - \* 세무·회계·법률 컨설팅 및 우수 승계사례 홍보, 부모-자식간 경영협약 유도
  - 경영·기술 경진대회 등 우수 전문경영체의 자발적 역량개발 방안 강구
    - \* 품목별·분야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전문경영체간 기술향상 노력 촉진 환경 조성
- 만 18~39세 청년들의 창업 초기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매년 300명을 대상으로 창업안정자금 지원(매달 80만원, 2년간)
  - \* (창업준비 단계) 영농창업계획 이행을 위한 영농창업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 시 훈련수당 지급
  - \* (창업단계) 창업(예정) 소재지에 주거 이전 및 농업경영체 등록 등 요건 확인 후 창업안정자금 및 멘토링·컨설팅 지원



- 신규 농지수요가 많은 지역의 농지를 매입(농지은행), 2030세대 신규 취농인과 청년창업인 등에게 전문기술 교육 등과 함께 패키지 지원
  - 귀농·귀촌 실적 및 2030 창업수요가 많은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취농인당 1,000m<sup>2</sup> 규모의 농지 임대

## ② 외부 민간자본 및 기술 활용

- 농산업 가치창조 펀드\*(5년간 1천억원), 아이디어 창업펀드\*\*(120억원), 6차산업 전문펀드\*\*\* (400억원) 등을 활용하여 농식품 창업 경영체 지원

\* 농식품 모태펀드와 농협중앙회 공동출자로 창업초기 청년(39세이하) 농축산기업에 투자

\*\* 농식품 모태펀드와 GS그룹 공동출자로 창업 3년 미만 아이디어 벤처기업에 투자

\*\*\* 6차산업 전문펀드는 현재까지 5개 경영체에 53억원 투자

- 안동참마를 활용해 빵·국수 등을 생산하는 안동고을탁촌장영농법인은 '14년 모태펀드를 유치(9억원)하였으며,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15년 매출액 15억원 달성

- 우수 농식품 창업기업이 일반국민,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운영(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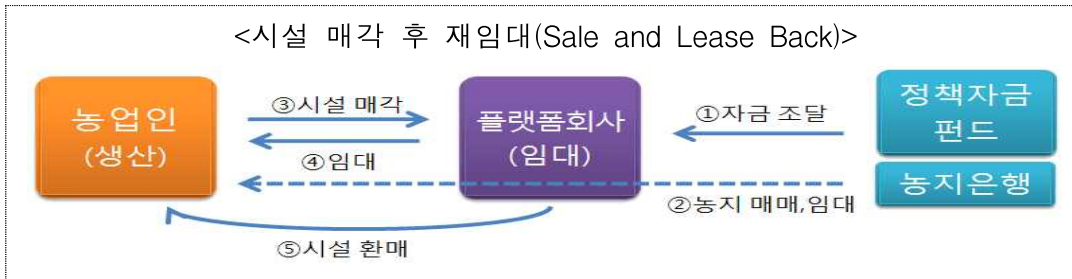
\* 기업의 사업계획, 상품 등을 온라인 사이트에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이 소액(최대 2백만원)을 투자

- 씨앗스티커를 판매하는 오믹시스㈜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3.6억원 투자를 유치('14)하여 상품개발, 해외 특허취득 및 마케팅에 활용하고 수출까지 추진('15년 매출액 12억원)

- 창업의지와 기술력은 있으나 첨단시설 초기 투자 여력이 없는 농업인이 필요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농업인이 시설 완공 후 자산운영회사에 매각하고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 자산운영회사의 시설구매 자금은 모태펀드 등 외부투자자 조달

\* '16년에 첨단 농업시설 5~6개소 설치 추진(총 200억원 규모)



- 물적 담보가 없이도 우수 기술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가치 평가료의 일부(최대 1천만원) 지원
- 농진청·산림청·대학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품목별 SNS 밴드 운영 등)
- 대기업 퇴직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경영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수출 노하우와 기술역량 전파('15:146개업체→'16:200)
-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유치·생활여건 개선·주거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지역 산업거점 육성(6개소)

\* (기업유치) 농공단지 리모델링,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일자리 및 인력양성) 취업훈련, 창업·기술교육 등, (생활여건 개선) 교육·문화 특화거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주거지원) 임대주택, 신규 주택단지 부지조성 등

- 구례 자연드림파크는 I-Coop이 농공단지를 활용하여 조성하였으며, 우리밀 리면공장, 영화관, 숙소사 등을 설치하고 지역단위 거점으로 육성하여 연간 고용 432명, 지역농산물 42억원 구매

### ③ 현장규제 발굴·개선

- 해제·행위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된 농업진흥지역을 6차산업, 임대주택 및 기타 다양한 2·3차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단위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아 지속관리가 **부적합한 지역은 진흥지역 해제**
-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하고, 농업보호구역 내에 6차 산업화 시설 등 **허용행위 대폭 확대**
-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농업생산 목적의 농지 집단화)과 농업보호구역(용수원확보 등 농업환경 보호)으로 구성
- **6차산업화 지구 규제특례 확대** 등을 통해 농산물 가공·유통·관광 등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고부가 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
- \* 국내 7개 기업과 분양계약 체결 및 미국·중국·체코 등 6개 기업과 외국인 투자신고 완료('15.12월)

#### 4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

- 기관간 **협업, 산하 공공기관 역량 결집,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관련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현장애로 해소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추진상 조율**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의 중복성을 제거하여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 **농협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협업을 통해 수출·농촌관광 등 현장애로 해소와 시너지 효과 창출
- 기업과 농업 간 **상생협력의 지역 및 민간단위 자율적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시·도 단위 상생협력 협의체 구축**(4월), 식품·외식 기업 **애로해소 및 상생협력 확산 방안 마련**(6월)



## 3. Presentation



##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Ⅱ.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 ① 그동안 추진성과
- ② 2016년 중점 추진과제
- ③ 추진방식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화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그동안 추진성과



그동안 6차산업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한 결과,

관심과 열기가 확산되어  
창업과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장에는 아직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 그동안 추진성과

- 장관 주재 **현장간담회**(’15년 90회, ’16년 7회)를 통해 6차산업화·수출 등 주요과제에 대한 현장애로 청취
- 6차산업·스마트팜·수출 관련 **홈페이지 설문조사** 실시(’16.1.6~10) 2,748명 응답

### 농산물 생산 및 제조·가공

- 원료 농산물 가격이 높아 비용이 많이 발생
- 농가가 **소규모로 생산**하여 대량수요처 요구에 대응이 어려움
- 디자인·브랜드 등 **상품화 역량**이 부족

### 유통 및 수출

- 우수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로**를 찾기 어려움
- 중국 내륙을 연결할 수 있는 냉동·냉장 등 **물류체계** 필요
- **검역·통관** 기간 단축이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

### 농촌 관광

- 특색있는 **관광상품** 불충분
-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고 교통 등 **접근성**이 부족
- 외국인 농촌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숙소 예약, 교통, 통역 등) 미비

☞ **생산, 가공, 유통, 수출의 연계성이 낮고**  
**경영주체들의 기술과 자본, 경영 능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

그러나, 아직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은 소규모 분산생산하는 구조로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 간의 연계성이 낮고,

기술과 경영 능력도 부족합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출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우리 정부의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생산, 가공, 수출, 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출도 늘리겠습니다.

**전략품목 중심으로 스마트팜 확산**

- 스마트팜 확산(스마트온실 600ha, 스마트축사 200호 보급)
  - 수출전문단지 조성(토마토, 파프리카 등)
  - 시설 개선, 가축분뇨 자원화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 빅데이터 분석(세종·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업)을 통해 국산 생육관리 S/W 개발·보급
  - 스마트팜(시설, 자재, 운영 S/W) 국제박람회 개최
- 토마토 대학 등 현장교육, A/S 현장지원센터(8개소) 운영

**우일계전공업주 농업 투자 사례**

- ▶ 농업회사법인 우일팜(주)을 설립하여 화옹지구 첨단유리온실을 인수하고 수출용 토마토 재배 ('16년 1월부터 일본 수출)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 확대**

- 들녘경영체 확대(224개소 → 250) 및 사업다각화 지원
-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공동경영체 15개소 육성
  - 공동생산·판매 통해 생산성·품질 향상 및 수급 조절
- 주산지 농협 중심 원료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 논·밭 공동경영체 대상 농기계 공동 이용 활성화

**영실영농조합법인 사업 다각화 사례**

- ▶ 벼 이외에 답리작(조식료, 맥주보리), 한우판매식당 운영 및 수제맥주 제조·판매로 연매출 2.5배 증가 ('10년 19억 → '14년 49억)

**6차산업 시스템이 발전하려면  
우선, 탄탄한 생산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략품목 중심으로  
스마트팜과 공동경영체를 확산하여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농가단위 가공 활성화

-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판로·자금 등 지원
  - R&D로 개발된 기술 현장적용 지원
-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44개소)를 통해 시제품 생산 및 창업 지원
- ▶ 6차산업지원센터를 통해 디자인·포장재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공골식품영농조합법인

- ▶ 충남혁신센터와 6차산업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전통 장류 포장 디자인을 개선하고 갤러리아 백화점 입점

### 식자재 산업 육성

- ▶ 산지와 외식업체·단체급식 연계
  - 전처리(preprocessing) 농산물 공급 확대
  - HACCP 적용으로 안전관리 강화
- ▶ 반가공(분말·건조 등) 소재 가공시설 확대 (3개소 → 10)
  - 곡류·과일류 등을 미분·농축하여 제조·가공업체에 공급

#### 농협 안성물류센터

- ▶ 채소류 등을 전처리하여 삼성웰스토리(식자재), 홈플러스(간편채소) 등에 공급

### 지역단위 식품산업 육성

- ▶ 가공식품 원료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 \* 국산 원료사용비율: ('12) 30% → ('17) 35
  - 주산지별 식품원료 정보시스템 내실화
  -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인증제 시범적용
- ▶ 지역 농산물과 식품기업 상생 모델 확산 (MOU 37건 → 62)

#### 천안당 호두과자

- ▶ 지역의 생산농가(45농가)로부터 국산 밀과 팥을 공급받아 천안 호두과자 생산 ('14: 밀 445톤/팥10톤 → '15: 560/50)

둘째, 농산물 제조·가공을 활성화하고  
식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서  
농가의 창업과 상품화, 판로 등을 지원하고,

식자재 산업과  
지역단위 식품산업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유통 효율화 및 유통산업 육성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103개소 → 140)
  -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표준조례안 제정·보급 (7월)
- Pos - mall,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직거래 확대
  - 외식·가공업체 등 대량 수요처와 산지간 직거래 매칭 시스템 구축
  - Pos - mall은 소량·다품목 익일 배송시스템 구축
- 농식품 유통산업 육성
  - 유통주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저장·물류 등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농협-쿠팡 협력사례

- ▶ 소셜커머스기업 쿠팡은 농협 물류센터에서 신선농산물을 10~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농산물 직배송 서비스를 \* 자체 배송망, 물류센터 저온저장고 등을 활용해 신선도 유지

수출 확대

- FTA를 활용, 전략 품목 중심으로 수출 확대
  - 김치 대중국 수출 확대 위해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미래부 협업), 통관기간 단축(식약처·관세청 협업), 중국 내 물류 인프라 확충
  - 한류마케팅, K-FOOD Fair, 한식세계화 연계 홍보
- 기업의 해외 유통망 적극 활용
  - 중국 진출 롯데마트, CJ홈쇼핑 등 입점 추진
- 농식품 수출개척협의회(aT·KOTRA 등) 통해 시장정보 제공, 홍보, 현장애로 해소

CJ-산청군 협력사례

- ▶ CJ프레시웨이는 산청군 딸기를 직매입, 가공제품(잼, 케이크 등)에 활용하고, CJ대한통운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 \* 싱가포르 등 6개국에 100톤 수출(15)

셋째, 로컬푸드 직매장, 공영홈쇼핑 등 차별화된 신유통경로를 확대하고

FTA를 활용하여, 김치 등 전략품목의 대중국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 승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20종)
  - 자유학기제와 연계, 직업체험프로그램 개발(2월)
- 고택·종택 및 전통음식 테마상품 확대
- 휴양림·치유의숲과 지역명소 연계(20개)

**국내외 예약결제시스템**

- 농촌관광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4월)
  - 지역특산물 구매, 숙박·체험 등 예약
- Hotels.com, AirBNB 등에 우수민박 150개소 등재(6월)
  - '17년까지 300개소로 확대

농촌 체험마을 관광객 수



파주 산머루농원

- ▶ 중국·대만 등 10개국 외국인 관광객 5만명 유치('15)

**정보 제공**

- 중화권 대상 집중 홍보(문체부 협업)
  - '2016-2018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
- 네이버, 카카오스토리 등을 활용, 우수 관광자원 정보 적기 제공
  - 월별·테마별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등

**접근성 및 서비스 향상**

- 농촌관광 등급제 확대(450개 체험휴양마을)
- 연계교통 제공(역·터미널 → 관광지 → 숙소)
- 외국인 관광객 대상 통역 서비스 제공

넷째, 국내외 관광객을 농촌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승마, 전통음식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국내외 예약결제시스템 구축 등

농촌관광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 질도 높이겠습니다.



## 추진방식 개선을 통해 체감성과를 높이겠습니다.

3. 추진방식

### 전문경영체·인력 육성

- 생산, 유통, 가공, 관광 등 전문경영체 발굴
  - 맞춤형 교육 및 지원으로 기술·경영 역량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창업 보육·컨설팅
- 청년창업자에게 2년간 창업안정자금 지원

### 외부 자본·기술 활용

- 농식품 모태펀드 활용 및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 대기업 퇴직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경영자문단' 확대(200개)
-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산업거점 육성(6개소)

### 규제 개선

- 해제·행위제한이 완화된 농업진흥지역을 6차산업, 임대주택, 기타 다양한 2·3차 산업에 활용
- 6차산업지구 관련 규제특례 확대
- 국가식품클러스터 규제프리존을 활용, 투자 활성화

### 협업 및 기업과 상생협력 강화

- 지자체와 협업으로 사업 중복성 제거 및 시너지 극대화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출·농촌관광 등 현장애로 해소
- 기업과 상생협력을 지역·민간 위주로 확산

8

이상의 네가지 과제에 대해  
추진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체감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경영체를 선발하여  
농기업가로서 경영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자본과 기술의 활용,  
현장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 관계 부처 및 민간기업과의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6차산업 고도화를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경기 진작과 수출 확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 고령농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배려 농정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6차산업 고도화를 통해  
당면 과제인 내수경기 진작과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영세 고령농에 대한 배려 농정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보도자료



 <p>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b>농림축산식품부</b>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p>	<h1>보도자료</h1>
<p>2016년 1월 14일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기획재정담당관 박수진, 서기관 김재형(044-201-1317) / 제공일 : 1월 13일(총8매)</p>	

##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 -

### 《 주 요 내 용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개별농가 농외소득 위주로 추진해온 6차산업을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농촌경제 및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전문경영체 육성을 통해 농업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자본·기술 활용, 기업과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하여 성과 제고
- ① (농산물 생산 첨단화·전문화) 전략품목 중심으로 '17년까지 스마트팜 4천ha(현대화 온실의 40%)를 보급하고,
  - 쌀 들녘경영체 확대(224개소→250) 및 밭작물 공동경영체 신규 육성(15개소)을 통해 품질제고 및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 ② (제조·가공 및 식품산업 활성화)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6차산업 지원센터 등을 통해 창업 및 디자인·판로·자금 등을 지원하고,
  - 식품·외식업체 등의 국산 농산물 사용을 확대('12:30%→'17:35)
- ③ (유통효율화 및 수출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103개소→140), 포스몰·공영홈쇼핑 등 직거래 확대 및 농식품 유통산업을 육성하고,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대중국 김치수출 확대를 위한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 및 통관기간 단축, 한류마케팅 등 추진

- ④ (내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2016~2018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 온라인예약시스템(airBNB 등) 구축,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중화권 언론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농촌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연계교통 프로그램 등 접근성 제고를 통해 내국인 농촌관광객도 더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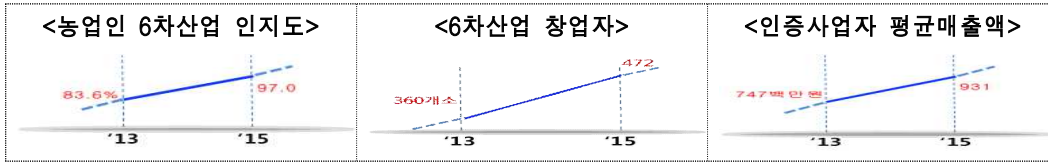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는 1.14일(목) 2016년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보고

- 농식품부는 기존 농외소득 중심의 6차산업을 넘어서, 탄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가공, 유통·수출 및 관광을 연계한 지역 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 외부자본과 인력 활용 및 기업참여 촉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체감 성과를 높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식품 수출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6차산업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 결과, 6차산업 창업과 인증사업자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전국에서 6차산업화 열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 현장에는 아직도 안정적 원료 공급, 상품화 역량 및 국내외 판로, 경영주체의 기술·경영능력 등에서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6차산업을 지역단위로 확산하기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였다.

- 장관주재 현장간담회('15년 90회, '16년 7회) 및 홈페이지 설문조사('16.1월) 등을 통해 6차산업화·스마트팜·수출 등 주요과제에 대한 현장애로 수렴

## '16년 중점 추진과제

- 이와 관련하여, 올해 농식품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농산물 생산 첨단화·전문화

- (스마트팜 확산) '17년까지 현대화된 온실(10천ha)의 40%(4천ha)에 스마트 온실을 보급하고, 스마트 축사도 전업농의 10%(730호)까지 보급
  - 국내환경에 적합한 생육관리 S/W를 개발·보급('16:토마토→'17:딸기·국화·파프리카)하고, 현장지원센터(8개소)를 통해 A/S 등 현장애로 해소
  - 대호간척지 등에 규모화된 수출전문 첨단 시설원예 단지를 조성('16까지 10ha)하고, 수출 전략품목(토마토·파프리카·화훼 등) 중심으로 ICT 융복합 첨단온실 신규 지원(16ha)
- (주산지 중심 조직화·규모화) 들녘경영체\*를 확대('15:224개소/51천ha→'16:250/55)하고, 경영체 특성·여건을 고려한 사업다각화 모델 육성(22개소)
  - 주산지 중심으로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유통·수급조절이 가능한 발작물 공동경영체 15개소 육성

## ② 제조·가공 및 식품산업 활성화

- **(농가단위 가공 및 창업 활성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확대('15:30개소→'16:44)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존 6차산업 창업지원 기관\*(46개소)을 연계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코칭·멘토링과 자금 지원**
  - \* 6차산업지원센터(9개소), 농산물종합가공센터(30개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귀농귀촌종합센터, aT 등
- **(식자재산업 육성)** 농협(안성) 물류센터 전처리 시설을 활용, 외식·단체급식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처리(Preprocessing) 농산물을 공급**하고,
  - 농식품 분말·건조 등 식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반가공 시설 지원도 확대**('15:3개소→'16:10)
- **(지역단위 식품산업 육성)** 가공식품 원료의 **국산원료 사용 비율을 확대**('12:30%→'17:35)하고, 지역특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업과 농업계간 **상생모델 확산**('15:MOU37건→'16:62)

## ③ 유통 효율화 및 수출 확대

- **(유통효율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5:103개소→'16:140), **Pos-mall**을 통한 소량·다품목 **익일배송 서비스 확대\***, **공영홈쇼핑**에 지역특화 상품 전용시간대 설정 등 **新유통경로를 통한 판로를 확충**하고,
  - \* 지역물류 거점 확대 : ('15) 4개소 → ('16) 6
  - 유통주체 전문성 제고, 저장·물류 등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등을 통해 **농식품 유통산업 육성**
- **(김치·쌀 등 수출 확대)** 대중국 검역장벽이 해소된 김치는 올해 대중국 100만불 수출을 목표로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미래부 협업), **수출 통관기간 단축**(식약처·관세청 협업) 등을 추진하고,

- 쌀은 대중국 수출 2천톤을 목표로 중국인 선호 품종을 **수출용 벼 재배단지\***를 통해 생산하고 안전·고급 이미지로 고소득층 적극 공략
    - \* 충남 당진 대호간척지 수출용 벼 재배단지 확대('15:200ha→'16:540)
  - **우리 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시장 진출 적극 추진**
    - \* 중국 진출 롯데마트, CJ홈쇼핑 등 입점 추진
  - **중국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도 물류기지**와 중국 내 거점 지역 공동물류센터(8개소)를 연결하는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10개) **발굴 및 한식 등 한류마케팅**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
- **(주요 수출시장 공략)** 생산기반(도축·도계장 등) 및 인증지원 등을 통해 **할랄식품 수출 11억불**('15년 대비 31% 증가)을 추진하고, 현지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일본·아세안 등 기존 주력시장 회복** 추진

#### ④ 국내외 농촌관광객 적극 유치

- 올해 농촌 체험마을 전체 방문객 1,000만명, 외국인 방문객 10만명을 목표로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접근성과 서비스 질 향상
- **(관광상품 개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고택·종택 및 전통음식 테마상품 등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 \* 승마체험, 금년 본격 도입되는 자유학기제 연계 체험프로그램(5종) 등
- **쇼핑·건강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상품과 연계한 패키지 관광 상품(5종) 및 코레일 연계 관광상품 개발(신규 10종)**
- **(정보 제공)** '2016-2018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 중국·싱가폴 등 **중화권** 현지 여행업계 및 언론 대상 **홍보**를 집중 추진하고,
  - 중화·동남아 등 주한 유학생 대상 **농촌관광 서포터즈(60명)**를 활용하여 SNS(웨이보·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 강화**

- **(접근성과 서비스 향상)** 농촌관광 등급제를 확대(450개 체험휴양마을) 하고, 역·터미널과 관광지·숙소 간 **연계교통 서비스** 시범운영(3개소), 영어·중국어 **통역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 **(국내외 예약결제시스템 구축)**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해외 예약·결제시스템**(Hotels.com, AirBNB 등)에 농가민박·체험마을 **150개소\*\*** 등재 등 안방에서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지역특산물 구매, 숙박, 체험 등 예약 가능
  - \*\* '17년까지 300개소로 확대

## 추진방식 개선

- 농식품부는 위의 4가지 과제를 추진하면서, 농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 하겠다고 하였다.
- 우선,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분야별 전문 경영체를 발굴하여** 품목별·단계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기술·경영역량을 강화**하고,
  - 청년 창업자 대상 **창업안정자금 지원**(2년간 매달 80만원) 및 소규모 맞춤형 **농지 임대차** 등을 통해 아이디어와 의욕을 가진 창업 희망자를 지원한다.
- **모태펀드\*** 및 **클라우드 펀딩** 활용, 시설매각 후 **재임대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농업 외부의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 \* 농협공동출자(5년간 1천억원), GS공동출자(120억원), 6차산업전문펀드(400억원) 등
  - \*\* 농업인이 시설 완공 후 자산운영회사에 매각하고 재임차하는 방식
  - 농촌 거점지역에 **기업유치·생활여건 개선·주거** 등을 패키지로 지원 하여 외부 자본·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활기찬농촌 프로젝트**도 추진한다.(전국에 6개 거점 조성)



- 해제되거나 행위제한이 완화된 농업진흥지역을 6차산업 등에 활용하고, 규제특례 확대 등을 통해 6차산업화 지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 또한,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업,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체감성과를 확산한다.
  - 특히,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역·민간 단위로 확산할 계획이다.
  - \* 시·도 단위 상생협의체 구축(4월)
- 이동필 장관은 “올해에는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농촌관광을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출 확대에도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 “농촌지역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 고령농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배려농정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사례

지 역	주요 내용
순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차산업화 지구를 중심으로 장류 제조업체(86개소)가 집적화 되어 지역농산물(고추·콩 등, 700여 농가와 계약재배)을 활용한 장류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li> <li>○ 장류산업 매출액은 4천억원(전국의 40% 수준), 고용인원은 8백명 수준으로 각각 순창군 전체의 53%, 64%를 차지</li> <li>○ '15년 방문객은 400만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li> </ul>
영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도 주산지(1,500ha, 630억원, 전국의 10% 수준)로 풍부한 원료 농산물을 활용한 와이너리(41개소)가 발달하여 최근 5년간 와인생산액 260% 증가('11년:12억원→'15:43, 전국의 23% 수준)</li> <li>○ 와이너리를 연계한 와인탐방로드 조성 등으로 포도·와인 관련 방문객은 연간 43만명 수준(경제적효과 100억원)</li> </ul>
문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5,500톤)하며, 오미자·사과 가공산업(92개소) 매출액은 연간 600억원 수준</li> <li>○ 민간기업(광동제약 등)과 연계한 오미자 가공시설 구축으로 약 100여명 고용효과 유발</li> <li>○ 문경 오미자 생산면적(1,000ha)은 최근 5년간 66% 증가</li> </ul>



## 2016년 업무계획



---

# 2016년 업무계획

---

2016. 1.

농림축산식품부





# 목 차



<b>I . 2015년 농정 평가 .....</b>	<b>65</b>
<b>II . 2016년 농정 여건 및 기본 방향 .....</b>	<b>75</b>
<b>III . 주요업무 추진 계획 .....</b>	<b>83</b>
<b>1.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b>	<b>85</b>
(1)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 .....	86
(2) 전문인력 양성 .....	89
(3) 공동경영체 활성화 .....	92
(4) 농식품 수출확대 .....	95
(5) 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	98
<b>2.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b>	<b>104</b>
(1) 식량의 안정적 공급 .....	105
(2)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	110
(3)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	119
(4)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125
<b>3. 농업인 소득안정 및 삶의 질 제고 .....</b>	<b>130</b>
(1)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	131
(2) 위험관리 강화 .....	135
(3) 농촌주민 복지 증진 .....	140
(4) 정주여건 개선 .....	143
<b>4.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b>	<b>146</b>
(1) 청년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	147
(2)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150
(3) 농업의 6차산업화 .....	153
(4) 귀농·귀촌 활성화 .....	158
<b>IV . 과제별 주요 일정 .....</b>	<b>161</b>
<b>&lt;참고&gt; 박근혜농정 주요 특징 및 지난 3년간 주요 성과 .....</b>	<b>179</b>





## I . 2015년 농정 평가



# 1. 농정 과제

## 가 박근혜정부 농정 방향

◆ 박근혜정부 농정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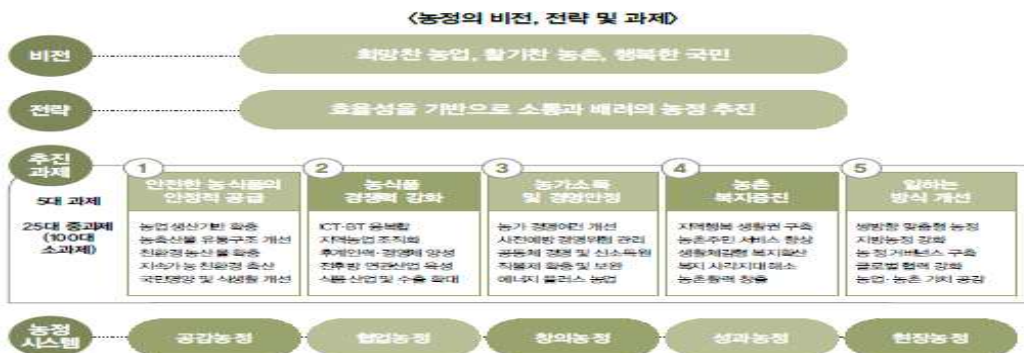
□ (패러다임 전환) 농업을 경쟁력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추진하면서 농정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

농정목적	효율성·경쟁력 중심	→	기술적 효율성과 함께 농업인의 행복 동시 추구
농정대상	개별 경영체 중심	→	지역 공동체 기반의 공동경영 강화로 조직화·규모화의 이점 제고
정책내용	생산 중심	→	6차산업 중심의 융복합과, 일터·삶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가치 극대화
접근방법	중앙정부 주도	→	지역의 역할과 주민참여 강조 농정에 대한 자율성·책임성 강조

□ (농정로드맵 수립) 국정과제 실천 및 농정신뢰 회복을 위해 박근혜정부 5년간의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13.10월)

○ 생산자·소비자단체·식품업계·언론·학계·지자체 및 일반국민 등의 폭넓은 소통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주요 내용)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쟁력·소득·복지 등 3대 축을 기초로 5개 분야, 100개 과제 선정



## 나 2015년 농정 과제

- ◆ 박근혜정부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방안**(14.11월)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실천
- ◆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과의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농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 **농정의 체감성과 확산**을 위해 **스마트 농정 추진**

### 1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추진

- 개방화에 대응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들녘단위 규모화, ICT 융복합 확산, 과학·기술농업 선도주체 육성 등 추진
-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
- FTA를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 농자재·신소재 등 **미래 전략상품 개발** 추진
-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영세 **고령농 배려** 및 **소득·경영 안정장치 확충**

### 2 FTA 등 개방화 대책 수립

- FTA 체결 영향을 분석하여 농업인, 전문가, 지자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가별·품목별 대책**을 수립
- 국회 여야정 협의사항인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및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에 대해 **충실하게 검토**

### 3 스마트 농정을 통해 농정 체감성과 확산

- **경영체 DB, 지역단위 농발계획** 등을 토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여 **효과를 높이고**, **보조금 유용 등 비정상 사례 해소**
-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는 **전면 개선**
- **관련부처, 산하기관, 도시 등 외부와의 협업 강화**

## 2. 2015년 주요 성과

### 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

- (ICT융복합) 스마트팜이 5배 이상 확대\*되어 농업의 첨단화·수출 산업화 기반이 마련되고, 창조마을 확산(12개소)을 통해 지역 활력 창출

- \* 스마트온실/축사 : ('14) 60ha/30호 → ('15) 364/156
- \* 스마트팜 생산성 25.2% 상승, 고용노동비 9.5% 절감

- (6차산업화) 전국적인 6차산업화 열기로 6차산업 창업이 확대되고, 경영다각화·판로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6차산업 창업자수 전년대비 20%, 인증사업자 평균매출액 전년대비 12% 증가

- (수출확대) 세계 경제침체·엔화 약세, 메르스 사태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중국·할랄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 증가

- \* ('15) 전년 대비 대중국 수출 6.2%, 대GCC(걸프연합) 수출 8.5% 증가

- 정상외교를 통해 중국 내 김치·쌀·삼계탕 검역조건에 합의하고, 김치·포도·흰우유(중국), 쇠고기(홍콩) 등의 위생·검역 장벽을 해소하는 등 수출 확대기반 마련

- (상생협력)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MOU 23건) 되고, 단순 계약재배 외에 유통·수출·종자·ICT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식품산업) 원료 농산물 정보시스템을 구축(6월)하고, 10개 품목별 국내외 시장동향 통계를 마련하는 등 식품산업 발전기반 확충

### ②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마련

- 한중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에 의한 상생협력기금 조성방안 마련

- '15.6월 한중 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농업분야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보완대책(10년간 1,595억원)을 마련하였으며, 11월 국회통과시 추가 보완대책(10년간 16천억원) 마련

### ③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부담 완화

- 3차에 걸친 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연간 1,222억원)  
\* (1차/15.1월) 연간 336억원 절감, (2차/7월) 572억원, (3차/12월) 314억원
- 쌀 고정 직불금('14:90만원/ha→'15:100) 및 이모작 직불금('14:40만원/ha→'15:50) 단가 인상, 재해보험 보상수준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정 도모  
\* 재해보험 보상수준 : ('14) 80% → ('15) 85 또는 90%까지

### ④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및 新유통 확산

- 생산자·소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개최(7회)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가뭄 등 공급불안 상황에서도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  
\* 채소류 가격변동률 : ('10~'14평균) 15.9% → ('15) 11.8
- 「농산물직거래법」 제정(6월), 농산물 전용 TV홈쇼핑 개국(7월)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4:71개소→'15:103) 등 직거래 인프라 확대  
\* 유통비용 절감액 : ('14) 6,241억원 → ('15p) 7,491

### ⑤ 가축질병·가뭄 등 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

- (가축질병) 구제역 백신접종 체계 구축 및 AI 상시예찰 강화, 현장 상황에 따른 선별적 살처분 시행 등으로 경제·사회적 비용 감축  
\* 구제역 살처분 규모/재정비용 : ('10~'11) 348만두/2조7천억원 → ('14~'15) 17만/6백억원  
- KAHIS 활용 생산·유통 이력정보 DB화, 축산차량 GPS 장착(48천대)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선진화된 방역 시스템 구축
- (가뭄) 봄가뭄 발생시, 긴급급수 대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가뭄 조기 극복  
\* 국방부, 경찰청, 안전처, 국토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협업

### ⑥ 영세고령농에 대한 배려농정 및 농촌 지역개발 확대

- (배려농정) 가사도우미 지원('14:10천가구→'15:15), '복지서비스 정보달력' 배포(39천부), 농촌형 교통서비스('14:13개소→'15:21) 등 체감도 높은 지원 강화

- 연금보험료지원 기준소득금액 상향(14:85만원→15:91), 공동아이돌봄 센터(31개소) 및 농업안전 보건센터(8개소) 등 **농촌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시행
- **(지역개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5,390개 마을), 행복마을콘테스트(2,017개 마을) 등 자발적 주민참여에 따른 **지역개발** 추진

## 7 농업현장 규제 적극 개선

-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4차례 개최하는 등 현장규제 적극 발굴·개선
- 6차산업시설 진입도로 규제 개선, 소규모 탁·약주 생산판매 허용,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 등 **422건의 과제** 발굴·개선

## 8 농업·농촌 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 **농업경영체 DB** 등 과학과 통계에 기초한 **합리적 농정 추진기반** 마련
  - '15.12월말까지 약 **160만 농가**가 DB에 등록하였으며, 경영체 DB와 농식품부 사업(62개) 및 타부처 전산망을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신청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로 농업인 여부를 확인,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어 연간 4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고, 가축질병 등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현장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 농진청·지자체·선도농·대학·기업 등 참여 **기술공감 밴드**(20품목)를 운영하고, KAHIS 시스템 구축 및 축산차량 GPS 부착(약 48천대)

- 한우목장을 운영하는 A씨는 태어난 지 얼마안 된 송아지가 이상증세를 보여 '한우 기술공감' 밴드에 글을 올린 후, 수의사축산전문가선배 축산인의 조언으로 애로사항 해결

- **관련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복지부와 협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나라미 공급 개선
  - (기존) 20kg 포장 단량공급, 10kg 포장은 7~8월 한정공급 → (개선) 10kg 포장 연중공급

### 3. 보완할 사항

#### 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체감성과 확산

-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핵심과제별로 나타나고 있는 성과를 현장에 확산하고,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필요
  - (ICT융복합) 국내 실정에 맞는 스마트팜 운영 S/W 개발·보급이 미흡하고, 첨단온실 등과 연계를 통한 수출농업화 필요
    - 창조마을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맞게 원격의료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 강화 필요
  - (6차산업화) 농진청·지자체·중기청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6차 산업 창업정책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체계화할 필요
    - 기획판매전 등 일시적 판로지원 외에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속적인 판매망 구축 및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판로 구축 필요
  - (수출확대) 고품질 쌀, 삼계탕, 김치 등 전략품목 중심의 농식품 수출 인프라를 확대하고, 할랄시장·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 적극적 개척 필요
  - (상생협력) 지자체·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필요

#### ②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최근 수년간 쌀 풍년으로 쌀 재고는 증가하는 반면, 밀·보리 등 타작목의 생산은 국내수요에 비해 매우 불충분
  - 답리작 확대, 간척지 등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필요
  -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생산 유도 및 수요확대 등 중장기 대책 필요
-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양파·배추 등 주요작목별로 수급·가격 불안발생 빈번
  - 농산물 관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생산자·지자체 등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필요



### ③ 농촌 활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 도농간 소득 및 주거·문화·의료·교통 등 삶의 질 인프라 격차 완화 필요
  - 다양한 사업 간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통합적 시각의 지역개발 추진 및 범부처·기관간 협업을 통한 농촌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충 필요
-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귀농·귀촌이 증가 추세이나,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은 아직까지 미흡
  - 도시의 청년 인재들이 농식품분야에서 창업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토지·자본·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산업·문화·주거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지역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 필요
- 모태펀드,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농업·농촌분야에 도입하는 등 민간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④ 현장 소통 및 공감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

- 현장에 기반을 둔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더욱 강화하여 농정신뢰 제고 및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필요
  - 현장 소통을 통해 농업계가 한 방향을 보고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도록 유도하고,
  - 그동안 추진한 미래성장산업화 정책의 구체적 성과를 토대로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 확산 필요
- 정책 성과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해 정책 대상을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지자체·소속기관 등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농업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경영·마케팅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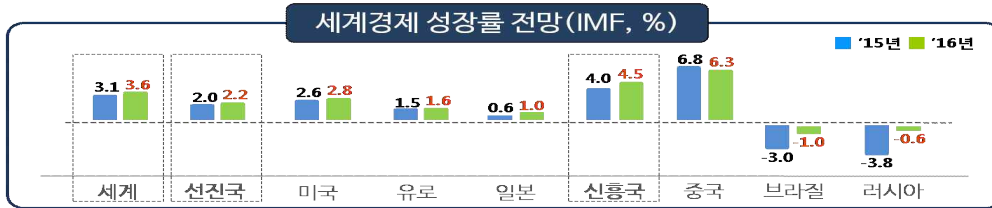
## Ⅱ. 2016년 농정 여건 및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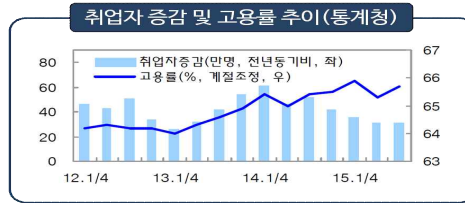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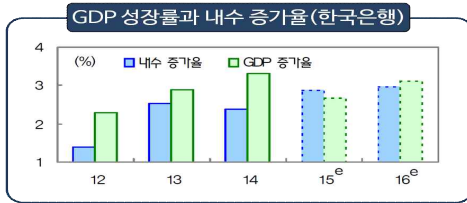
# 1. 농정 여건

## 가 국내외 경기 전망

- (세계경제) '16년 성장률은 완만한 개선을 보일 전망이나, 일본·유로존은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
- 브라질·러시아 등 신흥국 부진 등으로 대외여건 개선효과는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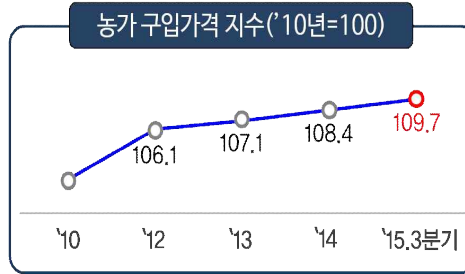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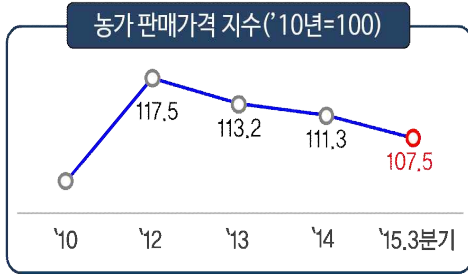
- (국내경제) 민간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중심 회복세가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고령화·기업경쟁력 약화 등 부담이 가중될 우려
- 내수회복에 힘입어 고용여건은 개선되나 청년고용 둔화 우려도 상존



## 나 농업·농촌 여건

- (개방확대) 중국·뉴질랜드 등 농업강국과의 FTA가 지난해 말 발효 (발효된 FTA 14건, 51개국)되는 등 대외개방 확대
- '16년부터 쌀 수출이 개시되고, 각국과의 검역협상이 타결되는 등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수출기회로 활용 가능
- 할랄시장·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개척이 기대되는 반면, 중국·일본 등 인접국 및 신흥국의 성장둔화는 수출 위협요인으로 작용될 우려

□ (농가경제) 농가 교역조건은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직불제 개선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국제곡물 가격은 생산호조 및 재고확대 등으로 하락세가 예상되나,  
엘니뇨 등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부진 우려 등 불확실성 상존

\* 세계곡물재고율(미농무부, 기말재고/기간소비) : ('14) 21.2% → ('15<sup>e</sup>) 22.8 → ('16<sup>e</sup>) 22.9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향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제유가 전망(두바이유) : IMF('15:\$53/B→'16:50), CERA('15:52→'1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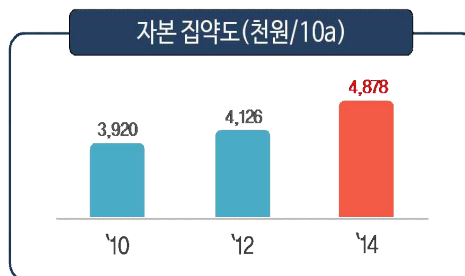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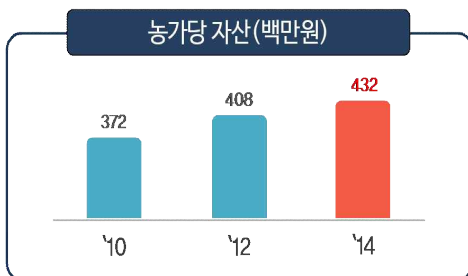
□ (농촌경제) 고령화 및 농촌인구와 농업 취업자수 감소추세 지속

\* 농가인구(19세이하/65세이상) : ('10) 13.2%/31.7 → ('12) 11.7/35.6 → ('14) 10.4/39.1

○ 귀농·귀촌 증가 및 6차산업 활성화 등은 농촌활력 창출에 긍정적 요인

\* 귀농·귀촌 가구수 : ('10) 4,067호 → ('12) 27,008 → ('14) 44,586

○ 정부의 투융자 등에 힘입어 농가자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2. 2016년 농정 방향

### 기본 방향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3년간 추진한 농업 체질개선을 토대로, 핵심 개혁과제 성과 확산
  - 농업을 첨단화하고, FTA를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성과를 통해 농업계의 자신감 확산
  - 농촌 일자리 창출, 취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도시 인재와 자본유입을 촉진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인 삶의 질도 향상
  - 소비자에게는 친환경농업·로컬푸드·식생활교육 확산 등을 통해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 충실히 수행
- ◆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일하는 방식 지속 개선으로 농정실행 체계 및 정책 체감 성과 확산
  - 정책대상의 유형별·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체계적 사후관리

### 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 첨단화, 인력양성, 공동경영체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의 체질 강화

- ICT 융복합의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고, 전문지식과 첨단기술 활용능력을 갖추고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주도할 핵심 인력 양성
- 주산지 중심의 논·밭 공동경영체를 활성화하여, 주산지 선도농가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더욱 집적화함으로써 수급조절 및 수출기반 조성

#### 농업 체질 강화를 바탕으로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 적극 개척

- 쌀, 삼계탕, 김치 등 중국 검역장벽 해소 품목의 수출 확대
- 중국내륙·할랄시장 등 신시장 진출 본격화와 병행하여, 고품질·고부가 미래 수출품목 전략적·선제적 육성

## 식품산업 동반 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농식품산업 외연 확대

- R&D 등 고부가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및 식문화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한식의 해외진출 확대
- 국산 농축산물 원료사용 확대, 지역 및 민간단위의 상생협력 모델 확산, 상생기금 운영 등을 통해 농업과 기업이 상생하는 문화 확산
- 신성장동력 창출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로 사업화율을 제고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나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본연의 기능인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충실히 수행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답리작 대폭 확대 및 주식인 쌀의 안정적 생산·소비기반 조성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
- 新유통비중 대폭 확대, 생산자·지자체의 자율 수급안정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가격변동성 완화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지속 기반 확충 및 GAP 인증 대폭 확대 등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을 확대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

## 다 농촌 활력 제고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창업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사람·자본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농촌 구현

- 창업에 필요한 자금, 농지, 영농기술 등에 대한 종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농식품 분야 청년 창업 확대



- 농촌 지역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읍면 중심지 활성화 및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 등 지속 추진
- 6차산업 지구 확대, 창업부터 사업 활성화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 6차산업 본격 확산

**기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세고령농에 대한 배려농정 지속 추진**

- 직불제 개선 및 위험관리를 위한 보험 가입률 제고, 재해지원 강화
- 관계부처 협업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영세고령농 배려 농정을 확산하고, 여성농업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라 정책의 체감 성과 확산**

**현장과의 소통, 협업, 스마트농정 고도화를 통해 체감 성과 확산**

-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하여 농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 확산
- 기관간 협업, 산하 공공기관 역량 결집,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체감 성과 확산
  - 관계부처와 지속 협업을 통해 농촌의 부족한 인적·물적자원 보완
  -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추진상 조율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 농협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과제 성과 도출에 각 기관의 역량 결집
- 경영체 DB와 KAHIS 등 ICT기반 정책지원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여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사후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스마트 농정 고도화

## 비 전

###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 효율성을 기반으로 소통과 배려의 농정 추진 -

## 중점 추진과제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 ①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
- ② 전문인력 양성
- ③ 공동경영체 활성화
- ④ 농식품 수출확대
- ⑤ 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⑥ 식량의 안정적 공급
- ⑦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 ⑧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 ⑨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농업인 소득안정 및 삶의 질 제고

- ⑩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 ⑪ 위험관리 강화
- ⑫ 농촌주민 복지 증진
- ⑬ 정주여건 개선

###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⑭ 청년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 ⑮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⑯ 농업의 6차산업화
- ⑰ 귀농·귀촌 활성화

## 일하는 방식 개선

현장·소통농정

협력·상생농정

스마트농정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6년 경제정책방향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Ⅲ. 주요업무 추진 계획

<p>1.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성과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li> <li>② 전문인력 양성</li> <li>③ 공동경영체 활성화</li> <li>④ 농식품 수출확대</li> <li>⑤ 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li> </ul>
<p>2.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 식량의 안정적 공급</li> <li>⑦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li> <li>⑧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li> <li>⑨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li> </ul>
<p>3. 농업인 소득안정 및 삶의 질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⑩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li> <li>⑪ 위험관리 강화</li> <li>⑫ 농촌주민 복지 증진</li> <li>⑬ 정주여건 개선</li> </ul>
<p>4.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⑭ 청년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li> <li>⑮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li> <li>⑯ 농업의 6차산업화</li> <li>⑰ 귀농·귀촌 활성화</li> </ul>



# 1.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화·전문화 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

- 농업의 첨단화 및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및 첨단온실 보급 확대
- 간척지 등을 활용하여 수출용 스마트 원예시설 단지 조성
-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보급 등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확충

## 전문인력 양성

- 젊은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농고·농대 교육 시스템 개편 및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 품목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품목특화 전문교육 확충
- 농업법인 역량강화 및 도시와 농업·농촌 간 인력 불균형 해소

## 공동경영체 활성화

- 쌀 들녘경영체 양적 확대 및 지역맞춤형 사업다각화 모델 확산
- 주산지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춘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 규모화된 조직을 대상으로 농기계 중·장기 임대 추진

## 농식품 수출 확대

- 할랄시장 등 신시장 개척 본격화 및 쌀·삼계탕·김치 등 검역해소 품목 수출 확대
-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시장 진출 적극 추진 및 미래수출유망품목 육성
- 일본·아세안 등 기존 주력시장 회복 및 코셔 등 기타시장 개척

## 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 한식과 문화·관광을 연계하는 등 식품·외식산업 육성기반 확충
- 글로벌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 투자 확대
-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종자·곤충·도시농업·말산업·반려동물 산업 육성

# 1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

## 가 '17년까지 스마트팜 보급 목표

□ (시설원예) 전체온실 53천ha 중 자동화 온실 등 스마트팜 설치가 가능한 면적은 약 10천ha인 것으로 파악

○ 이 중 수출이 가능하거나 생산성향상 및 노동력 절감이 기대되는 4천ha에 대해 '17년까지 우선적으로 스마트팜 보급 추진

- '15년까지 보급된 769ha 외에 나머지 3,231ha에 대해 품목 특성에 적합한 수출주도(첨단온실) 및 내수중심(복합·간편)형 스마트팜 보급
- \* (첨단형) 파프리카·토마토·화훼 등 수출재배 첨단온실 600ha(기존394+신축206)
- \* (복합관리형) 딸기·오이 등 규모화된 연동형 온실 2,400ha(기존334+추가2,066)
- \* (간편관리형) 참외·수박 등 소규모 재배시설 1,000ha(기존41+추가959)

재배면적('15)	토마토 (5,380)	파프리카 (575)	화훼 (장미,국화) (841)	오이 등 (2,836)	딸기 (6,789)	수박 등 (12,299)	참외 (5,380)
보급 목표	첨단형(첨단온실, 수출 : 600ha) (기존) 394 + (신축) 206						
	85	215	300				
	복합관리형(연동 : 2,400ha) (기존) 334 + (추가) 2,066					간편관리형(단동:1,000ha) (기존) 41 + (추가) 959	
	700	360	539	201	600	600	400

□ (축산) '17년까지 전업농의 10%(양돈 310호, 낙농 260호 등 700호)를 대상으로 스마트 축사 보급

## 나 '15년 주요 성과

□ 시설원예('15:364ha) 및 축산(156호) 분야에서 **스마트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주산지 선도농가 중심으로 **집적화되는 단계**로 진입

\* 스마트온실/축사 : ('14) 60ha/30호 → ('15) 364/156

\* 스마트팜 도입 이후 생산량 25% 증가, 품질 12% 향상 및 고용 노동비 9.5% 절감 등을 통해 농가 총수입 31% 향상('15.11월, 서울대)

○ **한국형 온실모델(단동형·연동형) 개발** 및 스마트팜 기기 표준화(22종), 교육·A/S 등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팜 확산기반 마련**

\* 권역별 현장지원센터(8개소)를 운영, '15.7월부터 A/S 4백건 이상 실시

A/S  
시스템

◇ 스마트팜 공급 기업별 개별 대응

- A/S 신청·처리결과 확인 불가
- 신속하지 못한 A/S처리 불만 우려

⇒

◇ 현장지원센터와 기업의 공동 대응

- A/S신청에서 처리결과까지 확인(콜센터)
- 단순고장: 농가 대응력 강화(교육, 컨설팅)
- 기계결함: 공급기업의 진단 및 A/S

○ 토마토 대학 및 첨단실습장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1,596명) 및 SNS 기술 컨설팅('14:6개 품목→'15:23) 등 농업인 역량 강화 추진

○ 창조경제혁신센터, 농진청 등과 협업을 통해 국내 환경 및 생육 정보 등을 포함한 빅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 다 '16년 추진계획

◆ **스마트팜 및 첨단온실 보급 확대, 노후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농업의 첨단화 및 수출산업화 촉진**

\* '16년 ICT 융복합 스마트팜 600ha 및 스마트축사 200호 이상 보급

### [스마트팜 보급확산 기반 조성 및 현장지원 강화]

□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책적 기반 확충

○ 빅데이터에 기반한 생육관리 모델을 조기에 개발·보급('16:토마토)

\*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2월)

-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모델**(단동형·연동형)을 시범보급하고, 첨단 유리온실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 개발(12월)
    - \* 기 보급된 스마트팜 모델의 비용(시설비·운영비) 및 성능에 대한 검증(7월~)
  - 스마트팜 적용이 필요한 품목·시설형태·기술수준 등을 유형화하여 **기초통계 정비**(3월까지)
  - 기존 농기계 국제박람회 등을 활용, **스마트팜(시설·자재·SW 등) 국제박람회** 개최(11월)
- **농가의 재배기술 보급 및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장지원 강화**
- 농가의 ICT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토마토대학 운영 확대**(토마토→토마토·딸기·버섯·양돈) 및 현장 실습교육(5천명) 등 추진
  - 교육·A/S 등 **권역별 현장지원센터**(8개소), 스마트팜 119 콜센터 및 불만제로 SNS 밴드 운영을 통한 현장애로 해소

### [수출용 스마트팜 조성]

- **간척지를 활용하여 규모화된 첨단 시설원에 온실을 조성하고, 원예·축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팜 보급 확대**
- **당진 대호간척지** 등에 ICT를 접목한 **규모화된 첨단 시설원에 온실을 조성**(10ha)하고, 향후 타 간척지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수출 전략품목이면서 온·습도에 민감한 파프리카·토마토·화훼 등의 수출재배단지에 **ICT 융복합 첨단온실 신규 지원**(100억원, 16ha)
    - \* 딸기·오이 등 재래식 비닐온실의 자동화도 추진
  - 지열·발전소 폐열·가축분뇨 등 **신재생에너지와 다점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1천ha)
 

- 발전소 및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온배수 등 폐열을 시설원에 난방 등 농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15년 4개지구 선정) \* (발전소 온배수) 당산·하동·제주, (산업체 폐열) 곡성
    - 향후 간척지 및 폐열원 인근지역 농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진청과 협업을 통해 산업폐열 분포 지도 및 농업적 활용 모델 마련
  - 시설 현대화 사업을 ICT 융복합이 가능한 시설·장비 위주로 조정하고, 축산의 경우 **지원대상 축종 확대**(양돈·양계→젓소·한우 추가) 추진



## 가 '15년 주요 성과

□ 농업의 첨단화와 수출산업화를 주도할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품목별 전문교육 및 현장실습 중심 교육 시스템 구축

○ 창조농업 선도고교 지정 및 농대 영농창업 특별교육과정 개설 등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6월)

○ 농고·농대생 농산업분야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토마토대학 등 품목별 전문교육 추진

\* (농고) 19개 학교, 101개 프로그램, (농대) 13개 학교, 66개 프로그램

- 토마토대학 품목 전문교육 실시 결과, 재배기술 역량이 18.7% 상승

○ 해외 품목전문가 초청 교육(231명, 10개 기수)을 추진하여 교육내용의 현업적용도 및 만족도 제고\*

\* 현업적용도 : ('14) 4.2점 → ('15) 4.3, 종합만족도 : ('14) 4.3 → ('15) 4.4

□ 후계농 선정 및 영농자금·교육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선도할 젊은 인력 확보

\* '15년 후계농업인 1,886명, 우수후계농 307명 선정

○ 특히, 후계농 중 40세 미만의 젊은층 비중 확대

\* 40세 미만 후계농 비중 : ('14) 52.6% → ('15) 58.5

□ 농번기 인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매칭 상시 지원체제 구축

\* '15.1~10월간 농업인력 중개 38만명(농협 35, 지자체 3) 달성

☞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젊은 핵심인력 양성이 필요

☞ 전문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농고·농대생 및 기존 농업인 등 대상별로 품목전문 기술교육 체계를 세분화할 필요

## 나 '16년 추진계획

◆ 품목별 수요에 기반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농업교육을 통해  
전문지식과 첨단기술 활용능력을 갖춘 핵심인력 양성

\* 품목별 전문교육 교육생 : ('15) 2,390명 → ('16) 3,290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주도할 젊은 인력 양성]

- 현장실습 및 창업지원 중심의 농고·농대 직업교육 본격 추진
  - 창조농업 선도고교를 선정(3개소, 4월)하여, 도제식 실습학년제 운영 및 해외전문기관 연수 등 지원(학교당 20억원)
    - \* 선정된 학교는 학과를 원예, 축산분야로 개편하여 운영
  - 영농창업 특성화대학을 선정(5개소, 2월)하여, 전문생산기술 및 경영역량 습득을 위한 영농창업 특성화 과정 운영(학교당 2억원, 9월~)
    - \* 원예·축산 또는 자율분야(농식품가공·6차산업 등) 중 사업단을 구성하고, 실습학기제·해외전문기관 연수·세미나학기 등 창업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 후계농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방안을 마련(6월)하고, 청년의 안정적 영농승계 지원
  - \* 자금지원 : (후계농) 최대 2억원, 금리 2%, (우수후계농) 최대 2억원, 1%
- 연구용역('15.10월~'16.2월)을 통해 그간 후계농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후계농이 정예농으로 성장하도록 단계별 육성전략과 지원방안 강구
- 승계 교육과정 개발, 후계농 선정·지원 시 우대 등으로 가업승계 촉진

###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통합 DB 구축]

- 품목별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중장기 교육과정 개편 추진
  - 농업인 대학, 농업마이스터대학 등 품목별 교육과정이 수준별·발전단계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편(6월, '17년 적용)
  - 품목별 선도농업인 DB를 구축하여 8개 농업교육기관의 현장실습교육강사로 활용토록 하고, 신규농업인에 대한 SNS 상담서비스 추진(3월)

□ **농업교육 통합DB와 성과평가시스템 구축(6월)**으로 농업인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품목특화 전문교육도 확대**

○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력포털 DB 등을 연계한 농업교육 통합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등 추진**

- 농업인의 영농규모·경력, 교육이력, 교육수요 등을 분석하여 수준별·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ICT 등 첨단기술 중심의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 확대**

\* 교육과정 : ('15) 토마토 → ('16) 토마토·딸기·양돈·버섯류

### [농업법인의 역량강화 지원]

□ **농업법인의 역량강화 및 채용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제공

○ 경영체별 **역량진단** 및 이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 **경영교육 확대**를 통한 경영역량 제고 추진

\* 농업법인 임직원 경영교육 : ('15) 40명 → ('16) 300

○ 우수 농업법인을 **청년 창업교육**을 위한 **현장실습장으로 지정(30개소, 11월)**하여 재배기술·경영 노하우 전수 등 추진

### [도시와 농업·농촌간 인력 불균형 해소]

□ **농번기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도농 인력중개시스템을 활성화 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

○ 일손 필요 지자체와 도시의 일자리 지원기관(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 센터 등)간 **정보공유 강화**, 인력중개 **참여 기관(농협, 지자체 등) 확대**

\* 인력중개 건수 : ('15) 38만건 → ('16) 45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추진

- 고용부와 합동으로 양봉·인삼 등 품목별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5~9월) 하고, 법무부와 협업하여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추진

\* 농축산분야 외국인력 배정 : ('15) 6,092명 → ('16) 6,600

### 3 | 공동경영체 활성화

#### 가 '15년 주요 성과

- 개별영농의 한계 극복 및 생산성·품질향상을 위해 들녘·주산지 중심으로 규모화·조직화된 **공동 농업경영체 육성 확대**
-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조직화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들녘경영체가 전년대비 42% 증가**(‘14:158개소→’15:224)
  - \* 요건완화(분산농지 가능), 지원장비 확대(3종→전기종), 쌀 직불금 지급상한 확대(50ha→400)

< 산청 영실영농조합법인 사례 >

- 벼농사 뿐 아니라 조사료 답리작, 맥주보리 재배 및 수제맥주 제조·판매를 통해 벼농사만 지을 때에 비해 매출액 2.5배 증가
- \* 매출액 : (‘10) 19억원 → (‘14) 49

- 규모화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주산지 중심의 **밭 공동경영체 육성방안\*** 마련
  - \* 품종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 선별·출하 등 단계별·유형별 지원
- 공동 농작업을 통한 **노동비 절감으로 경영개선 효과가 발생\***하고, 품목(쌀+맥류) 및 사업범위 확대로 **소득원이 다각화**되는 사례 발생
  - \* 평균 벼 재배농가 대비 생산비가 약 10%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KREI)

☞ 들녘경영체의 양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공동농작업 범위 확대, 지역 여건 및 자원을 활용한 사업다각화 등 **공동경영수준은 아직 미흡**

- \* 단일 영농계획 수립률 : 62.7%, 농작업 일지 기록률 : 63.3%

☞ 한·중 FTA 주요 영향 품목인 **밭작물의 조직화 미흡**

## 나 '16년 추진계획

### ◆ 들녘경영체의 양적 확대 및 지역 맞춤형 모델 확산

\* 쌀 들녘경영체 : ('15) 224개소(51천ha) → ('16) 250(55)

### ◆ 주산지 중심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적 수급조절 등에 활용

\* 밭작물 공동경영체 : ('15) - → ('16) 15개소

## [쌀 들녘경영체 확산 및 정책효과성 제고]

### □ 들녘경영체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사업다각화 모델 육성(22개소)

- 벼 농사 중심에서 가공·유통 등 연관산업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기반정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

### □ 타작물 재배\* 등 들녘경영체를 활용한 쌀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비 절감 및 작부체계 개선 등 성과확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

\*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경영체는 경영면적의 10~20%에 타작물 재배 유도(3천ha)

- 생력화 기술 및 신농법 교육(쌀선도경영체 교육 활용)을 통해 기존 노동비 위주의 절감 효과를 비료·농약 등 다른 분야 비용까지 확대

\* '들녘경영체 운영실태 조사 및 경영비 절감방안' 연구용역 추진(3월까지)

### □ 들녘경영체의 도정시설 의무보유 요건을 삭제하는 등 제도 정비

- 참여 농가의 농지 위탁경영·임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

\* 공동농업경영 근거 마련 및 농지의 임대·위탁경영 관련 예외규정 신설 등 (농어업경영체법·농지법 개정 추진, '16년)

## [주산지 중심의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 주산지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유통·수급조절이 가능한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15개소)
- 기 구축된 경영체 DB 등을 활용하여 주산지별 실태조사\*를 추진(3월)
  - \* 기 구축된 DB(지리·경영체·SOC 등)를 중심으로 10개 품목별 주산지(41개 시군, 108천ha)에 대해 수계·유통시설·농기계현황 등 세부 실태조사 추진(3월)
  - 이를 바탕으로 발작물 주산지 진단 및 수급활용 방안을 마련(6월)하고, 공동경영체별 운영 및 발전방향\* 수립(10월)
  - \*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ICT 기술 활용 및 수출 활성화 방안 검토
-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및 주산지 GAP 인증취득 등 지원 확대
  - 공동경영체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시설·자재 및 주산지협의체 운영비용 등 통합 지원(15개소, 개소당 10억원)
- 주산지 지역농협 주도의 계약재배(품종·재배방법 통일) 등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 공급체계 마련
  - \* 작목별 GAP 생산가이드 개발·보급(8월), 지역농협·기술센터 등을 통한 맞춤형 지도·교육
  - 지역특산 농식품(경주 황남빵, 천안호두과자 등) 생산 원료의 안정적 공급

## [규모화된 조직을 대상으로 농기계 중장기 임대 추진]

- 기존 농가단위 농기계 단기임대(1~3일) 사업을 전국 50ha 이상 들녘경영체와 발 공동경영체를 대상으로 중·장기 임대로 확대

## 4 | 농식품 수출확대

### 가 | '15년 주요 성과

-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국 및 할랄 시장 등에 대한 농식품 수출 증가
  - \* 농식품 수출액('15) : (대중국) 10.5억불(6.2% ↑), (대GCC) 3.8억불(8.5% ↑)
- 중국 온라인몰 '티몰(5월)'·'위마이왕(11월)', 연태시 백화점(2월)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설, CJ 중국 홈쇼핑 채널 진출(12월) 등 현지 유통채널 확대
  - \* 티몰('15) : 162개 브랜드, 1,552개 품목 입점
  - \* 백화점('15) : 110개 업체, 882개 품목(한과·막걸리·꿀 등) 입점
- 국내 외국인 관광객 대상 농식품 홍보관 운영(4개소), 중국·말련·인나·UAE 등 K-Food Fair 개최(7회, 131백만불 상담) 등으로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
- UAE와 할랄식품 MOU 체결(3월),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 수립(6월), 한-UAE 전문가포럼 개최(9월), 수출 상담실 개소(12월) 등 할랄시장 진출 기반 구축
- 13개 품목(中 포도·흰우유, 홍콩 쇠고기 등) 검역협상 타결,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빙 간소화(3월) 등 농식품 수출 애로 해소
  - \* 정상회담을 통해 김치·쌀·삼계탕 수출 개시를 위한 한·중간 양해각서 체결(10.31일)

☞ 국가전체 수출 감소(7.4% ↓)보다는 양호하나, 세계경제 침체·엔저 장기화 등으로 인해 농식품 수출이 전년대비 일부 감소(1.2% ↓)

- 주요 전략 품목별(쌀·김치 등), 국가별(중국·일본·할랄 국가 등) 차별화된 수출확대 전략으로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적극 개척 필요

### 나 | '16년 추진계획

◆ 검역장벽 해소 품목의 수출 확대 및 중국 및 신시장 진출 본격화와 병행하여, 미래 수출 유망품목 전략적·선제적 육성

- \* 농식품 수출액 : ('14) 61.8억불 → ('15) 61.1 → ('16) 81

## [전략 품목 수출 확대]

- 김치, 쌀, 삼계탕, 쇠고기 등 검역장벽이 해소된 전략 품목 수출 확대
  - (김치) 북경·상해 등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16년 대중국 수출 100만불 추진
    - 수출확대를 위한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미래부 협업) 및 통관 기간 단축 추진(식약처·관세청 협업)
    - 고품질 김치를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홍보(문체부 협업)하고 중국 현지인 대상 '김치 요리교실' 운영(2월, 북경)
  - (쌀) 안전·고급 이미지로 고소득층 공략, '16년 대중국 2천톤 수출 추진
    - 중국 수출용 쌀 도정공장 등록을 완료(1월, 6개)하고, 도시별(북경·상해 등) 선호 품종을 조사하여 수출용 벼 재배단지를 통해 생산
      - \* 충남 당진 대호간척지 수출용 벼 재배단지 확대('15:200ha→'16:540)
  - (삼계탕) 중국·미국 등 수출국별 맞춤형 상품(레토르트·소포장 등) 개발 지원, 현지 유통·외식업체를 통한 판로 확대 추진
  - (쇠고기) 홍콩 수출검역 타결('15.11월)을 계기로, 홍콩 시장에 한우의 우수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홍보·거래선 발굴 등 추진
    - \* '15.12월 태우그린푸드(수출자: 대우인터내셔널)가 한우 홍콩 첫 수출

## [중국·할랄 등 거대시장 진출 가속화]

-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물류·판매망 확충 및 유망품목 선제적 발굴로 '16년 대중국 농식품 수출 12억불 달성 추진
  - (물류인프라) 청도 물류기지와 중국 내 주요 거점지역 공동물류센터(8개)를 연결하는 콜드체인 배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부 내륙까지 진출
    - 청도 물류기지 가동률(현재 40% 수준) 제고, 현지 물류업체와 청도 물류기지 운영업체간 협력 강화(상반기 MOU 추진)
  - (판로 확대) 온라인 농식품 판매관 확대\*, 현지 모바일 쇼핑몰 내 한국 식품관 개설, 현지 지역별 유통업체와 제휴하여 대형유통매장 진출 추진
    - \* 온라인 한국 농식품 판매관 : ('14) 2개소 → ('15) 4 → ('16) 6



- (홍보) 한류마케팅 등을 활용, K-Food Fair(3회)·안테나숍(6개소) 등의 확대를 통한 현지 홍보 및 한식테마관 등을 활용한 국내 홍보 강화
- (유망수출품목 발굴) 대중국 수출유망품목\*을 확대 육성하고, 미래 가능성이 있는 고품질 화훼류 등 수출전략 품목 육성사업 신규 추진
  - \* 지원품목 확대(5개→10, 유제품, 인삼, 유자차, 버섯, 화훼 외에 5개 추가 발굴)
- **할랄식품 생산 및 수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품목을 다양화**  
(담배·커피 중심→과자·음료·신선농산물 등)하여 '16년 수출 11억불 달성 추진
- (생산기반) 국내 할랄도축·도계장 건립, 할랄 수출 원예단지 지정·운영(3개소), 할랄식당 리모델링 지원 등
- (정보제공) 할랄 식재료 DB 구축, 할랄인증·시장 정보의 체계적 제공을 위한 할랄식품 수출지원센터 설치(3월), '한-UAE 할랄식품포럼' 정례화
- (인증지원) 국내인증기관(KMF)과 UAE·인니 등과의 교차인정 확대, 할랄인증비용 지원 확대('15:5억원→'16:20)
- (홍보) 박람회(6회), 재외공관 연계 행사(UAE·카타르 등 9개 공관) 등 추진

## [기존 시장 회복 및 신시장 개척]

- **기존 주력시장 회복 및 코셔·베트남 등 기타 신시장 개척 적극 추진**
- (기존시장) 기능성 식품 및 신선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일본·아세안·미주지역 등 기존 주력시장 강화
  -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제품 개발, SNS를 활용한 젊은 층 공략, 한류스타를 활용한 K-Food Day 등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 \* 저도주·저염식 선호, 생면 선호도 증가, 건강·기능성 식품 소비 확대 등
- (신시장) 코셔식품 시장, 베트남 등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유망 품목 및 현지 바이어 정보제공 및 해외인증 지원 확대 등 추진

## 5 | 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 가 '15년 주요 성과

#### 식품·외식산업 육성 및 상생협력

- 식품·외식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 전통주 통신판매 범위 확대(5월), 인삼제품 CODEX 세계규격 채택(7월), 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 허용(12월) 등 규제개선
  -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6월), 원료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6월), 식품소재산업 육성(3개소) 등 식품·외식업체의 국산 원료 사용 촉진
  - 전통주 갤러리 개소(2월, 13천명 방문), 찾아가는 양조장(13:2개소→15:18), 코레일 협업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10코스) 등 음식 문화관광 활성화
  - 한식과 문화·관광의 연계를 위한 한식진흥정책 강화 방안 마련
    - \* 민관합동 한식정책협의회 발족(10월), 한식진흥을 위한 14개 협업과제 개발 등

#### 우수 사례 : 전통주 갤러리

- ◇ 전시·시음·판매 등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젊은층 및 외국인 대상 전통주 인지도 확산
  - \* 방문객 12,623명 / 외국인 2,387명(19%)
- 판매병행으로 영세업체 수익창출 및 방문객 구매수요 충족



-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 마련
  -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 협의체 운영('14.4월~) 및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4월) 등을 통해 외식기업 해외진출 및 식재료 수출 촉진
    - \* 외식기업 해외진출 및 식재료 수출 현황: ('14) 3,276개/247억원 → ('15) 4,656/327

○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10월, 116천㎡), 국내 6개사 선분양 체결 및 해외 6개사 투자신고 완료\*\* 등 **투자유치 본격 추진**

\* 투자조건에 따라 부지 임대료 감면(75~100%), 법인 및 소득세 3년간 100% 면제 등

\*\* 국내 6개 기업(히림, 원광제약 등) 입주계약, 국외 6개 기업(햄튼그레인즈, 차오마마 등) 투자신고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계약재배에서 유통·수출·종자·ICT·6차산업 등으로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MOU) 확산**(23건)

○ **상생협력 참여 기업의 농산물 구매량 증가**(CJ 17%, SPC 34, 농심 65)

☞ **한식과 문화·관광간 연계**를 강화하고, 한류확산 분위기 활용 필요

☞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은 중앙정부 주도의 초기단계로 농업·기업계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공감대 마련 필요

### 신성장동력 창출

□ 현장문제 해결 및 기술사업화에 초점을 둔 R&D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율 제고**(14:31%→15:34), SNS 기술 컨설팅 확대(14:6품목→15:23)로 현장애로 해소(62백여건)

□ 국산 종자품종 보급확대로 **종자 로열티를 절감**(전년대비 10.3%)하고, 식용 곤충 산업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새로운 시장 창출**

\* 장수풍뎅이 유충(15.6) 및 귀뚜라미(15.9)를 한시적 식품원료로 등록

□ 국회 텃밭조성(120평), 유치원·어린이집 체험학습용 텃밭조성(4천개소)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파트너십 강화

\* 도시농업 지역협의체 구성(85개소) 및 도농상생 협약 체결(37건)

☞ R&D 연구성과에 대한 **현장체감도 및 활용도**의 지속적인 제고 필요

☞ 국내 **종자업체의 영세성** 및 산업기반 미약 등으로 시장성장에 한계

☞ **도시농업 육성**은 초기단계로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 필요

## 나 '16년 추진계획

- ◆ 고부가 식품·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국산 농축산물 원료사용 확대
  - \* 식품업체의 국산원료 사용 비율 : ('15) 31.9% → ('16) 32.2
- ◆ 지역 및 민간단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 확산
  - \* 상생협력 모델 개발(MOU) 체결 건수 : ('15) 23건 → ('16) 25
- ◆ R&D 사업화율 제고 및 수출전략형 종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 \* R&D 기술 사업화율 : ('15) 34% → ('16) 40
- ◆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식품·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 식품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R&D, 분석정보 및 통계 등 확충
  - 전략품목\* 개발 및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R&D 추진('15:30억원→'16:50)
    - \* 건강기능식품, 즉석식품(HMR), 베이비식품, 실버식품, 환자식, 뷰티식품, 글루텐프리 식품, 고단백 곤충식품, 냉동식품, 저나트륨식품 등
  - 식품 R&D 협의체(농식품부·농진청·한식연 등 참여) 운영활성화를 통해 식품 R&D 중복배제 등 지원강화 대책 마련(4월)
    - 중소식품업체의 기술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기술종합지원단' 운영 등
  -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및 주요 가공식품 소비추세 변화 동향 등을 분석하여 식품산업계에 정보 제공 강화('16:15개 품목)
-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한식진흥정책 적극 추진
  - 문화창조벤처단지 내에 한식전시·체험·상품판매가 가능한 한식 테마관을 조성(2월), 한식세계화의 거점으로 활용
    - 한식재단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3월), 한식진흥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민관합동 한식진흥정책 강화방안의 이행계획 마련(2월), 한식과 한식 문화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11월) 등 추진

- 국내 대표 한식 축제인 **K-Food Festival**을 개최(10월)하고, **국제 행사·세계음식 축제**(마드리드, 2월) 등에서 한식홍보 추진
- '17년 국가식품클러스터 본격 가동을 위해 기업지원시설 완공(7월) 및 산업단지 조성(12월) 완료, 기업 투자유치 본격 추진
  - 국내외 기업·연구소와 **공동 기술 개발** 및 교육·컨설팅·바이어상담 등 **기업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투자유치로 연계('16:13억원)
    - \* 산학연 협의체 확대(4개→5) 운영으로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 식품·외식분야의 **국산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식품원료 농산물 정보시스템**에 영양성분표, 기능성, 가공적성, 전국 식재료 현황 등 식품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가**(3월)
  - 식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반가공 시설을 지원**('15:3개소→'16:7)하고, 지역농산물 수요확대를 위한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방안\*** 마련(4월)
    - \* 기능성 등 고부가 식품소재 발굴, 재배농가-소재업체-식품기업간 연계 강화 등
  - **가공식품·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를 시범 적용(3월)하고, 고부가 가치를 위한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중장기대책\*\*** 마련(5월)
    - \* 원료 농산물의 95% 이상이 특정 국가산인 경우 원산지 인증
    - \*\* 한국형 기능성 소재 발굴,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5월),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 등
  - **외식산업-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 기능 개편(2월)\* 및 **우수 외식업지구 사업 활성화\*\*** 추진(6월)
    - \* 운영체제 개편(전체회의→소위원회) 및 국내 외식산업 활성화로 기능확대
    - \*\* 우수외식업지구 협의체 구성 및 식자재 산지 페어('16:8회) 등
- **전통식품·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
  - 식품·한식분야 '**우수문화상품**' 지정(3월) 및 제도개선(문체부 협업)
    - \* 식품산업진흥법령 개정하여 '(가칭)우수문화 식품·한식' 인증제 규정 추가(12월)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발굴·개선**
    - \* 전통주를 '나라장터'에서도 판매하도록 통신판매 범위 확대(2월), 소규모 탁·약주 제조면허 도입(12월)에 따른 컨설팅 지원, 브랜드 시설기준 완화 등

- 술 품질인증 기준을 강화\*하여 우리 술 품질개선 도모(9월)
  - \* 탁주 제조 시, 쌀 이외의 당분 및 식품첨가물 등 사용 제한
- 전통식품·전통주 등의 국내 홍보·체험관 조성 확대
  - 전통주 갤러리 추가 개소(6월), 찾아가는 양조장 확대('15:18개소→'16:24), 식품 명인 체험·홍보관 조성(6월)으로 명인 식품의 산업화 촉진

## [농업계와 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확산]

### □ 지역 및 민간단위 자율적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 추진체계 강화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시·도 단위 상생협력 협의체 구축(4월)
  -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상생협력 적합 모델 개발 및 사후관리(품목별 재배단지 조성 등)
- 상생협력 발전포럼\*,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력하여, 식품·외식 기업 애로해소 및 상생협력 확산 방안 마련(6월)
  - \* 기업의 상생협력 임원(24개사)으로 구성된 Agro-biz 상생발전 포럼 발족('15.11월)

### □ 상생협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 상생협력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화\* 및 상생협력 경연 대회(11월)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속 추진
  - \* R&D, 수출마케팅·홍보, 농촌사회공헌인증, 동반성장위원회 체감도 평가 반영 등
- 대기업 퇴직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경영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수출 노하우와 기술역량 전파('15:146개업체 → '16:200)

### □ FTA 보완대책으로 마련된 '상생기금' 운영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가동하여, 농업계가 적극 참여하여 기업과 상생 협력하는 문화 확산

- 사업내용과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여 관련 법률 개정안 조속 마련(3월)
  - \* (FTA 지원법) 설치근거 및 사업내용,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재단명에 '농어업 추가' 및 사업범위 확대, (조특법) 인센티브 부여
- 관계부처·유관기관과 기금모금, 사업 내용, 조직 구성·운영 협의
  - \* (사)농촌사랑운동본부(1사1촌 담당),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농업·기업상생협력 담당) 역할·조직 재조정 추진

## [신성장동력 창출]

- (R&D) 한·중 FTA에 대응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현장체감도 제고를 위해 R&D 시스템 개편
  - 스마트팜 국산화 기술 개발, 발농업 기계화, 할랄·코셔 수출시장 진출 등 **핵심과제에 대한 R&D 투자 확대**
    - \* 스마트팜 국산화(135억원), 발농업 기계화(65), 할랄·코셔 시장 진출(30) 등
  - 개발된 기술의 현장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 수요자가 연구과제를 제안하고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R&D 바우처 제도 도입(4월)**
  
- (중자산업) 골든시드프로젝트 **글로벌 품종개발 확대**(누적 143품종→231) 및 로열티대응사업단 2단계 추진으로 **로열티 절감**(‘15년 122억원→’16년 116)
  - 민간육종연구단지 완공(8월)으로 분자유종 등 첨단기술 활용 본격화
  
- (도시농업) **공감대 확산**을 위해 민간기업 유휴공간에 텃밭조성을 유도하고, 교도소·대안학교·양로원 등에 **치유테밭 시범 도입(3월)**
  - 도시농업의 날(4.11일), 힐링·치유테밭 공모전(9월) 등 추진
  
- (신분야)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분야**를 육성하여 부가가치 제고
  - 식용곤충 이용 확대를 위해 귀뚜라미, 고소애 등의 **일반식품원료 전환** 및 해외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한 곤충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록** 등 추진
  -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용역(상반기), 관계부처 T/F 운영 등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대책 마련(12월)**
  - 농어촌형 승마시설(15개소) 설치, 전문 승용마 생산농가(30호) 육성, 승마장 진입관련 규제개선 등 **말산업 인프라 지속 확충**
    - \*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2차 말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17~’21)’ 수립(12월)
  - **사료·동물의약품** 등 축산 전후방 부문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ODA 활용** 등으로 수출 확대 도모

## 2.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 식량의 안정적 공급

- 자급률 제고를 위해 답리작을 확대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쌀 적정생산 유도 및 수요확대 등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식량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해외농업개발 강화

###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 직거래 등 新유통경로를 확대하고, 현장 공감대를 토대로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 관측개선, 생산자·지자체 자율 수급조절 역할 강화 등을 통해 농축산물 수급안정 체계화
- 농협 사업구조 개편 차질 없이 마무리

###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생산·유통·소비기반 확충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창조경제 비즈니스 모델화
- 약취저감, 산지생태축산 확산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GAP 인증 지원 강화로 농산물 생산·유통 확대
-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 속 식생활 교육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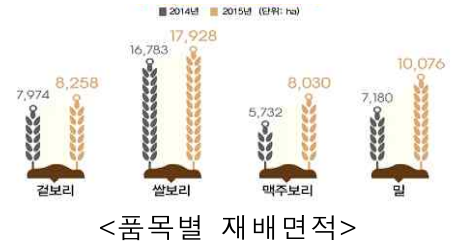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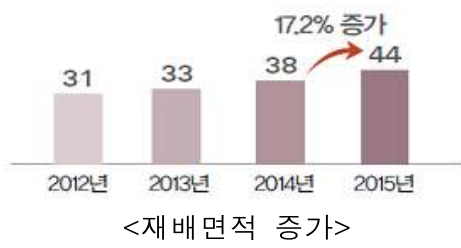


# 1 | 식량의 안정적 공급

## 가 '15년 주요 성과

□ (답리작) '14/'15년 최초로 시도된 봄파종(5,858ha) 등을 통해, 맥류(보리, 밀) 재배면적(44,292ha)이 전년대비 17% 증가

- 겨울철 유휴자원을 활용\*한 맥류재배 확대로 농가소득 및 자급률\*\* 향상
  - \* 경지이용률(논) : ('75) 130.9 → ('80) 118.8 → ('90) 107.7 → ('10) 109.9 → ('14) 118.3
  - \*\* 식량자급률 : ('12) 45.7 → ('13) 47.5 → ('14) 48.9



-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해 '15/'16년 가을파종도 49,424ha(보리 38,513/밀 10,911)로 전년 대비 43.1% 증가
  - \* '15/'16년 답리작 목표 달성 시 총 140천톤의 곡물이 생산되어 식량자급률 0.5% 상승은 물론 약 1,550억원의 농가소득 증가 예상
  - \* 밀, 보리 파종시 겨울철 이모작 직불금 ha당 50만원 지급

□ (쌀) '15년 쌀 관세화 이후 대응체계 구축

- 쌀 사전세액심사 제도 도입, 특별긴급관세 신설, 수입쌀-국산쌀 혼합금지('15.7.7.~) 시행
- 쌀 수출추천제 폐지(3월), 수출용 쌀 재배단지(200ha)를 활용한 수출 추진, 중국 쌀 수출을 위한 검역문제 해소(10월) 등 수출 확대 기반 구축

☞ 쌀은 최근 3년 연속 풍작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가격이 지속하락하고 있으나, 밥쌀용 쌀 수입, 가뭄, 수급 등 현안 대응으로 인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부족

## 나 '16년 추진계획

- ◆ (답리작) 적기파종을 위한 종자공급·기술지도, 대규모 생산주체 참여 유도 및 신규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전년대비 20% 확대
  - \* 답리작 면적 : ('15) 44천ha → ('16) 62(보리 49, 밀 13)
- ◆ (쌀)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감축, 수요 확대, 재고관리 등 추진
  - \* 벼 재배면적 : ('15) 799천ha → ('16) 769
  - \* 재고수준: ('15.12) 190만톤 → ('16.10) 134 → ('17.10) 113 → ('18.10) 80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답리작 지속 확대]

- (기반 확충) 답리작이 가능토록 배수시설 및 수확 후 처리시설 확충
  - 대규모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들녘경영체에 암거배수 시설 지원 등 배수개선 사업 우선 지원
  - 지속적인 맥류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수확 후 일손부족 해소
    - \* 맥류 건조·저장시설(누계) : ('00) 4개소 → ('14) 15 → ('15) 20 → ('16) 22
- (답리작 확산 지원) 적기 파종을 위한 사전 종자 공급, 기술 지원, 지역단위 대규모 생산주체 적극 참여 유도 등 추진
  - 맥류 62천ha 파종을 위한 종자 소요량(약 9,690톤, 보리 7,350, 밀 2,340)을 지역농협, 종자원 등을 통해 적기 공급
  - 작부체계별 재배기술과 매뉴얼 현장 보급 확대 및 시장 수요·제품 용도별 특성에 따른 고품질 맥류품종 개발 보급
    - \*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생산비 절감 최적 기술(파종·시비·배토 동시작업, 대형 수확기, 건조시설 등)을 영농교육 등을 통해 보급
  - 들녘경영체, 임대 간척지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생산주체 참여 유도

□ (판로 확보) 식품기업 등과 연계하여 동계 답리작 작물의 신수요 창출

- 가공업체와 계약재배 활성화, 식품기업과 생산자단체 등과 연계 등을 통해 국산 곡물 소비확대 운동 등 전개

\* 계약재배를 통한 국산밀 공급 확대 및 자조금 등을 활용한 소비확대 캠페인 전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 규모화·집단화된 전문단지\* 조성 확대 및 전문단지 중심으로 작부체계 변경\*\* (2기작, 옥수수·귀리 → 3기작, IRG 추가)을 통한 증산 유도

\* 기 조성된 전문단지 : (광역단지) 400ha 이상, (특화) 100, (중소) 10, (종자) 10

\*\* 당진 낙협, 20ha 규모의 시범포 운영 중, 간척지 이용 경영체로 확산

□ 지자체별 조사료 재배 목표제 도입,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조사료 종자 확보량, 조사료 품질, 재배면적·생산량 등 종합 평가

\*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볏짚비닐, 기계장비 구입비 등 차등 지원

□ 추위에 강하고 수확시기가 빠른 중부지역 특화(IRG품종) 개발(농진청 협업)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쌀 적정생산 유도 및 수요 확대

-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 쌀 품질 제고 등을 통해 쌀 적정생산 유도

- 기존 사업·지자체 연계를 통해 타작물 재배 등 벼 재배면적 감축(3만ha)

\* 감축(안) : 들녘경영체 3천ha, 간척지 1, 농지매입비축 1.2, 농진청 1.2, 지자체 23.6

- 공공비축 매입품종 및 보급종에서 다수확 품종 비율 축소 추진

- 변동직불금 지급요건 중 질소비료 기준 이행 강화 등 적정시비 유도

- 사료용 등 쌀의 신규수요처 발굴, R&D 확대 등을 통해 쌀 수요 확대

○ 쌀 수급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 강화 및 RPC의 저장능력 확충**

< 농협의 역할 강화 >

- 농협양곡을 중심으로 농협의 쌀 유통·판매체계 규모화('15: 149개→ '20: 38)
- 지역농협의 들녘경영체 참여 확대('15: 23개소→ '20: 50) 및 고품질 품종 매입 확대
- 농협의 양곡창고 개보수자금(융자)을 통해 보관능력 확충('16: 3천억원)
- 하나로클럽에 쌀 가공식품 전문코너 설치 추진

□ **특별재고관리방안 추진**('15.12월말 190만톤 → '16.10월말 134만톤)

- 국산 구곡('13년산 100천톤)의 가공용 판매가격 인하
- '12년산 국산 고미(92천톤)를 **사료용**으로 공급(2월~)
  - 농협 시험급여('15.12월)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추진계획 수립(1월)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용 쌀 판매가격 20% 인하**
  - \* 20% 인하가격에 복지부 지원 사업(판매가격의 50% 지원)을 적용

□ **밥쌀용 수입쌀 관리 체계 개선 : 도입 중심 → 수요·수급과 연계**

- 밥쌀용 수입쌀 국내 수요에 대해 정기조사, DB 구축('16~) 및 쌀 수출국 현지 모니터링 강화(7개국 대상 해외 모니터 '15: 8명 → '16: 12명)
-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밥쌀용 수입쌀 연간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시기별 판매량을 조정하는 시스템 도입
  - \* (예시) 판매실적 등을 토대로 수확기(10~12월)에는 판매량을 50% 이상 감축

□ **쌀 수급정책 관련 소통 강화**를 위해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쌀 수급안정 협의회 구성·운영**

- 쌀 수급안정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자간 **소통 채널** 마련
- 쌀 수급상황 점검, 수급안정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등 역할 수행

## [식량 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해외농업개발 강화]

### □ (핵심 지역 지원 강화) 연해주, 인도네시아 등 핵심 진출 지역에 대한 지원 분야 확대 및 해당국 정부와 협력 강화

#### ○ 곡물 생산 위주의 1차 산업에서 가공·유통형의 2·3차 산업으로 사업 영역 확대(연중)

\* 오일팜플랜테이션, 전분 가공공장 등 가공·유통형 기업대상 용자지원

\* 곡물 확보량(천톤) : ('10) 108 → ('14) 195 → ('15) 283 → ('16) 300 → ('21) 1,950

#### ○ 러시아 정부와 공동으로 연해주 농업개발 비전 및 계획 수립을 위한 한-러 공동연구 추진(1월~)

\* 연해주 지역 농업분야 중·장기 발전방안, 물류 인프라 개선 대책, 선도특구 활용방안 등 연구('16~'17, 3억원)

#### ○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농업협력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 모색(연중)

\* 한-캄보디아(5월), 베트남(6월), 중국(9월), 러시아(10월) 농업협력위 개최 추진

### □ (기업 관심 유도) 국제 곡물가격 하락에 따른 해외농업개발 관심도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기업간 소통 강화

#### ○ 진출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식량 확보와 더불어, 우리 농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 농기계, 농약, 종자 등 우리 농산업 진출 방안 모색

## 가 '15년 주요 성과

## □ 新유통경로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

\* 유통비용 절감액 : ('14) 6,241억원 → ('15p) 7,491

- 농산물 전용 TV홈쇼핑 개국(7월)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4: 71개소 → '15: 103), 「농산물직거래법」 제정(6월) 등 직거래 인프라 확대
- 공영홈쇼핑 개국(7월) 이후, 5개월간 농축산식품 509억원 판매

< 공영홈쇼핑 고춧가루 특별판매방송, '고추Day' 기획(11.5일) >

- 공급 과잉으로 산지가격이 하락한 고추 주산지 8개 지역의 고춧가루를 30% 낮은 가격으로 산지와 직거래로 약 5억원의 판매
- \* 전국단위 거래시장인 서안동농협 공판장의 일 평균 반입량(11톤)의 3배 수준 판매

- 직거래 정책에 대한 정책체감도 조사('15.6, 문체부) 결과 농가 수취가격 인상 및 소비자 구입가격 인하로 생산자·소비자 만족도 모두 향상
- \* 소비자/생산자 만족도(5점 만점): ('14) 3.74점 / 4.01 → ('15) 3.83 / 4.10

## □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13: 9.9%→'15: 17.1)로 가격 급등락 완화

\* 대책 시행 전후(23개월간) 비교시 농산물 가격변동계수 4.1%p 하락('15, KREI)

## □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및 매뉴얼에 따른 선제 대책으로 가격변동 최소화

- \* 5대 채소 가격변동률: ('10~'14 평균) 15.9% → ('15) 11.8
- \* '15.5월 이후 돼지고기 가격 급등시 민간 자율로 지급률 인하(1~2%)를 통해 소비자 가격 안정

- ☞ **新유통경로 확대**는 급변하는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추진함으로써 효과성 제고 필요
- ☞ 정가·수의매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거래 내실화 및 추진 필요성에 대한 현장 공감대가 여전히 불충분
- ☞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수급안정을 추진했으나,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자율의 수급역량을 제고하여 수급관리 내실화 필요

## 나 '16년 추진계획

- ◆ 직매장 및 공영홈쇼핑 활성화, 사이버거래(B2B) 확대 등을 통해 **新유통 비중을 18%까지 확대**
  - \* 新유통비중 : ('14) 14.4% → ('15) 16.3 → ('16) 18
- ◆ 정가·수의매매 거래 비중을 **20%까지 확대**
  - \* 정가·수의매매 비중 : ('14) 14.1% → ('15) 17.1 → ('16) 20
- ◆ 주요 채소류 가격변동률을 **14%대** 수준으로 안정
  - \* 5대 채소 가격변동률 : ('10~'14 평균) 15.9% → ('15) 11.8 → ('16) 14.3
- ◆ 축산물은 민간 역량을 제고하여 정부수매 없이 수급 안정 도모

### [직거래 등 新유통경로 확대]

#### □ 로컬푸드 직매장 내실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직매장 확대('15:103개소→'16:140) 및 **개설 전 준비단계**(교육·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해 사업 부실 방지
  - \* '16년(1년차) : 교육·컨설팅, '17년(2년차, 본사업) : 시설 설치 등
- 고정형 직매장 한계를 보완하는 찾아가는 이동형 직거래장터(로컬푸드 트럭) 개설 확대('16년 상반기까지 10개소)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6월) 후 우수직거래사업장 인증 등 추진(하반기)
  - \* 로컬푸드 표준조례안을 제정(7월)·확산하여, 학교급식으로 로컬푸드 활용이 가능토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 유도

□ 직거래를 ICT기술 및 최근 유통트렌드와 결합하여 시너지 창출

- 외식·식품가공업체 등 대량수요처와 산지 간 직거래 활성화
  - ‘직거래 매칭시스템’(가칭)을 구축하여(상반기) 맞춤형 거래희망 정보\*를 쌍방향으로 제공하고, 거래정보는 빅데이터로 구축·활용
    - \* 지역, 거래 유형(장기 또는 단기), 배송방법, 가격 조건 등
- 중소상인의 포스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소량·다품목 농산물 익일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거래모델 보급·확대
  - \* '15년까지 전국에 4개소 거점 유통사 기획보, '16년 중 소량·다품목 공급이 가능한 지역거점물류 유통사 2개소를 추가 확보해 전국단위 공급 추진
-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직거래(1단계) 창조유통플랫폼 시범 모델 구축(aT) 및 대도시 확산 방안 마련(3월)

□ 공영홈쇼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품목단체와 협조체계 강화

- 지자체, 품목 자조금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 홈쇼핑 판매 활성화 추진단\*」 확대·운영(1월~)
  - \* 지자체 특화 품목 등 우수 상품 발굴 및 물량 조달 등의 역할 수행
- 입점절차 간소화 및 이용 절차 등 정보제공으로 농가 참여 확대
-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매 연중 기획 방송 추진(5월~)



□ **농협 중심 조직화 및 안성물류센터 기능을 활용하여 노지채소류 중심으로 대량수요처에 직공급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유통 연계**

○ 공동선별·공동계산을 활용한 조직화가 곤란한 노지채소류는 **농협의 계약재배를 수단으로 생산자 조직화 추진**

○ **농협 물류센터의 소포장 및 전처리 기능을 활용해 1인가구 증가 등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품 공급 확대**

\* 홈플러스 신선편의 농산물 공급 : ('13) 46억원 → ('15) 192

- 외식업중앙회, 중소슈퍼연합회 등 대규모 수요처를 발굴하고, 산지 직거래를 연계해 산지의 개별 마케팅 부담 완화

### [농식품 유통산업 육성]

□ **농식품유통교육원(42과정, 18백명) 및 농협교육원에 국내외 유통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식품법인연합회도 자체적으로 산지조직화 교육 추진

□ **농협의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통합마케팅 조직 등)에 농산물유통(산지·도매·소매) 유경험자 등 우수 전문인력 우선 배치**

□ **저장·물류 등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유형을 발굴하고, 농식품 공동 물류\*** 확대 추진

\* 기업 간 물류자원(시설, 장비, 인력 등)을 공동 이용해 비용 절감 기여

○ **산지 수집 및 수송단계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배추·무에 대해 물류기기 이용 확대 등 물류표준화 시범사업 추진(7월)**

## [현장의 공감대를 토대로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 □ 정가·수의매매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및 홍보 강화

- 중점품목 관리 및 예약거래시스템을 통한 예약형 거래 활성화 유도
- 사례집 작성(9월) 및 경진대회 개최(11월)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찾아가는 교육 등 현장 공감대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 도매시장 운영·물류 효율화를 위한 평가 개선 및 시설현대화 추진

- 도매시장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해 시장 운영주체별 평가제도를 보완하고, 부진 도매시장은 관리체계 개편안 마련(12월)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현대화가 정상 추진되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기적 현장점검 및 관리
  - 가락 도매시장 소매권역 이전배치(2월) 및 도매권역 기본계획 마련, 천안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완공(12월) 등 추진
- 수도권 거점시장 최소출하단위 시범운영\*(14.12월~) 결과를 토대로 최소출하단위 설정 품목 및 운영 시장 보완 추진(3월)
  - \* 시범품목 : 포도, 배, 감자, 버섯 / 운영시장 : 가락·강서·구리 시장
- 저온창고 설치 완료(안동, 춘천) 및 신규 지원(1개소) 등 시설투자 확대

### □ 대금정산조직 운영 내실화 및 확대를 통해 도매시장 거래 안정성 제고

- (가락시장) '15년 설립한 상장예외품목 대금정산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분기별 운영 실적 점검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대금정산조합을 설립(3월)하고, 시장도매인(60개 법인)의 모든 거래를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정산 실시(6월~)

##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화]

- (관측 고도화) 생산단계 관측정보가 실제 생산조절로 이어지도록 사전예측기능을 강화하고, 소비단계 조사 강화로 수급관리 내실화
  - 생육환경 모니터링시스템 확대\*, 작황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산지작황 예측 정교화
    - \* ('15) 고랭지·겨울 배추 → ('16) 양념채소까지 확대
  - 대량수요처 저장·소비실태 조사를 강화하여 수급관리 정교화
    - 저장·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조사체계 보강
      - \* 마늘·양파 저장업체(120개소 → 150), 대량수요처(1개 품목, 연 2회 → 5, 5)
  - 관측 정확도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농협·농진청) 산지작황 및 출하동향 공동 모니터링 등 조사 강화
    - (aT) 비축물량 및 계약재배 현황 공유, 저장실태·수입국 생산동향 조사
    - (기상청) 품목별 주산지 시·군 기상 데이터 공유
    - (통계청) 통계와 관측치간 오차 축소를 위해 조사 방법 차이 개선
  - 사전 수급조절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관련기관·단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를 통한 관측정보 공유 강화
    - 파종·정식 전 주산지 중심의 수급동향 현장설명회 집중 개최
      - \* 현장설명회 개최 : 8개 품목, 4회 → 9개 품목, 8회
    - 품목별 자조금을 활용하여 회원농가 대상 관측정보 교육 확대

□ (자율수급조절) 생산자, 지자체, 중앙정부 간 체계적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

○ (계약재배 개선) 채소류 생산안정제\* 확대, 출하안정제\*\* 도입 등을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정책 뒷받침

\* 계약물량에 대해 일정가격(평년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대신, 주산지 중심의 생육단계 사전 면적조절 등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해 적정면적 유도

\*\* 기존 계약재배의 계약주체를 농협 중심에서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으로 다양화하고, 가공공장 등 고정 수요처를 확보한 조직 중심으로 지원 확대

- 생산안정제 사업 대상품목 및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주산지 중심의 생육단계 면적조절 등 사전적 대책 강화

\* ('15) 고랭지·겨울 배추, 양파(3개 품목), 5~10% → ('16) 겨울무 추가, 10~15%

- 식품업체 등 고정거래처를 확보하고 정부 수급조절에 참여하는 법인에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하는 출하안정제 도입·시행

\* aT 계약재배 및 비축사업과 연계하여 계약재배의 수급조절기능 강화

○ (지자체 역할 강화) 지자체 주도의 지역 특화 품목 수급조절 지원 확대

- 지자체·생산자단체가 조성한 기금으로 자율적 산지폐기 등 선제적 대책 추진 시 일정비율 매칭 지원

\* 자율적 수급안정지원 예산(긴급가격안정): ('15) 30억원 → ('16) 40

\* 제주 사례('14): 작황호조 등으로 12월 겨울당근 가격이 평년 대비 37% 하락 하자, 저급품 출하제한(6천톤), 산지 자율감축(6천톤) 등 자율적 수급대책 추진

- 채소류 유통조절명령제 대상 품목 확대(10월)

\* ('15) 고랭지 배추 → ('16) 겨울 배추 또는 무

□ (비축) 비축사업 내실화 및 탄력적 운용, 저장법 개선으로 수급불안 대응

○ (수매비축) 수급불안 예상품목 중심으로 확대하고, 계약재배 물량 우선수매\* 등을 통해 출하조절 물량 적기 확보 및 정책 간 연계성 강화

\* 산지유통법인 대상 aT 직접 계약사업 추진 : '16년 배추 70천톤, 무 10(20% 이내 상시비축물량 활용)

- (수입비축) TRQ 물량은 시장여건·매뉴얼 등에 따라 탄력적 운용
- (저장활용) 수급 불안 시 현장에서 쉽게 적용가능하고 저장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토굴 등 농산물 저장기간 연장방안 실증연구 추진
  - \* 농식품 R&D 사업 추진 : '16~'17년(예산 : 6억원 이내)

## [축산물 수급안정 체계화]

### □ (수급 조절) 수급조절협의회 중심의 민간 자율 수급관리 체계 정착

- (한우·돼지) 자조금 수급조절예비비 적립을 통해 수급불안 시, 업계 자율비축, 물량 구매 등에 우선 활용(연 한우 30억원, 한돈 25)
- (가금) 무허가 종계·종오리장 단속을 통해 과잉사육 사전 예방
- (낙농) 원유가 연동제 보완·개선, 전국단위 쿼터관리제 추진 및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방안 마련(상반기)
  - \* 원유생산 감축(전체 80천톤), 위생 하위등급에 대한 원유가격 페널티 부과 도입('16.1)

### □ (패커 육성) 계열화 체계를 갖춘 품목조합 및 거점(지역) 도축장을 축산물 패커\*로 중점 육성

- \* 축산물의 도축, 가공, 판매를 일관처리하는 경영체
- (계열화) 일관체계 구축을 위해 도축장을 중심으로 브랜드경영체(생산), 육가공업체(유통), 전통시장(판매) 등과 연계, 유통주체간 수평계열화 유도
- (거점도축장)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일관체계 물량 확대 유도
- (지역도축장) 중소규모 패커의 기능에 맞는 '지역도축장' 선정기준 마련(3월)
  - \* 패커 육성 등을 포함하여 「도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1/4분기)

### □ (수급 정보) 관측강화 및 가격통계 정비를 통해 수급 정보 정확도 향상

- (한우)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적정 사육마리수를 재설정하고, 수급 진폭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급상황별 대응방안 수립

- (돼지) 양돈관리시스템(한돈팜스)을 통한 농가 사육 및 생산정보 모니터링으로 **수급변화 사전예측** 및 사전 수급안정 조치 강구
- (가금) 가금 수급정보 정확도 향상 및 농가·유통업체 거래 기준별 체계화를 위한 **가금산물 가격조사 시스템 운영(2월)**

## **[17년 2월까지 농협 사업구조개편 차질 없이 마무리]**

□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중앙회·지주체제에 적합한 지배구조 구축** 및 **지도·감독 시스템 정비(6월)**

- (중앙회) 임원의 권한·책임을 명확화하고, 조합 발전 중심의 **이사회 역할 개편**
- (경제지주) 시장 경쟁에 적합한 **전문경영인체제 강화**

□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경제지주 중심 경제사업 활성화**

\* 중앙회 판매 비중 : ('11) 10% → ('14) 19 → ('15) 21 → ('16) 26 → ('20) 50

-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소매유통을 혁신하고(조합마트 계열화·체인화), 5개 유통자회사를 단일법인으로 통합한 **농산물 전문판매회사 육성**
- **조합공동사업법인** 발전방안을 마련(3월)하고 조공법인(97개소: 658개 농협 참여)을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주체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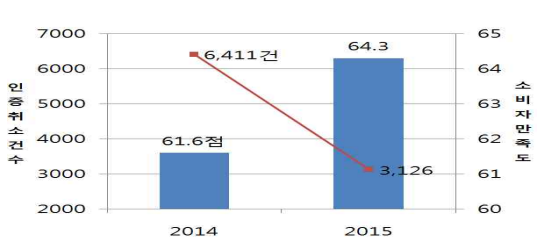
□ 판매농협 구현을 위한 **일선조합 발전방안** 마련(6월)

- 사업 미이용 조합원 제명,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에 조합 경제사업 이용 의무화, 무자격 조합원 정비 등으로 **이용자 중심 농협 구현**
- 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에 경제사업 실적 의무화, 도시 조합의 농촌 조합과의 투자협력 유도로 **경제사업 중심 경영체계 구축**

### 3 |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 가 '15년 주요 성과

- 친환경농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산-유통-소비 선순환체계 구축
  - 유기농 대상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5년→8), 발작물 친환경·밭직불 중복지급(25~40만원/ha)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지속실천 유도
  - 인증과정 2중-check 시스템(민간인증기관+농관원) 도입 등으로 부실 인증건수 전년대비 51% 감소 및 소비자만족도 향상
  - 친환경 판매채널 다양화, 우리부·롯데슈퍼·친환경단체 상생협력 MOU 등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식품 판매장과 매출액 증가



<인증취소건수 및 소비자 만족도 변화>      <친환경 인증 농식품 판매장·매출액 변화>

<우수사례 : 농식품부-롯데슈퍼-친환경단체 MOU(5.22)>

- 유기농 판매 점포 증가(3월 : 30개소 → 11 : 200), 취급품목 확대(3월 : 47개 → 11 : 108)
- 충청남도-롯데슈퍼간 유기농 MOU 체결(7.22) 등 상생협력 사례 확산

#### □ 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기반 확충

- 유기축산 직불금 및 동물복지 인증 축종 확대
  - \* 유기축산 직불 : 지원한도 확대(2천만원 → 3), 지급기간 연장(3년 → 5)
  - \* 동물복지 인증 : ('14) 산란계·돼지·육계 → ('15) 한우·육우·젖소·염소 추가

-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확대('14: 9개소 → '15: 22)
- 가축분뇨 처리기반 확충으로 자원화율 제고('14: 89.7% → '15: 90.2)
  - \*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 : ('14) 108개소/8개소 → ('15) 112/9

☞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 판매처 미비(전체 소매점의 0.7%) 등으로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에 어려움

☞ 가축 분뇨 자원화율 향상에도 불구하고, 악취발생 원인별 집중관리 부재로 악취관련 민원 지속

## 나 '16년 추진계획

-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지속 기반 확충, 인증기준 합리화**
  - \* 친환경농산물 인증 부적합률 : ('15) 4.6% → ('16) 3.5 → ('20) 1.0(연간 25% 감소 목표)
  - \* 유기·무농약 재배면적 : ('15p) 4.5% → ('16) 5.5 → ('20) 8
  - \* 친환경축산(유기·무항생제) 인증 : ('15) 7,716호 → ('16) 8,000
  - \* 동물복지 인증 : ('15) 76개소 → ('16) 150
-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이용 활성화 및 악취 문제 개선**
  - \* 공동자원화 시설 자원화율 : ('15) 14.5% → ('16) 15.8 → ('17) 17.2  
(가축분뇨 자원화율) : ('15) 90.2% → ('16) 90.6 → ('17) 91.0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기반 확충]

- (신뢰제고) 인증관리 강화와 인증기준 합리화 병행 추진
  - 유기·무농약 인증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12월)
    - \* 유기는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과도한 사항은 조정하고, 무농약은 안전과 관련이 적은 전환기간(1년) 등을 폐지하여 관행농가의 접근성 제고
  - 생산단계 2중-check 시스템 확대('15: 전체 인증의 3% → '16: 6)



- **이원화된 인증체계**(농관원·민간인증기관)를 민간인증체계로 일원화(8월) 하고, 농관원을 통한 민간인증기관 관리 및 사후관리 철저
  - 민간인증기관 역량강화 및 신뢰제고를 위한 **평가·등급제 시행**(7월)
    - \* 연구용역·의견수렴 등을 거쳐 평가기준·계획 마련(5월) → 평가 및 정보공개(7월)

□ **(유통·소비) 친환경 인증 농식품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 확대**

- 유통비용 절감 및 소비자의 안정적 상품공급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주도 **광역단위**(도단위) **산지유통조직** 육성(1개소)
- 생협·직거래·로컬푸드 매장 등 친환경농산물 **판매채널 다양화**
  - \* 소비자 판매장 확충(연간 10개소),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400억원) 등
- 자생적 소비촉진·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친환경 의무자조금 도입**(4월)
  - \* 단체설립 및 가입동의서 접수(1월) → 대의원회 구성(3월) → 의무자조금 출범(4월)
- 소비자단체협의회-친환경단체와 **공동체지원농업\***(CSA) 신규 추진 (12월까지 소비자 1만명 모집)
  - \* 소비자조직이 농가에 경영비를 지불한 후 수확기에 농산물을 현물로 제공받는 방식
-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 농산물 및 유기·무농약 혼합 가공식품 표시·인증기준** 마련('17년 상반기부터 시행 목표)

□ **(생산)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유기자재 관리 강화**

-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 구성·운영('16~'20년)을 통해 **한국형 유기·무농약 생산모델**(주요품목 10개) 개발·보급
  - \* 선진농가 성공사례 분석 → 품목별 생산모델 구축 → 현장실증 → 배포
- 효능이 확인된 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자재 관리체계 통합**
  - \* (현행) 공시(효능·효과 표시 불가)·품질인증(효능·효과 인증하여 표시) → (개선) 공시를 기본으로 하되, 대조약제 비교 등을 통해 효능·효과 표시 가능
  - \* 연구용역(1월) → 업계·농업인 의견수렴 및 개정안 마련(~3월) → 법률개정(12월)

□ (농업환경)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보전기능 제고 방안 마련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효과 검증 및 증진방안 연구(~'18, 7억원)\*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 방안 마련

\* 품목군별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현황 조사, 관행-친환경농가 농업환경 변화상 비교·분석 등을 거쳐 환경재 확산·관리체계 구축

- 농업의 전반적인 환경보전기능 제고를 위해 우리 농업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보전지구 모델 정립(12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가축의 습성을 고려하여 건강하게 사육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 구현

< 환경부담 최소화 >

< 생산기반 조성 >

< 공급 활성화 >

- ◆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 ◆ 축산악취 저감으로 민원해소

- ◆ 유희 산지를 활용한 환경 친화적 생산모델 도입

- ◆ 친환경축산/동물복지 인증확대
- ◆ 친환경축산물 유통 활성화

□ (공동자원화 시설 확대) 공동자원화 시설 수익성 확보 등을 통한 창조경제 비즈니스 모델화 추진

- 규모화·광역화를 통한 가축분뇨 처리물량 확대 및 수익성 확보

\* 퇴비화시설을 제외한 처리용량이 1일 100m<sup>3</sup> 이상인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에서 제외 추진(환경부 협업)

- 고품질 퇴·액비 수요처(가로수, 골프장 등) 및 바이오에너지 판로\* 확보

\* 바이오가스 플랜트 공정에서 나온 폐열을 인근 시설원에단지에 공급

-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 시설을 유치한 사례 홍보 및 견학·교육시설로 활용(예: 충남 아산, 전북 정읍 등)

□ (악취 저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악취 집중관리 및 유형별 표준 저감 기술을 선정, 보급하여 축산농가 등에 확산

- 주요 악취발생지역에 대하여 「패키지형 지원\*」으로 해당지역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4월)
  -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광역악취 개선사업(120억원)을 통해 3~5개소를 선정, 악취저감시설, 축산환경컨설팅, 경관개선, 홍보 등 실시
  -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를 타 지자체와 공유 및 확산(12월)
- 악취발생 유형별 표준 저감 기술을 농가 등에 보급(12월)
  - \* 기존 악취저감 기술을 유형별로 분류·평가(농진청, 실용화재단 등 협업)

□ (협업) 축산분뇨 및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구분	역할
농식품부	노후화된 시설은 개·보수를 유도하고, 환경부·지자체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적극 추진(3월) * 점검을 통해 환경부의 유사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 단가 등 합리적 조정
축산환경관리원	축산과학원, 환경관리공단 등 축산분야 환경관련 전문기관과의 기술협력 MOU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4월) * 주요 업무: 악취 컨설팅, 퇴액비 유통 및 품질관리, 분뇨처리시설 기술 평가 등
생산자단체	악취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소비자단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연중) * 지역주민이 찾는 축사농장 만들기, 축종별 결의대회, 교육·컨설팅 등
범축산업계	축산업 상생발전 기금(사료업계 조성) 등을 활용하여 축산환경 개선 R&D 사업 및 축산업 인식개선 사업 추진(연중)

□ (종합대책) 분뇨·악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축산환경 관리 종합대책' 마련(5월)

- 공동자원화시설 등 분뇨처리시설 관리 기준 마련(6월)
  - \*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악취 사전 차단,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
- 축산환경 컨설턴트 육성(현 380여명)을 통한 농가 컨설팅 상시화
  - \* 생산자단체, 농협, 교육기관 등에 교육과정 신설(6월)
- 가축 분뇨·악취 관련 전산 및 통계기반 구축(상반기)
  - 전국 가축분뇨 지도(map) 제작, 지자체의 퇴액비 이용 계획 등에 활용

□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확대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한 기반 확충

○ 저비용, 친환경적 축산모델 확산을 위한 산지생태축산 지속 확대

\*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누계) : ('14) 8개소 → ('15) 22 → ('16) 40

- 기 선정 농장(22개소)은 컨설팅을 통해 6차산업화를 지원하고, 신규 농장은 초지 조성, 기계·장비 등을 패키지 지원
- 시범농장('14~'16) 종합평가(12월)를 통해 한국형 표준모델 정립

○ 산지초지 조성에 따른 각종 규제와 부담금 해소 추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외(환경부, 안전처 협의)
  - \* 초지 내 부대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관계법령(초지법-백두대간법)간 상충 해소(산림청·환경부 협의)
- 국·공유림 활용 초지조성 시 각종 부담금과 비용 보조 검토(기재부 협의)

□ (신뢰제고) 친환경축산 인증의 유사·중복기준 표준화 및 인증기준 개선

○ 인증제\* 간 공통기준(현재 5개)을 확대하여 인증심사 시 면제(12월)

\* 인증기준 : 총 185개(유기 67, 무항생제 34, 동물복지(돼지) 72, HACCP(돼지) 85)

○ 친환경인증 동물약품 사용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무항생제 인증명칭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해소(12월)

\* (예시) 휴약기간의 2배 준수 →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전환기간 재준수

□ (유통·소비) 친환경축산물 유통채널 구축 및 소비자·생산자 네트워크 강화

○ 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에 친환경축산물 직거래매취 자금 지원('16년~, 업체 당 20억원)으로 전문 유통채널 구축

○ 농장음악회 등 소비자와 축산농가가 함께하는 행사 추진(6월)

## 가 '15년 주요 성과

## □ GAP 생산기반 조성으로 전년 대비 인증 농가(14%)·면적(8%) 확대

\* GAP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상승: ('14) 57.4% → ('15) 61.4

< 유통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및 농협을 통한 GAP 판로 개척 >



- GAP 취급품목/매출액  
( '14 ) - → ( '15 ) 14개/90억원
- GAP 인증 농산물  
( '15 ) 6 → ( '17 ) 25개 확대
- 청과사업단 GAP 매출액  
( '14 ) 45 → ( '15 ) 146억원

## □ 학교급식용 농산물에 대한 관계부처 간 안전관리 협업체계 확립

- 농식품부는 계약재배 등 생산단계, 식약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도매시장 등 유통단계를 전담해 부적합품의 사전 차단 강화

\* 농협-농관원 MOU로 로컬푸드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조사체계 구축

## □ 식생활·식습관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확산

- 교육대학교 학과목 신설, 농촌고령자 및 영·유아 어린이 대상 식생활 건강개선 사업\* 신규 추진(양평군 10개 마을, 어린이집 38개원) 및 식생활교육기관\*\* 신규 지정

\* 교육대학교 식생활교육 학과목 신설 : ('14) 0개교 → ('15) 7개교

\*\* 식생활교육기관 : ('14년) 53개 → ('15년) 55

☞ '06년 GAP 제도 도입 이후 인증면적이 3.8%('15)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소비자 인지도도 미흡

\* 소비자 인지도 비교('15년) : 친환경인증 95.8%, GAP 인증 61.4%

☞ 다양한 식생활·식습관 교육을 전개하였으나, 시범사업 형태의 단기성 추진으로 교육 효과의 지속성 미흡

## 나 '16년 추진계획

- ◆ 교육·컨설팅, 대량 수요처 발굴 등 지원 강화로 GAP 인증 확대
-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 확대
- ◆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수혜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추진

### [GAP 농산물 생산·유통 확대]

#### □ GAP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기반 구축

- (대단위)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분석 Free Zone을 설정하여 주산지 및 공동경영체 중심으로 GAP 조기 확대
  - \* GAP 인증에 소용되는 비용 중 토양·용수 분석이 34%로 큰 비중을 차지, 분석 프리존 설정 시 인증 비용 등 농가 부담 경감
  - \* '16년 예산(국비 60억)으로 연간 전체 경지면적의 9% 수준 분석 가능
- 시·도별로 GAP 확대 계획을 수립하면, 지역 내 중점지역에 대한 토양·용수 분석 비용을 지원하여 GAP 인증 확대 지원
- (소규모) 농가가 보유한 소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을 GAP 시설 개·보수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농가의 부담 완화
  - \* 개·보수 지원가능 시설 : (기존) APC, RPC → (개선) 농가 보유 소규모시설
- (교육) GAP 단체인증 단위교육, 품목단체별(과수농협·생약협회) 교육 등 맞춤형 교육 확대, 교육 기관간(농관원, 농진청 등) 협업 강화

#### □ 유통·급식업체와의 연계 강화, 맞춤형 홍보로 소비저변 확대

- 유통·급식업체와의 연계 강화로 GAP 농산물 수요기반 확충
  - 유통업체 중심의 GAP 농산물 취급 확대로 농가의 GAP 전환을 유도해 유통업체 GAP 농산물 매출액 전년대비 100% 이상 상승

- 「단체급식 GAP 취급 확대 T/F」 구성·운영으로 단체급식 업체의 GAP 농산물 사용유도, 영양사 교육 등을 통해 GAP 농산물 소비저변 확대

○ GAP 기획 판매전, 우수사례경진대회 등 차별화된 GAP 홍보 확대

###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HACCP 확대]

□ 지자체·관계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도축장·집유장 등 HACCP 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해 베스트 작업장을 선정(4분기)하고, 홍보 추진
- 도축장 HACCP 자율평가제(연 2회)를 도입(1월)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도축장의 책임성 강화
- 명절 및 하절기 등 축산물 위생관리 취약시기에 지자체·식약처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공동브랜드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 식약처와 협업, 로컬푸드 직매장 내 농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연중)
- 로컬푸드 표준 조례안을 제정하여 전국 시·도에 배포(7월)

□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 실시(4월·9월)

- 학교급식 식자재 전자조달시장 성장에 대응하여 안전·위생상태 점검

## [강화된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개정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로 시행과정(17.1.1~) 상의 업계 및 소비자의 혼란 사전 예방
  - 표시 품목수 확대\*, 음식점 표시방법 개선\*\*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완료하고(1월), 표시 대상업체와 국민을 대상으로 개정사항 이해도 제고
    - \* 농산물·가공식품 : 화훼류(절화), 백수오 등, 음식점 : 콩(두부, 국수, 비지), 쌀(누룽지, 죽)
    - \*\* 원산지표시판 크기확대 및 표시판 게시위치 명확화(주출입구 정면 등)
  - 외식업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음식점·시장 등에서 자율적 원산지 표시 정착 및 표시 우수 사업장 홍보 강화(수시)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속 식생활 교육 확산]

- 사전 예방적 식생활관리,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리 사각지대 농촌 고령자의 영양·건강 개선 사업추진(11월~익년 3월)
  -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농식품 기부를 새로운 사회공헌(CSR) 모델로 정립
    - \* 식품 제공처를 지역농협, 1사 1촌 기업, 관련 협회·기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모델 개발·확산
    - \* 도시지역 지역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업하여 노년층 대상 미각 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강화
  - (영유아) 텃밭을 활용한 과일·채소류 재배 및 실습 프로그램을 통한 편식 예방, 식생활 교구 지원 등으로 바른 식습관 형성 추진



- (청소년) 쌀 중심 식습관 학교 확대('15: 172개교 → '16: 200개소) 운영을 통해 쌀 소비의 미래 수요층 육성 및 건강 증진 도모(3월)
- (성인) 식생활교육 과목을 개설한 학교를 확대하여 예비교사 단계부터 교육(3월~)
  - \* ('15) 7개 학교 시범 운영 → ('16) 11개교
- (전체) 대형유통업체 문화센터에 식생활교육 강좌 개설 확대
  - \* 확대 운영 : ('15) 3사 40개소 → ('16) 4사 50개소
- (기타) 학교, 기업체 등 대상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활성화(수시)

□ 식생활 교육 확산 및 성과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업 확대

- (복지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직무교육 시 식생활교육 지원, 교육교재 및 교육 우수 사례집 제공(4월~)
- (여가부) 가족밥상의 날(농식품부)과 가족사랑의 날(여가부)을 연계, 공동 캠페인 추진으로 시너지 제고(3월~)
- (국방부) 바른 식습관을 위한 군부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5월~)
- (교육부·교육청) 초·중학교 정규 교과과정 개편('17년)에 따라 교과서 집필자용 식생활교육 지도서 보급 및 교사연수 지원(하반기)
  - 학교의 창의적 재량활동을 활용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교재 보급
- (기타)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식생활교육 범국민적 확산(3월~)
  - (휴롬)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제철 채소·과일 중심의 미각교육과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편식예방 및 건강 증진
    - \* 농식품부-휴롬-생산자연협회간 업무협약(MOU) 체결, 국내 채소·과일 소비촉진 도모
  - (대형유통업체) 「바른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 연중 홍보

### 3.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제고

◆ **사회안전망 확충, 체감형 복지정책 강화 등 배려농정을 확대하고, 소득안정·위험관리 지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제고**

####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 받고정직불 단가 일원화, 수입보장보험 대상 확대 등 소득안정 지원 강화
- 재해보험 확충 등을 통해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 부담 완화
- 시중금리 인하추세에 따라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여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
- 안전보험 보장수준 및 대상 질병 등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

#### 위험관리 강화

- 가축질병 방역현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방역주체의 책임성 및 역량 제고
-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의 철저한 추진

#### 농촌 주민 복지 증진

- 농촌지역의 상황과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 농지연금 및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인 노후소득 안정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복지전달 체계 개선
- 영농 후계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원, 여성농업인 육성 등 추진

#### 정주여건 개선

-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개발 패키지 지원
-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연계를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ICT 융복합 창조마을 조성 확대

# 1 |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 가 '15년 주요 성과

□ (소득안정 체계화) 받고정직불과 수입보장보험(밭작물 중심)을 도입하여 논 뿐만 아니라 밭에도 '소득안정 + 경영안정' 체계 구축

\* 쌀 소득안전망 : 소득안정(고정직불), 경영안정(변동직불)

○ (논) 논 고정직불 인상(90만원/ha → 100), 신규농에 대한 지급요건 완화, 논 이모작 직불 인상(40만원/ha→50) 등으로 쌀 농가 소득안정 강화

\* 쌀직불 : 평균 수급액('14: 102만원 → '15: 108), 수혜농가('14: 740천호 → '15: 777), 지급면적('14: 835천ha → '15: 841)

○ (밭) 밭직불 지목·품목 제한을 폐지하고,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실시

\* 밭직불 : 수혜농가('14:325천호→'15:546), 지급면적('14:192천ha→'15:362)

< 소득안전망 체계화 >



□ (재해 보험) 대상 품목 확대,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고, 보험 인프라 확충 등 보험의 공적기능 강화 추진

○ 품목 확대('14: 59개→'15: 62), 종합위험 보장 적용 확대('14: 2품목 → '15: 3), 전담기관(농금원) 출범 및 손해평가 자격제도 도입

\* 가입률('14: 16.2% → '15: 21.7), 가입면적('14: 134천ha → '15: 186)

□ (재해복구) 지원단가 인상으로 농업인 부담 완화

- 사유시설 7개 항목(평균 36.8%), 공공시설 25개 항목(평균 2.1%) 인상

□ (정책자금 금리인하) 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업인 부담 경감

- 두차례 농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최대 908억원의 금융부담 경감
  - \* (1월) 농기계구입자금 등 6개 사업 금리 인하(3%→2~1), (7월) 농업인 대상 25개 사업(3%→2.5), 일반법인 대상 12개 사업(4%→3) 추가 금리 인하 추진
  - \* 시중저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변동금리 적용 대상사업을 25개로 확대
- 농신보 위탁보증한도 확대(3천만원 → 5) 및 RPC 보증한도 확대(30억 → 50)

□ (세제 개편) 농업부문 국세·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 유지·개선

- 비과세예탁금, 농지연금 대상 농지 재산세 면제 등 일몰 기한이 설정된 제도의 일몰 연장
  - \* 농업용면세유, 농업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촌공사 정부대행사업 지방세 감면 등 약 20여건 일몰 연장(1~3년)
-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확대(5억→15)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 품목 추가
  - \* (기존) 52종 → (개정) 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왕 등 4종 추가

**나 '16년 추진계획**

- ◆ 밭고정직불 단가 일원화 및 직불제 제도 개선 등 추진
- ◆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 ◆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상품다양화 등으로 가입률 제고
  - \* ('15) 21.7% → ('16) 24.0 (면적 205천ha, 전년대비 19천ha 증)

**[직불제 개선]**

□ (직불제) 농가편의성 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밭고정직불 단가 일원화를 위해 대통령령 개정(3월, 직불제 시행규정)
  - \* (현행) 26개 품목 40만원/ha, 그 외 25만원/ha → (개선) 전품목 40만원/ha
- 들녘별 경영체의 논이모작 밭직불금 지급한도를 400ha로 상향

- 도시농업인, 관외 거주자 등에 대한 **자격요건 합리화와 부당수령 관리** 등 개선안 마련(12월), 이행점검 효율화를 위한 담당기관 변경(1월)
  - \* 의견수렴(5월), 부처간 협의 및 법령 개정 완료(12월)
  - \* (현행) 농어촌공사 → (개선) 경영체DB 관리기관인 농관원

##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상품 다양화로 가입률 제고]

□ **(재해보험)** 보험상품 다양화, 대상품목과 보장수준 확대로 농가의 자발적 가입과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피해조사 체계 강화

- **무사고환급제도\*** 도입, 보장금액 선택 특약, 벼 미이양 보장 등 다양화
  - \* 피해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농가의 재해예방 경비를 인정하여 보상
- 품목('15: 62개→'16: 66), 가입금액대비 85·90% 보장상품 확대(12품목→20), 과수종합위험보장 추가(배 전국, 단감 30곳, 사과 15, 뽕은감 3) 등
- 농금원의 재해보험 상품과 지원·개선 등 기존업무를 내실화하고, 안전보험 업무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정책보험 관리기능을 강화
  - \* 안전 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상품 연구·보급 등 업무 추가(1월)
- 손해평가사 교육·양성 등 객관적인 손해평가체계 마련(6월)
  - \* 손해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실시(1~2회), 실무교육 실시 및 현장 활용도 제고

□ **(안전보험)** 보장수준 확대 및 상품개선으로 농업인 만족도 제고

- **보장수준 상향, 대상 질병 추가** 등 산재보험수준으로 단계적 강화(1월)
  - \* 사망시 유족급여 : ('14) 100백만원 → ('15) 110 → ('16) 120
- **농기계보험 종합보험 가입률 제고 대책 추진**
  - \* 예산확대 및 농기계 종합보험-농기계은행 사업관리 체계화 등 검토
- 보험료 우대 등 **고령·영세농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등지원(지원비율은 관계부처 협의 중)

□ **(농업수입보장보험)** 농가 소득·경영 안정 강화를 위해 대상 품목 확대(4개)

- \* ('15) 콩, 포도, 양파 → ('16) 콩, 포도, 양파, **마늘**

## [재해지원 현실화]

- (재해지원)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대응력 강화, 복구단가 인상 추진
  -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 국민안전처 운영) 적용을 농업재해까지 확대하고 우리부와 공동 활용 방안 마련(9월)
  - 복구단가 인상 추가 수요 발굴 및 관계부처와 협의·확정(7월)

## [금리인하 및 세제 개편으로 부담 완화]

- (금리인하) 농업인 대상 시설자금 고정 금리인하(1월, 2.5% → 2.0)를 통해 연 314억원 금융비용 절감
  -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등 수요가 많은 16개 사업 대상
- (세제 개편) 국세·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 유지 및 개선(1월)
  - '15년 일몰도래 국세 10건 및 지방세 15건 세제혜택 연장(1월)
    - (국세)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10건) 제도 지속(3년)으로 약 1조 3천억원 국세부담 완화(조세지출)
    - (지방세)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및 농지연금사업 농지 재산세 면제 등(10건) 지속(1~3년)으로 연 2,500억원 지방세부담 완화
  -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확대(5억원→15)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 품목 4종 추가(2월)
    - \* (기존) 52종 → (개정) 56종(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 등 추가)
  - 신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하여 농업인의 재산형성 지원
    - 금융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 2 | 위험관리 강화

### 가 '15년 주요 성과

□ (가축질병 대응) 가축방역에 경제적·과학적 관점을 접목하고 방역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상시방역을 전제로 방역체계 개선

○ KAHIS, GPS 등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역학 추적 등으로 방역초동 대응시간 단축(20시간 → 4)

○ 살처분 및 이동제한 범위 현실화 등으로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등 : ('10~'11) 2조7천억원 → ('14~'15) 638억원

#### < 방역체계 개선 >

주요 내용	'10~'11년	'14~'15년
방역체계	발생 후 사후 대응 중심	사전 상시방역 중심
권한	농식품부에 집중	단계별 검역본부 등 현장으로 이관
살처분	방역대 내(3km) 예방적 살처분	위험도 분석 후 선택적 살처분
이동제한	방역대 내 이동제한	방역대 내 가금 검사 후 도축출하
소독시설	모든 차량 소독·초소 운영	축산차량 선별적 소독·초소 운영
농가 책임성	감액기준(8종)	감액기준(30종)
	방역우수농가 인센티브 없음	방역우수농가 인센티브 부여
계열사 책임성	계열화사업자 관리 책임 부족	계열농가 방역프로그램 마련
ICT	KAHIS, GPS 관리, 빅데이터 활용 미흡	IT 활용체계 정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예측기법 고도화

□ (가뭄 대응)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15년 봄 가뭄을 조기 극복하고 금년 가뭄에도 선제 대응하며,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 관계부처·지자체·농어촌공사 합동 대응을 통한 '15년 봄 가뭄발생지역 (5개 시도 7.4천ha) 긴급 급수대책 추진(513억원 지원)으로 가뭄 조기 극복

\* 「가뭄 및 수급대책 상황실」 운영(인원 30천명, 장비12천대 동원) 및 국방부, 경찰청, 안전처, 국토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과 협업 실시

- 금년 영농기 봄 가뭄에 대비하여 용수원 개발 및 저수지 준설\*,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 등 선제적 대응

\* 용수원 개발: 979개소, 저수지 준설: 1,025개소

\*\* 공주보-예당지, 상주1지구 하천수 활용사업 기본조사 착수

(공주보-예당지 988억원 관개면적 7,887ha, 상주1지구 332억원 798ha)

- 중장기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 수립('15.12월)

- ① 계획적·다각적 농업용수 확충, ② 물 복지 소외지역(밭·중산간지) 지속적 용수개발, ③ 물 이용 효율화 및 수리시설 기능개선, ④ 농업가뭄예보 등 상시 가뭄대응체계로 전환\*

\* 수리안전답률:60→80%, 발용수공급률:18→30%, 물손실률:35→25%, 재이용률:15→30%

## 나 '16년 추진계획

- ◆ 방역현장의 기능 강화 및 방역주체의 책임성 및 역량 제고
- ◆ '16년 봄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농업·농촌 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

###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 (현장 강화) 현장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통한 초동대응 제고

-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의 질병검사 기능 확대 등 방역기능 강화

- CPX 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지자체 현장대응능력 향상

- (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소독·살처분 등 현장 방역조치 지시 권한 부여('16년)



□ (책임성 강화) 방역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자율방역 도모

- (농가) 보다 구체화된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8종→30종, '15.12.23~)에 따라 우수농가에 인센티브 부여
- (계열화사업자) 가금류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평가(반기별 1회) 실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ICT) 빅데이터 분석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방역시스템 첨단화

- (빅데이터) KAHIS의 축산차량 이동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 질병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 방역조치  
\* 미래부, KT와 공동으로 재난형 동물질병 확산대응체계 구축 사업(~'16.3월)
- (KAHIS) 축산농장 정보 KAHIS 통합관리 및 방역지원본부를 통한 농장정보 현행화 등 상시 농장관리체계 구축(우제류 분기 1회, 가금류 월 1회)

□ (사전예방) 사전예찰·국경검역 강화 등을 통한 질병 조기차단

- (취약요소) 발생농가, 전통시장, AI 방역관리지구 밀집 사육단지 등 집중관리
- (가축이동 관리) 돼지이동 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 (국경검역)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 시 신고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처분기준 마련(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16년)
- (가축질병공제제도) 농가 손실보상 및 질병예찰·진료 제공을 위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추진('16: 연구용역 → '17: 시범사업)
- (농가역량제고)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연 1회)을 실시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방역 역량 제고

□ (기타 질병) 돼지 유행성설사병, 소 결핵병 등 발생 최소화

- (돼지 유행성 설사병) 고역가 백신 공급 및 국내 유행 바이러스에 최적화된 신형백신 개발 추진('16년 하반기)
- (소 결핵병) '결핵병 박멸협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거래 가축의 검사증명서 휴대제 도입('16년 하반기)

□ (근절대책 수립) 구제역 증장기 근절 대책 마련

- 생산자단체, 현장수의사, 전문가 및 「구제역·돈열 박멸대책위원회」와 공조를 통해 단계적 구제역 증장기 근절 대책 마련(6월)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의 철저한 추진]**

□ '16년 봄가뭄 대비,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 추진('15.6월~계속)

- (농업용수 개발)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의 지속적인 신설·보강\*과 4대강 하천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 추진

\* 다목적 용수개발(82지구, 32천ha),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5지구, 4.5천ha),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6.6천ha) 추진

\*\* 「공주보-예당지(218천m<sup>3</sup>/일)」, 「상주보-화달지(172천m<sup>3</sup>/일)」 하천수 활용사업 추진 ('16.1월 기본계획수립 → 공사 발주(1월)·착수(2월) → '16.6월 부분급수)

- (사전대책) 가뭄우려 지역은 사전 용수확보 대책 추진

- 가뭄취약지역에 대한 용수원 개발 지속 추진(979지구)

\* 관정개발 1,150개소, 양수장 설치 176, 송수시설 설치 195, 기타(보, 물탱크 등) 255

- 추가대책('15.12.1, 특교세 31억원, 예비비 403)으로 지원된 저수지 준설 275개소는 '16년 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농어촌공사 관리 주요저수지(200개소, 50백만m<sup>3</sup>)에 대한 양수 저류 등 용수확보 ('15.12월 현재 33백만m<sup>3</sup>, 66% 확보)
- 한발대비 용수개발비('16년 425억원)를 활용하여 추가 가뭄발생지에 대한 용수원 개발, 양수급수 등 긴급대책 추진

○ (양수장비 점검) 가뭄대비 관정·양수기·송수호스 등 가뭄대책 장비에 대한 시·군합동 일체점검 및 자체 정비(2~4월)

\* 양수장비 현황('15년) : 공공관정 28천공, 양수기 33천대, 송수호스 4.1천km

#### □ 「농업·농촌 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 추진

○ (농업가뭄 예보) 「농업가뭄지도」를 격주로 작성·발표

-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예측(3월부터), 들녘별 가뭄단계 저수율 예측

○ (효율적 물관리) 저수지별로 「관개계획」과 「급수실적」 등 점검

- 매년 3월까지 저수지별로 관개계획을 수립하여 이양시기 조정과 용수로별 급수를 추진하여 물 절약 도모
- 매년 9월 낙수기 이후 강우예측 시나리오(평년대비 100%·70%·50%·30%)에 따라 가뭄우려지역을 도출하여 양수저류 등 선제적 대책 추진

○ (상시대응 체계) 선제적 농업가뭄 대응을 위한 농업가뭄협의회(위원장: 차관), 농업가뭄센터 및 농업가뭄지원단(농어촌공사) 설치·운영

- 사전예방에서 사후복구까지 농업가뭄 전(全)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

\* 농업가뭄 매뉴얼 작성(2월), 가뭄관련정보 관계부처 공유체계 구축('16상반기)

## 가 '15년 주요 성과

□ (사회안전망) 사회보험료 지원 및 농지연금 제도 개선으로 영세 고령농의 노후 생활 안정 강화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 상향 및 홍보 강화로 연금 보험료 가입자 전년대비 11% 증가

\* 기준소득금액/월 지원금액 : ('14) 85만원 / 38,250원 → ('15) 91 / 40,950

\*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 ('14) 342천명 → ('15) 380

○ 감정평가율 상향(70% → 80), 이자율 인하(3%→2.5), 소유농지 면적기준 폐지 등으로 농지연금 가입자와 월지급액 각각 20%, 5.2% 증가

\* 농지연금 신규가입/월지급액 : ('14) 1,036건/96만원 → ('15) 1,243/101

□ (맞춤형 복지 서비스) 영세 고령농의 주거·영양·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체감형 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

○ 농촌형 교통모델 도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향상('14 : 42점→'15 : 89)

○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조성으로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 지원('14~'15) : 공동생활홈 70개소, 공동급식시설 54, 작은목욕탕 28

효과 : 식사 횟수(2.4회/일→2.9), 목욕횟수(13.4회/월→17.7), 난방비(30만원/월→10)

☞ 농어촌 복지 사업이 대부분 지방사무(지방교부세 사업)로 분류되어 신규사업 개발에 한계

☞ 농협 등 유관기관을 보다 적극 활용하여 복지 전달체계 개선 필요

## 나 '16년 추진계획

◆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의 교육·문화·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농촌 삶의 질 향상

\* 농촌 복지 만족도 향상 : ('15) 5.91점 → ('16) 6.3

◆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 및 역량발휘를 위한 여건 개선

□ (맞춤형 복지) 지역 개발 사업과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농촌 행복꾸러미\*' 도입 추진 및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내실화

\* '거동 불편 어르신 밑반찬 배달 서비스', '이동식 세탁소 운영' 등 소규모 복지 프로그램 10개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에 포함하여 추진

○ 지역개발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설명회 시 행복꾸러미 사업을 안내하고 지구별 사업 계획 수립 시 복지 전문가 컨설팅 지원(1월~)

○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설치와 운영('16년 설치: 3개소, 운영: 30)을 지원(4월)하고,

-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일반국공립어린이집을 공동아이돌봄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주민의 보육 여건 개선(1월)

□ (노후소득) 농지연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개선 추진

○ 농지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해 농지연금 모형을 재설계 하고 가입 연령 완화 및 담보농지 평가를 상향 등 검토(9월)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 상향 및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자) 기준에 총소득 개념 도입 추진(12월)

\*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 ('13) 79만원 → ('14) 85 → ('16) 91 → ('17p) 97

□ (전달체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 농협의 복지 관련 조직·사업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확대
  - 지역 농협의 「행복 모음센터\*」를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농번기 주말 들봄방, 공동 급식 등 확산\*\* (3월)
    - \* 행복 모음센터 현황 : ('14) 25개소 → ('15) 40 → ('16) 60
    - \*\* 행복 모음센터를 활용한 신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리모델링 등 지원
  - 「행복버스」 의료지원 시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까지 제공(4월)
    - \*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규모 : ('15) 660백만원(50회) → ('16) 825(75회)
  - 중앙부처·지자체·농협의 다양한 농촌 복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는 「복지정보 서비스 포털」 구축·운영(9월)
- 도서·벽지 농업인에 대한 원격협진 및 의료정보 제공 확대 등 농업안전보건센터 기능 개편 추진
  - 보건복지부의 「원격협진 활성화 사업」 대상지역과 연계, 농업인 주요 질환에 대한 원격협진 시범 실시('16.상반기, 1개소)

□ (장학사업) 영농후계인력 대상 장학금을 늘리고 농업 현장실습·인턴활동 지원

- 영농후계장학금은 농고·농대 재학생에 집중 지원
  - 장학생 선발 시 '영농종사 의지 및 영농활동실적' 심사 강화
    - \* 영농후계 : (대학) 250만원/학기당, 26백명, (고교) 50만원/연, 10백명
- 농업인자녀장학금은 저소득층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연계 차등지원(8월)
- 농산업 취창업 희망자 대상 농업현장 실습·인턴활동 지원 신규 도입(8월)

□ (여성농업인육성) 「제4차('16~'20)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추진(3월)

- 공동경영주 인정 등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귀농·귀촌 여성 인력 육성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등

## 4 정주여건 개선

### 가 '15년 주요 성과

- 읍·면 소재지를 농촌지역 문화·경제 등 서비스 전달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
  - \* 중심지 선도지구 15개소 지정
- 마을단위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노후주택 개량, 인프라 조성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 \* 55개 마을 대상, 4,132가구 정비(슬레이트 2,684, 재래식 화장실 1,448)
-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추진, 현장포럼 및 행복마을 만들기 등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확대**
  - \*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5,390개 마을, 현장포럼 418, 행복마을만들기 2,017 참여
- IT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창조마을 12개소 시범조성**

- ☞ 농촌 생활여건은 향상되었으나, 아직까지 의료·교육·문화 등 기초서비스 공급은 부족한 상황
- ☞ 도로·건물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는 애로

### 나 '16년 추진계획

- ◆ 농촌에 우수인력과 자본이 유입되고 활력이 창출되도록, 지역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추진
  - \* '16년 6개 지역 시범사업 추진
- ◆ 기초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읍·면 중심지 활성화**,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체감형 지역개발** 강화
  - \* 농촌 중심지 선도지구 : ('15) 15개 지구 → ('16) 33(누적)
- ◆ 농촌의 정주·복지여건 등 특성을 감안, **창조마을 15개소 이상 조성**

##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추진]

- 기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업유치, 생활여건 개선, 주거지원 등을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에 패키지로 지원(6개소)
- 지역 특성에 따라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이 협력하여 사업 추진(7월)
- 기업유치, 일자리 및 인력양성, 생활여건 개선, 주거지원 등 4가지 메뉴\*를 제시하여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3월)
  - \* 예시 : (기업유치) 농공단지 리모델링,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일자리 및 인력양성) 취업훈련, 창업·기술교육 등, (생활여건 개선) 교육·문화 특화거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주거지원) 임대주택, 신규 주택단지 부지조성 등

##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 강화]

-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충하고, 배후마을 간 통합개발 추진
- 농촌생활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ICT 기반 콘텐츠\* 및 영세 고령농 등이 체감할 수 있는 패키지 사업모델 마련(1월)
  - \* 예 : 농촌마을 버스운행 정보시스템, 독거노인 주거안전 CCTV 시스템 등
- 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을 포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계획 수립 등 중심지와 배후마을 통합개발 추진(통합지구 시범사업 2개소, 5월)

## [주민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추진]

- 주민 참여 확대, 중간지원조직 구성 유도 등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상향식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여건 확충
- 농협 등 공공기관 및 주민 협의체 중심의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15:5,390마을→16:6,000), 도시민 동참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8월) 등 추진
  - \* 출향 도시민, 자매결연 마을 및 소비자단체 등 참여
- 마을 미래설계, 현안해결 등 주민주도 협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 포럼은 기존 마을단위에서 읍·면단위 사업까지 확대(4월)
  - \* 협의사항 : (현행) 사업추진전 미래설계 → (추가) 사후관리 단계 문제해결



##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

- 안전·위생조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주거개선 사업 효과 제고
- 도로·상하수도, 생활안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행복생활권 연계협력\* 및 취약지역 지원('15:55개소→'16:85) 강화
  - \* 5대 분야(님비해소·교육·안전·일자리·인프라) 지원 비중 : ('15) 71% → ('16) 80
- 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 및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자금(5천억원) 지원조건\*\* 개선
  - \*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농식품부) 철거 후 지붕개량, (지자체) 자부담 보조
  - \*\* 대출금리 인하(2~2.7%→2),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축소(4종→2) 등

## [지역개발 사업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 지역개발사업지구(2,103개) 내 시설물의 부당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
- 사업지구 관리강화를 위해 지구 내 시설물 용도, 규모 및 설치단가, 수익금 처리방법 등을 규정한 '시설물 설치 및 운영기준\*' 제정(1월)
  - 기준에 따라 시설물 운영·관리 실태 상시점검 및 DB화
- 부실지구는 시설용도 및 운영자 변경, 운영주체 역량강화 등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ICT 융복합 창조마을 조성 확대]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창조마을을 확산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복지부) 등 타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해 농촌주민 만족도 제고
  - \* 연구성과가 우수한 농업안전보건센터(2개소 내외)를 진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ICT 융합서비스를 포함(1월) 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민간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성과 제고
  - \*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체적으로 창조마을 조성계획 수립

## 4.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창업자금·기술 지원,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및 6차산업화 등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제고**



### 청년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 청년층의 농산업 창업 초기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 청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 개선
- 우수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창업자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은 해제하여 활용도 제고
- 6차산업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 규제완화와 더불어 우량농지는 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

### 농업의 6차산업화

- 젊은 층의 6차산업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 6차산업 경영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촉진
- 국내외 관광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

### 귀농·귀촌 활성화

- 귀농·귀촌인에 대한 창업지원 및 멘토링 체계 구축
- 귀농·귀촌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체류형 실습시설 등을 맞춤형 지원
- 제1차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적 기반 확충

## 1 청년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 가 추진 배경

- 청년고용절벽 등 도시는 청년층 일자리가 부족한 반면 농업·농촌 분야는 고령화가 심화되는 불균형 상황
  - \* '14년 기준, 농업경영주 중 70대 이상이 40%, 40세 미만은 0.9% 수준
- 농업인력 고령화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ICT융복합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첨단농업화에 대한 취약성을 심화시킬 우려
- 한편, 최근 30대 이하 젊은 귀농이 증가하고 있으며, 6차산업 등에서 젊은 층의 성공사례도 나타나기 시작
- 청년층의 농산업 분야 관심을 유도하고 창업 및 단계적 성장여건을 조성하여, 농업혁신을 촉진하고 후계인력 기반 구축 필요
- 농식품분야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초기 소득발생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 창업자금 부족, 농지 확보 곤란 등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 \* 귀농 애로요인(KREI, 복수응답) : 자금부족(51%), 농지구입(42), 주거(26), 영농기술(21)
- 특히, 타 산업 분야 대비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점이 벤처창업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나 '16년 추진계획

◆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농지, 영농기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농식품분야 청년 창업 확대

\* '17년까지 청년 농산업 창업 매년 2천명 이상 확보

## [창업초기 자금조달 부담 완화]

- 창업초기 자금조달을 위해 **모태펀드 및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자본 활용을 지원하고, **농업시설 투자플랫폼** 조성 추진
- **농산업 가치창조 펀드\***(5년간 1천억원), **아이디어 창업펀드\*\***(120억원), **6차산업 전문펀드**(300억원) 등을 활용하여 농식품 창업 경영체 지원
  - \* 농식품 모태펀드와 농협중앙회 공동출자로 창업초기 청년(39세이하) 농축산기업에 투자
  - \*\* 농식품 모태펀드와 GS그룹 공동출자로 창업 3년미만 아이디어 벤처기업에 투자
- 우수 농식품 창업기업이 일반국민,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운영(4월)
  - \* 기업의 사업계획, 상품 등을 온라인 사이트에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이 소액(최대 2백만원)을 투자
- 물적 담보가 없이도 **우수기술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가치 평가료의 일부**(최대 1천만원) 지원
- 초기 대규모 자본투자 여력이 없는 신규창업농(기존 농업인 포함)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농업시설 투자플랫폼** 조성
  - 생산자는 농업시설을 자산운영회사에 **매각**하고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시설 **구매자금**은 **외부투자자**로부터 조달
  - \* '16년 총 200억원 규모의 첨단농업시설 5~6개소 설치



- 만 18~39세 청년들의 **창업초기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 매년 300명을 대상으로 **창업안정자금 지원**(매달 80만원, 2년간)
- 수요에 따라 **1+1(창업준비+창업과정)트랙** 또는 **창업트랙**으로 구분하여 지원

- 창업준비 단계에서는 영농창업계획 이행을 위한 영농창업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시 훈련수당 지급
-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예정) 소재지에 주거 이전 및 농업경영체 등록 등 요건 확인 후 창업안정자금 및 멘토링·컨설팅 지원

### [청년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 개선]

- 신규 농지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량농지를 매입, 2030세대 신규 취농인과 청년창업인 등에게 맞춤형으로 임대
- 귀농·귀촌 실적 및 2030 창업수요가 많은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1,000㎡ 규모 우량농지 매입·임대

### [농식품분야 벤처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창업 보육, 및 판로 등 경영단계 일괄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농식품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지정(3개소)
  - 특화센터에서 창업지원 정보를 창업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우수 창업자는 집중 보육을 통해 성공사례로 육성
  - 6차산업 창업자의 경우,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창업 코칭·컨설팅, 시제품생산, 자금 및 판로지원 추진
- 벤처창업 우수 시제품 판매관을 수도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고, 6차산업 안테나숍과 연계하여 시장테스트 지원
-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3~11월)를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육성
- '15년 콘테스트 수상자(10팀)는 기술사업화 R&D(농기평), 창업보육(투자유치·시제품 제작·판로개척, 실용화재단) 등을 통해 성공사례로 육성

## 2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가 | 추진 배경

- 농업진흥지역은 '92년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지가 집단화된 권역을 지정
  - 지정 이후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른 자투리지역 등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편 야기
-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는 엄격히 제한
  - 각종 농업관련 시설도 설치가 제한되어 농업의 6차 산업화 등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애로 발생
- ICT·B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 6차산업화 등 농업구조 변화에 맞춘 농촌공간의 계획적 이용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정비 필요성 대두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건의 분석 및 전국 실태조사('14.7~'15.7)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 마련('15.12)
  - \* '16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여 대국민 발표('15.12.16. VIP주제 경제관계장관회의)

### 나 | '16년 추진계획

◆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농지로서의 이용가능성이 낮은 땅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에서 2·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

##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상시 정비체계 마련]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은 즉시 해제

###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 ①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ha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07·'08년 해제기준 적용 지역
- ②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ha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 ③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 ④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 ⑤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농업진흥지역 상시 실태조사 및 보완정비 체계 마련

-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른 상시 해제 가능 면적(2ha)을 농업진흥지역 최소 지정기준인 3ha까지 확대
- 농업진흥지역 여건변화 상황을 매년 조사·관리하고, 필요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보완·정비 추진

\* '16년 상시 실태조사 예산 확보 : 300백만원

##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하여 6차 산업화 시설 등 허용행위 대폭 확대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변경 기준>

- ①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5ha이하로 남은 지역
- ②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ha이하의 미경지정리지역
- ③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ha이하로 남은 지역

○ (허용시설) 농업의 6차 산업화 및 농수산업 관련 시설

\* 추가 허용시설의 종류 및 면적은 농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16)

-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제조시설의 용도변경 허용
  - (허용시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추가로 허용되는 농업의 6차 산업화 및 농수산업 관련 시설
- 농업진흥지역 내 체험시설 및 산지유통시설 범위 확대
  - (농산어촌체험시설) 마을공동 → 현행 + 농어업인·법인·생산자단체
  - (산지유통시설) 국내산 농산물 → 국내산 농수산물(임산물, 축산물 포함)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 완화]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각종 개발수요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유도
  - (현행) 시설별로 제한/1,000㎡/1만㎡/1만5천㎡/3만㎡/무제한으로 구분
  - (개선) 3,000㎡, 5,000㎡ 단계를 신설하고, 일부 시설 면적 상향 조정
    - \* (예시) 종교·수련시설(아영장 등) : 1천~8천㎡, 운동시설(승마장 포함) : 1천~5천㎡ 등

### [우량농지 보전 및 인센티브 강화 추진]

- 농지보전부담금의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차등 확대 등 부과체계 개편 검토
  - (부과요율: 공시지가 30%) 농업진흥지역 안은 상향하고, 밖은 유지 또는 하향 조정
  - (상한액) 농업진흥지역 안은 상한액(5만원/㎡) 폐지, 밖은 유지
  - (감면대상) 농업진흥지역에서 감면대상 추가는 원칙적으로 불가 (필수 공공시설 및 농업용시설 제외), 감면은 농지법에서만 규정
- 농업진흥지역 토지소유자에 대한 각종 세제 감면 등 우대방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6월)



## 가 '15년 주요 성과

- (창업)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체계 구축(7개 협업과제 발굴), 창업코칭·시제품 제작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6차산업 창업 증가**(14:391개소→15:472)
  -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전남 혁신센터, '15.6월)를 중심으로 창업코칭·시제품생산·기술·자금·판로 **일괄지원 시스템 구축**
- (판매) 6차산업 인증사업자를 확대(14:379개소→15:802)하고, 온·오프라인 판매플랫폼을 구축·지원하여 인증사업자 **평균 매출액 12.1% 증가**
- (제도·규제) 6차산업 확산을 위한 **지구 확대 및 규제완화 등 추진**
  - **6차산업화 지구 지정을 확대**(14:3개소→15:9)하고, 공동인프라 조성과 함께 지역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 \* 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 허용(12월) 등 규제특례 적용
  -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위한 **농지규제 합리화 추진**
    - \*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주말 체험 목적 농지소유 허용자격 확대, 농지 보전부담금 납부방식 다양화(신용카드 허용),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
- (농촌관광) 메르스 발생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촌관광 꾸준히 증가**
  - 관광상품 다양화, 적기 정보제공 등으로 **우수체험마을**(오픈촌 23개소) **월평균 방문객과 매출액 각각 25%, 11% 증가**

- ☞ 6차산업 창업증가 추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사업 간 연계**를 통해 **창업지원 체계화 필요**
- ☞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관광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고, 분산되어 있는 **관광자원간의 네트워크 강화 필요**

## 나 '16년 추진계획

◆ 귀농·귀촌인, 후계농 등 젊은 층의 6차산업화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 6차산업 창업자 수 : ('15) 472개소 → ('16) 500 → ('20) 누적 3천개소

◆ 6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내실화로 매출액 8.0% 증가

◆ 국내외 관광자원을 네트워크화하고, 관광상품 다양화 및 적기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내·외국인 농촌관광객 적극 유치

\* 농촌 체험마을 방문객(전체/외국인) : ('15) 870만명/8.3만명 → ('16) 1,000/10

### [6차산업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 젊은 층의 6차산업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 창업희망자에게는 창조경제혁신센터·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등과 연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코칭·멘토링 제공

- 금융·디자인·세무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

\* ('15) 건당 50만원 → ('16) 최대 300만원

- 6차산업 인증사업자 중 선도경영체를 통한 멘토링과정 운영(3월)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확대('15:30개소→'16:44)하여 시제품 생산 및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보육대상자를 DB화하여 지속 관리

○ 전국적으로 구축된 제조·가공시설 디렉토리(5,172건)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유휴시설과 창업자를 연결하여 초기 시설부담 완화

○ 6차산업 전문 모태펀드(300억원), 농식품 투자플랫폼 등 금융지원 추진

## [6차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6차산업 인증사업자 DB를 통해 개별적으로 애로사항을 관리하고,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
  -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분기별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SNS 컨설팅을 정례화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 \* 인증사업자에게는 매달 시장트렌드·유통·수출정보 등 온라인 제공
- 창업 후 사업화 단계 및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인증사업자를 세분화하여 지원센터를 통해 상황에 맞게 **Push형** 지원 제공
  - 사업화 초기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운영자금(300억원, 2%)을 지원하고, 농신보 부분보증비율 확대(85%→90) 등 추진
  - 수도권에 전국단위 **안테나숍**을 설치(하나로클럽 등, 6월)하고, 기존 지역별 안테나숍(18개소),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판로지원 강화
    - \*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 ('15) 33개소 → ('16) 70
  - 수출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발굴하여 수출정보 제공, 해외박람회 참여 및 해외 모바일 쇼핑몰 입점 등 지원
  - 사업다각화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 농고·농대 졸업생, 경영·마케팅 전문가 등을 채용시 인건비의 50~80% 지원

## [6차산업의 지역단위 확산]

- 6차산업화 지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연계를 통해 입지규제 등 규제특례를 확대하여 지역단위 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 주체간 네트워크, 제조·가공·외식·숙박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 중기청과 협업을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및 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특례\* 적용 확대
    - \* 지구 내 체험·관광 등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 허용 등

	지구 조성 전	지구 조성 후
순창 6차 산업화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추장 민속마을(42개 업체)을 중심으로 전통장류 가공산업 위주 추진</li> <li>○ 입지규제로 식당·숙박시설 등 설치가 제한되어 관광·체험에 애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가공산업 위주에서 민박·장류체험 서비스 등으로 확대 ⇒ 방문객 26%, 매출액 13% 증가</li> <li>○ 식당·편의시설 등 설치가 가능토록 특례 적용('16.2월)</li> </ul>

□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

- 창조경제혁신센터·농산물종합가공센터·귀농귀촌지원센터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 강화

\* 지역별 활성화지원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간 MOU : ('15) 5건 → ('16) 9건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 초·중등학교 현장체험 프로그램 및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육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10종)로 도시학생 유치(교육부 협업)

\* 자유학기제 연계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자 공고(1.6일)

- 코레일, 민간여행사 등과 협업\*을 통해 체험마을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으뜸촌\*\* 관광여행' 등 상품 개발(신규 10종)

\* '15년 민간 농촌관광상품 운영 실적 : 9,822명 이용, 만족도 94%

\*\* 농촌관광등급평가에서 전문야(4개분야) 1등급을 받은 체험마을(23개소)

□ 농촌관광 정보제공·홍보 강화 및 서비스 편의성 제고

- '2016~2018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중화권 대상 집중 홍보

- 중국·싱가폴 등 해외 현지 여행업계 및 언론 대상 홍보 강화
- 중화·동남아 등 주한 유학생 농촌관광 서포터즈(60명)를 활용하여 SNS(웨이보·페이스북 등) 등 온라인·모바일 홍보 강화

- 월별·테마별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등 우수 관광자원을 SNS(카카오토티, 구독자 39천여명) 등을 통해 집중 홍보
    - 네이버 모바일 플랫폼(MODOO)을 통한 홍보 확대('15:농촌체험휴양마을→'16: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등 추가)
  - 도심에서 농촌관광 체험이 가능한 상설 체험홍보관 운영 및 농촌 관광 콘텐츠(사진·동영상) 공모전 개최(8월) 등
  - 농촌관광 등급평가 대상을 확대('15:350개소→'16:450)하고,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홍보·마케팅 등) 제공 등을 통해 품질 제고 유도
  - 외국인이 많이 찾는 마을을 대상으로 거점 교통시설과 마을 간 연계 교통 서비스\*를 시범운영(3개소)하고 통역서비스\*\* (영어·중국어) 지원
    - \* (코스예시) 인천공항-농촌관광지-서울역, 김해공항-농촌관광지-부산터미널 등
    - \*\* 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전문인력풀 운영
- 농촌관광 국내외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 구축
-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4월)
    - 숙박, 체험프로그램 및 지역 특산물 구매 등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3월)
  - Hotels.com, AirBNB 등 해외 예약·결제시스템에 농가민박·체험마을 등 우수 농촌관광자원 등재(150개소, 6월)
    - \* 민박B&B 인증 등을 통해 해외 관광객에 대한 신뢰도 제고

## 4 귀농·귀촌 활성화

### 가 '15년 주요 성과

- 베이비부머 은퇴, 농업·농촌 인식변화 등 사회적 흐름을 정부·지자체 정책으로 뒷받침하여 귀농·귀촌 인구 증가세 지속
  - \* 귀농귀촌 : ('10) 4,067호 → ('12) 27,008 → ('13) 32,424 → ('14) 44,586
- 귀농·귀촌인들이 다양한 경력과 창의적 아이디어,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활력을 창출하는 사례 증가
  - \* 고창군 마을이장 중 10%, 강원도 6차산업 창업자 중 42%가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현장 체감형 지원 확대
  - 초기 정보 및 자본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귀농·귀촌 교육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 조건 완화(금리 3%→2)
    - \* 교육내용을 귀농 기초→중급→고급, 귀촌생활로 세분화
    - \*\* 창업자금 지원 : ('14) 1,047건/879억원 → ('15) 1,544/1,572
  - 귀농 희망자에게 임시주거지 및 영농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개소(4월 금산, 11월 제천) 및 귀농인의 집 조성(70개)
  - 예비귀농인도 농신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쌀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귀농·귀촌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추진
    - \* 지급요건 : (기존) 영농2년, 농지1만㎡, 소득 900만원 → (개선) 1년, 1천㎡, 120만원

### 나 '16년 추진계획

◆ 젊은 층의 귀농·귀촌으로 농업·농촌 인력 양성 및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정착단계별 지원 강화

\* 2030 귀농창업 ('14) 1,197 → ('16) 1,500가구 / 3년내 역귀농률 10% 미만 유지

## [귀농·귀촌인에 대한 창업지원 및 멘토링 체계 구축]

- 각 도 농업기술원 내 **창업특별과정**을 설치(6개소)하고 창업지원 기관과 연계, 창업 유형별 일괄지원시스템 구축(3월)
- 6차산업 창업 희망자는 6차산업지원센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코칭·시제품생산 및 판로 등 종합 지원
- 농업분야 창업 희망자는 시·군 기술센터의 선도농가 실습지원과 연계하여 창업계획 수립 및 시행, 피드백 등 지원
- 도 기술원 또는 6차산업지원센터에 귀농·귀촌자 DB를 구축하여 창업과정 모니터링 및 귀농·귀촌자 멘토링 지원 강화
- 지자체 및 귀농·귀촌협의회 중심으로 우수 귀농귀촌인·마이스터 등 멘토 풀 구성·운영(9월)
- 중앙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전국단위 풀을 구성, 지역별 상담 데스크로 운영
- 귀농·귀촌인의 전문성과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6차산업지원센터·벤처창업 지원 등의 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
- 전문가 DB 및 멘토 풀 구성시 경제·문화 등 각계 귀농·귀촌자 우선 선발

## [귀농·귀촌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 귀농·귀촌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한 지역별 귀농·귀촌 정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2030세대·새터민 등 수요자 그룹별 교육 확대\*\*
- \* 귀농·귀촌종합센터 확장 이전 및 광역지자체별 상담기능 입주 등 추진
- \*\* 2030창업과정(2기), 대학교 특별과정(10개교) 및 새터민 창업실습교육 운영, 하나원 상설홍보관 운영(1월부터), 경찰·군인·대기업 퇴직자 과정(2회), 한농대 일학습 병행과정(3월부터) 등

- 귀농 창업자금 지원대상 조정(65세이상 고령자 제외, 농촌 이주 전 2년내 농지 등 선취득자는 포함) 및 규모 확대(1,000→1,500억원), 주택자금 금리 인하(2.7%→2%)
- 주거 및 실습지원을 위해 귀농인의 집을 확대(신규 70개소)하고,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운영('15:2개소→'16:7\*) 내실화 추진
  - \* ('15) 금산·제천, ('16) 영주·홍천·구례·고창·영천('16년 1개소(함양) 신규 착공)
  -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표준교육과정 및 운영 매뉴얼 보급(3월), 지역 밀착형 교육거점으로 활용 등 검토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확충]

- 귀농·귀촌 정책의 체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2월) 하고, 제1차 귀농·귀촌 5개년 종합계획 수립(6월)
  - \* 조사항목 : 귀농·귀촌 추세, 경영 및 소득·주거형태, 역귀농 실태 등
- 귀농·귀촌 추세 및 농업·농촌 활력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 등을 감안하여 귀농·귀촌 중장기 목표 수립
  - 단계별 지원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수요에 맞는 정책 체계화
    - \* 단계별 정책수요 : (관심) 정보·교육 → (실행) 자금·주거 → ( 정착: 귀농·귀촌~3년) 영농기술, 안정적 일자리 및 지역융합 → (성장: 3~5년) 공동체 활성화 → (5년 경과) 멘토링 및 공동체 활성화
- 귀농·귀촌인 참여 농촌 활력증진 우수모델 발굴 추진
  - 귀농·귀촌자와 지역주민간 협력사업계획 공모전(6월) 추진
  - 귀농·귀촌자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능나눔 사업 지원(3월)



## IV. 과제별 주요 일정



# 1.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 (1)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li> <li>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기준 정비 등</li> </ul>	1~12월 1~12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팜 A/S 등 현장 지원을 위한 통합 콜센터 운영</li> <li>스마트팜 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전략 마련</li> <li>폐열재이용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li> </ul>	1월 3월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팜 현장지도인력 ICT 활용교육 실시</li> <li>수출전문 스마트 팜 온실신축 공모안 마련 및 사업자 선정</li> <li>우수농가 생육환경관리 벤치마킹 서비스 본격 실시</li> </ul>	5월 5월 5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마토 최적생육환경관리 개발</li> <li>스마트팜 우수사례 발표회</li> <li>첨단 시설원예단지 시범조성 결과 점검</li> </ul>	8월 9월 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팜 성과분석</li> <li>수출첨단형(유리온실) 스마트팜 모델 개발</li> <li>산업폐열 분포지도 활용실태 분석</li> </ul>	11월 12월 12월

## (2) 전문인력 양성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목특화전문교육과정(4개 품목) 운영</li> <li>법인경영체 교육과정(2개과정 10회) 운영</li> </ul>	3~12월 4~11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대 영농창업특성화대학 대상학교 선정</li> <li>선도농업인 DB구축 및 SNS 상담서비스 정식 오픈</li> </ul>	2월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조농업선도고교 대상학교 선정</li> <li>맞춤형 교육을 위한 인프라(교육 종합DB, 역량진단시스템) 구축</li> <li>후계농업인 육성 정책 추진방안 마련</li> <li>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과정 개편방안 마련</li> </ul>	4월 5월 6월 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교육이력관리시스템 개발 및 성과평가시스템 개발</li> <li>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운영 시작</li> <li>외국인력 고용 농가 합동실태조사 완료</li> </ul>	7월 9월 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조농업선도고교 '17년 신입생 선발</li> </ul>	11월

### [3] 공동경영체 활성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들녘경영체 정의(농어업경영체법) 및 농지(농지법) 관련 법령개정 작업	1~12월
	• 들녘경영체, 발작물 공동경영체 대상으로 농기계 중·장기 임대	3~12월
1분기	• 농기계 임대사업, 주산지 일관기계화 대상자 선정	2월
	•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대상자 심사·선정	2월
	• 들녘경영체 사업지침 개정 및 대상자 선정	3월
	• 지역·특성별 운영실태 조사 연구용역 추진	3월
	• 발작물 주산지 실태조사	1~3월
2분기	• 발작물 주산지 진단 체계 및 수급 활용 체계 마련	6월
3분기	•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대상자 중간점검 및 컨설팅	7월
	•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관계자 워크숍	9월
4분기	• '17년도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 접수 및 평가	10~11월
	•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모델 우수사례 발굴 및 워크숍	12월
	•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 1년차 실적 평가	12월

### [4] 농식품 수출확대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재외공관 연계 한국농식품 수출지원사업	3~12월
	•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활용한 현지화 종합 컨설팅 지원	3~12월
	• 중국 콜드체인 배송지원 사업 추진	4~12월
1분기	• 쌀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도시별 소비자 선호 조사 추진	1월
	• 북경 문화원 內 김치홍보관 설치	2월
	• 인사동 수출홍보관을 활용한 삼계탕 시식행사 개최	2월
	• 삼계탕 등 한식 200선 레시피(영문판) 제작·배포	3월
	• 할랄식품 수출지원센터 설치	3월
2분기	• K-Food Fair 개최(중국 성도)	6월
	• 한-UAE 할랄식품포럼 개최(UAE)	6월
3분기	• K-Food Fair 개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중국 광둥)	7~9월
	• 해외 온라인·모바일 쇼핑몰 內 한국식품관 개설(2개소)	9월
4분기	• K-Food Fair 개최(태국·아랍에미리트·중국)	10~11월
	•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발굴	11월
	• 중국 김치수출을 위해 품질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 [5] 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든시드 프로젝트 품종개발 및 로열티 대응 품종개발·보급</li> <li>● 식품기술융합지원단 운영</li> <li>● 상생협력 연계 산지 직거래 Fair</li> <li>● 식품클러스터 6대 기업지원시설 본격 가동</li> </ul>	연중 4월~ 4월~ 7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주 통신판매범위 확대, '나라장터'에서도 판매 허용</li> <li>●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한식테마관 조성 운영</li> <li>● 한식진흥정책 강화방안 세부이행계획 마련</li> <li>● R&amp;D 상부상조 플랫폼 확대 개편 및 정책부서 PM제 도입</li> <li>● 위생적 사육기준 고시제정(안) 마련 및 고소애의 일반식품원료 전환</li> <li>● 상생협력 인센티브 방안 마련</li> <li>●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시범 적용</li> <li>● 민관합동 도시농업정책워크숍 개최</li> <li>● 마드리드 음식 축제 참가 한식 홍보</li> </ul>	2월 2월 2월 2~3월 3월 3월 3월 2월 2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방안 마련</li> <li>● R&amp;D 바우처 시범사업 실시</li> <li>●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중장기대책 수립</li> <li>● '도시농업 봄 조성의 달' 운영 및 도시농업의 날(4.11) 행사</li> <li>● 전통주 갤러리 추가 개소 및 식품 명인 체험·홍보관 설치</li> <li>● 상생협력 포럼을 통한 상생협력 확산 방안 마련</li> </ul>	4월 4월 5월 4~5월 6월 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육종연구단지 완공 및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원 서비스 시작</li> <li>● 술 품질인증 기준 강화</li> <li>● 제5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광주 풍암호수공원, 9.23~26)</li> <li>● 지역별 도농상생사업 모델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li> </ul>	8월 9월 9월 7~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Food 로드 개발 및 Festival 개최</li> <li>● Agri-biz 상생발전 포럼 발족</li> <li>● 상생협력 경연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집 발간</li> <li>● 기술 SNS 컨설팅 우수성과 경진대회</li> <li>● 2016 APSA 한국총회 개최(인천송도, 11.7~11)</li> <li>● GSP 2단계('17~'21) 품목별 상세기획 및 종합계획 수립</li> <li>● 도시농업 외연확대 방안 마련</li> <li>● '(가칭)우수문화 식품·한식' 인증제 규정 추가</li> <li>● 제2차 말산업 발전 5개년 종합 계획</li> <li>●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방안 마련</li> </ul>	10월 11월 11월 11월 11월 12월 10~12월 12월 12월 12월

## 2.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1) 식량의 안정적 공급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직불제 개선방안 마련</li> <li>• 논 타작물 재배 작부체계 및 품종 개발</li> <li>• 답리작 면적 확대를 위한 추진 단계별 홍보 실시</li> <li>• 답리작 들녘경영체 대상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추진(3개지역, 334ha)</li> <li>• 연해주 농업개발 비전 및 계획 수립 한-러 공동연구</li> <li>• 해외농업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li> <li>• 사료용 쌀 등 정부양곡 특별재고관리대책 추진</li> <li>• 수입쌀 수요조사 추진</li> <li>• 쌀 수급안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li> </ul>	1~12월 1~12월 1~12월 1~12월 1~12월 1~12월 1~12월 1~12월 1~12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16년 답리작 봄파종 추진</li> <li>• 수입쌀 연간 판매계획 수립</li> <li>• 지자체 타작물 재배 계획 수립</li> </ul>	1~3월 1월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17년 답리작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시달</li> </ul>	5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답리작 현장 기술교육 추진</li> <li>• 한·중 농업협력위원회</li> </ul>	7~9월 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li> <li>• 답리작 가을파종 실적 조사 및 보고</li> <li>• 한-러시아 농업협력위원회</li> <li>• 지자체 대상 조사료 재배 관련 종합 평가</li> </ul>	10월 12월 10월 12월

## [2]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공영홈쇼핑 기획판매방송을 통한 판매촉진 및 표시제도 홍보	1~12월
	• 수급조절위원회 개최(분기 1회 이상)를 통한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1~12월
	• 채소류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 사업 추진	1~12월
	• 최소출하단위 시범사업 운영	1~12월
	• 농식품 홈쇼핑 판매 활성화 추진단 구성·운영	1~12월
1분기	• 가락 도매시장 소매권역 이전배치	2월
	• 가금산물 가격 조사시스템 운영	2월
	• 최소출하단위 설정 품목 및 운영 시장 결정	3월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대금정산조합 설립	3월
	• 도축산업 선진화 방안	3월
2분기	• 농업관측 실행력 향상을 위한 주산지 현장설명회 개최	4월
	• 산지-소비자 직거래 매칭시스템 구축	6월
	•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6월
3분기	• 농업관측 실행력 향상을 위한 주산지 현장설명회 개최	8월
	• 정가·수의매매 사례집 작성	9월
4분기	• 채소류 유통조절명령제 대상 품목 확대	10월
	•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발굴 경진대회 개최	11월
	• 포스몰 거점물류 추가확보(대전 등 2개소)	12월
	• 도매시장 체계 개편 등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 마련(국회제출)	12월
	• 천안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완공	12월
	• 우수직거래 사업장 인증	12월
	• 찾아가는 이동형 직거래 장터 개설 확대(10개소)	12월

### [3]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농산물 인증과정 2중-check(농관원, 민간인증기관)</li> <li>친환경농산물 매취자금, 판매장 개설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li> <li>친환경축산물 등 유통·소비 촉진을 위한 오픈마켓 홍보</li> </ul>	1월 ~ 3월 ~ 1~12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무자조금 단체설립을 위한 가입동의서 접수</li> <li>설 명절 친환경농산물 유통 특별조사</li> </ul>	1~2월 2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의무자조금 도입</li> <li>친환경농산물 매취자금, 판매장 개설자금 지원 계획수립</li> <li>산지생태축산 관련 규제개선 협의(농식품부·환경부·산림청 등)</li> <li>축산 환경관리 종합 대책</li> <li>제4회 대한민국 친환경축산 페스티벌 개최</li> <li>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 제정 및 고시</li> <li>분뇨처리시설 관리 기반 마련</li> </ul>	4월 4월 4월 5월 6월 6월 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농산물인증 민간인증기관 평가·등급제 시행</li> <li>농관원 인증업무 민간 완전 이양</li> <li>추석 명절 친환경농산물 유통 특별조사</li> <li>축산환경컨설턴트 육성 및 축산농가 종합 컨설팅 실시</li> <li>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선정</li> </ul>	7월 8월 9월 6~9월 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제도 통합 및 기준마련</li> <li>친환경 인증제도 개선(규칙, 고시 등)</li> <li>CSA 확산을 위한 우리부-소비자단체-친환경단체 MOU 체결</li> <li>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운영성과 종합평가</li> <li>친환경인증 동물약품 사용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li> <li>축산분야 인증제 개선, 공통기준 표준화 및 중복심사 면제</li> <li>친환경축산인 전국대회 및 친환경축산 대상 시상식</li> </ul>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 [4]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산지·들녘경영체 대상 GAP 안전성분석 지원</li> <li>• 품목별·취약시기별 농산물 안전성조사</li> <li>• “바른 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li> <li>•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개정사항 홍보</li> <li>•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식생활교육</li> <li>• 쌀 중심 식습관 학교 운영</li> <li>• 교육대학교 식생활교육 학과목 신설·운영</li> </ul>	1~12월 1~12월 1~12월 3~12월 3~11월 3~11월 3~12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등) 지침 확정 및 사업비 교부</li> <li>• GAP 유통 활성화 관련 유통업체 협의 및 애로사항 발굴</li> <li>• 채소·과일 소비촉진을 위한 농식품부, 휴롬 및 과수·채소 연합회 MOU</li> </ul>	3월 3월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급식업체 GAP 농산물 취급확대</li> <li>•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업체 특별 안전성조사(상반기)</li> <li>• 가족밥상의 날 &amp; 가족사랑의 날, 공동 캠페인, 농식품부 &amp; 여가부 MOU</li> <li>• 대형유통업체 문화센터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 군부대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교육</li> </ul>	6월 4~6월 3~5월 3~5월 5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추진</li> <li>• 사업 추진상황 현장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li> <li>• 로컬푸드 표준 조례안 제정·배포</li> <li>•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업체 특별 안전성조사(하반기)</li> <li>• 도시지역 고령자 대상 식생활교육 시범사업</li> </ul>	7~9월 7~9월 7월 7~9월 7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고령자 대상 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li> <li>• GAP 농산물 매출액 확대 관계기관 협의</li> <li>• 어린이집·유치원 식생활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li> <li>• 쌀 중심 식습관 학교 우수사례 경진대회</li> </ul>	10월 10~11월 11월 11월

### 3. 농업인 소득안정 및 삶의 질 제고

#### [1]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홍보</li> </ul>	2~12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쌀·논 이모작 직불금 이행점검 기능 이관</li> </ul>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보험 품목·보장확대 시행</li> </ul>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안전보험 업무위탁기관 지정</li> </ul>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험 보장수준 상향 및 대상질병 추가</li> </ul>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농업수입보험 시범사업 추진 대상 시군 확정</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신청·접수</li> </ul>	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밭고정직불 단가 일원화 관련 시행령 개정</li> </ul>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도 도입</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실무 교육</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 복구단가 인상 추가 수요 발굴 및 확정</li> </ul>	7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재해 복구지원 단가 조정</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재해에 대해 국가재난정보시스템 공동활용 방안 마련</li> </ul>	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쌀·밭 등 직불사업 지역간 교차점검</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수입보험 품목 확대(콩, 포도, 양파, 마늘)</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쌀·밭 직불금 제도 개선 법령 개정</li> </ul>	12월

## [2] 위험관리 강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지역별 강수상황 및 가뭄상황 상시 모니터링	1~12월
	• 방역 취약지역 정기 관리(밀집사육단지, 백신 미접종 농가 등)	1~12월
	• 국내 사용 백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백신 국산화 추진	1~12월
1분기	• 용수부족 예상지역 분석 및 용수확보대책 수립·추진	1~3월
	• AI 발생우려 대상 관리강화 방안 마련, 시행	1월
	•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 합동점검	2월
	• 양수장비 일제정비·점검, 영농준비 추진상황 점검	2~4월
	• 양돈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실태 평가 방안 마련	3월
2분기	• 구제역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고시 개정	4월
	• 구제역 근절 중장기 방역대책 수립	6월
	• 상반기 양돈·가금 계열화사업자 가축방역 관리 실태 평가	6월
3분기	• 거점 소독·세척시설 추진상황 합동점검,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7월
	• 영농 마무리 용수공급 및 익년도 안전영농 용수공급대책 수립	7~9월
4분기	• 가뭄 우려지역에 대한 선제적 농업용수공급 대책 추진	10~12월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축산관계자 입국 신고 의무화 등)	11월
	• 하반기 양돈·가금 계열화사업자 가축방역관리 실태 평가	11월

### [3] 농촌주민 복지 증진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장학사업 수혜자 정보 DB 구축	1~12월
	•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4~12월
	• 영농후계인력 선진 농업현장 실습 및 인턴활동 지원	8~12월
1분기	• 장학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16년 1학기 영농후계장학금 지원	2월
	• 농업안전보건센터 DB 이관 및 '중앙DB센터' 질환정보 통합관리	3월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대상자 선정	3월
	• 행복꾸러미 공모 사업 대상자 선정	3월
	• '16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3월
2분기	• 장학생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	6월
	• 원격협진 활성화사업 대상지역 보건소와 농업안전보건센터 협약	5~6월
	• 농업안전보건센터 성과평가	6월
3분기	• '16년 2학기 영농후계장학금 지원	7~9월
	• 원격협진 대상 농업안전보건센터 선정	8월
	• 농지연금 제도개선 검토(가입연령 완화, 감정평가율 상향)	9월
	• 농업안전보건센터 심포지엄 개최	9월
4분기	• 일반농산어촌 사업 지구 확정	12월

#### [4] 정주여건 개선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농촌중심지활성화 계속사업 대상 모니터링 실시	1~12월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참여자 교육실시	1~12월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사후관리 점검	1~12월
1분기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가이드라인 제시	1월
	• '16년 연계협력사업대상 선정	2월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대상지 공모	1~3월
	• 농촌중심지활성화 유형·예시 사례 개발	2월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중앙추진단 구성	3월
	• 창조마을 시범사업 공모 및 선정	3월
	• 농촌중심지활성화를 위한 복지·문화분야 사업 패키지 제시	3월
	• '16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구 선정	3월
	•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추진계획 수립	3월
2분기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대상지 선정	5월
	• 농촌중심지활성화 통합지구 시범사업 선정	5월
	• 창조마을 세부계획 수립 및 조성 착수	5월
	• 농촌중심지활성화 계획수립 내실화를 위한 현장포럼 운영	4~6월
3분기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9월
	• 농촌중심지활성화 계획수립 내실화를 위한 현장포럼 운영	7~9월
	•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7~9월
4분기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 관리(주민역량 강화 등)	10~12월
	• 창조마을 시범조성 완료 및 성과평가	12월
	• 농촌중심지활성화 신규사업 기본계획 확정	12월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점검결과 분석보고	12월

## 4.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1) 청년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상담 및 컨설팅 실시	1~12월
	• 찾아가는 현장 창업보육 실시	1~12월
	• 제2회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개최(시행계획 수립 ~ 결선)	3~11월
1분기	• 청년농산업 창업지원프로그램 사업지침 마련	1월
	•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비율 및 손실충당금, 보유자금 등 제도개선	2월
	• 농식품 투자플랫폼사업 수요조사 및 시행지침 통보	2~3월
	• '16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계획 공고	3월
	• 농산업가치창조 펀드 결성	2월
	• 청년창업농 선발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창업자 선발	3월
	• 기술가치평가 지원 실시	3월
2분기	• 특화센터 확대 설치,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조성	4월
	• '16년 농식품펀드 운용사 모집	4~5월
	• 청년창업농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5월
	• 농식품 투자플랫폼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조달	4~6월
	• 농지은행 연구용역 실시	3~8월
3분기	• 농식품 투자플랫폼 사업시행(시설매입·신축 등)	7~9월
	• 농지은행 사업개편방안 확정	8월
	•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지원실태 점검	9월
4분기	• 농식품경영체 경영·투자교육 실시	10월

## [2]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진흥지역 제도개선 관련 농지법령 개정</li> </ul>	1~12월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지자체 검증</li> <li>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요령 시달</li> </ul>	1~2월 3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작성(시군) 및 해제 승인 요청(시도)</li> <li>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농식품부) 및 해제 고시(시도)</li> <li>농업진흥지역 우대방안 연구용역 추진</li> </ul>	4~5월 6월 2~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진흥지역 상시관리체계 마련</li> </ul>	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개편방안 마련</li> </ul>	12월

### [3] 농업의 6차산업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6차산업 우수제품 발굴 및 판로지원	1~12월
	• 6차산업 인증사업자 현장상담 및 코칭	1~12월
	• 농촌관광 자원 및 상품 관련 정보제공	1~12월
	• 이달의 6차산업인 선정	1~12월
	• 6차산업 인증사업자 선정·발표	분기별
	• 6차산업 국외훈련 운영	분기별
1분기	•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1월
	• 사무장 역량강화 방안 시행	1월
	• 민간여행업계 대상 농촌관광 상품화 공모	2월
	• 6차산업화 지구(완료·시행중) 성과평가	3월
	• 멘토링 제도 운영	3월
	• 농촌관광 사업장내 기업 마일리지 활용방안 마련	3월
	• 특화농공단지 신규지구 사업성검토	3월
2분기	• 외국인 관광객 전용 농촌관광 상품 출시	4월
	• 주한 외국인 유학생 소속 주요대학과 농촌체험휴양마을 간 MOU 체결	5월
	• 체험프로그램 개발 공모 실시	6월
	•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 개최	6월
	• 6차산업화 지구 '17년 예비지구 선정	6월
	• 6차산업 대학생 사업모델 공모전	6월
3분기	• 도농교류의 날 개최	7월
	•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7월
	•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진, 동영상) 공모전 실시	8월
4분기	•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 및 결제 시스템 시범 운영	10월
	• 6차산업화 지구 추진 매뉴얼 개발	10월
	• 농촌관광 등급결정 실시	11월
	• 농촌사회공헌인증서 수여식	11월



#### [4] 귀농·귀촌 활성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귀농·귀촌 실태조사 실시, 종합계획 수립 T/F 구축	2월
	• 도 단위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 운영	3월
	• 체류형창업지원센터 매뉴얼 보급 / 재능나눔 추진	3월
2분기	• 실태조사 결과 및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발표	6월
	• 귀농귀촌자 지역 협력 비즈니스모델 공모	6월
3분기	• 우수 귀농귀촌인 등 멘토 Pool 구축	9월
4분기	• 종합계획 지자체 계획 수립	12월



## 박근혜농정 주요 특징 및 지난 3년간 주요 성과

### I. 박근혜정부 농정 구상

1. 농정여건 및 과제
2. 농정 패러다임 전환 및 새로운 농정방향
3. 박근혜정부 농정의 주요 특징

### II. 그동안 박근혜정부의 농정 성과

1.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2. 농식품 경쟁력 강화
3.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4.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개발
5. 농업·농촌 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 I. 박근혜정부 농정 구상

## 1 농정여건 및 과제

□ WTO 가입 등 본격적 개방농정이 시작된 '90년대 이후 20여년간 3차례의 대규모 투융자에도 농업·농촌의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음

- \* 곡물자급률 : ('95) 29.1% → ('10) 27.6 → ('12) 23.7 → ('14) 24.0
- \*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중 : ('95) 96.0% → ('10) 66.8 → ('12) 57.5 → ('14) 62.2
- \* 농가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중 : ('95) 16.2% → ('10) 31.8 → ('12) 35.6 → ('14) 39.1

○ 국민들의 농업·농촌 투자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농업계에서는 농정방향과 내용에 일관성 없다는 비판이 제기

□ 쌀 관세화·FTA·등 개방화 이슈로 인해 농업·농촌의 불안감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와 비판이 교차

○ (비관적 시각)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개방화, 기후변화 등으로 더욱 위기를 맞을 것이며, 농업·농촌 예산 증가율이 국가예산 증가율을 하회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쳐질 수 밖에 없음

- \* 국가전체/농업·농촌 예산증가율 : ('10) 2.9%/4.4 → ('12) 5.3/4.2 → ('15) 5.5/3.7

○ (낙관적 전망) 삶의 질 중시 분위기, ICT·BT 등 첨단기술 및 융복합 지원 플랫폼 등 새로운 여건변화를 활용, 위기를 기회로 승화 가능

- 수출시장 확대 및 할랄 등 국내·외 식품시장의 확대, 최근 증가 추세인 귀농·귀촌 인력의 기술·경험·아이디어 활용

⇒ 박근혜정부 농정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

○ 농업계 내·외부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는 등 공감대 확산 및 역량결집과 함께, 개방화에 대응하여 한국농업의 민감성을 보호하고 넓어진 경제영토 진출을 위한 미래성장산업화 필요

## 2 농정 패러다임 전환 및 새로운 농정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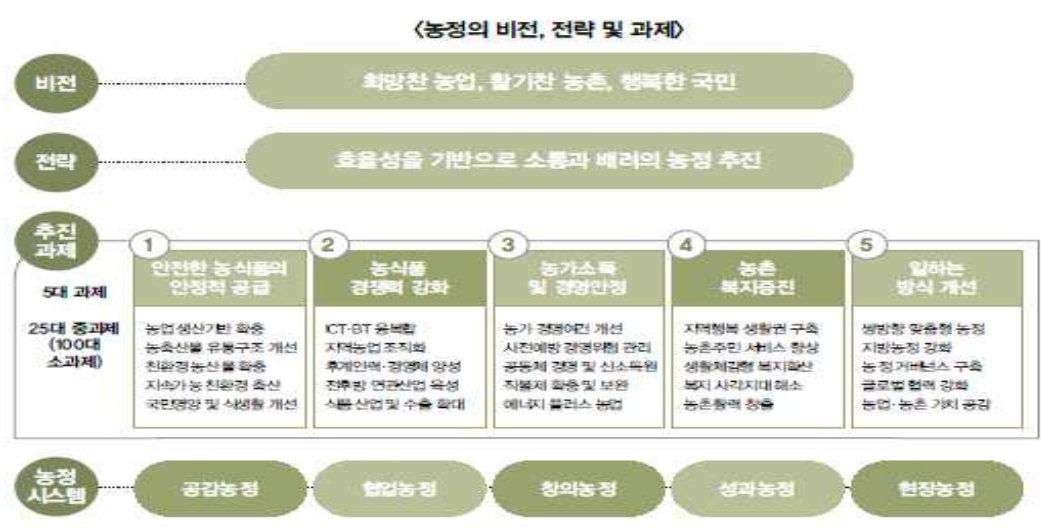
□ (패러다임 전환) 농업을 경쟁력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추진하면서 농정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

농정목적	효율성·경쟁력 중심	→	기술적 효율성과 함께 농업인의 행복 동시 추구
농정대상	개별 경영체 중심	→	지역 공동체 기반의 공동경영 강화로 조직화·규모화의 이점 제고
정책내용	생산 중심	→	6차산업 중심의 융복합과, 일터·삶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가치 극대화
접근방법	중앙정부 주도	→	지역의 역할과 주민참여 강조 농정에 대한 자율성·책임성 강조

### ▶ 박근혜정부 농정 로드맵 수립 경과

- 새 정부의 농정과제 구체화 및 농업·농정 가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민공감농정위원회’(167명)을 구성하여 운영(‘13.4월부터)
- 생산자·식품산업·소비자단체·언론·학계·연구기관·지자체 및 일반국민 참여 6개 분과위원회 및 12개 소위원회 설치, 심도있는 논의 실시(총 76회)
- 논의결과와 전문가 의견, 일반국민 대상 온라인 정책공모(355건 접수) 등을 거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작성 및 확정(‘13.10월)

□ (주요 내용)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쟁력·소득복지 등 3대 축을 기초로 5개 분야, 100개 과제 선정



### 3 박근혜정부 농정의 주요 특징

- ① 박근혜정부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방향성 있고 예측 가능성 있는 농정 추진
  - 명확한 농정철학을 토대로 농정의 지향점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하여 신뢰를 제고하고 한방향을 보면서 함께갈 수 있도록 유도
- ②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이자 국민의 일터·쉼터·삶터로서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공간·산업·사람을 고려한 농정 추진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농업 생산자와 도시민이 함께 농촌이 가진 가치에 대한 공감 확산
- ③ 경영체의 성격과 특성을 기초로 한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 경영체 DB 등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
    - \* (전업농) 규모화·전문화·ICT융복합 등에 의한 첨단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 \* (중소농) 조직화·공동체농업·6차산업화 등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 (영세고령농)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배려농정 확대
- ④ 자조·자립을 기반으로 도농상생 등 외부와의 협업농정 추진
  - 농업인의 자조·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 지역개발 사업 추진, 부족한 자원보완 및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협업 강화
- 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농정 추진
  - 농업·농촌·식품분야 기초통계 정비 및 경영체 DB에 근거한 과학적 정책 추진으로 재정 투융자 효율성 제고 및 성과 극대화
    - \* KAHIS 및 GPS 등 ICT 기술을 활용한 가축질병 방역 효율성 제고
- ⑥ 남북 농업협력 및 해외협력 강화 등 글로벌 농정 추진
  -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통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 지원 모델 다양화, ODA사업과 해외농업개발 연계 등 우리농업 위상 강화

## II. 그동안 박근혜정부의 농정 성과

### 1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가] 추진 배경

- 쌀 중심 인프라 집중 투자로 일정수준 성과는 발생했으나, 식량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본원적 기능인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애로
  - \*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 ('05) 29.3% → ('10) 27.6 → ('12) 23.7 → ('14p) 24.0
  - \* 주요 OECD 국가 식량자급률('13) : 미국 127%, 프랑스 120, 영국 60, 일본 39
- 단, 쌀은 오히려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세화에 대한 농업계의 반대 등으로 인한 지난 20년간 관세화 유예로 의무수입물량(MMA)을 매년 약 2만톤씩 늘려 쌀 재고에 큰 부담으로 작용
  - \* 쌀 의무수입 물량 : ('95) 5.1만톤 → ('04) 20.5 → ('14) 40.9
- 축산업 성장으로 사료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희자원을 활용한 이모작 등 작물재배가 저조
  - \* 우리나라의 배합사료 원료 자급률 : ('12) 24.0% → ('14) 23.3
- 국내 산지 이용률이 낮으므로 축산과 연계 시 사료자급률 향상 가능
- 식습관 선호가 패스트푸드·간편식으로 변화하여 국내산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영유아·미취학 아동부터 식문화 교육 필요성 증대
  - 농촌 고령자는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높고, 비만도도 증가 추세
    - \* 노인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07~'10) : (동 지역) 19% < (읍·면 지역) 21%
    - \* 노인비만 유병율(도시/농촌) : ('98) 29.8%/18.7 → ('05) 34.4/29.9 → ('12) 34.7/33.1
- 수급 및 가격불안이 상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단기적·인위적 수급정책으로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불신과 비난을 받는 상황
  - \* 배추가격이 하루 만에 전일 대비 54% 급등, 다음 날은 34% 급락 사례 발생('10년)
- 특히, TRQ·할당관세 등 임시 처방적 농산물 수입에 따른 가격 하락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농정에 대한 비판 야기



## (나) 주요정책 및 성과

### ▶ 지난 20년간 최대 농정속제였던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14년 말)하고,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

- \* 농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쌀 관세화(513%) 결정
- \* 목표가격 : ('05~'12년산) 170,083원/80kg → ('13~'17) 188,000 [10.5% ↑]
- \* 고정직불금 : 90만원/ha → 100 / \* 이모작직불금 : 40만원/ha → 50
- \* 구곡·신곡 및 수입산·국산 혼합판매 금지('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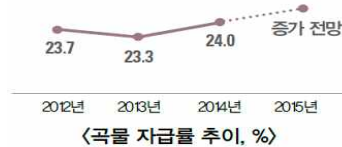
⇒ 쌀 관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쌀 의무 수입량의 추가 증량이 중단되어 국내 쌀 산업 보호

- \*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14년 의무수입량은 국내 쌀 소비량의 9%에 달하는 408,700톤이며, 쌀 관세화('15.1.1) 시행으로 추가적인 의무 수입 증량 중단

###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유희농지를 활용한 작물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및 제도 개선

- \* 이모작 직불금 도입 : ('14도입) 40만원/ha → ('15) 50
- \* 이모작 목적의 겨울농지 단기임대차 허용('15.1월 농지법 개정)
- \* 간척지 사료작물 재배 확대 : ('10) 528ha → ('14) 1,543 → ('15) 2,358
- \* 봄파종 면적('15) : 보리 1,624ha, 밀 691, 조사료 3,543
- \* '조사료 증산 보완대책' 마련('13.5), '답리작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15.4)

⇒ 유희자원 활용 사료재배 및 답리작 확대 등으로 곡물 자급률 증가 추세



- ▶ SPCC그룹과 의령군간 MOU 체결 : '15년 250톤의 조경밀 포함 총 2천톤의 우리밀을 수매, '17년까지 조경밀 530톤을 포함 총 5천톤으로 확대

### ▶ 건강식습관 교육·정보제공 확대로 농산물 수요를 창출하고, 도시 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본질적 역할인식 제고

- \* 어린이 식습관교육 시범학교 : ('12) 30개소 → ('15) 130
- \*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소·농협·풀무원·낙농진흥회 등과의 협업을 통한 농촌 고령자의 건강·영양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식생활·건강 개선사업' 추진
- \* 음식점 식재료 원산지 표시 품목 : ('12) 12개 품목 → ('13이후) 16개
- \*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13.5월), 도시농업 전국 네트워크 구축

⇒ 도시농업 지역협의체(85개) 및 도농상생 업무협약 체결(36개) 등 도시농업 확산 및 도·농간 파트너십 강화

- ▶ 경기과천시 꿈틀어린이텃밭학교 : 50여명 어린이 및 부모 대상 텃밭힐링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경로 활성화로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 생산자는 제 값 받고, 소비자는 덜내는 유통생태계 조성**

\* 로컬푸드 직매장 : ('12) 3개소 → ('15.8월) 94

▣ 완주 로컬푸드 영농조합은 '10년부터 건강한밥상꾸러미 배달서비스 운영 : 4백여 농가가 35백가구에 공급

- \*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법」 제정('15.6월)
- \* 농산물 전용 공영홈쇼핑 개국('15.7월)
- \* 사이버거래소 매출 : ('12) 11,146억원 → ('14) 22,131
-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 : ('12) 8.9% → ('14) 14.1 → ('15.5월) 18.4
- \* 축산물 패커의 유통 점유율 : ('12) 소10.9%/돼지4.7 → ('15.6) 27.3/19.1



⇒ 농축산물의 새로운 유통경로가 확산되고, 유통비용 절감효과 확대

- \* 유통비용 절감액(농산물) : ('12) 2,919억원 → ('13) 4,291 → ('14) 6,241 (44.7%↑)
- \* 유통비용 절감액(축산물) : ('14p) 1,593억원

▶ **정부 주도의 수급조절에서 탈피하여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선제적·자율적 농축산물 수급관리체계 구축**

- \* '농산물 수급조절 위원회'('13.4월) 및 '축산물 수급조절 위원회'('13.6월) 설치
- \* 주요품목(배추·양파·무·건고추·마늘) '가격안정대' 및 수급조절 매뉴얼 운영
- \* 할당관세 등 임시처방적 수입관리 조치 자제

⇒ 자율·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 대폭 완화

- \* 5대채소 가격 변동률 : ('12) 14.0% → ('13) 12.9 → ('14) 9.8

▣ 양돈 공급과잉으로 '13.3월 돼지 도매가격은 경영비 28만원/두 보다 낮은 24만원으로 형성되었으나, 자율적 모돈감축(13만두)으로 '13.12월 33만원으로 회복

▶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육성 및 사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유희산지를 활용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 \* 산지생태축산 선도 시범농장 : ('14) 8개소 → ('15) 18
- \* 산지에서의 가축방목 절차 및 방목허용 면적 개선

구분	기존	개선
준보전산지	신고, 3ha까지	신고, 5ha까지
임업용 산지	허가, 3ha까지	신고, 5ha까지

⇒ 한국형 친환경 축산 모델로서의 산지생태축산 확산 기반 마련

▣ 금산 이담목장은 20ha 산지에 초지를 조성하고 400여두 유산양을 자연방목하여 발효유와 요구르트를 가공·판매하는 등 6차산업화 추진

## [가] 추진 배경

- 그동안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일정수준의 규모화·전문화 성과가 발생했으나, 개별농가 단위의 경쟁력 확보는 한계
  - \*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 : 우리나라 1.5ha('13), 미국 176.9ha('12), 네덜란드 25.9('10), 스위스 17.8('10), 뉴질랜드 7.9('10, 초지제외), 일본 1.8('13)
- 농·농간 양극화로 공동체 붕괴우려가 있으며, 소규모 경영한계 극복을 위해 지역단위 공동경영체 육성 및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 기존 토지·노동집약적 농업에서 ICT 등 자본·기술집약적 스마트팜으로 전환하여 전통농업의 한계 극복 및 수출농업으로 육성 가능
- 소비패턴의 고급화 및 안전에 대한 관심증대에 대응하여 부실인증 등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저하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신뢰제고 필요
  - \*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만족도 : ('12) 67.8점 → ('14) 61.6 (9.2%↓)
  - \*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 ('10) 194천ha → ('12) 164 → ('14) 83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농식품산업의 수출시장 확대기회 조성
  - \* 한·칠레 FTA 이후 '12년까지 8건의 FTA가 발효되었고, 호주·캐나다·중국·뉴질랜드 등 농업강국과의 FTA도 발효·타결('13~'15)
- FTA 체결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도 필요
- 식품·외식산업은 높은 성장세이나 국산원료 이용 비율이 31.2%('13)에 불과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
  - \* 1인당 쌀소비량 : ('84) 130.1kg → ('03) 83.2 → ('13) 67.2 → ('14p) 65.1
- 국산 농자재 산업의 육성 및 농기계 공동이용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 경영비용 절감 및 농자재 산업의 수출토대 구축 필요
  - \* 호당 농업 경영비 : ('10) 1,712만원 → ('12) 1,846 → ('13) 2,061 → ('14) 2,188
- 종자로열티 비용 절감을 위해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강화하고, 국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필요

## [나] 주요정책 및 성과

### ▶ 소규모 개별농가단위 경영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들녘경영체를 통한 규모화·조직화 촉진

구분	기 존	개 선
직불금 상한면적	● 50ha	● 400ha
지원 요건	● 50ha이상 집단화	● 산간지역은 분리 허용
지원 장비	● 공동영농장비 3종	● 공동영농장비 모두

⇒ 들녘경영체의 양적 확산 및 생산비 절감

- \* 개수/면적 : ('12) 118개/24천ha → ('13) 132/27  
→ ('14) 158/32 → ('15) 2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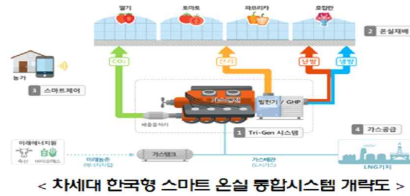


### ▶ 시설재배 및 축산에 대해서는 생산성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ICT 기술을 접목한 첨단 스마트팜 확산

- \* 원예시설 현대화/첨단온실 : ('13) 10,500ha/345ha → ('15목표) 13,200/755
- \* 축산분야 스마트 축사 : ('14신규) 양돈 30호 → ('15) 양돈·양계 120
- \* 한국형 단동형 스마트온실 표준모델 개발('15.6)
- \* ICT 활용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토마토대학, '15.7~11월) 운영

⇒ 생산성 증가, 노동력 절감, 안전강화 등 스마트팜 설치 효과 가시화

- ☑ 세종시 창조마을 : 생산성 22.7%증, 노동력 38.8%감, 도난방지 효과 발생



### ▶ 소비패턴 고급화, 환경·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증가 등을 고려하여 국민신뢰를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

- \* 민간기관-농관원 2중 check 시스템 구축, 부실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등 도입
- \* GAP 신청절차 간소화 : (구비서류) 12종 → 3, (처리기간) 126일 → 42
- \* 유기농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 ('14) 5년 → ('15) 8
- \*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 ('12) 63천ha → ('15) 77
- \* 친환경 축산('15.6) : 유기 95호, 동물복지 65, 무항생제 7,556, 환경친화농장 8
- \* 친환경 농산물 유통·판매시설 확대

⇒ 친환경 농식품 신뢰제고로 소비확대 기반 마련

- \* 민간 인증기관 취소 : ('14.6월) 3,821건 → ('15.6월) 1,791 (53% 감소)

▶ **중국·캐나다 등 농업강국과의 FTA를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체결하고,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 \* 한중 FTA 초민감품목과 민감품목 비중 : 63.4%
- \* 한중 FTA 대책 : 10년('16~'25)간 총 1,595억원 규모
- \* 영연방 FTA 대책 : 10년('15~'24)간 총 2.6조원 규모

▶ **FTA를 농식품 수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동남아·할랄 시장 개척 등 새로운 거대시장 개척 및 진출 등 적극 공략**

- \* 중국 온라인 쇼핑몰 '1호점'('13.10월)·'알리바바'('14.10월)·'티몰'('15.5월), 연태시 따웨이청 백화점('15.2월) 등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설
- \* 중화권·아세안 국가 K-Food Fair 개최 : ('13) 4개국 5회, ('14) 4개국 7회
- \* 청와대 사랑채, 인사동 전통주 갤러리, 공항 등에 한국식품 홍보·판매관 운영
- \* 할랄인증 업체/품목 : ('14) 133개소/404개 → ('15.6월) 148/488
- \* 주요 수출품목 검역협상 타결 : ('13) 7개 품목, ('14) 12개, ('15.6월) 8개
- \* 중국 권역별 시장정보('14.3월) 및 온라인 마케팅 전략('14.12월) 등 발간
- \* '15.8월까지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MOU 29건 체결

⇒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 지속 증가

- \* 농식품 수출 : ('12) 56.4억불 → ('14) 61.8 [연평균 4.8% ↑/국가전체는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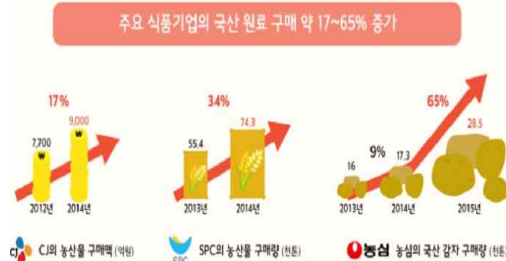
▶ (주)코메가는 들깨를 볶지 않고 생으로 찌는 기술 특허를 획득하고, 정부의 해외식품 박람회 지원을 받아 일본·싱가포르 등에 수출 : '14년 13만불 → '15년목표 200만불

▶ **국산 농산물의 식재료 활용 확대 및 수요창출, 농업 부가가치 제고 등을 위해 식품 및 외식산업 육성**

- \* 쌀 가공산업 5개년 계획 수립('14.10)
- \* 외식기업 해외진출(점포수) : ('12) 1,484개 → ('14) 3,726
- \* 정육점에서 축산가공품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 즉석 판매업' 신설('13.10월) 및 메쯔거라이 컨설팅(매년 20개소) 등 추진
- \* 김치('01)에 이어 인삼제품의 CODEX 세계규격화 승인('15.7)

⇒ 고부가 식품 및 외식산업 육성으로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 \* 우수 외식업지구 국산식재료 구매액 : ('12) 13.6억원 → ('13) 27.9
- \* 해외진출 외식업체 국산식재료 수출 : ('13) 202억원 → ('14) 247
- \* 식육즉석가공판매업 : ('13) 0개소 → ('14.10) 4,818



▶ 평택 미등영농조합법인은 OEM 방식으로 스타벅스에 유기농 쌀스낵 415억원어치 납품( '14)

▶ **종자·농기계 등 농자재 산업 육성으로 농업 경영비 절감**

- \* ‘골든시드프로젝트’ 추진,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등 종자산업 육성기반 구축
- \* 농기계 임대사업소 : (‘12) 251개소 → (‘13) 293 → (‘15) 379

☐ 합천군은 92개 기종 750대의 농기계보유, 대여실적 : (‘12) 2,961건 → (‘13) 4,077

- \* 에너지 절감형 농자재, 융복합 농기계 R&D 지원

⇒ 국산 신품종 개발을 통한 종자 수출확대 및 농업인 로열티 절감

- \* GPS 2년간 105개 품종 개발, 8백만불 수출, 56억원 수입대체
- \* 농업인 로열티 지불액 : (‘12) 176억원 → (‘14) 136

**3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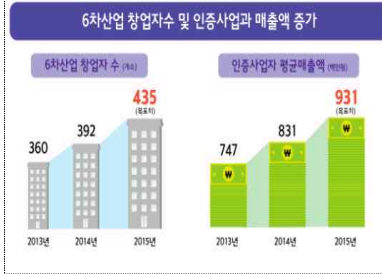
**(가) 추진 배경**

- 직불제 등 농업소득 보완정책은 중소농의 소득증대에 제한적이며 23차 산업 유치 등을 추진했으나 체계적인 농외소득원 창출에는 한계
  - \* 농외소득 : (‘95) 6,931천원 → (‘10) 12,946 → (‘12) 13,585 → (‘14) 14,799
- 농업소득 비중이 축소되고, 농·농간 양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도 확대
  - \*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중 : (‘95) 48.0% → (‘10) 31.4 → (‘12) 29.4 → (‘14) 29.5
  - \* 도시 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중 : (‘95) 96.0% → (‘10) 66.8 → (‘12) 57.5 → (‘14) 62.2
- 시중금리 하락추세를 감안, 정책자금 금리 인하가 필요하며, 농업 투자 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농신보 보증확대 등 개선 필요
- 경영위험 관리를 위한 재해보험제도 개편 및 농업인 참여 제고 필요
- ‘10~‘11년간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가축 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진화된 방역체계 마련 필요
  - \* ‘10~‘11년간 구제역 피해규모 : 3,748호 348만두, 재정비용 2조 7천억원

## [나] 주요정책 및 성과

### ▶ 농업과 가공·유통·관광을 융복합하는 6차 산업화를 통해 농가소득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 ('12) 12개소 → ('15) 30
- \* 6차산업 인증사업자 342개소 선정
- \* 판로지원 : 안테나숍(14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33개소), 네이버 전용관 설치('15.9월) 등
- \* 6차산업화 지구 : ('14) 3개소 → ('15) 신규 6



	기존	개선
6차산업 관련규제 One-stop 처리로 지역특화산업 플랫폼으로 육성	개발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별도사업 추진 · 각종 규제에 따른 투자 및 산업발전 한계 · 관련 사업의 개별적 추진으로 투자 효과 저조 ·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를 지정, 통합 처리 ·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간 연계 및 종합적 추진 · 사업간 통합·연계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 ·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One-stop 신속 처리
▶ 규제의 일괄 개선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정('15.6) 및 도별 지원 전문기관 설치(9개소)

☑ 예산 은성농원은 3ha 사과농장에서 와이너리 투어, 사과파이썬 등 체험·관광의 접목으로 연매출 6.3억원, 일자리 창출 90여명 달성

###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가격 하락에도 일정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 도입



- \*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15) : 3개 품목(양파·콩·포도) 시범사업 추진

⇒ 직불제 확충 등으로 이전소득 및 농가소득 증대효과 발생

- \* 이전소득 : ('12) 5,615천원 → ('13) 5,844 → ('14) 6,819 [ '12대비 21.4% ↑ ]
- \* 농가소득 : ('12) 31,031천원 → ('13) 34,524 → ('14) 34,950 [ '12대비 12.6% ↑ ]



▶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농촌 전원의 생태가치 활용 및 다양한 관광자원의 발굴·육성 추진**

- \* 코레일·민간여행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확대 : ('14) 9종 → ('15) 55
- \* 모바일·SNS 등을 활용한 농촌관광 정보이용 접근성·편의성 제고
- \* 규제개선 : 농촌민박 조식제공 허용, 초지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관광까지 확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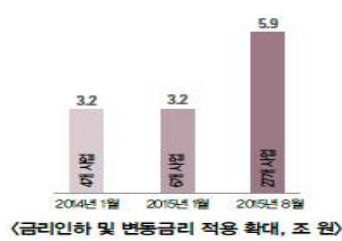
⇒ 농촌관광상품 다양화 및 규제완화 등으로 농촌관광객 증가

- \* '14년 으뜸촌 평균 방문객 및 매출액이 '12년 대비 10%, 37% 증가

▣ 담양 삼지내 체험마을(으뜸촌)은 코레일 연계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 상품을 통해 매출액 증가 : '13년 1.7억원 → '14년 4.7 (187%증)

- \* 승마체험인구 : ('12) 14천명 → ('14) 19

▶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금융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 \* 농신보 위탁보증 한도 확대 : 3천만원 → 5천만
- \* 무보증 신용한도 상향 : 1.5천만원 → 2천만

⇒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

- \* '14~'15.1월 금리인하로 657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 \* '15.8월 추가 금리인하로 연간 572억원 절감 기대

▶ **재해발생시 농업인의 경영위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실적으로 운영**

-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 ('12) 51품목 → ('15) 62
- \* 과수보상 범위 : ('12) 특정위험보장 → ('13) 종합위험보장 도입
- \* 보상수준 : ('12) 가입금액의 60~80% → ('15) 85 또는 90% 까지

▣ 재해보험에 가입한 청송 사과농가(4,248m<sup>2</sup>)는 '14.5월 우박피해를 입었으나, 납부한 보험료 238만원 대비 23배에 해당하는 5,567만원을 보상받음

- \* ICT 활용 보험평가('14) 및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시행('15.6)

⇒ 재해보험 가입률 및 농가단위 보장(가입) 금액 증가

- \* 가입률(가입면적) : ('12) 13.6%(108천ha) → ('14) 16.2(134) → ('15.6) 20.4(174)
- \* 농가당 평균가입금액 : ('12) 34백만원 → ('14) 42 (23.5% ↑)



▶ **AI·구제역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선진화된 상시 방역체계 마련**

- \* 살처분은 현장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토록 SOP 규정 개정
- \* 구제역은 평시 백신접종 및 발생시 긴급백신 투입
- \* KAHIS 활용 생산·유통이력정보 DB화, 축산차량 GPS 장착('14:47천대)
- \* KT와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축질병 확산경로 예측모델 개발

< 방역관련 기관간 역할분담 명확화 >

농식품부	▶ 국가 방역정책 수립, 부처 간 업무 협조 및 지자체 지원·감독
검역본부	▶ 진단·역학분석, KAHIS 구축, 축산차량 GPS 관리, 지자체 방역기술 지원
지자체	▶ (시·도) 지역단위 방역시스템 구축 및 책임방역 총괄 ▶ (시·군) 질병발생 사전예방, 초동대응 및 사후관리 등 현장 방역 ▶ (시협소) 진단 및 역학조사 등 초동대응
방역본부	▶ 시료채취, 초동대응 및 DB 현행화 등 방역 지원업무

⇒ 효율적 방역체계 구축으로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발생

- \*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등 : ('10~'11) 2조7천억원 → ('14~'15) 638억원
- \* AI 이동제한 구역내 출하실적 : ('10~'11) 0건 → ('14~'15.6) 391농가 501만수
- \* '14.3.6 안성 AI 발생 시, GPS 조회로 누락 사항 식별 후 2시간만에 조치 완료

## 4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개발

### (가) 추진 배경

-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영세 고령농의 열악한 소득 및 삶의 질과 취약한 정주환경이 문제로 제기
  - \* '14년말 현재 65세이상 경영주는 전체농가의 56%
  - \* 최저생계비 미만 비율('10년) : 농어업종사자 8.1%, 도시근로자 1.4%
  - \* 20호 미만 과소화마을 : ('05) 2,048개 → ('10) 3,091 / 면지역에 87.5% 분포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서는 영세고령농의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농촌활력 저하 문제의 해결이 필요
-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발보다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
  - 종전 마을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농촌 중심지와 마을간 연계를 통한 종합개발, 인근 시·군간 지역행복생활권 공동사업의 추진 필요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책유도를 통해 농촌활력화 주체로 육성 필요

## [나] 주요정책 및 성과

### ▶ 고령농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 농지연금 가입연령 : ('13) 부부 모두 65세이상 → ('14) 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
- \* 농지연금 가입비(농지가격 2%) 및 소유농지 면적기준(3ha 이하) 폐지
- \*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 : ('12) 846천원 → ('14) 956 → ('15.6) 1,048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지급액 : ('12) 79만원/최대 35,550원 → ('15) 91/40,950원

⇒ 농지연금 가입자 및 연금지원 인원 증가로 고령농 생활안정에 기여

- \* 농지연금가입자(누계) : ('12) 2,202명 → ('15.6) 4,760
- \* 연금보험료 지원인원 : ('12) 265천명 → ('15.8현재) 342

### ▶ 취약계층을 위한 작지만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지원

- \* 공동이용시설 지원('14~'15) : 공동생활홈 70개소, 공동급식시설 54, 작은목욕탕 28
- \* 가사도우미 지원 : ('14) 10천가구 → ('15) 15
- \* 고령농 대상 '복지서비스 정보 달력' 제작·배포('15)

<공동이용시설 지원 효과>

구분	거주전	거주후
식사횟수	2.4회/일	2.9
목욕횟수	13.4회/월	17.7
거주비용	11.6만원/월	5.3
식비	14.1만원/월	9.7
난방비	30만원/월	10

### ▶ 농촌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범 부처 협업 강화

- \*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 '14~'15.8, 총 99회 실시
- \* 농촌형 교통서비스 사업 : ('14신규) 13개소 → ('15) 21

☑ 안성시 보개면 구사리에서는 안성 시내까지 12km가 떨어져있어 일반택시 이용시 17천원을 감당해야 하지만, 행복택시 사업 지원으로 1,100원으로 이용 가능(2,203가구 수혜)

- \* 공동아이돌봄센터('15:30개소) 및 주말돌봄방('15:15) 지원
- \*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 : ('12) 0개소 → ('15) 8

⇒ 농촌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및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속 향상

- \* 복지정책 만족지수 : ('12) 80.8점 → ('14) 85.8
- \* 농촌 삶의 질 만족도 : ('12) 36% → ('14) 41

### ▶ 농촌마을 주거여건 개선, 읍·면 중심지의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 거점 육성으로 농촌생활여건 개선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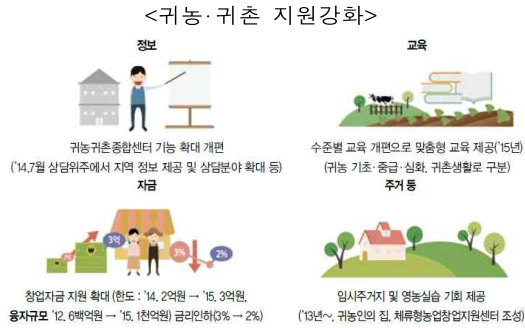
- \* 농촌중심지 육성(선도지구) 시범사업 : '15년 15개소(개소당 80억원)
- \* 지역개발·건축·문화·복지 지원단(40명) 및 프로젝트 매니저(100) 운영('15)
- \* 주거개선('13~'14) : 노후주택 17,213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8,386동, 빈집 8,521동
- \* 체감형 연계협력 사업 : ('13) 300억원 → ('14) 650 → ('15) 650
- \* 취약지역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 '15년 55개 지구

⇒ 농촌 지역개발에 대한 만족도 상승

- \* 종합/기초인프라정비 만족도 : ('12) 79.5점/77점 → ('14) 81.1/90

▶ **귀농·귀촌 및 농촌재능나눔 활성화를 통해 인적자원 확보 및 활력 제고**

- \* 2030세대 대학귀농교육('15:10개소), 2030 농지임대 알선 등 추진
- \* 귀농·귀촌 교육 : ('13) 1,925명 → ('14) 2,450 → ('15p) 2,800
- \* 귀농·귀촌종합센터 실적('15.1~9) : 상담 12,859명, H/P 이용 566,877명, 교육 1,952명, 언론 홍보 264건, 출장상담 639명, 집단상담 216명



- \* 스마일 재능뱅크 운영 : '14년말 신청 2,244마을(3,252건) 신청
- \* 재능나눔 MOU 체결 : ('12) 25개소 → ('13) 26 → ('14)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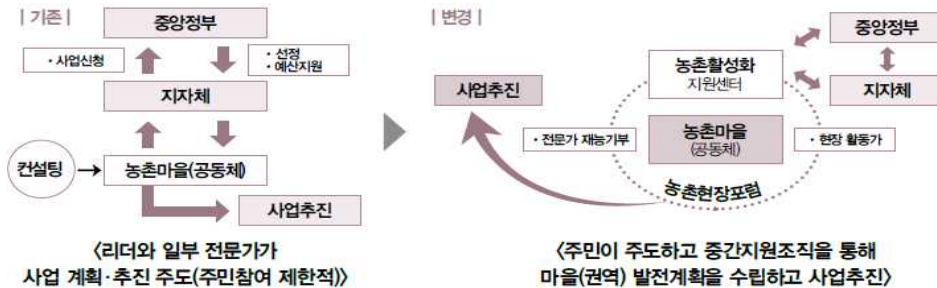
⇒ 귀농·귀촌 가구수 증가 및 재능나눔 활동 활성화

- \* 귀농·귀촌 가구(전체/40대 이하) : ('12) 27,008호/10,729호 → ('14) 44,586/17,611
- \* 재능기부자 수 : ('12) 30천명 → ('13) 50 → ('14) 52

▶ 도시 은행원 출신 조○○씨는 신안군 증도에 귀농하였는데, 전담 7천평 임대, 귀농 창업 자금 지원, 선도농가 교육 등을 통해 농사 및 펜션운영으로 연간 1억원 내외의 소득 달성

▶ **자발적 참여에 의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으로 자조·자립 정신 함양**

- \*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대 : ('12) 37개 마을 → ('15) 418



- \*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추진 : 141개 시·군 18개 관련기관 참여
- \*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 ('14) 1,831개 마을 참여 → ('15) 2,017

⇒ 지역주민의 마을만들기 활동 자발적 참여 확대

- \*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참여마을 : ('14신규) 807개 마을 → ('15) 5,390

▶ 성주군은 '12.9월 태풍 '산바' 로 323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민관합동으로 '클린 성주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13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마을만들기 대상' 을 수상하는 등 주민참여형 환경개선 활동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자리매김

## 5 농업·농촌 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 (가) 추진 배경

- 농업·농촌의 경제·사회구조 다변화에 따라 정부주도의 평균에 기반한 일방향 획일농정으로는 창의와 혁신,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에 애로
  -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고, 농정에 대한 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 필요
- 농가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계획의 미흡으로 현안에 대한 적기 대처가 어렵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발생
-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역개발을 위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상향식 농정 강화 필요
- ICT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기술 발전에 따라 농업 경영체 등에 대한 효율적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제기
- 6차산업 등 농촌현장에서는 손톱 밑 가시규제를 제거하고 관계부처·기관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덩어리 규제개선 요구 증가
-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농촌의 부족한 인적·물적자원을 보완하는 한편, 국민·정책고객과의 소통·협력을 통한 공감대 확대 필요

### (나) 주요정책 및 성과

#### ▶ 농업경영체 DB 등 통계에 기초한 과학적·합리적 농정 추진

\*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 '15.9월까지 1,602천 경영체 등록

▣ 과수화상병 발생시 동업경영체 DB를 활용, 행정비용·방제비용 1,290억원 절감

\* 경영체 DB와 사업간 연계(누적) : ('13) 5개 → ('14) 22 → ('15) 62 → ('16) 102

\* 보조지원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사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15)

▣ 경영체 DB 활용 재정집행 관리로 '14년 발직불금 40억원 부당지급 방지, 직불금 부정집행 95억원 및 면세유 부정수급 76억원 적발에 기여

\* 관계부처 전산망과의 연계를 통해 농업인 편의증진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신청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여 증비서류 제출 면제에 따라 연간 4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 **지역의 특성과 실제 생활권에 기초한 현장농정 추진**


- \* 지자체(15개 시·도, 167개 시·군·구)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14~'18)' 수립 추진
- \*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 : ('13) 33개소 → ('16까지) 140
- \* 지역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방식 도입 : (예비단계) 역량강화 → (진입 단계) 소규모 사업 → (발전단계) 종합개발 → (자립단계) 활성화

▶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애로와 가축질병 등을 적기에 정확하게 대응토록 지원하는 농업현장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 \* 농진청·지자체·선도농·대학·기업 참여 '기술공감' 밴드(20개 품목)를 운영하여, 11,165명 가입 및 4,320건 컨설팅 실시('14.6~'15.8)

▶ 한우목장을 운영하는 A씨는 태어난 지 얼마안 된 송아지가 이상증세를 보여 '한우 기술공감' 밴드에 글을 올린 후, 수의사·축산전문가선배 축산인의 조언으로 애로사항 해결

- \*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구축 및 축산차량 GPS 부착('14:47천대)

현재	방식	개선 후
정확도가 10m 내외 오차발생 	GPS 성능개선	정확도가 1m 내외 오차발생 
원(Circle)으로 구획 방문정보 수집 시 오차발생 	축산시설 존(Zone) 설정방식	다각(Polygon)으로 구획 가능 추가 실제 시설 면적과 근접하게 구획가능 

- \* 정밀토양정보시스템 '휴토람' 이용 현황 : ('12) 352천건 → ('13) 439 → ('14) 681

▶ **농촌현장의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 전통주 통신판매 범위 확대('15.5) : (기존) 제조자, 우체국, aT, 지자체 → (개선)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 홈페이지, 농협쇼핑몰 추가
- \* 하우스 맥주 외부반출 허용('14.4) 및 하우스 막걸리 제조면허 신설('16년 상반기)

▶ 김포파주인삼농협은 하우스 맥주 외부반출 허용으로 인삼쌀맥주 판매량이 3배 이상 증가

- \* 식품제조·가공시설 기준완화 조례·규칙 제정 지자체 : ('13) 4개 → ('15.9) 88
- \* 식품원료 대상 곤충 확대 : ('13) 3종 → ('14) 5 → ('15) 7
- \* 농업법인 등 경영 효율화 및 투자제약 요인 해소

기존	개선
정산 후 재설립 ·영입력 단절 ·부채상환 등 금융부담	법인간 합병·분할 농업법인의 합병·분할 허용
출자자 무한책임 ·투자 기피	포괄원채무 책임 범위 출자액 한도 이내 유한책임

▶ 법인 경영체의 구조조정·규모화 촉진  
▶ 외부 자본의 투자위험 경감으로 투자 촉진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5.1.6)

- \*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면적 1ha → 1.5ha,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에서의 판매 범위 농산물 → 임·축산물 및 가공품까지
- \* 농업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지이용 규제 합리화

기존	개선
농지취득 제한 ·연구·실험 애로	바이오연구소 농지소유 농업 연구목적 농지취득 허용
농산물만 취급 가능 시설설치 허용면적 ·가공시설 : 1ha ·사료 제조시설 : 1ha	임산물, 축산물 및 가공품 추가 허용 허용면적 확대 ·가공시설 : 1.5ha ·사료 제조시설 : 1ha

▶ 민간의 농업연구 투자확대로 기술농업 촉진  
▶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로 농가소득 향상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14.12.30)

▶ **관련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보완하여 시너지 제고**

- \* 농촌지역개발 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기존	개선
인구 50만 이상 도농복합시는 국토부, 그 미만은 농림축산식품부	도농복합시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읍·면은 농림축산식품부, 동 지역은 국토부 * 다만, 도농복합시 중 읍지역에서 도시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부가 협업(공동운영)하기로 함

- \* 환경부,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업으로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 사업'으로 확대 발전
- \* 복지부와 협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나라미 공급 개선

기존	개선
- 20kg 포장 단량 공급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저하 문제 발생) - 10kg 포장 나라미는 7~8월에만 한정 공급	- 10kg 포장 나라미를 연중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복지부 협업 - (농림축산식품부) 포장재 제작·공급 - (복지부) 배송비 예산 추가 지원

- \* 국토부·지자체와 협업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의 교통여건 개선

▶ (농식품부) 사업주관,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제도개선, (농어촌희망재단) 사업공모 및 지원대상지 선정, 예산관리, (지자체)조례제정, 세부계획, 안전관리 등 행정적 지원, (마을주민회 등) 운행계획 수립 및 실제 운영

- \* 기재부·행자부와 협업하여 농식품분야 조세제도 개선

▶ 영농자녀에게 농자·초지 등 증여시 증여세 전액감면 3년 연장(~'17.12까지), 농어촌 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24.6까지) 등

- \* 농진청·산림청과 협업으로 기획단계부터 실용화·사업화를 고려한 R&D 추진
- \* 농식품부 장관, 농진청장, 산림청장 참여 농정전략협의회 운영('15.2~9, 5회)

▶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주요 농정 현안과제 해소 및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 농정과제 구체화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운영('13.4부터)
- \* 생산자·소비자·전문가 참여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구성, 참여와 합의에 의한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회의실적 : 총 102회)
- \* '이동필의 1234'를 통해 '13년부터 현장 339곳 방문

▶ '13년 46개 시·군, '14년 72개 시·군 111곳, '15년 8월까지 47개 시·군 72곳 방문  
▶ '14년에는 총 129건을 건의 받아 60건 수용, 기추진 및 검토 중 52건, 기타 17건

- \* SNS·온라인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및 정보공유 강화
- \* 정책홍보 및 설문조사 등을 위한 쌍방향 농정소통시스템(PIMS) 운영
- \* 현장이해도 증대를 위해 대학생 등 활용 블로그 운영



▶ **농식품 행정업무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보람 고취**

- \* 원격 영상회의 확대 : ('14) 3,616건, ('15.7까지) 1,830
- \* 위임전결 규정 개정('15.6) : 장관 결재사항 32%, 차관 34% 감축
- \* 소통·단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칭찬릴레이' 추진 : '13.5~'15.10동안 102명

⇒ **박근혜정부 농정의 '일하는 방식 개선' 을 통해 농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각종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부처로 선정**

- 농업인·일반인 등 정책 고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14년) 45% → ('15년) 63.4%로 증가하였고, 부정적 평가는 15.3% → 5.5%로 감소**
- **정부 3.0 등 국정 아젠다 추진에서 우수 부처로 평가**
  - 정부 3.0 최고등급('14) 및 정부 3.0 활동성과 발표대회 최우수상('14.7)
  - 정책홍보 최우수기관('13~'14) 및 정부업무평가(홍보) 전부처 1등('14)
  - 부패방지시책 1등급('13~'14) 및 규제개혁평가 우수기관('13~'14) 등





[별첨 1]

---

첨단화 · 경쟁력 · 활력화

**현 장 이 답 입 니 다**

---

2016. 1.

농촌진흥청





# 목 차

I. 2015년 평가 .....	205
II. 2016년 업무추진방향 .....	211
III. 주요업무 추진계획 .....	215
<첨단·융복합>	
1. 스마트팜 확산 및 농작업 자동화 .....	219
2.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확산 .....	221
3. 바이오 융합 신성장동력 창출 .....	222
<글로벌 경쟁력>	
4. 개방 대응 기술경쟁력 제고 .....	227
5. 농식품 수출 및 세계화 지원 .....	233
<상생·협력>	
6. 농업·농촌 활력 촉진 .....	237
7. 동반성장 기술협력 .....	241
IV. 국민중심의 현장소통행정 .....	245
<참고> ① 농촌진흥청 일반현황 .....	253
② 2015년 외부기관 평가결과 .....	258



## I . 2015년 평가

1. 주요성과

2. 평가 및 반성



# 1. 주요성과

◇ 고객·현장·정책중심의 기조에 맞춰 농가소득 향상,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집중

□ **(한국형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융합, 농업의 생산성·편리성 향상**

- 시설원예분야 1세대 스마트온실 표준모델(3종: 무가온, 관수, 관수+가온) 및 온실용 ICT 부품 표준규격 개발(22종: 센서 13, 제어기 9)
- 작물별 스마트팜 적용 최적 생육모델 개발(토마토) 및 현장 확산
  - \* ICT 융합기술 현장시범(142개소), 작물 생육 정밀관리 종합컨설팅(5개소)

□ **(현안대응) 개방 대응 품목별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수출현장 지원**

- **(쌀) 당노방지(눈큰흑찰 1호), 쌀 국수용(새미면) 등 기능성 품종 육성 및 가공식품 다양화 기술 연구(건식 쌀가루 품질기준 설정 등)**
- **(로열티 절감) 수입 대체(감귤 ‘무봉’) 품종 육성 및 참다래 수출시장 개척**
  - \* 참다래 수출계약('15~'16) : 100톤(싱가포르 등 4국)
- **(가축개량) 고유의 맛과 성장능력을 보완한 흑돼지 ‘우리흑돈’ 개발**
  - \* 새끼: 10마리(재래 6~8) 1일 증체량: 830g(재래 500)
- **(수출지원) 신선도 유지를 위한 부패 억제·세척·포장기술 현장 보급**
  - \* 수출딸기(선행) 선도유지기간 확대: 7~9일 → 9~11



□ **(첨단기술 융복합) 생명공학 등 바이오기반의 신성장분야 육성**

- 면역 거부반응 유전자 제어 형질전환돼지 증식(20두: 초급성 18, 초급성·급성 2) 및 영장류 이식연구 추진(심장, 대동맥 등)
  - \* 정부운용 특수 목적건 복제·보급: 관세청 제공 마약탐지견 등 8두('15)
- 기능성 식약품 개발 원천소재용 유용유전자원 발굴(10작물, 47자원)



□ **(부가가치 향상) 곤충·농축산물 활용, 농업의 고부가 산업화**

- 식용곤충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록(4종) 및 레시피 개발(체과제빵 7종, 환자식 50종)
- 새싹보리의 숙취해소효과 입증 및 기술 이전(17업체, 실시료 319백만원)
  - \* 1kg 당 : 보리종자 902원 → 분말 56천원(증 62배)
- 감귤 바이오겔 이용 항산화(7종)·미백 활성(1종) 신소재 선발
  - \* 가공식품 제형 개발(초콜릿 등 3종)



□ **(6차산업화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

- 지역·농가단위 6차산업화 특성화품목 (137개소) 및 가공체험 상품화(108개소) 지원
- 농업인 공동 활용 가공시설과 창업보육 지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30개소)
  - \* 6차산업 창업자 : ('13) 360명 → ('15) 435
- 농업인 등 6차산업화 경영역량교육(619명), 유통·마케팅 컨설팅지원단 운영(150명)
  - \* 도 단위 마케팅 지원 전문가협의체 운영(9개도, 140명)



□ **(현장소통) 부처 간 협업 및 對국민 공개·공유·협력 확대**

- (협업) 식물방역법 금지 '화상병 긴급방제'(농식품부 ↔ 산림청 ↔ 지자체)
- (공개) 모바일 기술 콘텐츠 구축(2,713편), 공공데이터 개방(1,492건)
- (공유) 중소 농산업체 대상 연구장비(1,029종)·포장(5ha) 등 개방
- (협력) 중앙-지방 R&D 협력방안 마련, 작목별 연구협의체 운영(22작목)

- ◇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부문 7년('09~'15)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국조실)
- ◇ 「정부3.0 추진성과 평가」에 2년('14~'15) 연속 우수기관 선정(행자부, 총리표창)

## 2. 평가 및 반성

- **(스마트팜 확대)** 온실 유형별 ICT 적용모델 및 표준규격 부족
  - 영세업체를 통해 이중규격의 ICT 기기 등이 보급되는 상황
  - 시설형태·작물특성을 고려한 표준화 기술의 현장 확산 필요
- **(6차산업 정착)** 유통·마케팅 역량 부족 등 획기적 소득 향상에 한계
  - 상품의 생산부터~판로·마케팅까지의 패키지 맞춤 컨설팅 필요
  - 소규모 농가의 창업, 경영체 조직화, 기업과의 협력 등 지원
- **(현장수요 충족)** 영농·산업현장의 가시적 성과 확산이 아직은 미흡
  - 수출용 밥쌀, 소비기호충족 가공품 등 쌀 신규수요 창출 및 논을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 등 이모작 확대기술 보급 필요
  - 산지·간척지 등 유휴지를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등 유휴자원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보급 부족
  - 밭농업 작업공정별 기계화율 격차 심화 및 재배양식 통일 미흡
  - 신선도·안전성 등 수출현장 애로기술 지원과 FTA 체결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필요
- **(위기대응)** 이상기상, 돌발해충 등 위협요소에 대한 대응 확대
  - 금지검역 병해충 증가에 따른 생태·예찰·방제체계 확대
  - CO<sub>2</sub> 배출 저감을 위한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 기술 확보 필요
  - 농촌지역의 재해취약성을 고려한 재난안전연구 강화

⇒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적 자세로 농정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더욱 노력



## Ⅱ. 2016년 업무추진방향

1. 2016년 여건전망
2. 업무추진체계



# 1. 2016년 여건전망

◇ 개방 확대, 고령화, 기후변화 등 위기요인과 함께 농업·농촌의 가치 증시, 수출시장 확대, 첨단기술(ICT·BT) 등 기회요인 상존

□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핵심과제의 가시적 성과가 확산되는 시점

- (스마트팜) 성공한 농장의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단계
  - \* 스마트팜 도입(누계) : ('14) 시설원예 60ha, 축산30호 → ('15) 769,186 → ('17) 4,000, 700
  - \* 도입효과 : 생산성 25% ↑, 품질 12% ↑, 소득 31% ↑(서울대, '15.11)
- (6차산업) 가공·체험 등 농가경영 다각화로 농외소득 증가세
  - \* 농가소득 대비 농외소득 비중 : ('95) 31.8% → ('14) 42.3

□ 시장개방에 따라 농식품산업의 수출시장 확대여건 조성

- FTA, 정상외교를 활용, 중국·할랄시장 농식품 수출액 증가
  - \* 對 중국 수출 : ('14.11) 9.0억불 → ('15.11) 9.6(전년 동기대비 7% ↑)
  - \* 對 할랄(GCC 국가) 수출 : ('14.11) 3.2억불 → ('15.11) 3.4(전년 동기대비 6% ↑)
- 국산 쌀의 중국수출검역요령 시행('15.12)으로 중국 수출 가능('16.1~)

□ 식품·외식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는 정체

-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품질 우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추세
  - \* 국산농산물 충성도(가격에 관계없이 국산 구매) : ('09) 37.0% → ('15) 21.0<sup>1)</sup>

□ 신 기후체제 출범(파리기후협정)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의 유지·보존이 핵심이슈화

-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연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
  - \* 파리기후협정(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 2.0℃ 이내
- 한반도 가뭄 발생빈도의 급격한 증가 등 사전 재해대응 중요
  - \* 가뭄 빈도 : (1904~2000) 35회(0.36회/년), (2000~2015) 10회(0.67회/년)

1) 2015년 국민의식조사결과(농촌경제연구원, 도시민 1,500명 조사)

## 2. 업무추진체계

### 비 전

농업기술 혁신으로 국민행복시대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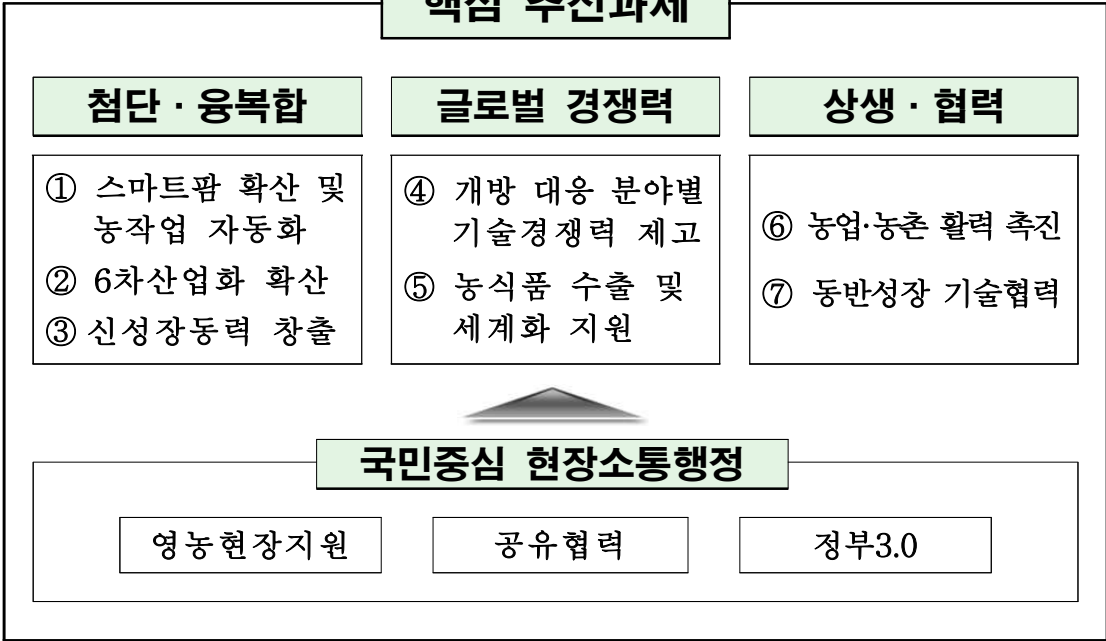


### 2016 목표

- 첨단기술 ·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개방화 시대 「경쟁력 강화」 및 「활력 극대화」



### 핵심 추진과제



| 고객 · 현장 · 정책 중심의 기관 운영으로 국민신뢰 제고 |

##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 첨단·융복합
- ◇ 글로벌 경쟁력
- ◇ 상생·협력





## **첨단 · 융복합**

1. 스마트팜 확산 및 농작업 자동화
2. 농업 · 농촌의 6차산업화 확산
3. 바이오 융합 신성장동력 창출



# 1. 스마트팜 확산 및 농작업 자동화

## 가 스마트팜 확산

◇ 스마트팜 본격 확산을 위한 기술 표준화 및 빅데이터 활용  
○ 스마트팜 농가 생산성 : ('14) 20% → ('16) 23 → ('17) 25

- **(표준화) 한국형 스마트 온실·축사 및 핵심부품 표준화**
  - (시설원예) 단동·연동형 스마트 온실모델 고도화 및 현장시험
    - 온실 테스트 베드 활용 ICT 기기 작동성능 등 평가 및 개선연구
  - (축사) 급이·급수 등 자동화기기·환경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축사관리모델' 개발(대상: 돼지, 한우, 산란계 등 6축종)
  - (ICT 부품) 온실·축사 적용 센서 및 제어기의 표준규격 개발

- **(기반기술) 농작업 자동화 및 로봇화 기반기술 개발**
  - (센서) 근적외선 분광법을 활용한 토양 유기물 센서 개발
    - \* 토양센서 개발 : ('13) 수분·경도·영양분(EC) → ('14) pH → ('16) 유기물
  - (로봇) 차륜형 벼 제초로봇 현장실증을 통해 가동매뉴얼을 확립하고, 로봇 활용 노지과수 정밀관리기술을 개발(국제공동연구)
    - \* 제초로봇 : ('14) 궤도형 → ('15) 차륜형 → ('15~'16) 현장실증 → ('17) 농가시범보급

- **(빅데이터) 측정 데이터 기반 생육관리 S/W 개발 및 컨설팅**
  - 빅데이터 수집기반을 확대하고 최적의 생육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16: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버섯 → '17: 참외, 국화)
  - 수집·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 생육관리 종합컨설팅 추진(8개소)

- **(현장확산) 스마트팜 표준기술 시범투입 및 시범농장 지원**
  - 주산지별 표준모델 구축 등 ICT 융합기술 시범사업(26사업, 171개소)
  - 농식품부와 협업, 권역별 스마트팜 거점농장 육성 지원(8개소)

## 나 | 밭농업 기계화

### ◇ 주요 밭농업의 쏠과정 기계화 등 기계화 기반 구축

○ 밭농업 기계화율 목표 : ('14) 56.3% → ('17) 65 → ('19) 70

#### □ (쏠과정 기계화·범용화)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정식·수확기계를 중점 개발하고 기 개발 농기계의 성능 향상 등 범용화 추진

○ 트랙터 부착형 감자 파종·수확기와 승용형 고추·배추 정식기 및 콩 수확기 개발을 추진(산학연 협업)

\* 감자 : 파종기 제작(7월)·파종 현장실증(9월), 수확 현장실증(10월)

○ 참깨예취기의 콩·팥·들깨에 대한 적용을 위한 기계 개량 및 밭작물용 트랙터 범용성 증진을 위한 부착작업기 개발

- 트랙터 전방 부착형 운반적재기, 밭농업용 3륜형 승용관리기 등

#### □ (재배기술 표준화) 기계화 적합 재배양식 및 수확후 관리 표준화

○ 재식밀도, 예취시기 등 표준재배기술 설정(들깨) 및 기계화 표준 재배법 현장실증(참깨, 잡곡)

○ 유통종합처리장(SPC)를 통해 콩의 수확후 품질관리기준 설정

#### □ (전용품종) 기계화 작부체계에 적합한 우량 품종 개발

○ 줄기가 굵고 단단하여 기계 수확에 유리한 내탈립<sup>2)</sup>·내도복성 콩 품종 육성(밀양283호)

○ 참깨·들깨의 초형(草型) 개선 및 키가 작은 수수 육성

#### □ (현장보급) 선도단지 육성 및 교육·연시·시범사업 추진

○ 국산 콩 최대생산을 위한 특산단지 육성(7개소, 700ha)

○ 시범사업(10사업, 71개소)과 농기계 교육과정(22과정, 1,560명) 운영 및 밭농업기계 신기종 기술 연·전시회 추진(3월, 130업체 참여)

2) 내탈립(耐脫粒) : 곡류가 이삭이나 줄기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견디어 내는 성질

## 2.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확산

### ◇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

- 연평균 농가소득증가율 : ('14) 13.0% → ('16) 15.0 → ('17) 15.5

### □ (참여확대) 시범사업 참여농가와 함께 중소가족농 중심의 신규 참여를 확대하고, 대상별 6차산업화 추진방식을 차별화

- (시범농가) 지역별로 특화품목 중심의 수익모델을 구축(114개소) 하고, 농가단위의 가공·외식·체험관광 활성화를 지원(120개소)
- (중소가족농) 농가별 경영개선과 유통·마케팅 역량을 집중 지원
  - \* 멘토링(3,000농가), 창업 기술지원실 운영(도별 1개소), 창업경진대회(11월)

### □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 귀농인에 대한 현장실습형 「귀농창업지원센터」를 설치(6개소) 하여 사업성 분석 등 창업화 전 과정에 대해 자문과 컨설팅 지원
- 농산물종합가공센터(44개소) 운영 및 소규모가공창업 지원(18개소)
  - \* 창업코칭 1,200명(창업사업장 700, 예비창업자 500), 창업교육 25,000명

### □ (성과확산) 경영체 규모화, 유관기관 협업 및 성공사례 확산

- (조직화) 2~3개 경영체를 조직화(협동조합, 법인화 등)하는 지역단위 중간유통 판매조직체를 시범운영
- (협업) 도시민 등 관광객 대상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모니터팜<sup>3)</sup>, 농촌전통테마마을, 코레일 등)
- (확산) 우수 6차산업 경영체의 비즈니스 성공사례 확산
  - \* 우수사례 확산(100선, 1천부), 현장 경진대회(9회), 브랜드 기술지원(9개소)

3) 「모니터팜」 : 일반인 및 농업인(동일 사업)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가능한 전문 농장

### 3. 바이오 융합 신성장동력 창출

#### 가 종자산업 육성 지원

##### ◇ 유전자원 다양성 확보 및 분야별 종자 개발과 수출지원

- 로열티 절감(추정) : ('13) 72억원/년 → ('16) 83 → ('17) 88

##### □ (유전자원) 신품종 육종 및 산업화를 위한 유망자원 확보

- 다양한 국내외 유용자원을 확보(7,000자원)하고, 유용형질 특성 평가(6,400자원)를 통해 고부가 유망자원을 발굴(50자원)
  - \* 유망자원 발굴 : 병저항성(흰잎마름병, 뿌리혹병 등), 기능성 등
- 보존 영양체와 단명(短命)종자의 장기보존기술 개발(초저온동결법 등)

##### □ (국산품종) 주요 품목별 로열티 대응 품종 육성 및 확산

- 시장경쟁력이 있는 화훼류(12작목, 22품종), 수입대체용 약용작물(지황 등 3작목) 및 소비자 선호 버섯(폴버섯 등 3종) 품종 육성
- 육성품종 현장실증을 위한 거점 주산지 중심의 시범포 확대
  - \* 약용작물 대량 생산단지 조성 : 50ha(제천, 영주 등 4개소)

##### □ (종자수출) 수출 전략품종 개발 및 해외생산기지 구축

- (GSP<sup>4</sup>) 추진) 수출국 맞춤형 식량작물 품종 육성(벼 10계통, 옥수수 8, 감자 3)과 국외 적응성 시험재배를 확대(13국, 10작물, 65품종)하고, 한국형 종돈 개량과 토착종 원종계 계통 선발을 추진
- (생산기지) 국화 '백마' 품종의 중국현지 생산기지를 설립(1월)하고 생산물량은 현장평가회를 거쳐(3월) 일본 수출을 추진(12월)
  - \* 생산기지 : 중국 해남도 / 생산면적 : (16) 0.3ha → ('20) 45

4) Golden Seed Project : 수출 전략품종 개발 등 종자경쟁력 제고 사업(2013~, 농식품부 주관)

## 나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 ◇ 기초기반연구, 형질전환동물 개발 등 농업과 생명공학 융합

- 농생물 유전체 해독·DB화(누계) : ('13) 6종 → ('16) 12 → ('17) 26

### □ (원천기술) 농생물자원 유전체 정보 DB화 및 활용기반 구축

- 국내 고유자원 유전체 해독('17년까지 17종) 및 유용형질 발굴
  - \* 17종 : 식량 3, 원예·특작 7, 가축 4, 곤충선충 3
- 유전자지도 작성을 통해 주요 작물병 방어가 가능한 병충해 저항성 마커 개발(벼 키다리병 저항성, 벼멸구 저항성 유전자 등)
- 농생명 빅데이터 관리·분석 활용시스템(NABIC)<sup>5)</sup> 고도화 추진
  - 유전체 분석프로그램 개발, 체계적 등록·관리·공유로 활용 극대화

### □ (실용기술) 농업과 생명공학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바이오장기용 다중형질전환돼지 생산(2종) 및 돼지 장기의 영장류 이식 추진(5회: 심장, 체도, 피부 등 이종이식)
- 마약탐지·수색견 등 특수목적견 복제생산 및 유관기관 보급(10두)
- 감귤 유전자원 이용 피부 주름개선 및 항염증 등의 효능 평가

### □ (GMO 안전)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성 평가기반 확립

- 국내유통 GMO 안전관리를 위한 실시간 GM작물 검출법 개발
- 벼 품종별 GMO 식품안전성평가 DB(영양성분 및 항영양소) 구축 및 독성·알레르기 평가시스템 구축
- GMO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설명회 및 교육 추진(연중)

5) NABIC(National Agricultural Biotechnology Information Center) :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http://nabic.rda.go.kr>)



## 다 농축산물 활용 부가가치 창출

### ◇ 곤충, 농축산물을 활용한 고부가 농식품 산업화 기술 개발

- 기능성원료 등록(누계) : ('13) 3종 → ('16) 5 → ('17) 7

### □ (식의약소재) 곤충, 식량작물 이용 식의약 소재 및 효능 연구

- 심혈관계 질환개선 효능이 우수한 식약용 곤충 선발(2종) 및 곤충 유래 항혈전 물질 추출·효능평가(3종, 혈전형성억제 효과 등)
- 새싹보리 추출물의 숙취해소와 간 기능 개선, 인삼의 골결손 개선 및 쥐오줌풀의 신경보호 효능 검정
- 백삼의 뼈 건강 개선 및 인삼 열매의 간 기능 증진 효능 연구
- 의료용 실크소재의 제형화와 물성 조절을 통한 3D 프린팅 연구 추진
  - \* 3D 프린팅용 실크단백질 원료 제조기술, 프린팅시스템 등 개발

### □ (기능성소재) 농산물의 기능성 연구 및 산업용 소재 개발

- 국내 농산물자원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등록 추진(4종)
  - \* 흑미(체지방 감소), 여주(혈당개선), 복분자·구기자(항산화)
- 식량작물과 부산물을 활용 피부보호 및 미용소재 개발
  - \* 레스베라트롤 쌀(항노화), 옥수수 수염(피부보호), 쿠메스테롤 콩(미백) 등
- 잠상·양봉자원 이용 산업용 소재 개발(누계: 봉독화장품 등 16종)

### □ (가공기술)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및 발효 미생물 자원화

- 한우고기 육질 향상을 위한 건조숙성기술 및 저지방 모짜렐라 치즈 제조법과 저염치즈 제조를 위한 소금 대체제 개발
- 산채류 동결조건 확립, 냉동 베리 가공기술 등 간편식 확산에 대응한 농식품 냉동 및 활용기술 연구
- 발효 미생물 선발(10주) 및 우수 미생물의 생물자원 등록(3주)

## **글로벌 경쟁력**

- 4. 개방 대응 기술경쟁력 제고**
- 5. 농식품 수출 및 세계화 지원**



## 4. 개방 대응 기술경쟁력 제고

### 가 쌀 소비 촉진

- ◇ 쌀 소비촉진을 위한 품종·가공기술 다양화 및 수출지원
  - 건식 쌀가루 품질기준 설정(누적) : ('13) 1건 → ('16) 5 → ('17) 6

- **(품종 다양화)** 기능성·가공용 벼 품종 개발 및 품질관리 지원
  - 향미, 제면용·양조용 쌀 등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고 특수미 가공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5개소)으로 신수요 창출을 지원
    - \* 쌀가루용(수원594호), 바스마티 향미(수원607호), 저아밀로스(밀양300호)
  - 수입국 쌀 품질평가(5국, 32브랜드) 및 원산지 판별 DNA 마커 개발
- **(가공기술)** 쌀 용도 다양화 및 소비촉진기술 개발
  - 수입 사케 대체용 한국형 청주 상품화 연구(사케 제조법 적용)
  - 건식 쌀가루 품질기준 설정('15:쿠키, 백설기 → '16:절편용)
  - 편이점용 냉동컵밥·국밥(조리형·편이형) 및 쌀 빵·과자 개발
- **(수급안정)** 일반벼의 사료용 전환 및 논 이용 발작물 생산
  - 일반벼 중 조사료 가치가 높은 품종 선발(6종:벼키 90cm↑, 수량 500kg/10a↑) 및 급여기술 정립
  -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대규모단지 조성(10시군)과 발작물 전환에 용이한 작부체계 개발(7종) 등 논 이용 발작물 생산기술 개발
- **(수출확대)** 밥쌀 및 가공제품 등의 해외수출 지원
  - 수출 대상국 기호 맞춤형 수출 전문단지 육성(10개소, 1,200ha)
  - 대호 간척지 등을 활용한 수출 벼 생산단지 육성 지원(540ha)

#### <對 중국 '쌀 수출' 확대를 위한 RPC 기술지원 전담반 운영>

- 구성 : 저장·품질관리, 가공, 병해충, 잔류농약, 유통관리 등 8분야, 14명
- 대상 : 5개소(중국 수출 전용 RPC 대상 수출 및 재배 매뉴얼 등 기술지원)

## 나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제고

### ◇ 소비트렌드 대응 품종육성, 안정생산 등 원예산업 활성화 지원

- 국산품종 보급률 : ('13) 25.3% → ('16) 32 → ('17) 34

#### □ (품종육성) 소비자 선호 품종 및 표준품종 등 육성

- 껍질째 먹는 사과형(200g) 배, 고품질의 중소과형(230g) 완전단감, 수입대체 프리지아, 기능성 감귤 등 소비자 선호 신품종 육성  
\* (채소) 병저항성 품종 등 2품종, 13계통 / (과수) 소비자 선호 품종 등 5품종, 2계통
- 약용작물의 표준품종 육성(백수오 등 32작목) 및 신수요 작물의 유전체연구와 분자유종기반 구축(도라지 등 5작목)

#### □ (국내보급)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산 품종의 보급을 확대

- (현장평가회) 작목별 주산단지 중심으로 연중 평가회 실시(20회)
- (국산묘 보급) 무병묘(사과 '썸머킹', 배 '만풍' 등)·무병종구(나리 '다이아나' 등 6종, 프리지아 '샤이니골드' 등 2종) 보급
- (인삼 채종포 확대) ('15) 2.5ha(5개소) → ('16) 4(10)

#### □ (안정생산) 작황예측, 불량환경피해 경감기술 등 안정생산 지원

- 원격탐사기술을 활용 채소 주산지 재배면적과 작황 상황 평가  
\* ('16) 3작목(양파, 배추, 무) → ('17) 4(마늘) → ('18) 5(고추)
- 저장 중 양파 부패 억제 및 여름배추 저장기간 연장(30일 → 60)을 위한 필름처리기술 실용화 추진
- 인삼 원료삼의 안정생산을 위한 비가림 하우스 재배(직파·피복자재) 및 뿌리썩음병원균 진단키트 등 연작장해 경감기술 개발
- 약용작물의 GAP 및 친환경 고품질 유기재배 기술 개발  
\* GAP생산(영경귀 등 3작목), 표준재배지침(감초 등 10), 유기재배(도라지 등 5)

## 다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

### ◇ 육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축산기반 확대

- 개발 씨돼지 보급 : ('13) 224두 → ('16) 280 → ('17) 350

### □ (가축개량) 씨가축 육성 및 맛 중심 소비트렌드 대응

- 보증씨수소 선발(한우 30두, 젖소 2), 닭·오리 품종 복원(12계통), 씨돼지 보급(280두) 등 주요 축종별 씨가축 선발·보급
- 개량 흑돼지 '난축맛돈'의 등지방두께 조절(21mm → 18) 등 맛 향상 연구 및 현장 보급(100두)

### □ (생산성)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축종별 생산성 향상

- 거세한우 육량개선을 위한 첨가물질(감자 추출물 코팅제) 현장보급
- 젖소의 적정 사료 급여수준 설정 및 조기 임신진단기술 개발
- 영양소 조절을 통한 비육돈의 증체량 증진 사양기술 개발

### □ (가축분뇨) 가축분뇨 고품질 퇴·액비 생산기술 확립 및 냄새 개선

- (자원화) 기능성 퇴·액비 등 유용자원의 회수기술 개발 및 가축분뇨 이용 고체연료화 기술 개발·보급(특허출원 1건)
- (냄새저감) 가축분뇨 처리시설별 축산냄새 배출특성 분석 및 냄새 저감용 미생물 공급(116시군, 13천톤)과 실천매뉴얼 보급(2종)  
\* 미생물 활용 냄새저감 시범농가 육성(91개소), 실증모델 설치(김제, 20농가)

### □ (친환경 축산) 축사시설 현대화 및 가축질병 예방

- 사육환경·급이·급수 자동관리가 가능한 간이축사모델 개발(오리, 닭)
- 가축의 생체지표(행동특성, 호흡기질환 징후감지 등)를 활용한 가축질병 제어기술 개발 및 보유축 질병관리 통합프로그램 운용

## 라 농업 생산비 절감

### ◇ 에너지 절감, 조사료 안정공급 등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보급

○ 시설재배 평균 난방비 비중 : ('13) 35% → ('16) 30 → ('17) 25

#### □ (에너지) 에너지절감 및 효율성 향상기술 개발·보급

- 산업폐열의 농업분야 활용을 위한 축열물질 제조와 운송기술 개발 및 활용방안 확산(산업부, 농식품부 협업)
- 지하수층 이용 축열방식 냉난방시스템 효과 분석 및 산업체 기술이전
- 비닐하우스의 열손실 취약부 개선, 차광도포제를 이용한 냉방 효율성 제고 등 저비용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 □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품종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 간척지 적응 내염성 사료품종(IRG) 및 수입종 대체 옥수수 신품종(수원203호) 개발
- 기존 산지초지(시범목장 23개소)의 식생개선 및 가축 성장단계별 방목의 효율성 제고 등 산지초지 이용기술 연구
- 조사료 품질향상을 위한 조제기술 개발 및 규격화
  - \* 수분변화 예측지표 개발 및 적외선분광광도기 이용 품질평가체계 고도화

#### □ (노동력절감) 인건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기술 확산

- 화훼 육묘 자동화(3개소), 단동비닐하우스 절전형 환경제어(12개소), 딸기하이베드 2단 재배(2개소) 등 신기술 현장보급
-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 적응성 평가(8개도, 무인항공 포함) 및 잡초방제 현장실증(5개소)

## 마 친환경 안전농식품 공급

### ◇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 및 농산물 안전관리기술 개발

- GAP 생산가이드 발간(누계) : ('13) 10작물 → ('16) 25 → ('17) 30

#### □ (생산기반)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유기농업의 환경생태 영향 및 공익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농경연 공동) 및 유기농경지 유형별 토양 건전성 조사(150개소)
- 비료사용처방 개선 등 농경지 토양·양분 관리 추진
  - \* (기존) 단비 → (개선) 복합비료, 유기질비료 추가
- 작물 활성 증진과 친환경 방제를 위한 유용 미생물 이용기술 보급
  - \* 인삼 잘록병 방제 미생물제 등 :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6건)
- 시설과채류 대상 천적이용 방제기술 표준모델 개발(2종)

#### □ (안전성 확보) 위해요소 안전관리 및 GAP 실천기술 확산

- 소면적 재배작물 농약의 직권등록 추진(누계: 80작물, 300품목)과 농작업자 보호를 위한 한국형 농약노출량 산정모델 개선(벼)
- 식중독 미생물의 환경 친화적 제어물질 선발(박테리오파지 등 3종) 및 신선채소 식중독균의 동시진단키트 현장 적용 추진(5종)
- 국가관리 바이러스 진단 표준 매뉴얼 개발(2종)
- GAP 활성화를 위한 작물별 실천기술 패키지 보급
  - 초보자용 GAP 생산가이드 발간(5종 : 콩, 파, 마늘, 복숭아, 오디)
  - 토양, 수질, 병해충, 작업자안전 등 유형별 실천기술을 종합한 GAP 세부실천지침 개발(32종)
  - \* ('15) 식량 10, 특용 4 → ('16) 과수 14, 약용 18 → ('17) 채소 22, 버섯 9



## 바 농자재 품질관리 및 유통점검

### ◇ 안전·유통·시험연구기관 관리 강화로 불량 농자재 최소화

- 불량 농자재 발생 최소화 : ('13) 10.1% → ('16) 5.5 → ('17) 5.0

#### □ (안전관리) 농자재 평가 및 관리기준 강화

- 유기농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지표성분 설정과 분석법 개발(누계:8종)
- 등록신청 농약과 원제에 대한 안전성 종합평가(500품목) 및 등록유효기간(10년) 만료 농약 대상 재평가 실시(359건)
- 농약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설정과 처벌기준 차등화로 비료·유기자재의 비의도적 혼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유해물질 혼입 시 : (현재) 공시취소 및 고발 → (개선) 청문회 후 의도·비의도적 구분 처벌 차등화

#### □ (유통관리) 불량 농자재 유통근절 및 검사·회수 시스템 구축

- 관세청, 경찰청, 농자재 명예지도원(141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과수 주산단지 등 밀수농약 사용지역 중점 단속(4회/년)
- 비료·유기자재의 공장 출하 전 품질검사(1~5월) 및 불량제품 회수
- 가격정보, 부적합비료 홈페이지 공개, 불량정보 문자서비스 등 농자재 가격안정화 및 불량제품 최소화 관리방안 마련

#### □ (제도개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농자재 법령 개선

- 시험기관 등급제 도입, 전문평가단 운영 등 관리체계 개선
- 유기자재 제도 통합(공시·품질인증→인증)에 따른 효능검증·표시 의무화를 추진(제조용 유기자재 허용 여부 검토 : 전문가 등의견수렴)
- 농약혼입 등 비료 사용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 5. 농식품 수출 및 세계화 지원

### 가 수출현장 애로해결 기술 지원

#### ◇ 수출 농식품 수확후 처리기술 개선 및 현장보급

- 참외·감귤 유통 중 손실감소:('13) 35~40%→('16) 20~25→('17) 15~20

#### □ (수확후처리) 선도유지·부패억제 등 저장기술 확립과 수입국 검역기준에 부합하는 포장방법 개선

- (참다래·뽕은감) 에틸렌을 이용한 후숙기술 확산
- (감귤) 살균세척과 포장기술을 적용한 시범수출 추진(2회)
- (참외) 수송온도 개선·세척 등 선박수출에 용이한 선도유지 기술 매뉴얼 보급(손실감소율 개선 : 25~35% → 15~20)
- (딸기) CO<sub>2</sub> 처리를 통한 '설향, 매향'의 선도유지기술 확립(유통기간 2일 연장) 및 신품종(담향)의 선도유지조건 설정

#### □ (안전성)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 및 기술지원 강화

- 수출대상 국가별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보급(10개국, 28작물)
  - 이슬람지역 수출 활성화를 위한 對인도네시아 수출농산물 농약 안전사용지침 신규설정(2월)
- 국내등록농약 해외잔류기준 설정 : ('13) 13농약 → ('16) 26
- 토마토(일본), 배추(대만) 등 수출농산물 중 농약 안전성 위반 작물 대상 현장기술지원(수출사업단, 농약회사 등과 연계)

#### □ (현장지원) 수출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현장 컨설팅

- 수출현장 애로기술의 직접 발굴을 위한 「수출현장리포터」 운영(50명)
- 「수출농식품 기술지원 협의회」(200명) 구축 및 현장컨설팅 추진

## 나 신시장 개척 지원

### ◇ FTA 대상국 등 주요국별 수출상품화 전략 마련 및 보급

- 중국·할랄시장 신규개척, 신상품 개발 및 현장 컨설팅

### □ (중국) 품목별 현지인 수요 파악 및 현장컨설팅 추진

- 검역협상 완료품목 대상 수출경쟁력 분석 및 현장보급
  - (쌀) 고품질·기능성 쌀의 현지 수요 분석 후 정보 제공(RPC)
  - (포도) 對 중국 수출단지 대상(상주, 천안)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 (김치) 상온유통 김치 가공기술 및 응용상품 개발 추진
  - (삼계탕) 인삼 등 첨가물에 대한 현지 선호도 등 상품성 조사
- 추가 검역협상 품목은 수출 가능성 등 사전조사(참외, 딸기 등)

### □ (할랄) 원재료 국산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및 수출전략 마련

- (축산물) 할랄식품 원재료 생산기술 개발
  - 할랄재료 생산가이드 및 할랄인증 매뉴얼 발간(소고기, 닭고기)
- (가공식품) 소규모 농산업체 대상 할랄인증 기술 지원
  - 농산업체 생산품의 할랄전환기술 및 생산가이드 등
- (수출전략) 할랄시장 진출 농산업체의 경영개선 전략 마련
- (체험·교육) 할랄식품 소비자 대상 농촌체험기반 구축(3개소) 및 할랄식품 생산기술 및 인증방법 교육(50명)

### □ (신상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상품 개발 지원

- 지역특화품목을 선정, 수출상품화 매뉴얼 개발 및 시범수출을 지원(2품목: 품목 선정 → 해외 선호도 조사 → 상품화 → 시범수출)
- 품종·농기자재 등 우수농업기술의 수출사업화 모델 개발('16~)

## 상생 · 협력

6. 농업 · 농촌 활력 촉진

7. 동반성장 기술협력



## 6. 농업·농촌 활력 촉진

### 가 개발 신기술 현장 확산

- ◇ 개발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로 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 향상
  - 기술보급 만족도 : ('13) 84.8점 → ('16) 89.5 → ('17) 91

#### □ (기술보급) 현장 수요 중심의 기술 확산으로 실용화 촉진

- 개발기술을 알기 쉽게 가공,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현장에 확산
  - 교육·연시(230회), 자료(63종), 시범사업(138종), 동영상(678건)
- 현안 중심의 패키지화된 신규과제 확대('15: 31종 → '16: 45) 및 소득안정을 위한 판매·마케팅 현장컨설팅 운영(연중)
- 소득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높은 시범사업은 정책사업으로 확산
  - 정책사업화 확대(중앙/지방) : ('15) 19종/82종 → ('16) 22/95

#### □ (농정협력)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기술적 지원체계 강화

- 개방화 대응 품목별 취약요인에 대한 현장기술지원(5분야, 20회)
  - \* 현안(병해충 등), 기초(6차, 농작업안전), 식량(쌀, 밭작물), 원예·축산(종합컨설팅)
- 관측정보 현장 확산 및 농업인 영농 의사결정 지원(무, 배추 등 35품목)
  - \* 농업기술지(32천부/월), 주간농사정보(54회/년), 영농교육, 기관 홈페이지 활용

#### □ (지역활성화) 친환경·곤충산업 등 신성장산업 현장 파급

- GAP 등 인증기준에 맞는 품목별 수출 규격화 단지 조성(48개소)
- 클로렐라 현장적용(엽채류, 과채 등) 및 곤충 사육기술 상용화
  - \*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원예단지 조성(16개소, 500ha), 곤충사육기술(3종, 18개소)

## 나 농업전문인력 양성

### ◇ 연구개발성과 현장 활용 및 농정시책 확산을 위한 교육

- 농업인대학교육의 농가소득 기여율: ('13) 30% → ('16) 32 → ('17) 34

#### □ (경영역량) 농업기술·경영·마케팅 등 전문역량 강화

- 지역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137개소, 13천명)
  - \* 교육과정 강화 : 품목기술+가공·경영·유통·코디네이터+자율학습
- 경영수준·성장단계별 품목별 전문기술교육(81만명)
  - e 러닝, SNS, 동영상 등을 활용한 영농시기별 품목교육(51만명)
  - 밭농업 기계화, 농기계안전, 임대사업 등 농기계교육(30만명)
- 영농계획 수립, 농정시책 등 새해농업인실용교육(1~2월, 30만명)
  - \* 중점교육 : 스마트팜, 가축방역, 농산물수급안정, 수출농업, FTA 대응 등

#### □ (자립역량) 품목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제고

-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규모화와 유통조직화 지원(2,627개, 156천명)
  - \* 콘텐츠 지원(34종), 현장 활용 컨설팅(4,500호)
- 귀농·귀촌인 등 신규농업인의 기초영농·현장실습교육(5천명)
-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한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구축(5개 유형)

#### □ (지도역량) 농촌진흥공무원 농업경영·유통마케팅 역량 강화

- 경영·마케팅 컨설팅 역량향상을 위한 콘텐츠 확산 및 교육 확대
  - \* 기본교육(2천명), 전문교육(550명), 심화교육(50명) 등 단계별 추진
- 현장적용 중심 경력단계별 교육 및 정책과정 연계(68과정 4,260명)
  - \* 6차·경영·유통·마케팅 교육 및 스마트팜, 축산분뇨냄새저감 등 정책연계

## 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 안전 농작업 환경조성 및 고령농 복지 지원 등 삶의 질 향상

-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증가율 : ('15) 26% → ('16) 28 → ('17) 30
- 농촌노인 생활만족도 향상 : ('13) 78.7% → ('16) 81 → ('17) 82

### □ (현황조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조사

- (복지분야) 주제별 농업인 복지실태(4,010가구 대상, 보건의료·사회안전망 분야) 및 농촌노인의 사회적 관계(300명) 조사
- (정착분야) 귀농·귀촌인 정착과정 추적조사(3년차, 814명)

### □ (농작업안전) 농작업상 질병 및 재해 예방관리 실천 지원

- (예방기술) 작목별·작업 단계별 위험요인 개선 시범(249개소) 추진 및 농작업별 안전관리 표준화 매뉴얼 보완(36품목)
- (교육·홍보) 시군센터 작목담당자 대상 농작업안전 사이버교육(2천명) 및 농업인 안전실천 캠페인 추진(질병관리본부 공동)
- (협업) 농업안전보건 중앙 DB센터 구축(↔ 농식품부), 농작업 재해현황 조사(↔ 통계청) 등 유관기관 협력 추진

### □ (노인복지) 농촌노인의 생산적 복지 확대 및 생활서비스 지원

- 실버농장, 공동선별, 간이가공 등 마을자원을 활용한 어르신 공동사업 추진(50개소 시범 추진 후 성과정립 및 사업모델 정립)
- 부녀회 등과 연계하는 농촌어르신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174마을)
- 유관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의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농촌 어르신 일자리 연중 발굴 및 정보 제공



## 라 재해·병해충 피해 최소화 지원

### ◇ 신속한 재해대응 및 협업을 통한 농업피해 최소화

- 병해충 피해 절감효과 : ('13) 80% → ('16) 85 → ('17) 85

### □ (조기경보) 기상재해 조기경보 기반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

- 농가 맞춤형 조기경보서비스 대상 확대
  - 대상작목 : ('15) 과수·식량작물 6종 → ('16) 채소 포함 10종
  - 대상지역 : ('15) 3개시군(1,000km<sup>2</sup>) → ('16)10(4,000)
- 농장단위 토양·기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10시군), 농촌 지역의 복잡지형에 대한 예보항목을 추가
  - \* ('15) 3항목(최고·최저기온, 강수량) → ('16) 5항목(일조시간, 풍속 추가)

### □ (재해대응) 사전대응 및 대응기술 현장 확산으로 피해 최소화

- 가뭄, 일조부족 등 주요 농업재해대응체계 구축(12개 유형)
  - 영농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해유형별 대응기술 리플릿 보급(10종)
- 생육조사와 병해충자료를 활용, 발생재해가 작물수급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강화(조사 시기 확대, 예측모델 활용 수급 전망 등)
- 영상회의, 밴드 등을 통해 신속한 정보 확산과 대응체계 현행화
  - \* 영상회의, 업무담당 밴드(24개), 자동기상관측장치(AWS) 현대화(7개소)

### □ (방제강화)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공동방제

- (사전예찰)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 활용 적기 방제 지원
  - \* 자료등록(17백만건), 무인포충망 활용 방제시기 실시간 제공(40개소), 예찰포(143개소)
- (공적방제) 화상병 방제매뉴얼 보급 및 금지병해충(5종) 예찰·방제
  - \* 화상병 : 개화 전 전국방제(31천ha), 예찰(4회), 보상기준 개정 등
- (협업방제) 농경지·산림 공동방제단 운영(50개소, 돌발해충 4종)

## 7. 동반성장 기술협력

### 가 도농 상생교류 다양화

- ◇ 가공·유통업체 연계, 국산원료 생산단지 및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 농가·기업의 상생협력 확대, 판매망 확보 지원, 도농 간 소통 확산

#### □ (원료구매협력) 가공업체가 농업인과 연계, 국산농산물 계약구매 확대

- 가공업체가 참여하는 국산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지원
  - (팥) 천안호두과자('15: 80ha → '16: 150), 안흥편빵 ('15: 40ha → '16: 60), 경주황남빵(150ha, 300톤 생산, 팥앙금 원료 전량 신제품 '아라리'로 교체)
  - (두유용 콩) '미소콩' 생산단지(괴산 아이쿱 생협 20ha, 영주 정식품 5ha)
  - (들깨) 들기름 가공업체 참여 '들샘' 생산단지(옥천식품 등 80ha)
  - (새싹보리) 녹즙용 가공제품 원료곡 생산단지('15: 10ha → '16: 60)
  - (수수) 원료 가공업체 참여 생산단지(25ha, 구례·단양·정선·제주)
    - \* 생산자(원료곡 생산) - 업체(계약수매, 제품화) / 농진청(종자·기술지원)
- 전국적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생산단지(농업인)-가공업체」 연계 시범사업 추진(44개소)

#### □ (유통협력) 농가와 유통기업 협력으로 농산물과 농식품의 판로 개척

- 국산품종 과수·채소 전용판매코너 설치 추진(이마트 협력)
- 유통업체와의 마케팅 제휴를 통한 온-오프라인 시장론칭 지원(4회)
  - \* 전자랜드, 농협 하나로마트·로컬푸드매장, 중기청 아임쇼핑과 협력

#### □ (소통확산) 농업의 가치 확산·업무협력을 위한 교육 및 소통 확대

- 단체급식·외식업체 대상 우리 농산물 우수성 교육 추진(7만명)
  - \* 식생활교육(4만명), 식농(食農)아카데미(1만명), 소비촉진리더 양성(2만명)
- 농업계·산업계·연구기관 간 소통 강화를 위한 농산업협의체 운영(5분야)

## 나 해외기술협력

### ◇ 개도국 기술지원 성과확산 및 선진국·국제기관 협력 강화

- KOPIA 시범마을 확대, 대륙별 협의체 사업 내실화, 국제농업 현안 대응

#### □ (개도국 지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확대 및 성과 제고

##### ○ (기술확산) KOPIA 농업기술 시범마을 조성 확대(3개국 → 5)

- (신규) 마을 단위의 실질적인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2개국)
  - \* 케냐(3마을 90농가) : 감자 생산성 25%, 소득 20% 증/ 육계 폐사율 감소로 소득 25% 증
  - \* 파라과이(4마을 200농가) : 우량참깨 3품종(K5,6,7) 재배기술 보급으로 1,200kg/ha 생산
- (계속) 농가수 확대 및 투입기술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3개국)
  - \* 캄보디아(육계 : 70농가, 32ha → 95, 33), 필리핀(벼 : 200농가, 240ha → 300, 400), 스리랑카(40농가, 500ha → 80, 1000)

##### ○ (센터운영) 신규 센터 개소 및 맞춤형 기술개발 강화(20개국 46과제)

- \* 신규 센터 및 주요사업 : 라오스(채소, 잠업 등), 짐바브웨(식량, 원예작물 등)

#### □ (대륙별 협의체) 권역별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간 기술 협력

##### ○ (아시아, AFACI) 기후변화 등 아시아 농업현안 해결 강화(9과제)

- \* 이동성 병해충 관리 등 협의체 사업 규모화 : ('15) 12과제 → ('16) 9 → ('17) 8

##### ○ (아프리카, KAFACI) 식량증산 및 기술보급 사업 중점(13과제)

- \* 아프리카 벼 연구소 등 국제기구와 공동 “아프리카 벼 개발” 신규 사업 추진(20국 참여)

##### ○ (중남미, KoLFACI) 물 관리 등 다자간 사업 지원 강화(3과제)

- \* 제2차 총회(11월, 엘살바도르) 및 현지 국제기구(열대농업연구센터)와의 공동훈련 등

#### □ (대외협력) 첨단기술 공동개발, 국제현안 대응 등 협력 강화

##### ○ (국제기관) 국제감자연구소·축산연구소 등 공동연구(8기관, 16과제)

##### ○ (기술강국) 미국(농식품 안전), 화란(동물복지) 등 첨단분야(9개국, 21과제)

##### ○ (남북협력) 북한 곡물생산량 추정 및 대북 기술지원 준비

## 다 기후변화 대응

### ◇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농업부문의 선제적 대응기술 개발

- 농업 온실가스감축목표 : ('14) 37천톤CO<sub>2</sub> → ('16) 855 → ('17) 1,012

### □ (온실가스) 신 기후체제하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이행평가 대응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고도화와 저탄소 농업정책 지원
  - \* '16년 농경지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국가 보고서 작성
- IPCC<sup>6)</sup> 신규 가이드라인 적용 대비 배출계수 신규 개발(2종)
- 농경지 탄소저장 기반기술 구축('14 : 발 → '16 : 과수원)

### □ (영향평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농업생태계 영향평가

- 물, 질소 등 농경지 물질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예측
  - \* ('15) 논 → ('16) 밭작물 → ('17) 과수원
- 주요 과수·채소 재배지변동 예측지도 제작:(~'15) 7작목 → ('16) 10

### □ (적응대책) 주요작물 피해 예측 기술개발 및 신소득 작물 도입

- 농장(필지) 단위의 토양·기후정보 통합정보시스템 기반구축
  - 농업기후지표 분석·개발(3종)과 재배적지 구분(과수 5종)
  - 재배적지 변동, 침수취약성, 가뭄위험 정보 등 시범제공(10개소)
- 이상기상 등에 따른 병해충의 국내 발생 가능성 평가 및 돌발·침입해충(풀무치,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특성과 방제적기 분석
- 기후변화 적응 논의 최적 작부체계, 채소·과수의 생육·수량 예측모형(배추, 양파, 고추 등 5종) 및 작물별 대응품종 개발
- 열대·아열대 신소득 유망작물의 도입 가능성 평가(50종) 및 재배기술 개발(13종)

6)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 **IV. 국민중심의 현장소통행정**

- 1. 찾아가는 영농현장지원**
- 2. 공유협력**
- 3. 정부3.0 성과확산**



# 1. 찾아가는 영농현장지원

- ◇ 농촌현장 직접방문과 현장애로 직접해결 등 현장공감 확대
  -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기술컨설팅과 봉사활동을 융합

## □ (현장지원) 마을과 농가단위 대상으로 기술컨설팅과 봉사활동을 연계하는 영농현장 기술지원단 상설 운영

- 식량(두메산골현장지원단)·원예(원예사랑방)·축산(축산현장종합컨설팅단) 등 분야별 영농현장지원단 운영(연중)
- 영농기술, 의료,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은 민간·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정착(4회)

## □ (기술민원) 현장기술민원 신속해결 및 반복 영농애로 해소

- 기술민원 발생 시 「369시스템」 7)에 따라 방문 처리(연 250건)
- 고질적인 영농애로 해소를 위한 행복농업 이동상담장터 운영(월2회)
- 작목별 생육·병해충·수확 등 영농시기별 기술정보 제공(26작목)
- 농식품 분야 밴드(40개)를 활용한 현장 애로상담 지원(농식품부 협업)
- ※ 민원사례집 「바로 처리한 농업궁금증」 발간 배포(2회)

## □ (취약층 지원) 안심영농 맞춤기술 지원 등 안정정착 실현

- (탈북귀농인) 1:1 멘토링 상담(월1회), 영농철 맞춤기술 컨설팅 및 시군센터 담당자 매칭 등(통일부 협업)
- (출소예정자) 농업분야 취·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법무부 협업)
- (초보귀농인) 3년 미만 귀농 대상자를 선정, 집중관리
  - 애로사항 해결방식의 맞춤형 현장컨설팅 및 사후관리 상담

7) 369시스템 : 3일 내 현장방문 → 6일 내 분석·검토 → 9일 내 결과를 통보하는 농촌진흥청 현장지원시스템



## 2. 공유협력

### ◇ 산·학·연, 지방농촌진흥기관 참여 농업 R&D 협력체계 강화

- 연구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전략 수립

### □ (중앙·지방) 중앙-지방 농업 R&D 협업체계 구축

-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산업포럼(가칭)」 구성
  - (목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포럼을 통한 지역 R&D 자문 기능
  - (구성) 정책부서, 농업인(시민)단체, 학계, 언론, 농촌진흥 전문가
  - (운영) 포럼 자료집 발간, 운영 중인 협의체와의 연계 강화
- 「작목별 중앙-지방 연구협의체」를 통한 역할 분담 내실화
  - 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수행, 연구정보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
- 농업 R&D 중앙-지방 통합기술로드맵 구축 및 사업연계 강화
  - 통합기술로드맵을 과제기획 및 사업지원 체계와의 연계 활용
-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농촌진흥사업 육성지원 법제화 추진
  - 지역 R&D지원·기술보급·교육훈련·교류협력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 법제화 실무 TF 운영('15.12~, 월 1회 정기협의회 개최), 정책용역('16.1~8.)

### □ (R&D 협업) 유관부처 및 산·학·연 농업 R&D 협력 강화

- 기관,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추진
  - (기관고유) 기관 내/기관 간 협업·실증연구 확대
    - \* 발농업 기계화 촉진, 기능성 소재 발굴 식품화, 가축분뇨 냄새 저감 등
  - (공동연구) 다부처·다기관 참여 융복합, 현장사업화 중점 추진
- 국가 농업 R&D 거버넌스 강화 및 협업전략 수립
  - (단기) 산·학·연 연구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협업과제 발굴 추진
  - (장기) 연구 분야별 중앙-지방, 산·학·연간 협업전략 수립

### 3. 정부3.0 성과확산

#### ◇ 정부3.0 성과홍보 및 변화관리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3.0」 선도

- 정부3.0 국민체감도 : ('14) 76.8점 → ('16) 80 → ('17) 82

#### □ (국민참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재설계 및 국민참여 확대

- 국민디자인단(액션러닝) 운영, 국민중심의 맞춤 서비스 설계 및 구현
  - \* 국민디자인 과제 수 : ('14) 10과제 → ('15) 10 → ('16) 10 (누적 30)
- 국민이 참여하는 콘텐츠 개발, 다양한 행사 추진
  - \* 정부3.0박람회, 국민디자인발표회, 축제형 경진대회, 이벤트 행사, 정부3.0day 등

#### □ (내재화) 정부3.0 성과 확산 맞춤형 교육 확대

- 핵심문제 해결, 협업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3.0 맞춤형교육 확대
  - \* 맞춤형교육 : ('15) 295명(5기) → ('16) 500명(10기), 사이버교육, 특강 등
- 정부3.0(청 사업) 우수성과 대외 발표 및 컨설팅단 상시 운영

#### □ (제안·제도개선) 제안제도 활성화 및 행정제도 개선 과제 발굴·육성

-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우수제안 발굴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 국민제안 공모전 홍보 강화 및 제안 활용성 제고 담당자 교육 실시
- 국민 실생활 중심의 현장애로·제도개선 과제 적극 발굴·육성
  - \* 과제공모(2~3월) → 과제 선정·육성(4~7월) → 행자부 제출(8월)

#### □ (성과확산) 정부3.0 성과의 통합 홍보 추진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 핵심성과 10대 과제를 선정,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과 확산
  - \* 홍보전략회의(매월), 우수사례 시상, 방송사(특집, 다큐, 광고), 중앙지 기획홍보 등
- 우수성과의 정부3.0 표출 홍보 추진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 정부3.0 과제(35개) 보도자료 4회 이상, 각종 행사, 전시회 반드시 정부3.0 문구 표출 유도



## 참 고 사 항

- ① 농촌진흥청 일반현황
- ② 2016년 주요정책 · 행사 캘린더
- ③ 2015년 외부기관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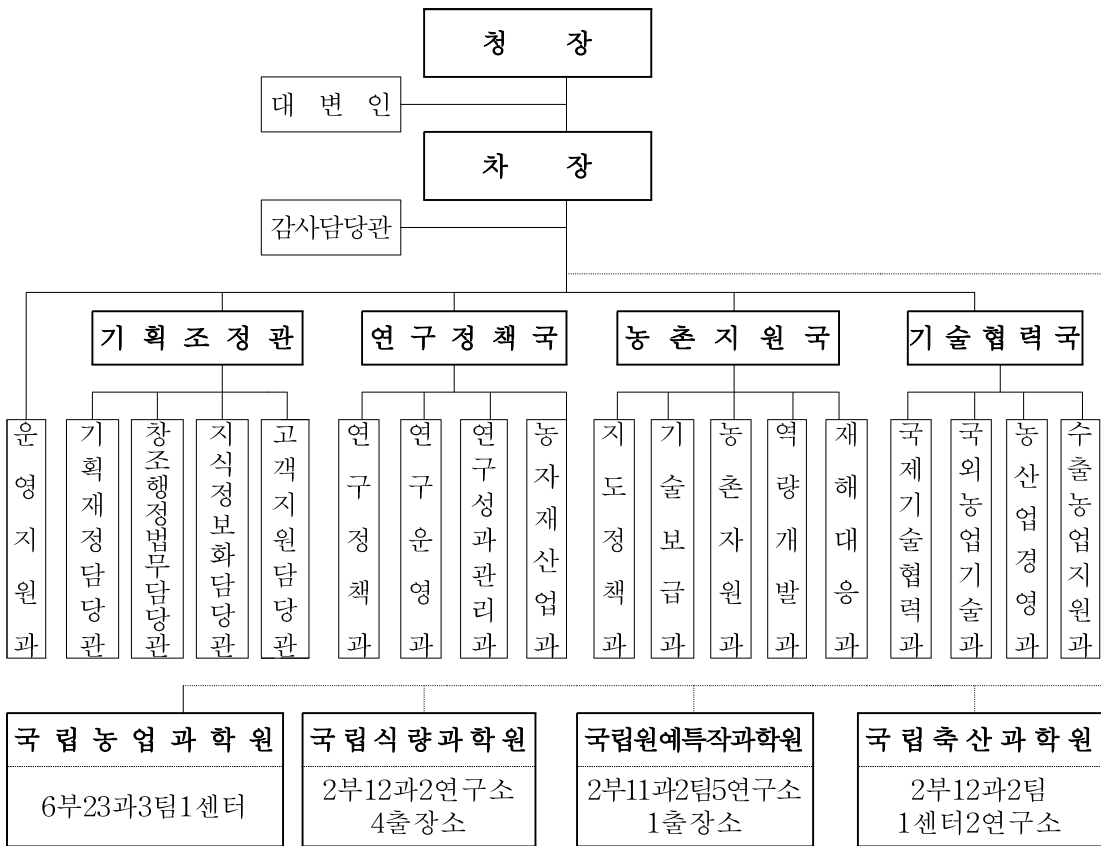


## 1 농촌진흥청 일반현황

### 가 연혁

1962. 4 농촌진흥청 발족 (2국 11기관)
1994. 12 농업기술연구소, 농업유전공학연구소, 농약연구소  
및 농림부의 농자재 품질관리기능을 통합,  
농업과학기술원 신설
1996. 2 한국농업전문학교 신설
1997. 1 도 농촌진흥원 및 시군농촌지도소 연구·지도직  
지방직화 (연구직 580명, 지도직 6,900명 지방직 전환)
2002. 3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신설
2007. 6 작물과학원에 인삼약초연구소 신설
2008. 10 품목·기능 중심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  
으로 조직개편 (9개 소속기관 → 5)
2009. 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
2009. 10 한국농업대학 농림수산식품부 이관 (→ 한국농수산대학)
2014. 7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전북혁신도시 이전
2015. 4 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전북혁신도시 이전

**나 조직** : 1관 3국 20과(담당관) 4연구기관



※ 지방농촌진흥기관 : 9개 도 농업기술원,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산하 공공기관(1개)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다 정원**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고위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행정직	농업· 전산 등
계	1,839	22	1,148	96	255	318
본청(1관 3국)	346	6	114	71	93	62
소속기관(4)	1,493	16	1,034	25	162	256

## 라 임 무

-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교육훈련 및 국제기술협력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
- 농업인 복지·농촌 활력 증진 등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

국·기관	정원	주요 임무
계	1,839	
<본 청>	346	
기획조정관	67	정책수립 조정, 미래전략, 예산, 정부3.0, 조직, 법령, 성과평가, 정보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총괄, 영농기술 상담 및 영농현장 지원
연구정책국	69	연구개발사업 기획·운영·성과관리, 농자재등록 및 품질관리
농촌지원국	83	기술보급, 농촌자원 개발, 농업인 교육, 재해대응
기술협력국	58	국제협력·해외농업기술개발, 농업경영기술개발, 수출지원
대변인	12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정책발표에 관한 브리핑 지원
감사담당관	14	공직기강, 농촌진흥청 및 산하단체 감사, 진정 비위 조사·처리
운영지원과	43	보안, 관인, 인사, 급여, 예산집행, 국유재산관리
<소속기관>	1,493	
국립농업과학원	504	농업환경, 농산물안전성, 농기계, 생물·식품자원, 생명공학, 유전자원 등에 관한 기초기반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국립식량과학원	343	식량작물 품종개량·재배법 개선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국립원예특작과학원	326	채소·과수·화훼, 인삼·약초·버섯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국립축산과학원	320	가축·가금, 축산물안전성, 축산시설·환경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마 2016 세출예산**

□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9,272억원으로 지방이전사업 완료에 따라 2015년 예산(12,386억원) 대비 3,114억원(△25.1%) 감액

※ 이전사업비 3,462억원 순감

○ 지방이전을 제외한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예산(8,924억원) 대비 348억원(3.9%) 증액

(단위 : 억원)

분야별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b>합 계</b> (지방이전 제외)	<b>12,386</b> (8,924)	<b>9,272</b> (9,272)	<b>△3,114</b> (348)	<b>△25.1</b> (3.9)	
기 능 별	◇ 사업비	7,347	7,617	270	3.7
	○ 연구개발	4,763	4,871	108	2.3
	○ 국제협력	195	203	8	4.1
	○ 기술보급	1,877	2,018	141	7.5
	○ 정보화	171	166	△5	△2.9
	○ 실용화재단이전	66	300	234	354.5
	○ 이주지원및관리	275	59	△216	△78.5
	◇ 지방이전	3,462	-	△3,462	순감
	◇ 인건비	1,375	1,448	73	5.3
◇ 기본경비	202	207	5	2.5	
회 계 별	일반회계	7,450	7,782	332	4.5
	농특회계	489	449	△40	△8.2
	지특회계	985	1,041	56	5.7
	혁특회계	3,462	-	△3,462	순감

## 분야별 사업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억원)

사 업 명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b>합 계</b>	<b>7,347</b>	<b>7,617</b>	<b>270</b>	<b>3.7</b>
1. 창조농업 지원 융복합 기술 개발	328	392	64	19.5
2. FTA 등 개방대응 경쟁력 향상 및 수출농업 지원	1,230	1,301	71	5.8
3. 식량작물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 농식품 공급	1,280	1,302	22	1.7
4.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 및 신성장 동력 창출	1,355	1,434	79	5.8
5. 연구단지 이전 및 지역농업연구 활성화	690	584	△106	△15.4
6.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	195	203	8	3.9
7. 개발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확산	1,023	1,044	21	2.1
8. 농촌 삶의 질 향상 등 농촌 활력화 지원	734	832	98	13.4
9.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171	166	△5	△2.9
10. 공공기관 지방이전(혁특 제외)	341	359	18	5.3

## 2

## 2015년 외부기관 평가결과

구 분	평가분야	수여기관	평가결과	비고
최우수 (7)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국무조정실	최상위기관	'15. 3.
	과학기술진흥유공	미래창조과학부	최우수 (대통령 표창2)	'15. 4.
	정부3.0 유공	행정자치부	최우수 (대통령표창)	'15. 5.
	지역발전사업 평가	지역발전위원회	최우수	'15. 8.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최우수 (대통령 표창)	'15. 9.
	새마을운동 유공	행정자치부	최우수 (대통령 표창)	'15.11.
	산업기술진흥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수 (대통령 표창)	'15.12.
우수 (17)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행정자치부	우수	'15. 4.
	과학기술진흥유공	미래창조과학부	우수 (총리2, 장관표창17)	'15. 4.
	정부3.0 평가	행정자치부	우수 (총리 표창)	'15. 5.
	발명의 날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우수 (장관2, 청장표창1)	'15. 5.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우수 (농수산 7)	'15. 7.
	지역발전사업 평가	지역발전위원회	우수	'15. 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미래창조과학부	우수 (장관표창 3)	'15. 9.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총리1, 장관표창8)	'15. 9.
	국가R&D사업 종료평가 (지역전략작목산학협력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우수	'15.10.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	여성가족부	우수 (장관표창)	'15.11.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 교육과정개발분야 평가	인사혁신처	우수 (처장표창)	'15.11.
	새마을운동 유공	행정자치부	우수 (장관표창)	'15.11.
	국가기록관리 평가	행정자치부	우수 (장관표창)	'15.12.
	NTIS 데이터 품질평가	미래창조과학부	우수 (장관표창)	'15.12.
	책임운영기관 정부3.0 평가	행정자치부	우수 (장관표창)	'15.12.
	종자생명산업시책 유공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장관표창 5)	'15.12.
	정책홍보 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총리표창1)	'15.12.

---

**임업인에게 희망을!**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행복을!**

---

2016. 1.

산 림 청



# 순서

I . 2015년 성과와 반성 .....	263
II . 2016년 정책추진 여건과 방향 .....	269
III . 2016년 주요 업무계획 .....	275
①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산림관리 .....	277
② 돈이 되는 미래성장산업화 .....	284
③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활성화 .....	293
④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구현 .....	304
⑤ 세계와 함께 가꾸는 산림 .....	312
⑥ 정책추진 기반확보 .....	319
IV . 주요 정책 현안 .....	323
1. 산림병해충 방제 .....	325
2. 봄철 산불방지 .....	328
<참고1> 2016년 입법 추진계획 .....	331
<참고2> 201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332
<참고3> 2016년 분기별 추진계획 .....	333
<참고4> 기관 일반현황 .....	335



## I . 2015년 성과와 반성

1. 주요 성과

2. 반 성





# 1. 주요 성과

## □ (산림산업) 친환경 산림산업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

### ○ 불합리한 제도 정비로 산림산업계 경영활동을 활성화

- **입목취득세 폐지**로 원목생산업계 조세부담 완화(행자부 협업)
  - \* 입목취득세 2→0% : 원목생산업자 1인당 연간 51만원 세금감면 효과
- **벌기령 완화**로 사유림 목재생산량 확대 및 산주소득 증대
  - \* 참나무류 50 → 25년 : 사유림 수확벌채 80% ↑, 산주소득 연 286억원 ↑
- **정책자금 용자 및 보험제도 개선**으로 임업인의 경영안정 유도
  - \* 용자 : 4개 사업 금리인하(0.5%p) 및 변동금리 적용 / 보험 : 농업인과 동일혜택 부여

### ○ 산업계 지원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산업을 육성

-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 현대화**로 국산제품의 품질향상 도모
  - \* 건조·방부설비 개선(30개소) : 원목대비 방부목재의 부가가치 4배 ↑ 효과
- **정원산업 제도화**로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 \* 「수목원·정원법」 개정('15.7) / 세계정원시장 규모 : 210조원(Market Line, '13)



□ (산림복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로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

○ 「산림복지법」\* 제정('15.3)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

\* 산림복지진흥원 설립, 전문업 등록제, 소외계층 산림복지 지원 등 규정

○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메르스 등 관광업계 불황에도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이 증가

\*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 : ('14) 2,999 → ('15p) 3,100만명 (약 100만명 ↑)

○ 도시녹화운동에 대한 시민·기업 등 민간 참여가 확대

\* 민간참여 : ('14) 298 → ('15) 487개소 (63% ↑, 예산절감효과 약 100억원)

☞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동아일보)에서 도시숲 정책이 정부정책 6위에 선정

□ (산림재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획기적으로 저감

○ 산불골든타임제 강화로 '2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 달성

\* 산불피해 : (10년 평균) 631ha → ('15) 418ha (34% ↓, 대형산불 제로화)

○ 선제적인 취약지역 관리로 '23년만에 산사태 없는 해' 달성

\* 산사태 피해 : (10년 평균) 393ha, 6명 사망 → ('15) 산사태 및 인명피해 '0'

\* 도로변 54개소 사방사업 추진(국토부 협업) → 2년 연속 도로변 산사태 '0'



\* 산림복지 수혜인구 : 자연휴양림·치유의숲·산림교육시설·수목원 이용객 수(연인원)

□ (해외협력) 남북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강화

- 북한의 요청에 따라 금강산 병해충 피해 긴급지원을 실시
  - \* 남북한 산림전문가 공동조사('15.7) 및 방제약제(1톤)·기자재(20대) 지원
- 양자협력 강화와 기업지원으로 해외조림 면적을 확대('15까지 39만ha)
- AFoCO\* 설립협정문 채택('15.9)으로 AFoCO 설립을 가시화
  - \* AFoCO(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아시아산림협력기구)
  - \* 차관·국무회의-대통령재가('15.11.25) 완료 및 국회 비준절차 추진중
- 세계산불총회\*, 세계대나무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 \* 72개국 4,617명 참석, 산불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평창 선언' 채택
  - \*\* 104만명 참석, 대나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규제개혁 등) 불합리한 규제와 비정상적인 적폐를 해소

- 임산물재배시 복구비 예치 및 감리 면제, 국유림대부료 부담 완화 등 농림축산업의 경영활동 저해 요인을 해소
-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 산단 내 요존국유림 편입면적 확대 (4→8ha) 등으로 적극적인 산지투자 확대를 유도
- 일본·중국식물로 오해받는 우리 식물(2,645종)의 영문명을 변경·홍보
  - \* 사례 : (소나무) Japanese red pine → Korean red pine (광복70주년 기념사업)



## 2. 반 성

###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재선충병 신규피해 지역 발생

- 전국 840개 방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로 피해지역의 방제품질은 향상되었으나, 신규 피해지역\*\*이 확산

\* 정부·시민단체 합동점검(1,697회), 항공·지상방제 확대(8→12만ha) 등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자체 : ('14) 74개 → ('15) 85개 시·군·구

- ☞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설립으로 예찰·예방을 강화하고, QR코드 이력관리제 도입 등 인위적 확산방지에 노력중

### □ (목재제품) 목재제품 품질관리 미흡(감사원·국정감사 지적)

- 「목재법」 시행('13.5) 초기임을 감안하여 산업계 계도·홍보에 중점을 두어 현장의 관리·단속은 상대적으로 미흡\*

\*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품목(8개) 중 방부목재·목재펠릿 등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집중 단속을 실시

- ☞ 전문가 합동 단속반 구성 등 품질관리·단속 확대 추진중

### □ (수출입업) 임산물의 대외 수출 실적이 저하

- 수출대상국의 경제성장 둔화, 환율변동 등으로 수출액 감소

\* 임산물 수출실적 : ('14) 3억 6천7백만\$ → ('15p) 2억 7천만\$ (26%↓)

- ☞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수출입업을 강화할 필요

## Ⅱ. 2016년 정책 추진여건과 방향

1. 정책 추진여건

2.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



## 1. 정책추진 여건

### □ (정부) 현 정부 4년차이자, 제20대 총선이 치러지는 해

○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국민복지 증진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각종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부 3.0, 정상화, 협업, 경제혁신, 4대부문 구조개혁 등

### □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타결로 기후변화가 핵심이슈로 부각

○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향후 산림 노령화에 따른 탄소흡수량 저하 문제가 대두

☞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을 위한 전략적인 산림관리로 국가 저감목표 달성과 국내 산업계 부담 완화에 기여 가능

\* 국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12): 연 5천5백만톤(국가 배출량(6.9억톤)의 8%)

\*\* 파리협정(제5조) : 온실가스 흡수·저장원의 기능 증진을 위한 이행을 촉구

### □ (FTA)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

○ 국내 산림산업은 저급 목재제품 생산, 단순재배형 1차산업 위주로 저가형 중국제품 대량유입에 취약한 구조

☞ 고품질·고부가 제품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중국·할랄시장을 겨냥한 수출입업 활성화가 필요



□ (융복합) 산업·기술분야간 융복합이 중요한 트렌드로 발돋움

○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복잡·다양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융복합이 필수적으로 요구

☞ 산림산업과 ICT·BT, 의료기술 등의 융복합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산림관리·산림복지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

□ (일자리) 청년·노년층의 일자리 부족이 경제 활성화를 저해

○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 돌입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고용절벽에 부딪힌 청년·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

\* 고용률('14) : (청년) 41%, (30~50대) 74~79%, (60대 이상) 39%

☞ 산림산업 부문에서 장·단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필요

□ (사회문제) 인구고령화,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인구고령화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미래세대 부양부담 증가와 학교폭력·교실 스트레스 등 청소년 행복 저하 문제가 심화

\* '14년 기준 OECD 국가 중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고령화 속도 1위

☞ 헬스케어 3.0\*에 맞춘 산림치유 활성화로 국민건강 증진·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등과 연계한 산림교육 확대를 청소년 정서함양에 기여할 필요

\* 헬스케어 3.0 : 평소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예방 및 건강수명 증진

## □ (재해) 기후적·인위적 요인으로 산림재해 발생 우려가 증가

- 봄철 건조한 날씨, 이상기후 증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 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대

\* '15년 산불 피해(418ha)는 대부분 봄철에 집중 발생(375ha, 90%)

\* 연평균 산사태 면적 : ('80년대) 231 → ('90년대) 349 → ('00년대) 713ha

- ☞ 산림재해의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적인 재해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필요

## □ (남북협력) 북한 황폐지 복구 관련 협력사업 재개가 예상

- 남북 산림협력이 한반도 신뢰구축을 위한 우선사업으로 부각

\* 남한 : 복합농촌단지(드레스덴 선언), 산림공동관리(8.15 경축사), 종자교류(통준위)

\* 북한 : 산림황폐화·관리부실 인정, 산림복구전투(대대적 조림) 추진, 우리 측에 금강산 병해충 방제지원 요청, 남-북 산림전문가 공동학술연구 추진 등

- ☞ 남북협력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준비태세 확보가 필요

## □ (해외협력) 녹화 성공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역할이 증대

- 산림복구 경험·기술의 공유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

- ☞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게 산림분야 ODA 규모를 확대하고, 국제 산림협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확산할 필요

\* 산림분야 ODA 예산('15) : 112억원 (우리나라 전체 ODA 예산의 1% 미만)

## 2.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

### 비 전

임업인에게 **희망**을!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행복**을!

### 목 표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

#### 5대 전략과제

①	<b>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산림관리</b> [국정과제 12-4, 92-1·3]
②	<b>돈이 되는 미래성장산업화</b> [국정과제 12-4]
③	<b>국민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활성화</b> [국정과제 12-4, 111-1]
④	<b>건강하고 안전한 산림구현</b> [국정과제 86-5, 111-1]
⑤	<b>세계와 함께 가꾸는 산림</b> [국정과제 126-3·5]

#### 15대 정책과제

1.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산림경영 기반 만들기
2. 국내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줄이기
3. 해외·북한 산림에서 탄소배출권 확보하기
4.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산림산업 만들기
5. 미래사회를 위한 산림산업 만들기
6. 희망찬 산림일자리 갖기
7. 숲을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8. 숲에서 몸과 마음 힐링하기
9.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녹색공간 만들기
10. 건강한 산림생태계 만들기
11. 대형 산불발생 막기
12. 산사태 없는 안전한 산림 만들기
13. 세계 산림자원 확보하기
14. 지구촌 산림자원 함께 가꾸기
15. 산림을 디딤돌로 통일에 다가서기

#### 정책추진 기반확보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협업, 정부3.0, 4대 부문 구조개혁

### Ⅲ. 2016년 주요 업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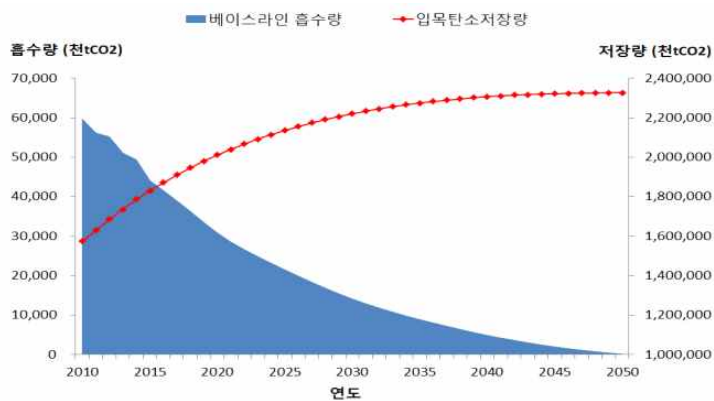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의 기여 방안

△ 산림의 노령화로 인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급속히 감소할 전망

\*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 ('12) 5천5백만tCO<sub>2</sub> → ('50) 10만tCO<sub>2</sub>

→ 산림의 영급구조 개선, 벌채·조림(수종갱신) 확대 등을 통해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유지·증진하여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필요



<국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예측>

△ 해외·북한 조림사업, REDD+\*사업 등의 단계적인 확대로 국가 탄소배출권 확보에 기여 및 녹화 선진국의 위상 강화

\* REDD+ : 개도국의 산림전용·항폐화 방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

## 전략과제 성과목표

△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시나리오 분석 ☞ 흡수량 최대화 방안 도출

△ 중장기 산림관리 마스터플랜 마련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연구 ☞ 해외·북한 산림 탄소배출권사업 강화

# 1.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산림경영 기반 만들기

△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장려하는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산업부문의 감축부담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①

## 「2030 산림탄소경영전략」 수립

□ (계획) 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행을 위한 「2030 산림탄소경영전략(2016~2030)」 수립('16.3)

○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 최적화를 위한 영급 구조 개선, 목재제품 이용 등 산림자원의 선순환 관리·이용체계 강화

☞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추가

\* 파리협정 5조에서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저장원을 보전·증진 활동 촉구

○ 해외조림 중·장기 계획 및 남북 산림협력 계획에 산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협력 추진 방안을 포함

□ (협상) 파리 협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내외 협상에 적극 대응

○ 향후 협상 의제별(산림분야 국가감축 기여,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규칙, 탄소시장 메커니즘 등) 민·관·학 협의체를 활용

☞ 산림상쇄 목표 달성을 위한 유리한 출발지점을 확보

□ (R&D)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부문별 연구·개발을 강화

○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 시나리오 분석 및 해외·북한 산림 협력 사업\*의 국제 탄소시장 적용 방안 등 연구 추진

☞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 최대화를 위한 시나리오·산림관리 정책대안 및 국가 간 협력 추진 방안 마련

\* REDD+ 사업, 해외 사막화방지·조림사업, 북한 산림복구사업 등

○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공유 통합 관리

☞ 적응력 강화로 산림 건강성·저항성 증진과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기술공유·교육 체계화

□ (특별작업단) 신기후체제 대응 산림분야 특별작업단 구성

○ 신기후체제의 산림탄소 감축, 산림생태계 적응, 기술 공유 등 산림분야 대응력 강화를 위한 특별작업단\* 구성·운영

☞ 산림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연구·정책·예산의 효율적 수립·이행 기반 마련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분야 외부 전문가 합동 구성

\*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마련, 산악기상 관측, 생태계 적응 모니터링, 외부자원 활용방안 마련, 기술교육 등 전담



## 2. 국내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줄이기

### ① 산림 탄소흡수량 효과적 관리·활용

#### □ (산림구조) 산림의 탄소흡수량 최대화를 위한 구조개선

##### ○ 목재생산 최적지\*를 대상으로 경제림 단지를 재구획

###### ☞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집약경영의 대상 명확화

\* 공익임지·준보전산지·개발예정지 등 제외 : (현재) 292만 → (재구획) 약 200만ha

##### ○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벌채·조림 및 산림 SOC를 확대\*

###### ☞ 영급구조\*\* 개선으로 지속적인 산림의 탄소흡수량 유지·관리

\* '스마트 양묘시스템' 확산(7개소) : 생육환경 자동조절시스템, 시설온실 등  
→ 묘목 생산성 제고(5배), 생산기간·비용 절감(50%↓)

\* 원목생산 : ('15) 534만 m<sup>3</sup> (자급률 17%) → ('17) 650만 m<sup>3</sup> (21%)

\* 나무심기 : 온실가스 흡수능력, 목재가치를 고려한 수종 선택(낙엽송·참나무류 등)

\* 임도시설 : ('16) 전국 임도밀도 3.2m/ha, 경제림 단지 임도밀도 3.8m/ha

\*\* 국내 산림의 영급구조 편중(3·4영급 60%) : 지속가능한 탄소흡수 저해

#### □ (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의 시장가치화

#####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공공·민간 참여 지원 및 거래 활성화 추진

###### ☞ 산림탄소흡수량 확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유도

\* 산림탄소상쇄제도 : 탄소흡수원 증진활동(신규/재조림, 산림경영, 목재제품·바이오매스 이용)으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

②

## 목재이용 확대 및 정책 이행역량 강화

- △ 목재는 생산·이용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탄소를 장기간 고정  
(목재가공 시 온실가스 배출량 : 철강의 1/350, 알루미늄의 1/1,500 수준)
- △ 목재 바이오매스에너지 사용 시 목재 1m<sup>3</sup>은 원유 0.2톤(0.6 CO<sub>2</sub>톤 배출) 대체
- △ 제17차 기후변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자국산 목재로 만든 목재제품  
(HWP : Harvested Wood Product) 이용이 국가 탄소계정에 포함

### □ (목재) 목재생산·이용 확대로 신기후체제에 대비

#### ○ 국산목재 우선구매제 활성화\*로 목재이용 문화를 선도

\* 「목재법」 제19조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국산목재를 우선 구매 허용

#### ○ ‘목재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국산목재의 지역 내 소비 유도

\* 지역 내에서 원목생산 - 제품가공 - 소비 및 재투자까지 순환되는 체계

####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확대 및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연계 강화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대수 : 주택용 3,000대, 사회복지용 100대, 산업용 7대

\* 목재펠릿 공급량 : ('15) 8.2 → ('16) 9.4 → ('20) 41만톤(원유 1백만배럴/년 대체)

☞ 국산목재 이용 촉진,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량 증대

### □ (역량) 산림탄소 흡수·HWP 이용 정책의 제반역량을 강화

#### ○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운영 및 목재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 산림탄소전문가 양성, HWP 이용량의 탄소계정 반영 기반 마련

### 3. 해외·북한 산림에서 탄소배출권 확보하기

△ 파리협정 5조에서 개도국의 산림황폐화방지(REDD+) 활동 이행을 촉구

#### ① 해외 산림분야의 탄소흡수 협력 강화

##### □ (REDD+) 현행 REDD+ 사업의 탄소배출권 사업화를 추진

- 양자협력 4개국\*에 실행 중인 프로젝트 단위의 산림황폐화 방지(REDD+) 사업을 지역·국가단위 사업으로 확대\*\*

\* REDD+ 사업을 시행중인 양자협력 4개국 : 인니,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프로젝트 단위의 REDD+ 사업은 주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국가 단위 추진 시에만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인정

- REDD+ 사업을 국제 탄소시장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 파리협정에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탄소시장 이외에도 양자 협력국 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될 다양한 형태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

##### □ (국제기구) 탄소배출권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GCF, GGGI\*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자금 활용 추진

☞ 개도국과 상호이익에 기반한 협력 증진 및 사업규모 확대

\* GCF : Green Climate Fund(녹색기후기금, '13년 설립)

\* 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글로벌녹색성장기구, '12년 설립)

②

## 남북 산림·기후변화 협력 확대

△ 북한은 파리 총회 당시 산림황폐지 복구로 기후변화에 기여할 것을 천명

### □ (정책기반)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을 연계

#### ○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협력방안을 ‘북한 산림복구 기본계획’에 반영

##### ☞ 북한의 산림 건강성 증진 및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 \* 북한의 산림복구 계획·관리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고위급 발언 등을 토대로 볼 때, 산림사업의 추진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
- \* 기존 산림복구 협력 중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연계한 협력으로 확대

#### ○ 산림협력 시범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단계별 추진방안 수립

- \* 복구사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지는 남한의 산림과 유사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벤토리 관리 협력

### □ (인프라) 남북 협력 산림복구 준비 및 국제기구 활용

#### ○ 종자 공급원·저장시설 조성 및 국제·민간기구 협력 추진

##### ☞ 산림종자 추가 지원 및 남북협력에 필요한 대외자금 확보

- \* 대북지원 전용 양묘장 조성(16 본공사 착수) 및 종자 채취(연간 5톤)
- \* 북한의 산림복구에 유엔기후협약 하의 기금인 GCF, GEF(국제환경기금) 등의 활용 가능성 검토 및 협력 방안 마련

## 전략과제 성과목표

- △ 목재·청정임산물 부가가치 제고 ⇨ ‘산림산업 GDP 2조원’ 증대
- △ FTA대응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 ‘임산물 수출 5천만\$’ 증대
- △ 산림일자리 대책 성과제고 ⇨ ‘청년, Active Senior 등의 일자리 2천개’ 창출



## 1.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산림산업 만들기

## ①

## ‘생산지 ~ 식탁까지’ 산업활동 지원·육성

△ FTA시대의 중국산 수입증가에 대비한 국산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 시급

\* 對중국 임산물 수입액 : 17억 4천만\$ ← 수출액(6천만\$)의 28.4배('14)

□ (산업) 국내 산림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

○ 임산물 생산기반을 규모·집약화\*하고, 친환경 재배를 강화\*\*

⇨ 규모의 경제 확대 및 국산 임산물의 청정이미지 제고

\* 임산물 산지별 작물생산단지·복합경영단지 확대 : 72개소(176억원)

\*\* 친환경 방제비,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임업인 지원 : 132억원

○ ‘목재 KS 표준’(430개 품목, '15.7월 산업부에서 이관)을 전면  
제정비하고, 품질검사·표시의 ‘자기 적합성 선언제도’\*를 도입

☞ 업계의 자발적인 품질관리 유도를 통해 시장여건에 맞는  
목재제품 품질관리 기반 마련 및 소비자 알권리 신장

\* 생산자가 직접 품질을 검사·표시(검사기관 의뢰에 따른 기간·비용부담 완화)

○ 낙후된 국내 목재·청정임산물의 유통구조를 현대화\*

☞ 국내산 임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 증진  
및 생산·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구매편의성 제고

- \* 산지종합유통센터 확대(96→130개소) : 임산물 주산지별 유통의 중심지
- \* ‘임산물종합정보센터’ 개원(여주) : 임산물 전시·홍보, 먹거리·레시피 개발 등
- \*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개선 : 국내 임산물의 유통정보 실시간 제공
- \* 대형유통망을 통한 임산물 판로 확대(하나로마트·아마켓(농협), aT 거래소 등)

○ 산양삼 품질·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확대

☞ 국산 산양삼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 품질기준강화(DDT 0.01→0.001mg/kg 이하), 불법유통 산양삼 신고소 개설 등

\*\* 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15.11개관) 운영 : 산양삼 전시·홍보·교육 전담

○ 임산물 소득자원 신제품종과 재배기술 개발·보급을 확대

☞ 국산 임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 및 산주소득 증대

\* 유실수 품종 육성, 특용수·밀원수 품종 개발, 산채·산약초 재배기술 개발

\* 밤나무 ‘대광’, 표고 ‘백화향’, 헛개나무 ‘풍성1호’ 등 우수품종에 대한  
경영임가 보급·확대('15년 55품종 → '16년 60품종)

○ 국산 임산물의 소비처를 개발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

☞ 공공·민간 부문이 함께하는 국산 임산물 이용 활성화

- \* 농협 학교급식 내 지역 청정 임산물 식재료 활용 및 공동마케팅 추진
- \* I LOVE WOOD 캠페인 : 목재이용의 효과 홍보 및 체험·재능기부형 이벤트 실시

□ (경영지원) 임업인 교육·재해관리 강화로 경영활동을 지원

○ 임업인을 위한 임산물 재배·경영 교육·컨설팅을 강화

☞ 품목별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

- \* 지역별 임업인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 지역대학·민간교육기관 등 대상 공모
- \*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의 복무·평가·교육 규정 제정 : 경영지도의 전문성 제고

○ 자연재난 복구비용 단가인상 및 신속한 재해피해 복구지원

☞ 실효성 있는 자연재해 대응으로 임업인의 경영안정성 제고

- \* 단가인상(머루, 다래, 산양삼 등 13개 품목), 재해복구비(20억원)

○ 임업보험 제도·상품 개선, 홍보·교육 강화를 통한 운영 내실화

☞ 피해 후 조속한 임업경영 복귀 및 신체상해 보장성 제고

- \* 임산물 : 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 등 5개 품목 운영 및 오미자 시범사업
- \* 임업인 :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 농업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혜택 제공

②

## 6차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단순재배형 임업의 6차산업화로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임가소득('14) : 31,058천원(농가대비 88.9%, 어가대비 75.7%)

### □ (2차산업) 규모화·현대화된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 영세·노후화된 목재산업계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청정 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가공사업 활성화\*\*를 지원

\* 목재생산시설 현대화(제재·건조·방부시설 51개소),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2개소)

\*\* 청정임산물 기능성·식품 소재화 R&D 추진(밤만쥬, 감식초 등 브랜드화)

### □ (6차산업) 임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청정임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6차산업 단지화'\*를 추진

☞ 생산·가공·체험 등 클러스터화로 산업영역 확장 및 부가가치 창출

\* 6차산업화단지 운영 모니터링·평가(2개소) : 뽕은감(청도), 대추(군위)

\* 6차산업화단지 확대(7개소) : 지리산 향노화산업(함양), 밤(공주)·대추(보은) 등

○ 산림·문화자원과 연계한 지역특화 6차산업화 방안을 추진

☞ 임산물 생산지와 산림·휴양시설·지역명소 등을 연계\*하고, '꾸러미 관광상품'\*\* 등을 통해 방문 유도(지자체·여행사 협업)

\* 장성 치유의 숲(연 21만명), 인제 자작나무숲(가공시설·숲교육 접목, 연 11만명)

\*\* 백제도읍 관광지와 연계한 밤 재배·수확 체험의 패키지 여행 시범사업 실시(공주)



③

## 수출임업 육성

△ 대규모 임산물 수출이 가능한 중국·할랄 등 거대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필요

\* 농식품시장 규모 : 중국 1.2조\$, 할랄시장 1.3조\$ (전세계 농식품시장의 35%)

### □ (수출경쟁력)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수출 여건을 개선

○ 주산지별로 수출특화지역\*을 육성하여 임산물 수출 거점화

☞ 수출용 장비 공동이용 등으로 투자비용 절감 및 규모화

\* 수출특화지역 : '16년 영동(표고), 부여(밤) 2개소 추가 육성(총 5개 지역)

○ 수출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수출확대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

☞ 수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수출대상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 글로벌 GAP·할랄인증 등 해외인증 및 잔류농약·위생검사 지원 등(8억원)

### □ (시장개척)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유망품목 마케팅을 강화

○ 신시장을 개척하고, 비교우위 수출유망품목을 집중 지원

☞ 중국, 할랄시장에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추진

\* 유망시장 정보조사·제공 : 중국(조경수·분재), 할랄시장(식품·포장디자인)

\* 해외시장개척단 운영(10회), 중국·할랄시장 내 안테나숍 운영(2개소)

\* 시험수출 지원, 홍보관 운영, K-Food Fair 등 박람회 참여(농식품부 협업)

\* 유망품목 발굴(산양삼·대추 등) 및 패키지형 지원(제품개발-해외진출-정착)

## 2. 미래사회를 위한 산림산업 만들기

①

### 첨단 산림산업 육성

△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생명산업 육성 필요

\* 세계 생명산업 시장규모 : ('15) 352조원(美 Global Industry Analysts 추정)

△ 급증하는 산림복지수요를 산업화로 연계하여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필요

#### □ (생명산업) 생명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소재산업화 추진

○ 산림약용자원연구소('16.5설립)를 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연구·산업화 기반시설과 통합 라이브러리를 단계적으로 구축

☞ 생명산업 연구 활성화와 원재료 공급을 위한 플랫폼 창출

\* 시설 : 상설재배시험지(양구·수원·충주) 운영, 식물정유은행 설치(향료자원 조사), 산양삼 종자공급단지 조성('18까지 50ha, '22까지 총 수요량의 50% 공급)

\* R&D : 융·복합기반 첨단기술 및 신산업·신시장 창출 기술개발(30억원)

→ ('17) CR단지(Creative Resources, 종자공급원) 조성, 대한민국 물질지도 제작

#### □ (힐링산업) 정부주도형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산업화 추진

○ 민간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델개발 연구\*\*를 추진

☞ 다양한 힐링산업화 모델창출 및 민간투자 의욕 고취

\* 전문업 등록제 도입·프로그램 유료화, 사유 휴양림 산지전용신고 의제 등

\*\* ICT 융복합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 개방형 산림치유환경 정보시스템 개발 등

○ 산림치유·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힐링산업화 시범사업\*을 실시

☞ 힐링산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치유의숲 프로그램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 등

②

## 미래 삶터, 산촌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산림산업

△ 귀농·귀촌 증가와 연계하여 산림산업을 통해 산촌경제의 활력제고 필요

\* 귀농·귀촌 세대원(누계) : ('12) 47,322 → ('13) 56,207 → ('14) 80,855명

### □ (산촌경제) '주민주도형 산촌경제 활성화'를 추진

#### ○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중·장기 산촌정책을 재설계

\* '전국산촌기초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18~'27) 수립

#### ○ 산촌생태마을협의회 주관 하에 '주민현장학교'\*를 지원(8개소)

☞ 산촌 활성화를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강화

\* 마을리더 육성, 마을사업 개발, 주민 갈등관리, 마을간 정보공유의 장으로 육성

#### ○ 산촌마을별 6차산업화 계획을 컨설팅하고, 차등지원\*을 실시

☞ 산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구적 노력·분위기 유도

\* 계획 평가 → 등급 구분(4단계) → 지원규모 차별화(총 20개 마을)

### □ (귀산촌) 귀산촌인을 산촌경제를 주도할 임업인으로 육성

#### ○ 귀산촌인·희망자를 대상으로 '산촌미리살아보기 캠프'\* 운영

☞ 귀산촌 관심 제고 및 조기·안정적인 산촌 정착 유도

\* 단순체험에서 임산물 재배실무·6차산업화까지 단계별 교육(1일~2주일이상)

#### ○ 농식품부 협업을 통해 귀농-귀산촌 정책의 시너지 창출

\* 산촌캠프 이수시, '귀농창업·주택구입' 지원 조건(귀농교육 100시간) 인정

\* 임업진흥원 '콜센터' - 농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 인력·정보교류 실시

### 3. 희망찬 산림일자리 갖기

△ 청년·노년층의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산림분야의 일자리 창출 필요

- \* 고용률('14,%) : (청년) 41%, (30~50대) 74~79%, (60대 이상) 39%
- \* 향후 10년간 임업의 고용성장률은 4.8%로 전체 평균의 약 5배('12, 고용부)

①

#### 친환경 청년직업, 'Young Forester' 육성

□ (인력양성) 취업률 100%의 젊은 산림현장 인력을 양성

○ 'Young Forester' 육성의 요람, 산림 특성화고\*를 지원\*\*

☞ 졸업생들의 수목원, 산림사업 현장 등 산림일자리 진출 유도

\*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등 2개교

\*\* 현장 실무형 교과과정 개편,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기계장비 무상임대 등

○ 인턴-기업간 자율매칭방식으로 젊은 해외산림인턴\*을 파견

☞ 중·장기적으로 국제산림분야를 이끌어갈 특화인력 양성

\* FAO, ITTO, 몽골사업단 등 국제기구 및 협력사업, 해외산림개발 사업체 파견

□ (일자리창출) 사회적 수요에 맞는 산림일 자리를 창출

○ 기후변화·정원산업 등에 대비한 전문가 제도 도입을 추진

☞ 산림탄소관리사, 나무의사 등 새로운 유망 전문직 창출

\*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개정추진 중

②

## ‘Active Senior’를 위한 산림 일자리 창출

### □ (자격취득) 취미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시니어 일터를 제공

- 생활 속 목공예에 전문성을 부여한 목공지도사를 양성하고, 권역별 목재문화 체험시설·프로그램\*을 운영

☞ DIY 수요를 일자리로 연계 및 국산목재 이용 촉진

\* 목재문화체험장(시설) : 15개소 / 목재체험교실(프로그램) : 20개소

- 산림교육전문가\*의 활동영역을 유관분야\*\*로 연계·확대

☞ 증가하는 복지수요 충족 및 산림복지전문가 일자리 안정화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 취득자(8,530명)

\*\* 자유학기제(교육부), 방과후학교(여성가족부), 보호관찰청소년(법무부) 등

### □ (일자리) 장년층에 적합한 공공·민간·사회적 일자리를 확대

- 장년적합업종(고용부 선정, '15)인 산림재정사업\* 일자리를 지속운영

☞ 취업취약계층의 민간 일자리 이동을 위한 디딤돌 기능 수행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 등

- 산주·산림일자리 희망자를 산림경영인·임업기능인으로 양성

\* 전문임업인(산림경영인) 확대(7,900 → 8,400명), 임업기능인 교육·훈련(1만명)

- ‘시니어 고용·창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국임업진흥원 활용)

\* 시니어 대상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일자리 매칭 및 창업 지원 등

## 전략과제 성과목표

- △ 인프라·프로그램 강화 ☞ ‘산림복지 서비스 수혜인원 200만명’ 확대
- △ 산림복지바우처 도입 등 ☞ ‘소외계층 1만명 무료서비스 혜택’ 제공
- △ 도시녹화운동 확대 등 ☞ ‘1인당 생활권 도시숲 증가율 2배(0.28m<sup>2</sup>/년)’ 확대



## 1. 숲을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 국내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 OECD 국가 중 최하위(’10~’14)

①

## 유아의 감성을 터치하는 숲체험

□ (숲태교) 태아와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증진

○ 치유의 숲, 도시근교 산림을 활용한 숲태교 프로그램\* 확대

☞ 건강한 출산을 위한 신세대 주부들의 수요를 충족

\* 숲태교 수혜 인원 : (’15) 1,030명 → (’16) 1,500명

\* 숲태교 프로그램 참여자는 무력감, 불안감, 공격성 등 정신적 지표와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코티졸, cortisol) 농도가 의미 있게 감소(인제대 백병원)

□ (유아숲체험) 유아들의 전문적인 산림체험 기회를 확대

○ 유아숲체험원을 확충(35→43개소)하고, 민간위탁운영\*을 추진

☞ 유아의 창의성·오감발달 및 새로운 민간 산업화 유도

\* 산림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사회적기업 등 활용(4개소)

○ 유아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산

☞ 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유아숲체험의 효과성·신뢰도 제고

\* 유아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매뉴얼 보급('16.1) 및 정기점검 시행(분기별)

\*\* 교육인증 프로그램(50개) 공유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운영 유도

□ (교육전문가) 산림교육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 산림교육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등급제\*\* 도입방안을 연구

☞ 전문성·자질 향상을 통한 산림교육서비스 품질제고

\* 숲해설가 6,834명, 유아숲지도사 936명, 숲길체험지도사 760명 등

\*\* 단일 등급 → 1·2·3급 : 산림교육전문가 전문성 제고 및 능력별 업무 세분화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유아숲체험원

②

## 청소년 행복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산림교육

### □ (협업교육) 청소년 대상별로 차별화된 숲교육을 실시

○ (교육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교실 스트레스 해소, 진로 탐색 및 인성함양 효과 창출

\* '식물학자 되어보기' 등 호기심을 유발하는 직업체험 기회제공(300개교, 3만명)

\*\*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 기본계획' 내에 산림교육이 포함

○ (법무부) 학교폭력 등에 관련된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산림교육\*

☞ 취약계층 교육·힐링 기회 제공 및 건전한 사회복귀 유도

\* 수혜인원 : ('15) 582명 → ('16) 1,200명, 중·장기 프로그램화로 교육효과 제고

### □ (인프라) 산림교육센터를 산림교육의 구심점으로 활용

○ 권역별 센터 확충(4→8개소)\* 및 지도자 양성·정책 개발 등 전담

\* 조성 완료 4개소(횡성·태안·부산·장성), 조성 중 4개소(양평·청주·완주·청도)



식물학자 되어보기(자유학기제)



보호관찰청소년 숲교육



## 2. 숲에서 몸과 마음 힐링하기

△ 산림휴양·치유 등 산림복지 수요 급증 : ('13) 2,761 → ('14) 2,999 → ('15p) 3,100만명

①

### 체계적인 산림복지 구현, '산림복지진흥법'

#### □ (복지법) 새로운 「산림복지진흥법」('16.3 시행) 시대를 개막

- 산림복지진흥원 설립, 전문업 등록제·산림복지단지 도입 등 「산림복지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이행

☞ 법 시행 초기에 각종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유도

\* 하위법령 제정, 산림복지진흥원 운영 인력·예산 확보 등

- 새로운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야영장\*을 도입하고, 산림휴양 시설 안전관리\*\*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

☞ 최신 휴양트렌드 반영 및 안전하고 올바른 산림휴양 유도

\* 산림 내 야영장 허용,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불법산지전용 야영장 양성화 등

\*\* 합동모의훈련(경찰·소방·병원), 안전진단(공립 10개소), CCTV확충(국립 60대)

\*\*\* '산림은 그대로, 휴양은 제대로' 캠페인 추진('15~'17, 국민서명 200만명)

#### □ (소외계층) 여건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

- 산림복지바우처 제도\* 시행 및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실시

☞ 누구나 불편함 없이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층에게 산림복지시설 이용권(10만원 이내) 제공 : 9,100명

\*\* 여가부(저소득층 방과후 아카데미), 기업(정몽구재단) 등과 협업 추진

## □ (산림레포츠) 산림 내 다양한 레포츠 문화를 활성화

### ○ 산림레포츠 시설\*를 확대하고, 지역시설과 연계\*\*를 강화

#### ☞ 변화하는 국민수요 충족 및 민간산업화 기반 마련

\* 복합산림레포츠시설(문경·군위·함양) :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한 곳에서 제공

\*\* 산림레포츠용 테마임도(600km) 및 산악승마 연계형 특화휴양림 지정·운영 등

### ○ 다양한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로 산림레포츠의 저변 확대

\* 산악스키·마라톤·행/패러글라이딩·오리엔티어링 등 5개 대회(산림청장배)

## □ (숲길) 쾌적·안전한 숲길을 만들고, '숲길 비즈니스'를 창출

### ○ 숲길네트워크·등산로\*를 정비하고, 올바른 산행\*\*을 지원

\* 전국 5대 트레일·5대 둘레길 연차별 구축 및 주요 등산로 정비(1,364km)

\* 국립등산학교 설계·착공 및 산림항공본부·산악구조협회 합동 산악사고 대응

### ○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사업'에 따라 전국 숲길 DB를 개방\*

하여 숲길 이용객을 위한 「코리아모빌리티」\*\*를 구현

#### ☞ 산림공공데이터의 비즈니스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

\* 산 정보 : 100% 개방 기완료 / 등산로 정보 : 21,000km(64%) → 33,000km(100%)

\*\* 난이도·소요시간·날씨 등 다양한 조건별 최적 숲길정보 모바일 제공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모빌리티' 가동('08) 후, 트레킹 인구 매년 15% 증가)

→ 주변지도·교통·숙박·식당 정보 등 접목 시 지역방문 및 소비촉진으로 연계

③

## 고령화 시대의 현명한 대안, 산림치유

△ 고령화 속도 1위('14, 산업연구원) \* 고령화 지수 4.0 : OECD 평균(1.6)의 2.5배

### □ (산림치유) 숲을 '국민을 위한 열린 치유공간'으로 활용

#### ○ 국립산림치유원·치유의숲 등 산림치유 인프라\*를 확충

☞ 고령화 시대의 국민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 국립산림치유원('16.4 개원, 영주·예천), 치유의숲 조성·운영 확대(35 → 41개소)

△ 국민의 11.7%인 노인인구(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지출('14) : 9.2조원/년(전체의 36.6%)

△ 등산의 의료비 대체효과('09, 산림청) : 연 2.8조원(노인인구 건강보험지출의 30.4%)

#### ○ 국가보건체계\*와 연계하고, 수요자별 특화서비스\*\*를 제공

☞ 산림치유지도사의 영역 확대 및 특성화된 산림치유 제공

\*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기준에 산림치유지도사 포함

\*\* 소외계층(다문화가정·새터민·요보호아동), 스트레스직군(AI방역·소방·경찰) 등

### □ (지역발전) 산림치유 인프라를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계

#### ○ 치유의 숲 내 편의시설 최소화 및 숙박시설 조성 지양

☞ 인근 숙박·요식업소 등 방문·소비를 통한 지역발전 유도

\* (장성 치유의 숲 사례) 연간 30만명 방문 → 인근 4개 마을 매출액 약 70억원

#### ○ 인근마을과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추진

☞ 산림치유 시설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방향 제시

④

##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수목장림

△ 국내 묘지 규모 : 약 10만ha (국토면적의 약 1%, 산지면적의 약 1.6%)

\*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900ha 묘지가 새롭게 발생

△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장례 방법 : 1위 수목장 ('15, 한국소비자원)

\* 수목장 44%, 수목장-봉안당(묘) 조화 26%, 봉안당(묘) 21%, 매장 4% 등

### □ (수목장림) 자연친화적 장묘문화를 위한 수목장림 활성화

○ 국립 수목장림 운영을 내실화\*하고, 신규 조성\*\*을 지원

☞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 확충

\* 국립 하늘숲추모원(양평)을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및 운영·관리 강화

\*\* 국·공립 수목장림(서천, 보령) 조성 및 산림조합 수목장림 조성 지원

○ 사설 수목장림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

☞ 수목장림에 대한 정부관리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 수목장림 TF(복지부·전문가 합동) 운영 : 산림청의 관리·감독기능 강화방안 마련

\*\* 수목장 실천운동 전개 : 지도층 참여유도, 임업 유공자 묘역 마련 등



수목장림 해외사례(독일)

- 일반묘지 내에도 나무무덤·나무장 활성화
- 가급적 자연 그대로의 산림관리 추구



수목장림 국내사례(하늘숲 추모원)

- 나무에 작은 표식을 통해 추모목 표시
- 작은 돌·꽃 등을 활용한 주변 장식

### 3.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녹색공간 만들기

△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13)은 8.3㎡로 WHO 권고기준(9㎡)에 미달

\* 주요 도시 비교 : 서울 4㎡, 파리 13㎡, 뉴욕 23㎡, 런던 27㎡

①

####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숲 가꾸기

#### □ (도시녹화운동) 시민·기업이 함께하는 도시녹화운동 전개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으로 연계

☞ 시민·기업을 도시숲의 단순한 이용자가 아닌 주인으로 인식

\* 기업의 사회공헌규모 : 2조 6,708억원(전경련 발표, '14)

\*\* 기업-지자체-정부간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숲(500개소), 학교숲(9개교) 등 조성

○ 도시녹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국민의식 제고로 도시녹화운동의 참여율·만족도 향상

\* 기부금품 운영관리가 가능한 기관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 확대(20→40개)

\*\* 도시숲 사랑 캠페인(분기별), 기업대상 설명회(5개권역), 신문·방송홍보(연중)

#### □ (인프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 인프라를 확충

○ 내 집·학교·회사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나라꽃 무궁화' 심기를 추진\*

☞ 도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 제고

\* 도시숲(328ha), 학교숲(113개소), 무궁화동산(17개소) 조성 등

②

##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

### □ (도로경관) 견고 싶은 길, 쾌적한 도로경관을 창출

- 가로수로 외곽산림-도시녹지를 연결하는 녹색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명품가로수길을 조성

☞ 가로환경의 품격제고 및 지역 랜드마크 창출(가로수 자원화)

\* 가로수 조성(325km, 166억원), 명품가로수길 조성(172km, 85억원)

- 주요도로변, 관광지·생활권 등 가시권 산림경관 개선\*

☞ 지자체 협력을 통해 계절별·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조성

\* '16년 복합산림경관숲 조성(10개소, 4.2억), 꽃피는 나무·야생화 등 식재

\* 전국 도로변 산림경관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국토부·도로공사 협업)

### □ (농산촌경관) 농산촌의 자연·역사에 맞는 경관을 창출

- 전통마을숲을 복원(37개소)하고, 산촌생태마을 가꾸기\*를 추진

☞ 농·산촌의 산림문화 계승, 경관 개선 및 활력 증진

\* 농촌클린운동 연계 : 마을별 디자인에 맞는 묘목지원, 산촌마을 환경정화, 꽃나무심기·꽃동산 조성 등 추진(농식품부 협업)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담양)



전통마을숲(보은)

③

### 정원문화·산업 육성

#### □ (정원문화) 정원을 가꾸고 향유하는 정원문화 확산

○ 정원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정원박람회\*\*에 진출

☞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국민인식 및 국가위상 제고

\* 코리아가든쇼('16.4 : 정원작품 중심), 정원산업디자인전('16.9 : 정원산업 중심)

\*\* 터키정원박람회('16.4~10 : 국내 우수정원 전시·홍보, 해외 우수사례 공유)

○ 정원조성·관리, 시민가드너 과정 등 정원관련 교육 확대\*

☞ 실용교육을 통한 정원의 생활화 유도 및 국민행복 증진

\* 정원 교육기관 지정·운영 확대 : ('15) 4개 → ('16) 7개 기관

#### □ (정원산업) 국내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 지방·민간정원\* 조성·등록 및 정원산업지원센터\*\* 조성 추진

☞ 아름다운 지역경관 창출 및 정원산업화 기반 마련

\* 지방정원 조성(강원·충남·경북), 민간정원 등록(6개소, 관광·휴양연계 6차산업화)

\*\* 정원산업지원센터 조성('15~'17) : (예산) 70억원, (규모) 연면적1,650㎡



□ (생활화) 산촌마을, 주택가 등 생활권 내 야생화 확산

-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등 일상 공간에 우리꽃 화단을 조성
- ☞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및 생활 속 야생화 문화 창출

□ (관광자원화) 야생화를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육성

- ‘야생화 100대 명소’(15.10 선정)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
  - \* 명소별 자원현황·운영상황 전수조사, 인근 수목원·식물원과 관리협약 체결 등
- 전국의 야생화 군락지를 활용한 야생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개화시기·지리정보를 포함한 ‘대한민국 꽃길지도’를 제작·보급
  - ☞ 야생화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 및 6차산업화 기반 마련
  - \* 기후대별 수목원·식물원의 개화시기에 맞추어 ‘야생화특별전시회’ 개최

□ (고부가가치화) 야생화 식품·문화상품 등 개발·산업화

- 동의보감·본초강목 등 고문헌과 향토지식을 활용한 기능성 물질 탐색·효과 분석 및 야생화 품종개발
  - ☞ BT기업·연구기관·화훼농가 등에 보급·산업화 유도
  - \* (사례) 분홍찔레꽃 신품종 ‘노을향기’ 개발(15) → 보급·산업화 추진(16)
- 야생화에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다양한 문화상품화 추진
  - \* 야생화 세밀화·꽃누르미(압화) 제작·보급, BH 사랑채 전시회 개최 등



## 전략과제 성과목표

- △ 과학적·신속한 산불진화 ☞ '3년 연속 대형산불 제로화'
- △ 산림헬기 안전관리 강화 ☞ '3년 연속 산림헬기 무사고'
- △ 취약지역 관리 강화 ☞ '3년 연속 산사태 인명피해 제로화'



## 1. 건강한 산림생태계 만들기

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 (보호구역) 생물자원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강화

○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중심으로 산림보호구역 지정 확대\*

☞ 산림부문 아이치 타겟\*\* 및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강화

\* 국립공원 내 가치가 높은 산림(한라산 구상나무·왕벚나무, 설악산 눈향나무·난쟁이붓꽃, 무등산 털조장나무 등)의 단계적 보호구역 지정 추진

\*\* 아이치 타겟 : 2020년까지 육상면적의 17%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 산림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장관리 체계를 정비

☞ 산림보호구역 공간정보 현행화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 전국 실태조사 및 공간정보 DB화('16~'18), 지자체 보호구역 지정·해제 매뉴얼 마련

○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생물종의 현지 내·외 보전을 강화\*

☞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인 보전 및 자원화 기반 마련

\* 지역생태숲 조성(5개소: 서식지 보전·교육), 자생식물원(5개소: 종 보전·연구·전시)

□ (복원·관리) 핵심생태축을 중심으로 복원·관리를 강화

○ 백두대간·DMZ 일원 등 훼손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복원\*

☞ 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

\* 백두대간 단절지 연결(지리산 정령치) 및 산불피해지·폐군사시설 복원(46ha) 등

\*\*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유엔 개발정상회의 시 채택, '15.9)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시스템을 개편\*

☞ 중·장기적인 관리 기반 마련 및 지역주민 참여 확대

\*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수립('16~'25),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관리체계 구축, 백두대간 보전·관리 협약제도 도입



백두대간 훼손지역(인제 구령덕봉, 복원 전)



백두대간 훼손지역(인제 구령덕봉, 복원 후)

②

## 산림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수목원 확충

### □ (국가수목원) 산림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현지 외 보전기반 확충

○ 국가수목원을 확충하여 기후대별 국가수목원 네트워크 구축

☞ 기후대·식생권역별 식물자원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

\* (온대북부) 백두대간수목원 개원 준비('09~'15, 경북 봉화)

\* (온대중·남부) 중앙수목원 공사 착수('12~'20, 1,351억원, 세종특별자치시)

\* (서부·해안) 새만금수목원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17~'25, 1,705억원, 전북 새만금)

### □ (사립수목원) 사립수목원의 경영개선 및 활성화 지원

○ 사립수목원·식물원에 대한 경영진단·컨설팅 서비스 제공

☞ 자체적인 경영진단이 어려운 사립수목원·식물원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한 문제점·개선방안 제시

○ 사립수목원·식물원을 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 확대\*

☞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국가 수목원과의 협업체계 강화

\* 생명자원관리기관(18개) 운영 : 국내·외 유용식물자원 수집·증식 실시



백두대간수목원(준공현장)



중앙수목원(조감도)



새만금수목원(조감도)

**③ 무분별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 산림사법경찰 1인당 관할면적 과다 : 5,432ha(남산의 16배) → 효율적 관리 체계 필요

**□ (사범) 불법 산림훼손 감시시스템과 업무조직을 개선**

**○ ICT기반의 훼손 의심지 적발\* 및 사범전담조직 개편\*\***

☞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단속기반 마련

\* 항공사진 비교·판독을 통한 훼손 실태조사 : '16년 강원·울산·부산지역

\*\* 산림사범 업무를 전담할 산림사범수사대 구성·운영, 산림보호지원단(250명) 신설

**○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산림보호·단속의 핵심주체\*로 육성**

☞ 부족한 현장단속 인력 확충으로 사범업무의 신속성 제고

\* 사법경찰권 부여(법무부 협의), 사범수사 교육이수 강화, 처우개선 등

**□ (인식) 올바른 산림보호·이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산**

**○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지속 추진 및 기업·단체 홍보협력 확대**

☞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 실천문화 정착 및 법 질서 확립



## 2. 대형 산불발생 막기

①

### 산불예방 체계 고도화

#### □ (예방)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한 과학적인 예방활동 추진

##### ○ 빅데이터 분석 등 ICT 기반\*의 체계적인 산불감시를 실시

☞ 한정된 산불감시 인력(2만2천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산불 빅데이터 분석 → 집중근무 : (남부) 1~4월 (중부) 2~4월 (북부) 3~4월

\* 감시원 GPS 이동이력 분석 → 산불취약지 위주의 근무순찰지 조정·관리

\* NFC 전자순찰함 제도 운영 → 감시시간·위치정보 등 실시간 모니터링

##### ○ 산불위험도에 따른 입산관리\*와 산불방지시설 적지적소 설치\*\*

☞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과적인 감시·관리체계 마련

\* 등산로 개방·통제 정보 대국민 서비스(포털사이트·스마트폰 앱 활용)

\*\* 밀착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17개소)·산불소화시설(18개소) 확충

#### □ (홍보·교육) 국민·기관과 함께하는 산불방지 태세 강화

##### ○ 대국민 타깃별 홍보\* 및 산불방지 인력 교육·훈련\*\*을 강화

☞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전문가 확대·양성

\* 지역·시간·연령대별 매체노출 정보분석 → 차별화된 홍보물 활용

\*\* 전담기관 지정(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진화대·감시원·영림단 등 교육·훈련

②

## 신속·안전한 산불진화 시스템 구축

### □ (진화) 지상·항공진화 역량 강화로 대형산불 확산 방지

#### ○ 기계화진화대\* 운영 및 다양한 현장여건\*\*에 맞는 진화역량 강화

##### ☞ 기관별 지상진화 작업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 시·군·구·관리소별 1개팀 이상 운영, 기계화진화시스템 주2회 이상 반복훈련

\*\* 도시지역·야간산불·험준지역 등에 대한 맞춤형 진화 시범사업 추진

#### ○ 산림헬기\* 및 유관기관 지원헬기\*\*의 공동진화 실시

##### ☞ 산불진화 골든타임 강화(산불발생 30분 이내 현장 도착)

\* 산림헬기(45대) 전국 11개 격납고 분산배치 및 산불위험지역 수시 이동 배치

\*\* 소방(25대)·군헬기(16대) 표준운영절차 준수 및 임차헬기(54대) 진화 지원 등

### □ (항공안전) 사고발생 없는 안전한 산불진화헬기 운영

#### ○ 기관 간 장비·시설 공동활용(협업)\* 및 야간진화 안전 강화\*\*

##### ☞ '3년 연속 산림헬기 사고 제로화'(13.5 안동 임하댐 사고 이후)

\* 영상전송시스템 장착완료(소속기관·지자체 등 실시간 상황전파·공유),  
합동 안전훈련(국방부·지자체), 모의비행훈련장치·이착륙장 공동 활용 등

\*\* 야간산불진화에 필요한 승무원·지상준비 인력 교육, '17년 신규도입  
대형헬기(1대)에 야간진화장비(야간투시경·고정식물탱크) 구비

### 3. 산사태 없는 안전한 산림 만들기

#### ① 선제적인 산사태 방지사업 추진

##### □ (예방·대응) 산사태취약지역을 사전에 발견·대비

###### ○ 전국 단위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

☞ 산사태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

\* 우려지역 실태조사('16년 5천개소) → '산사태 취약지정' 지정·고시(현 18,555개소)

###### ○ 현장예방단\*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전수 점검·정비 조치

☞ 산사태 발생요인 사전제거 및 산사태 대응시스템 강화

\* 현장예방단 88개단(352명) : 사방댐·배수로 관리, 거주민 대피체계 등 점검

##### □ (사방사업)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을 추진

###### ○ 주택·도로변 등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에 사업을 우선 추진

☞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 사방댐 825개소, 계류보전 575km)

###### ○ 사방사업과 관련한 부처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

☞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및 농산촌 가뭄피해 대응력 제고\*\*

\* 국토부(도로변 66개소), 국방부(민북지역 9개소), 문화재청(문화재주변 6개소)

\*\* 농업·산불진화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저사 겸용 사방댐 조성(연간 100개소)

## ② '스마트 재해방지 시스템' 구축

### <기존 산림재해 방지체계의 문제점>

- △ (시스템) 산불·산사태·병해충·항공 등 관리시스템이 별개로 분산·운영
- △ (데이터) 실시간 산악기상정보·사면이동정보 등 데이터가 거의 전무  
→ 재해 발생·확산 예측과 대비체계 구축에 한계
- △ (정보공유) 재해발생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못하거나, 기관 간 데이터 형식 차이로 전송·해석 지연 → 안전처·지자체 대처에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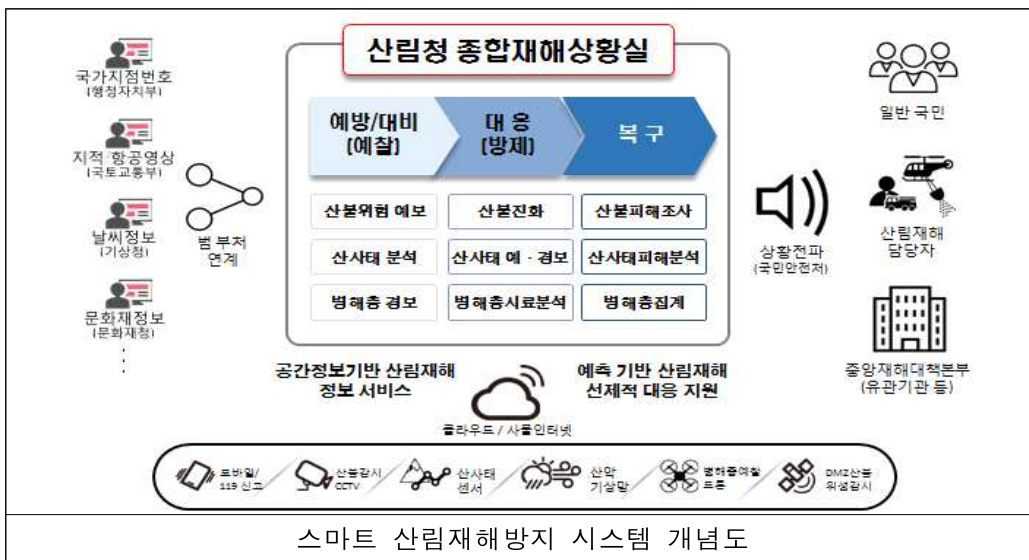
### □ (SPS) 스마트 재해방지 시스템(Smart Protection System)을 추진

- 분산된 재해시스템을 통합·공개\*하고, 재해예측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 ☞ 산림재해 발생·확산에 대한 예측력 제고로 피해 최소화

\* '16까지 산불·산사태·항공시스템 통합완료 및 오픈 API를 통한 민간서비스 확대

\*\* 산악기상정보(산악기상관측소)·사면이동정보(사면센서) 등 연차별 고도화





## 전략과제 성과목표

- △ 국내업체들의 해외진출 확대 ⇨ 해외조림 면적 3만ha 확대
- △ 해외 바이오매스 조림사업 ⇨ 국내 발전업체 1만톤 원료 제공
- △ 개도국과 산림협력 강화 ⇨ AFoCO 회원국 확대설립



## 1. 세계 산림자원 확보하기

## ①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지원 강화

△ 국산 목재 공급량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요량 증가로 수입 확대 전망

- \* 국산 목재 공급량 장기전망 : ('15) 534만 m<sup>3</sup> → ('50) 1,200만 m<sup>3</sup>
- \* 국내 목재 수요량 장기전망 : ('15) 3,131만 m<sup>3</sup> → ('50) 4,000만 m<sup>3</sup>

□ (지원기반) 해외산림자원개발 민간투자 지원체계를 개선

○ 해외조림 투자기업 협회 설립\* 및 산림협력센터\*\* 설립 확대

⇨ 기업 간 투자정보 공유 및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16.상반기), \*\* 메콩강 산림협력센터 1개소 추가

□ (목재자원) 자원경쟁에 대비하여 해외목재자원을 확보

○ 용자지원 확대 등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조림 확대\*\*를 통한 국내 장기·안정적 목재자원 수급 대응

\* 사전환경조사(2.5억원) 및 용자지원 확대(250억원 → 290억원)

\* 해외조림지 매수지원 강화(임령·조림시기 규제 폐지, 바이오매스조림 추가)

\*\* 해외조림(누계) : ('15) 39만 → ('16) 42.4만ha → ('17) 46만ha

○ 바이오매스 조림 시범사업 등 신규 수익 사업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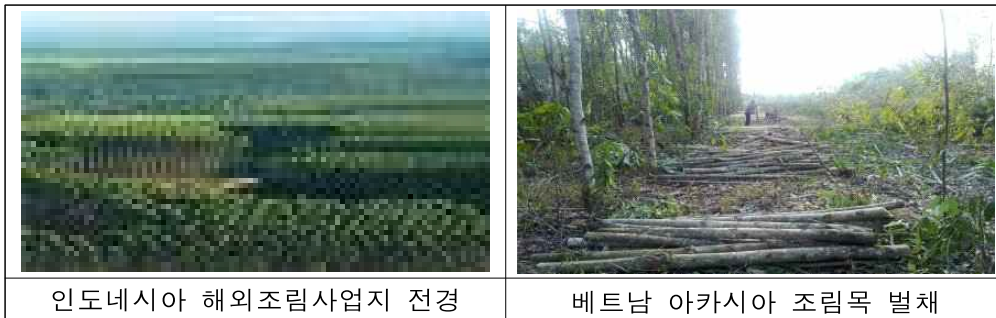
☞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른 바이오매스 연료공급\* 으로 국내 친환경 에너지원 수급에 기여

\* 시범조림지 200ha 벌채 → 국내발전사 1만톤 도입(30MW 발전소 원료의 5%)

○ 해외산림인턴의 교육기관 변경 및 교육기간 확대\*

☞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교육품질 제고로 인턴의 전문성 향상, 현지적응력 강화 및 취업률 제고

\* 교육 전문성 제고 : (기존) 녹색사업단 3일 → (변경) 산림교육원 10일



②

## 양자협력국별 맞춤형 대응 강화

△ 중국의 경제성장과 자원보유국의 통제강화로 자원확보경쟁 심화

\* '13년 중국은 미국 목재수출량의 50%, 캐나다 목재수출량의 21%를 수입

△ 국외 산림자원 확보 및 산업확대를 위해 양자협력국과의 유대 강화 필요

### □ (협력확대) 산림협력을 확대 및 협력분야 다각화

○ 기관 간 약정 체결\*을 확대하고, 산림복지·생물다양성 등 분야별 특성화 협력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및 산림자원 개발 대상국 확대

\* MOU 체결확대(중남미개발은행(CAF)·피지 등), 산하기관·단체 간 MOU 중재

\*\* 필리핀(양묘장 조성), 베트남(우호의숲), 도미니카공화국(산림휴양) 등

### □ (내실화) 협력국별 맞춤형 관리·대응 및 성과 내실화

○ 정기 '산림협력위원회'\* 및 '양자협력발전협의회'\*\*를 운영

☞ 양국 민간기관 협력 및 해외투자 기업 문제해결 지원

\* 산림협력위원회(18개국), 양자협력발전협의회(해외산림개발협회·전문가 합동)



한-중 산림복지 MOU



한-캐나다 산림협력 MOU

## 2. 지구촌 산림자원 함께 가꾸기

### ①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 산림복원 기술·경험 공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는 역할수행 필요

#### □ (개도국 지원) 정상합의를 이행하고, 국제기구 확대 설립

##### ○ 정상 간 산림분야 합의의제에 관한 협력사업을 가속화\*

\* 한-카자흐스탄(우호의 숲 설계·공사), 한-캐나다(목조건축, 산불기술교류), 한-인도네시아(산림휴양·생태관광센터 공사, 역량강화 교육 등)

##### ○ ‘한-아세안산림협력협정’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로 확대 설립

\* 협정 만료('16.8) 이전까지 범아시아 14개국의 서명·비준 절차 진행 독려

#### □ (지구녹화선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개도국 녹화 지원

##### ○ 건조지녹화사업\* 확대 및 몽골·중국 사막화 방지 조림\*\* 추진

\* '12년 아프리카 3개국 → '16년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 동북아 11개국

\*\* 한-몽 그린벨트 후속사업 계획 수립, 중국 사막화방지 조림 지속 추진



인니 산림휴양·생태관광센터 조감도



사막화방지 조림(중국)

②

## 국제 협력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경제 성장과 산림 복원을 달성한 국가 위상에 걸맞는 수준의 국제회의 유치 및 국제기구 협력을 추진하고,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

### □ (국제회의) 산림분야 국제회의 유치와 후속조치를 추진

○ FAO 주관의 제15차 세계산림총회(2021) 유치\*를 통해 산림 복원 결과를 홍보하고, 다양한 산림정책 체험 기회를 제공

☞ 국내 산림복원 사례 및 정책에 대한 국제적 인식 확산

\* 제23차 FAO 산림위원회(16.7)에서 유치 제안서 발표 후, FAO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제6차 세계산불총회('15.10, 평창) 개최 후속조치를 이행\*

\* 아시아 산불훈련프로그램 운영 지원, 산불관련 국제 공동대응·기술교류 추진 등

### □ (국제기구협력) 산림분야 관련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

○ UN환경 협약 및 다자기구와의 산림복원 이행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여타 선진국의 참여\*\* 확대 촉구

☞ 우리나라 주도 산림복원 이니셔티브의 영향력 제고

\* 산림복원 이행사업 : 창원이니셔티브(UNCCD), 산림복원메커니즘(FAO),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CBD) 등 3개

\*\* FAO 사업에 스웨덴이 참여 중이며, 향후 독일·프랑스 등 참여가 예상

### 3. 산림을 디딤돌로 통일에 다가서기

①

#### 북한 산림복구 내부역량 강화

#### □ (지원기반)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 북한의 긴급지원에 대비한 대북용 종자확보\* 및 양묘장\*\* 조성

☞ 북한 황폐산림 복구에 부족한 종자·묘목지원체계 마련

\* 종자확보계획(누계) : ('15) 20톤 → ('17) 30톤 → ('19) 40톤 → ('21) 50톤

\*\* 북한과 연접한 강원도 고성 국유지(3ha)에 '17년까지 20억원 투입

##### ○ 민간단체의 종자·묘목 지원근거\* 마련 및 전문가 Pool 구성

☞ 남북관계 전개에 대비한 탄력적 민간 활용체계 구축

\*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종자 및 묘목의 무상양여 기준 마련

#### □ (복구체계) 모니터링 체계 확립 및 복구 세부실행방안 마련

##### ○ 북한 황폐산림 모니터링\* 및 산림정보 DB\*\* 구축

☞ 북한 산림황폐지 정보 수집을 통해 체계적 복구방안 마련

\* 모니터링 : ('99) 전체 → ('08) 전체 → ('13) 5개 → ('14) 11개 → ('15) 전체 지역

\*\* 산림자원 DB 구축, 사방·조림·혼농임업 적지 및 복구방법, 비용 등 분석('16~'19)

##### ○ 모니터링을 토대로 북한 황폐산림 복구 세부실행방안 마련

☞ 남북관계 진전 및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인 복구태세 완비

②

##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작은 통일 구현

### □ (민·관협력) 실행가능한 소규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 통일부 기금을 활용한 산림분야 민간단체 공모사업\* 확대

☞ 단순 물품지원이 아닌 개발협력사업으로 확대할 기회 마련

\* 종자·묘목지원, 양묘장 조성, 병해충 방제, 임농복합경영(4개단체, 21.5억원)

#### ○ 남북간 종자교류\* 및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 북한의 요구사업으로 교류협력의 지속 및 확대 가능

\* 북한의 자생수종 수급상황에 따라 제3차 종자교류 추진('15년 8톤 지원)

\*\* '16. 3~5월 1차 방제지역(800ha) 모니터링 및 솔잎혹파리 1,000ha 방제 지원

### □ (국제협력) 안정적 대북지원을 위해 국제기구 활용

#### ○ FAO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사업\* 지속 추진('09~'16)

\* A/R CDM, REDD+ 워크숍, 국제심포지엄, 임농복합경영 등(15억원)

#### ○ FAO, WFP(World Food Programme : 세계식량계획) 등과 협력하여 패키지형 신규사업\* 개발·추진

\* 산림복구(조림·양묘장·병해충방제)와 식량난 해결(임농복합경영)을 복합적으로 설계

### □ (과학자 교류) 남북한 산림과학기술분야 교류 확대

#### ○ 남북한 산림과학자간 학술회의\* 정례화를 통해 기술 등 전수

\* 남북한 산림(임업)용어 정리 및 사전발간 등 산림과학기술 정보 교류

□ (규제정비) 산지의 합리적 이용, 기업부담 및 국민불편 해소

○ 불합리한 산지이용 제한 및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검토·정비

☞ 석재산업 육성 및 보호구역 내 합리적 이용 활성화

\* 지하채굴의 계단식 채굴의무 완화, 산림보호구역내 임산물 채취 확대 등

○ 목재분야의 과도한 인증제도를 수요자 편의에 맞게 통합하고, 경쟁제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사업의 개방 확대

☞ 분산된 인증 획득을 위한 업계의 시간·비용 부담 완화 및 산림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 목재제품 품질검사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로 전환 / 목재제품 품질인증과 KS를 통합

\* 숲길 조성·관리사업 등 산림사업에 조경분야 참여기회 확대

○ 작지만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형 규제를 발굴·정비

\* 사실상 묘지주변 임의벌채 확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납부 등

□ (사후관리) 기 개선된 과제 A/S 및 국민체감도 제고

○ 기 개선하였으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찾아 추가 개선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하여 대응책을 마련

○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국에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27개소)



②

## 비정상의 정상화

- (부산물) 산지 내 버려지던 부산물을 산업원료로 수집·활용
  - 산림사업 후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던 원목, 가지 등 산림 부산물(연 350만 $m^3$ )의 목재산업계·에너지 업계 원료화 추진
  - ☞ 산림자원낭비의 적폐 해소 및 국내 목재자급률 제고

③

## 부처 간 협업

- (개발사업) 각종 개발사업장 내 발생임목 재활용(국토부)
  - 개발사업 시 발생임목(연 144만톤)을 폐기물로 처리(기존방식) 하지 않고, 목재산업계에 원료로 제공(공개매각 시스템 개발)
  - ☞ 폐기물처리 예산 절감 및 원목수입 대체효과 등 기대
- (산사태) 관리소관이 상이한 산지 내 산사태 예방(국토부·국방부)
  - 도로변·민북지역 내 산사태 예방사업 및 실태조사 추진
  - ☞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및 운전자·군인 등의 산사태 피해 방지
- (산지축산) 친환경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농식품부)
  - 요존 국유림 내 가축방목 허용, 밤나무 재배지를 활용한 산지양계 모델개발 지속 추진(품목 확대·경제성 분석 등)
  - ☞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저항력 제고 및 농림업인 소득 증대

### □ (서비스 정부) 국민 개개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임업인·국민 대상으로 ICT를 융합한 국민 맞춤 산림서비스 제공
  - \* 산림재해통합시스템, 산림주제도 서비스, 자연휴양림 빅데이터 활용 등
- 소외계층에 산림서비스 선제적 제공 및 산촌주민·고령자 불편해소
  -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산림패트롤 운영,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
- 민간의 창의성을 산림행정에 접목 (국민디자인단 과제 확대 : 1→5개)

### □ (유능한 정부) 지식기반의 과학적·선제적 행정 구현

- 산림지식 범정부 공유 환경 강화 및 모바일 행정 확산
  - \* 산림지식의 클라우드 이관, 산림조사 대장·항공사진 등의 모바일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산림공간정보 공동활용 체계 개편
  - \* 국가산림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이용 체계 일원화

### □ (투명한 정부)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 등산로·숲길·국가생물종 DB\* 활용 민간사업화 지원 및 개방 확대\*\*
  - \* '15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10대 과제) 선정 \*\* '16년 9개 DB 추가 개방
- 개방데이터 순환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 민간활용도 제고
  - \* 민간 주도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산림청이 재가공하여 민간 제공

⑤

## 4대 부문 구조개혁

### □ (노동개혁)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

○ 산림분야 2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16년부터 전면 시행

☞ 청년고용 기회 확대 및 계층간 상생고용 문화 정착

\* 한국임업진흥원('15.8.27), 녹색사업단('15.10.21) 노사합의 도출 및 규정변경 완료

### □ (공공개혁: 공공기관) 공공기관 기능조정 선제적으로 대응

○ 산림분야 공공기관인 녹색사업단의 해체·기능이관 결정('15.5)

☞ 공공기관 기능중복에 따른 효율성 저하 문제 해소

\* 「산림자원법」, 「임업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계류 중

### □ (공공개혁: 재정)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에 동참

○ (보조금) 산림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 ('15) 「산림분야 보조금 관리 및 운영 규정」 마련, 산림분야 보조사업 DB 구축

→ ('16) '산림보조금 관리시스템' 마련 및 농식품부 연계 추진(부처 간 중복수급 방지)

○ (재정정보공개) 세입·세출 운용상황 홈페이지 공개 실시

\* 기재부 '열린재정' : 국고보조사업 부처별·사업별 비교 공개 등

○ (지출효율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재정집행계획 수립·시행

\* 실적점검(매월) : 예산집행 심의회 및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 '16년부터 재정운영 효율화의 가시적 성과 제고

## IV. 주요 정책 현안

1. 산림병해충 방제

2. 봄철 산불방지



# 1. 산림병해충 방제

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추진실적) 지난 5월 이후 발생한 피해 고사목 81만본 중 32만본(40%) 방제('15.12 현재)

○ '13년 이후 급증한 재선충병 피해를 감소 추세로 전환

\* 피해본수(만본) : ('07.4) 137 → ('11.4) 26 → ('14.4) 218 → ('15.4) 174 → ('15.12) 81

○ 감염목 벌채에서 감염우려목까지 전량벌채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국 840개 방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로 방제품질 향상

\* 정부·시민단체 합동점검 방식으로 전환, 총 1,697회 현장점검

○ 항공·지상방제 확대(82→115천ha) 및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전국 소나무류 유통·취급업체(4천개) 일제점검 실시(경찰청 합동)

○ 항공·지상예찰 강화로 신규 피해지 조기발견 및 선제 대응

\* 5개 신규 발생지는 피해목이 10본 미만으로 초기대응에 성공

□ (기반정비) 재선충병 특별법 개정('15.6)으로 방제기능 강화

○ 국가의 방제역할 확대, 제도 개선 및 확산우려지 관리 강화

\* 문화재 등 중요지역 국가 직접방제, 부실업체 벌칙 강화, 일시 이동중지 등

○ 방제지침 제정 및 '16년 764억원 예산 확보('15 대비 16%증)

□ ('16.4까지 완료)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 및 방제품질 향상

○ (피해목 방제) '16.4월\*까지 2~3차에 걸쳐 반복 방제 실행

☞ 방제 누락목 미발생으로 피해 안정화 체계 구축

\* 방제완료 기한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3월, 제주도 4월

○ (품질관리) 권역별 방제 전략 수립 및 책임방제\* 강화

☞ 피해유형·방제여건을 감안한 종합적 방제로 재발생률 최소화

\* 방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별 책임방제구역 설정

□ (연중 추진) 피해목 활용도 제고 및 예찰·모니터링 강화

○ (피해목 활용) 피해목 처리방식을 개선(훈증 → 수집·활용) 하여 재활용률\*을 50%까지 확대

☞ 대량방제시설 3개소\*\*를 거점으로 高부가가치 목제품 생산

\* 재활용률 : ('13) 18.8% → ('14) 19% → ('15) 37% → ('16) 50%

\*\* 피해가 극심한 제주, 경북 포항, 경남 밀양에 설치(1일 600그루 처리)

○ (인위적 확산방지) 선제적 단속 및 이력관리(QR코드\*) 강화

☞ 취급업체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

\* 소나무류 이동을 DB화하여 이동통제 및 단속에 효율적으로 활용

○ (모니터링) 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운영, 재발생률 조사 등 체계적인 전국단위 예찰·모니터링 실시

☞ 피해목 조기 발견 및 차년도 방제전략 수립 지원

②

##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 □ (참나무시들음병) 사전예방 및 완전방제로 우량 참나무림 보호

#### ○ 사전예방 사업 확대와 신규 방제기술 개발을 통한 확산 저지

☞ 매개충 포획 등 예방효과가 탁월한 방제사업 확대

\* 끈끈이롤트랩 확대(만본) : ('13) 28 → ('14) 29 → ('15) 29 → ('16) 38

#### ○ 중점관리지역 설정 후 정밀예찰 및 공동방제 추진

☞ 국립공원, 등산로 등 지역별 중점관리지역 집중 방제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방부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공동방제(협의체 운영)

### □ (솔잎혹파리)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산림경관 보존

#### ○ 경기장 주변 및 고속도로변 등 가시권지역 집중방제 실시

☞ 저독성 약제를 활용한 나무주사로 친환경 이미지 구현

#### ○ 지역별 적기방제(우화최성기)에 따른 방제효과 제고

☞ GIS기반 우화시기 예측모델에 따른 적기 나무주사 실시



참나무시들음병 사전예방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 2. 봄철 산불방지

### ① 금년도 봄철 산불 전망

- 따뜻한 날씨와 재선충병 방제로 산불 대응여건은 불리
  - 1월부터 따뜻한 날씨와 높은 기온이 예상되어(기상청 장기예보) 산불위험이 높고, 재선충병 방제로 현장 대응역량 분산 우려

### ②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전국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사전대비 철저
  - 산불감시인력(2만2천명)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316개)하여 위험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
  - 인화물질을 사전제거하고, 소각금지기간을 철저히 운영(3~4월)
-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신속한 초동진화 실시
  - 유관기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접속 권한 부여 및 119로 신고 접수되는 임야 화재 정보의 실시간 연계로 산불피해 최소화
    - \*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 산불위험예보, 산불신고 단말기 및 어플리케이션, 감시카메라, 등산로 개방·폐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산림헬기(45대), 인력 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만명, 기계화 진화대 193대) 등 보유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초동진화력 제고

## 참 고 자 료

〈참고1〉 2016년 입법 추진계획

〈참고2〉 2016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참고3〉 2016년 분기별 추진계획

〈참고4〉 기관 일반현황



## 〈참고1〉 2016년 입법 추진계획

□ 입법 추진계획 : 총 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산림 탄소상쇄 우수제품 인증을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으로 통합	○법제처 제출 : '16. 4월 ○국회제출 : '16. 6월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17. 1월)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를 목재 제품명인 인정제도로 통합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제도 부처 통합 운영 ○목재제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도입 ○지역간벌재 인증 유효기간 폐지	○법제처 제출 : '16. 4월 ○국회제출 : '16. 6월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17. 7월)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제도로 전환	○법제처 제출 : '16. 4월 ○국회제출 : '16. 6월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17. 7월)
4	청원 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	○청원산림보호직원 보수 등의 지급 기준 개선을 위한 근거 법률 개정(청원산림보호직원 직무 : 임업서기 → 임업공무원)	○법제처 제출 : '16. 7월 ○국회제출 : '16. 8월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17. 7월)

## 〈참고2〉 201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연번	제목	주요 변경사항	제도(시행일)
1	산림복지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해설, 산림치유 등의 제공 목적의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단체는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운영</li> </ul> </li> <li>○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바우처를 발급·사용</li> </ul> </li> <li>○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복지시설의 시설·전문가 서비스 등에 대한 인증</li> </ul> </li> <li>○ 산림복지단지 조성</li> </ul>	산림복지법 (’16. 3월)
2	숲속야영장·레포츠 시설 설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보전산지 내 설치 불가 → (변경)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휴양법」에 따른 종류·기준에 적합한 경우</li> </ul> </li> </ul>	산지관리법 산림휴양법 (’16. 1월)
3	벌채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베기 최대면적 축소 : 50ha → 20ha</li> <li>○ 존치방법 개선 : 단목·군상·수림대 → 군상·수림대</li> </ul>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16. 1월)
4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단속 품목 확대 : 8개 → 14개</li> <li>○ 목재·제지분야 KS 인증제품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 권한 : 산업부 → 산림청</li> <li>○ 목재·제지분야 KS 인증기관 : 한국표준협회 → 한국임업진흥원</li> </ul>	목재이용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16. 1월)
5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도시 거주자 중 연료비 절감가능한 자</li> <li>- (변경) 화석연료 대체를 희망하는 모든 자</li> </ul> </li> <li>○ 지원제외 기준 &lt;신설&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부정수급자(5년 간 참여 제한)</li> </ul> </li> </ul>	산림자원법 (’16. 1월)
6	산림사업종합 자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자금 이자율 ‘변동금리’ 적용 &lt;신설&gt;</li> <li>○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속야영장, 레포츠시설 지원 규정 추가</li> </ul> </li> </ul>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16. 1월)
7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료 산정방식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국유림 가격에 10/1000을 곱한 금액</li> <li>- (변경) ‘최근 공시한 해당 권역의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존 산정 방식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li> </ul> </li> </ul>	국유림법 시행령 (’16. 6월)
8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불가</li> <li>- (변경) 국·공립(10ha미만) 및 사설(3ha미만) 수목장림 설치 허용</li> </ul> </li> <li>* 생활환경보호·경관보호·수원함양보호구역(1·2종) 대상</li> </ul>	산림보호법 시행령 (’16. 1월)

## 〈참고3〉 2016년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1~4월
	▪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실시	1월
	▪ 봄철 나무심기 착수	2월
	▪ 2016년도 목재수급계획 수립	2월
	▪ 산림보호지원단 구성	2월
	▪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16~2025) 수립	2월
	▪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2~5월
	▪ 산림복지진흥법 시행	3월
	▪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3월
	▪ 산림분야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	3월~4월
	▪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추진	3~4월
	▪ 소나무류 이동 전국 일제 특별단속 실시	3~4월
2분기	▪ 제71회 식목일 기념행사	4월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개원	4월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4월
	▪ 지리산 둘레길 한바퀴 걷기행사 개최	5월, 10월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5월
	▪ 아스타나 우호의 숲 착수식	5월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및 지상방제 실시	5~10월
	▪ 국유림 무단점유 집중 단속기간 운영	6월
	▪ 임업인과의 만남(컨설팅) 행사 개최	6월
	▪ 제1차 한-도미니카공화국 산림협력위원회	6월
	▪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사업 착공	6월
	▪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	6~9월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6~8월

구분	실천과제	세부일정
3분기	▪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캠페인 전개	7월
	▪ 2017년 산림소득사업 공모 실시	7월
	▪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실시	7월
	▪ 제23차 FAO 산림위원회 참석(WFC 유치 제안 프리젠테이션)	7월
	▪ 산림사범 특별대책 기간 운영	7~8월
	▪ 태풍 대비 산사태 예방·대응 긴급대책 수립·시행	7~9월
	▪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8월
	▪ REDD+ 고위급 회의 개최(라오스 MOU 체결)	8월
	▪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9월
	▪ 생활정원 공모전 개최	9월
	▪ 정원산업 디자인전 개최	9~10월
	▪ 전국 산림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실시	9~11월
	4분기	▪ 목훈식 페스티벌 개최
▪ 제1차 AFoCO 총회		10월
▪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개최		10월
▪ 백두대간 사랑운동 추진		10월
▪ 제15회 산의 날 행사 및 제9회 산림박람회 개최		10월
▪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고시		10월
▪ 숲가꾸기 기간 행사		11월
▪ 전국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 실시		11월
▪ 2017년도 탄소흡수원 증진 시행계획 수립		11월
▪ 제1차 한-아르헨티나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11월
▪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창립 총회		11월
▪ 백두대간 정령치 생태축 복원사업 준공식		11월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11월
▪ 2016년도 목재산업 박람회 및 목재의 날 행사 개최		12월
▪ 종묘가격 결정·고시		12월
▪ AFoCO 교육훈련센터 준공		12월
▪ FERI 글로벌 고위급 회담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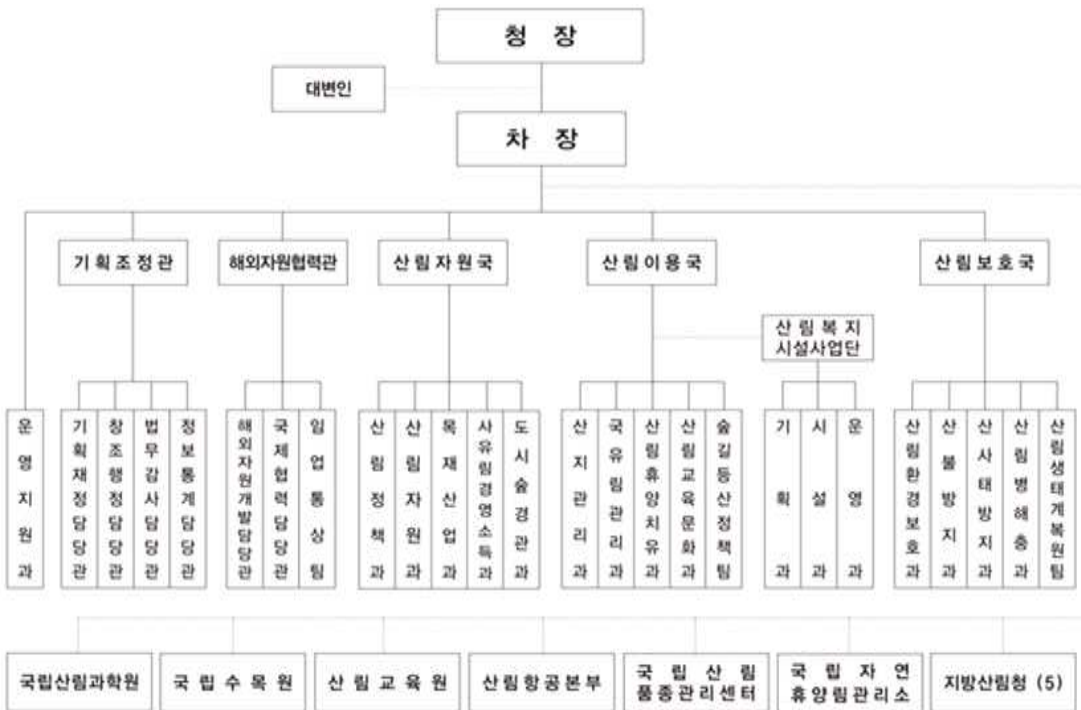
## 〈참고4〉 기관 일반현황

### 1 조직 및 정원

□ 임 무 : 산림자원 · 산업 육성, 산림보호, 산림이용 · 복지

□ 조 직 : 2관 3국 1단 24과 3팀, 11개 소속기관

- 본 청 : 기획조정관, 해외자원협력관, 산림자원국, 산림이용국, 산림보호국, 산림복지시설사업단
- 소속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방산림청(5)



□ 정 원 : 1,751명 (본청 279, 소속기관 1,472)



## 2

## 주요 업무

## □ 본 청

구 분	주 요 업 무
기획조정관	주요업무계획, 국회, 예산 및 재정성과, 행정혁신, 조직 및 정원관리, 성과평가, 감사, 법령심사, 산림통계, 산림행정 정보화
해외자원협력관	해외산림자원개발, 임산물 수출입·관세 정책, ODA, 임업분야 통상, 국제기구·협약 협상, 양자·다자협력, AFoCO 지원
산림자원국	산림정책·연구조정, 기후변화·산림탄소, 남북산림협력, 일자리 창출, 종묘·조림·숲가꾸기, 목재산업 육성, 목재수급,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임업기계, 임업기능인 양성, 임도, 도시숲 조성·관리, 무궁화 보급, 임산물 수급, 임업인 소득 증대, 임업인 육성, 산림경영지도, 산림조합 육성
산림이용국	산지관리, 국유림 경영·관리, 산림복지·휴양 증진, 치유·산촌, 산림교육·문화, 숲길조성, 등산지원
산림복지시설사업단	백두대간·중앙수목원 및 산림치유단지 조성, 전시·체험·연구시설 운영
산림보호국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산림보호구역 지정·관리, 산림보호·단속, 백두대간 보호·관리, 산림생태계 복원, 산불방지, 사방사업, 산사태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 □ 소속기관

구 분	주 요 업 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 지식·기술 연구 개발
국립수목원	산림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증식, 광릉숲 보전
산림교육원	산림분야 공무원·임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산림항공본부	헬기에 의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악구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물 신품종 출원심사 및 권리보호, 종자 및 유전자원 관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운영 및 관리
지방산림청	국유림 경영 및 관리, 국유림 확대 및 이용, 산불예방·진화 지원

## 3

## 소관법률 (총 19개 법률)

법률명	제정일자	주요내용
○ 사방사업법	1962. 1.15	○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1963. 2. 9	○ 산림피해 방지와 보호를 위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 산림조합법	1980. 1. 4	○ 산림소유자와 경영자의 권익단체인 산림조합에 관한 사항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1997. 4.10	○ 임업 및 산촌의 진흥과 임업인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01. 3.28	○ 수목원·정원의 조성·육성 및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산림기본법	2001. 5.24	○ 산림과 임업에 관한 기본방향 제시
○ 산지관리법	2002.12.30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2003.12.31	○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2005. 5.31	○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 8. 4	○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및 산림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 8. 4	○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05. 8. 4	○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07. 8. 3	○ 부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 산림보호법	2009. 6. 9	○ 산림보호구역 관리 및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1. 4. 4	○ 민통선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역주민 지원 사항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1. 7.25	○ 국가·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012. 2.22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증진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2. 5.23	○ 목재이용 활성화·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 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2015. 3.27	○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및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4

## 2016년도 예산

## □ 회 계 별

(단위 : 억원)

구 분	2015 예산	2016 예산	증△감	
				%
계	19,484	19,841	357	1.8
○ 일 반 회 계	9,791	10,006	215	2.2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936	6,171	235	4.0
○ 지역발전특별회계	3,305	3,195	△110	△3.3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52	469	17	3.8

※ 2016년 예산(총지출기준) : 정부예산 대비 0.51%, 농림예산 대비 10.0% 수준

## □ 분 야 별

(단위 : 억원)

부 문 별	2015 예산		2016 예산		증△감	
	예산	%	예산	%		%
계	19,484	100	19,841	100	357	1.8
○ 산림자원육성·관리	5,811	29.8	5,639	28.4	△172	△3.0
○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1,875	9.6	2,200	11.1	325	17.3
○ 산림복지서비스증진	2,673	13.7	2,728	13.8	55	2.1
○ 산림재해예방·대응	5,307	27.2	5,481	27.6	174	3.3
○ 산림생태계보전	938	4.8	847	4.3	△91	△9.7
○ 국제산림협력 및 R&D	1,061	5.5	1,036	5.2	△25	△2.4
○ 산림행정지원	1,819	9.4	1,910	9.6	91	5.0

## □ 집 행 계 획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억원)	상반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	계획	%	계획	%	계획	%	계획	%
2016	17,242	10,397	60.3	5,242	30.4	5,155	29.9	3,431	19.9	3,414	19.8
2015	17,628	11,916	67.6	5,194	29.5	6,722	38.1	2,680	15.2	3,032	17.2

※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 기준 금액('15년은 실적)